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2권]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제2권]
유럽경험의 탐색

인 쇄: 2008년 8월 15일

발 행: 2008년 8월 15일

편 자: 제주평화연구원

발 행 처: 제주평화연구원 출판부

등 록: 제 652-2008-00002호(2008.5.31)

주 소: 697-12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번지

전 화: (82-64) 735-6500

팩 스: (82-64) 735-6512

전자우편: jejupeace@jpi.or.kr

홈페이지: <http://www.jpi.or.kr>

Copyright © 2008 by 국제평화재단, 외교통상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동아시아재단

가격: 25,000원

ISBN 978-89-959470-7-4

Jeju Peace Institute Research Series [7]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4회 제주평화포럼 자료집 제2권

일 러 두 기

■ 이 책의 외국인 집필진들의 한글 번역 성명 표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1. 일본과 중국의 필자들은 통상 성(姓)을 앞에, 이름을 다음에 쓰는 용례에 따라 한글 표기는 성(姓), 이름순으로 쓴다. 괄호안의 영문표기도 성을 앞에, 이름을 뒤에 쓴다. 이 경우 영문 성은 전체를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예) 일본 → 이토 겐니치(ITO Kenichi)

중국 → 장윤링(ZHANG Yunling)

2. 미국, 러시아 등 서구의 필자들은 이름을 앞에 쓰고 성(姓)을 뒤에 쓴다. 괄호안의 영문표기도 같은 순서로 쓰며, 성은 대문자로 표기하였다.

예) 도널드 그레그 (Donald GREGG)

이고르 로가체프 (Igor ROGACHEV)

■ 이 책의 국내외 필자들의 소속 및 직책은 포럼 개최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 머리말 |

2001년 시작된 이래, 제주평화포럼은 동북아시아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학계·정계·경제계·언론계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국가차원의 중요한 국제회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제주평화포럼을 국제회의 개최의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의 하나로 이끌어 왔으며, 저명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도출해 내는 역내의 주요 평화담론의 장으로서 제주평화포럼을 정례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자료집은 2001년을 시작으로 2003년, 2005년에 이어 지난 2007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에서 개최된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 발표되었던 논문과 연설문 등을 엮은 것입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4회 제주평화포럼을 주관하였습니다.

특히, 제4회 제주평화포럼에서는 기본 세션 이외에 두 개의 특별세션, 즉, 특별세션 I: “헬싱키에서 제주까지: 동북아시아의 다자협력 매커니즘을 위한 제주프로세스 구상” 및 특별세션 II: “동북아시아의 IT 협력”이라는 주제가 추가되어 “포럼 안의 포럼”의 형식을 취하며 진행되었습니다.

제4회 제주평화포럼의 기획의도는 정치, 안보 그리고 경제분야에서 유럽의 경험을 탐색하고 그 교훈을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문제에 적용

시켜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동북아에서의 국가간 협력체제 형성이라는 주요 이슈를 염두에 두면서, 제4회 포럼을 통해 냉전 및 탈냉전 시대의 CSCE/OSCE(유럽안보협력회의/유럽안보협력기구), 독일 통일, 그리고 EU(유럽연합)의 정치·경제통합 등을 포함한 유럽의 경험 사례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와 협력 틀을 탐색해 보고, 이러한 시도가 역내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제도화 과정을 가속화시키는 데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치·경제·안보의 측면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되고 있는 큰 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찾아보고, 앞으로의 기술혁신이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경제공동체의 형성과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간에는 중요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제주평화연구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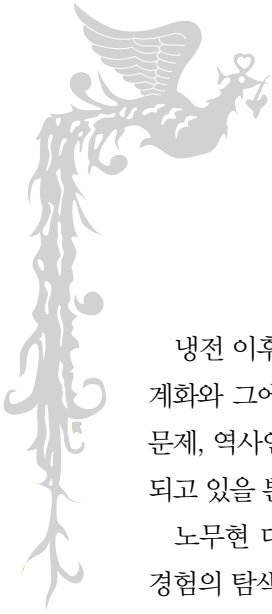
제4회 제주평화포럼 결과자료집의 발간에 즈음하여,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평화재단, 동아시아재단이 공동으로 포럼을 주최하고, 제주평화연구원이 주관하여 포럼의 조직 총괄업무를 맡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낌없는 관심과 후원을 베풀어주신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동북아시아대위원회, 제주대학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비롯하여 제주발전연구원

등의 공동후원기관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포럼을 성공리에 개최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본 자료집의 발간을 위하여 오랜 시간 애써주신 제주평화연구원의 윤태룡 박사, 고봉준 박사, 이성우 박사, 진행남 박사, 고정선 간사, 김순선 간사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제주평화포럼이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기존의 전통을 유지해 나아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촉진할 목적으로 공공·민간 부문의 영향력 있는 지도자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견해를 나눌 수 있는 품격 있는 논의의 장으로서 굳건히 자리매김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008년 8월

제4회 제주평화포럼 조직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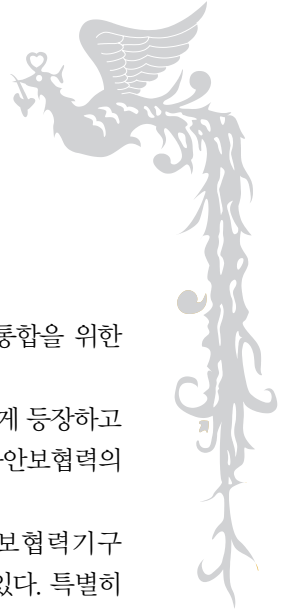
| 제4회 제주평화포럼 선언문 |

냉전 이후 동북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세계화와 그에 따르는 역내의 상호의존과 협력이 증대되고 있는 반면, 핵문제, 역사인식문제, 영토문제 등 갈등요소가 지역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역내 협력과 통합 과정에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내외분의 참석하에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 경험의 탐색’이라는 주제로 2007년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제4회 제주평화포럼은 유럽의 지역협력과 통합 경험을 동북아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탐색해 보았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IT)이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포럼 참가자들은 동북아·한반도·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안보·경제·문화·사회의 구체적 현안 문제들을 살펴 보았다. 구체적으로 역사 및 민족주의 문제, 전통적·비전통적인 안보 도전, 경제협력, 다자안보 협력을 위한 인식공동체 형성,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아태지역평화활동센터(POC)를 설립하는 문제 등에 대한 대안들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유럽은 정치·안보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고, 경제통합은 물론 다자안보협력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다. 역사 및 문화 등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럽의 경험이 동북아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힘들다. 하지만 지난 30여년간에 걸친 유럽의 성공 사례는 개별 국가들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서 경제·안보 공동체를 형성해 감으로써 동아시아에 좋은 선례를 보여 주었다. 제4차 제주평화포럼은 다음을 천명하는 바이다.



- 유럽에 비하여 동북아시아에서의 분쟁해결 및 협력과 통합을 위한 다자주의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공감한다.
- 북한 핵위기, 군비경쟁, 역내 구조적 불안정 그리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비전통안보 현안 등을 감안할 때, 동북아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 보다 요청된다.
-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의 증진을 위해서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다양한 협상과 대화의 경험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이러한 다자협력체제 구축에 있어서 강대국의 경합관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유럽의 핀란드, 유고슬라비아 및 스위스와 같은 중간 규모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음을 인식한다.
- 국가의 규모와 지정학적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효율적인 안보구축과 정치적 통합을 추진함에 적합한 국가라 할 수 있다.
-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과, 그에 따른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에 포함된 한반도 평화체제 및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관련 사항들은 지역 공동체 건설에 긍정적인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한다.
- 동북아 지역의 정부간, 그리고 비정부단체간의 지속적이고도 신속성 있는 역내 안보대화협의체를 구축하기 위하여 헬싱키 프로세스를 모델로 하는 제주 프로세스의 실현을 촉구하는 바이다.
- 2005년 1월,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에서 이러한 다자안보협의 프로세스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천명했다.

2007년 6월 23일
제주평화포럼

2007년 제4회 제주평화포럼 프로그램

	6월 21일 (목)	6월 22일 (목)	6월 23일 (금)		
08:30-09:00	등록 (08:30-09:00)				
09:00-09:20	특별회의 I : “헬싱키에서 제주까지: 동북아 다자협력제도화를 위한 제주프로세스 구상” (09:00-18:30)	등록 (09:00-09:50)	동시회의 II : 안보패널 I & II 경제패널 I (09:00-10:40)		
09:20-09:40		개회식 (09:50-10:00)			
09:40-10:00		기조연설 (10:00-10:20)	커피 브레이크		
10:00-10:20		전체회의 I : 유럽의 경험과 동북아 (10:20-10:50)			
10:20-10:40		커피 브레이크 (10:50-11:30)	동시회의 III : 안보패널 III 경제패널 II & III (09:00-10:40)		
10:40-11:00		세계지도자회의 (11:30-12:30)			
11:00-11:20		특별회의 I 오찬대화 (11:45-13:15)	오찬 (12:00-13:45)	오찬 동아시아재단이사장 주최 (12:50-14:00)	
11:20-11:40					등록 (13:30-14:00)
11:40-12:00	특별회의 I : “헬싱키에서 제주까지: 동북아 다자협력제도화를 위한 제주프로세스 구상” (09:00-18:30)	특별회의 II : “동아시아 II 협력” (14:00-18:00)	국내외 정치지도자 원탁회의 (14:10-15:30)		
12:00-12:20				전체회의 II : 동북아 평화공동체 건설의 현안과 과제 (14:20-15:40)	
12:20-12:40			커피 브레이크	커피 브레이크	
12:40-13:00			전체회의 II : 동북아 경제공동체 건설과 번영 (16:00-17:20)		
13:00-13:20			휴식 (18:00-18:40)	동시회의 I :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도전 제주패널 I & II (17:40-19:00)	외신기자 원탁회의 (17:20-18:40)
13:20-13:40					
13:40-14:00			비공식회의 (20:10-22:00)	제주패널 III : “제주영어마을” (20:30-22:00)	종합회의 및 제주선언 (18:50-19:20)
14:00-14:20					
14:20-14:40					고별만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주최 (19:20-21:00)
14:40-15:00					
15:00-15:20					
15:20-15:40					
15:40-16:00					
16:00-16:20					
16:20-16:40					
16:40-17:00					
17:00-17:20					
17:20-17:40					
17:40-18:00					
18:00-18:20					
18:20-18:40					
18:40-19:00					
19:00-19:20					
19:20-19:40					
19:40-20:00					
20:00-20:20					
20:20-20:40					
20:40-21:00					
21:00-21:30					
21:30-22:00					

| 차례 |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유럽경험의 탐색 [제2권]

머리말	• 5
제4회 제주평화포럼 선언문	• 8
2007년 제4회 제주평화포럼 프로그램	• 10

제 1 장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통한 번영: 통합을 위한 의제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티제이 펠펠 • 17
노무현 정부의 경제 공동체 건설 이니셔티브: 기회, 도전과 전망	이경태 • 36
중국과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	장율링 • 47
일본과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 제약, 기회와 전망	이토 겐이치 • 63

제 2 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전망과 과제

제주평화활동센터의 역할	아카시 야스시 • 71
제주의 번영: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국제투자	고성규 • 75
제주영어마을: 새로운 발상 및 뉴욕과의 연계	다니엘 밥 • 90

제 3 장 동북아의 역사, 민족 정체성 그리고 갈등

동북아의 역사, 상충되는 기억과 화해	신기욱 • 107
동북아의 역사, 민족정체성, 그리고 갈등: 중국의 시각	시아 리핑 • 112
동북아의 역사, 민족정체성, 그리고 갈등: 일본의 시각	타마모토 마사루 • 116
탈국가의 동아시아: 한국의 시각	임지현 • 120

제 4 장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 체제의 미래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체제의 미래: 일본의 시각	타나카 히토시 • 127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체제의 미래: 러시아의 시각	블라디미르 나자로프 • 131
북핵문제의 해법: 희망과 난제	양철힌 • 138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체제의 미래: 미국의 시각	존 박 • 142
북한의 핵 게임과 끝나지 않은 문제	김태우 • 148

제 5 장 자동차 산업과 지역협력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한·중·일 기업간 협력	이타미 히로유키 • 159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한·중·일 정책협력	무룡핑 • 167

제 6 장 싱크탱크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 건설

동북아시아 협력대화: 1.5트랙 외교의 시도	수잔 셔크 • 175
지식 공동체의 중요성:	
동아시아 협력 과정에서의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쥘리춘 • 180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제: 러시아의 시각	겐나디 추프린 • 186
싱크탱크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 형성: 일본의 시각	아마모토 타다시 • 193

제 7 장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협력

-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동북아시아 이고르 톰버그 • 199
 중·미 관계에서 에너지에 대한 상호 관심사 조명 짜다오지웅 • 226
 중·일 에너지 관계: 경쟁인가 공생인가? 켄트 칼더 • 242

제 8 장 동북아시아의 지역 FTA 전망

- 동북아시아에서의 FTA 확산이 동북아시아 FTA 지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창재 • 263
 동북아시아 FTA의 장애물과 변수 후카가와 유키코 • 275
 동북아시아 FTA와 지역화 문제: 비판적 조망 사무엘 김 • 296

제 9 장 국내정치와 지역공동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 국내정치와 지역공동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고르 로가체프 • 307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김원웅 • 311
 동북아 통합을 위한 지도자론 남경필 • 316
 국내정치와 지역공동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니시무라 야스토시 • 319
 지역공동체 건설: 중국의 관점 장울링 • 322

제10장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외교관의 시각

동아시아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중장기 전략	알렉산더 버시바우	• 329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일본의 시각	오시마 쇼타로	• 336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유럽의 시각(1)	노바트 바스	• 341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유럽의 시각(2)	브라이언 맥도널드	• 345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제: 한국의 시각	박인국	• 347

제11장 북핵위기와 동북아시아: 언론인의 시각

북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손지애	• 353
남한에서 북한 실상 취재기: 인접국가 밀접취재를 위한 기나긴 여정	존 허스코비츠	• 357
북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언론인의 시각	도널드 커크	• 360
북핵 위기에 관한 시각	호리아마 아키코	• 364

폐 회 사	367
찾아보기	369
저자소개	377

제1장

동북아 공동체 건설을 통한 번영: 통합을 위한 의제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노무현 정부의 경제 공동체 건설 이니셔티브: 기회, 도전과 전망

중국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일본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제약, 기회와 전망

동북아시아 경제통합: 현황과 전망

티제이 펴펠
(T.J. PEMPEL)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논의한다. 무역과 투자 흐름에서 보여지듯 역내 상호 의존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본 논문은 최근의 발전이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을 보다 제도화, 아시아화, 중국 중심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는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동 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움직임의 한 부분만 보여준다. 비록 이 세 가지 추세가 명백하지만 전체적 제도화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아직까지, 일본은 역내 거대 경제이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동남아시아와 미국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실,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 통합 과정의 강력한 허브이다.

지난 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는 1997-98 아시아 외환위기 동안,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은 세 가지 추세로 대표될 수 있다. 경제 관계는 1) 제도화 2) 아시아화 3) 중국 중심으로 변했다. 본 논문은 다음 장에서 이 세 가지 추세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분석을 논의할 것이다. 그러나, 예측의 일환으로 이 추세와 반대되는 흐름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추세는 3개의 현실이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 경제 관계는 정부와 공식 협정이 아닌 이윤 창출과 생산의 능력을 추구하는 기업에 의해 추진된다. 2) 동북아시아의 심화되는 경제 상호 의존성과 동남아시아와 하위지역(sub-region)과의 의존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 한국은 세

계 시장, 특히 미국 시장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3) 그 어느 때 보다 중국은 동북아시아 무역과 투자의 중요한 허브이지만 일본은 현재까지 역내 가장 강력한 경제 주체이다.

외환위기 전 동북아시아: 출발점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동북아시아는 정치보다는 경제적으로 연계되어 있었다. 기업간의 투자가 이런 지배적인 관계를 융합시켰다. 아시아 기업들은 하의상달, 시장 중심적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화의 흐름에 편승했다 (Hamilton 1996; Katzenstein, Shiraishi 1997, 2006; Pempel 2005, inter alia). 증가하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역내 다국적 생산 네트워크, 투자 통로, 수출 가공 지역, 성장 삼각 지대의 교차망을 창출했다. 이는 역내 무역과 경제의 상호의존을 증대시켰다. 시장, 투자, 기업은 지역 관계 발전의 주요 동인이었고, 정부의 공식적 제도화와 상의하달식 통제 역할은 다소 축소되었다(Grieco 1997). ASEAN, APEC, ARF(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는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에 활동했으나, 권한은 최소화 되었고, 조직은 축소 되었으며, 회원국간의 분쟁 해결에 구속력 있는 통제력의 사용을 자제했다(Kahler 2000a). 기업 중심의 비 정치적 경제 관계는 동북아시아에서 특히 현저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만을 위한 지역 기구는 없고,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기구들은 더 폭넓은 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 기구들이다.

외환위기 이전의 두 번째 특징은 일본의 명백한 우세였다. 해외 원조, 은행 대출, 기술력, 외국인 직접 투자, 아시아 개발 은행 (ADB)에서의 우위, 일본식 경제발전 모델이 영미식 자유방임 자본주의의 대안이라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공유된 믿음 등은 일본의 우위를 명백하게 했다 (Macintyre Naughton 2005). 필자는 이 상황을 소인국의 경제적 걸리버라고 묘사한적 있다(Pempel 1997). 대만, 홍콩, 한국의 기업들은 역내

주요 투자자로 거듭나고 있고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성장에 기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연계는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경제 주체의 하위에 놓여있다. 중국은 경이적인 경제 성장으로 아시아의 두 번째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일본의 GNP는 중국의 10배이고 1인당 소득은 중국의 90배에 달한다(Pempel 1999a, 72). 90년대 중반 아시아의 역내 역학 관계는 이런 일본의 지배적 위상을 반영한다.

세 번째 특징은 동북아시아 국가와 연관된 지역 기구와 역내 지역 기구의 아시아 태평양적 특성이다. 개방 지역주의의 가장 상징적인 예는 APEC과 ARF이다. ARF는 안보 문제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APEC은 범 태평양 지역 경제 기구로의 역할을 했다. APEC은 21개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홍콩과 대만과 같은 비 국가도 포함되어 있고 미국, 캐나다, 멕시코, 러시아와 같이 동아시아에 위치하지 않은 국가도 포함되어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도 주목할 만 하다. 10개의 회원국을 둔 ASEAN은 1967년에 설립된 아시아 최초의 지역기구였으나 오늘날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없어서 소지역 기구로 분류된다. ASEAN은 지역 통합 노력의 주요 동인이 된 ASEAN+3(ASEAN Plus Three: APT)의 절차를 통해 동북아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했다. 중복되지 않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지역 기구로 인해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 기구는 공통점이 결여된 태평양연안 국가들을 포괄하게 되었다.

최근 경제 동향

우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다. 일본은 90년대 후반의 기업 구조조정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조짐이 지속적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후 가장 지속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불식되고 있고 경수수지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며(GDP의 4.1%), GNP 성장률은 지난 2년 동안 2.5%를 상회했다. 이는 수십 년 전 최고 기록에는

못 미치지만 90년대의 저조한 실적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개선된 것이다. 한국 또한 아시아 외환위기를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극복했다. 한국의 GNP는 연간 4%대가 넘는 증가세를 보이며 산업 생산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대만과 중국 또한 경기가 좋다. 중국 경제는 산업 생산성 증가와 수출 증대로 거의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대만은 연간 4%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 이 4개국은 모두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가장 낮은 3%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은 가장 높은 7.6%를 기록하고 있다(*Economist*, May 5, 2007, 121-22).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2002년 7월의 임시 경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빈곤이 만연하고 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외부 원조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다. 북한이 공식적인 경제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논의할 수 없다. 그러나 자급자족의 이념이 북한의 세계 및 지역 시장에서의 체계적인 통합을 저해하고 주변국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확실하다.

위에 언급된 세가지 추세와 관련, 각국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경제 관계를 보장하는데 과거보다 더욱 적극적이다. 아시아의 선두 기업간의 경제 관계에 공식적 제도화라는 새로운 층이 더해졌다. 이 중 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독점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역외 국가들과의 관계에 사용되었다. 동북아시아 국가의 정부들이 취한 조치는 역내 협력 증진보다는 대부분 동북아시아 경제권 및 세계시장 그리고 동아시아 시장과 연결 짓는 것이었다.

강화된 정부 역할은 아시아 외환위기에서 비롯되었다. 1997-98년 외환위기 당시 다수의 동북아시아 국가 정부들은 국내 경제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나 더 넓은 지역의 경제 활동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는 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로운 시장과 유동적이고 변덕스러운 자본 흐름에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를 가리켜 위너(Winner, 1999)는 과전압 보호기 없이 세계 경제라는 코드에 전선을 연결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기존의 아시아 지역기구는 확산되는 위기를 멈출

의지도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외환위기는 냉전 종식 후 세계 질서가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로 재편되고 미국은 동아시아의 개발 모델이 미국의 경제, 안보 이해와 대치할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국 및 역내 대외 경제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력을 증대하기 위해 정부역할의 강화로 대응했다. 이는 아시아의 엘리트층이 외환위기의 요인으로 지적했던 억제되지 않은 시장화와 세계화에 대한 정부의 반격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구체화하려고 한 공공 기관과 정부 활동은 역내에서 더욱 중요해졌다. 아시아 지역 관계는 더 이상 하의상달식 시장관계의 독점적인 부산물이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 더 많은 아시아 정부들은 더욱 진보되고 통합된 지역 구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다. 이런 노력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는 금융과 무역에서 지역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조치를 들 수 있다. 다시 말해, 일련의 노력은 역내 잠재적인 금융 능력을 동원해 외환위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의 노력으로 막고자 하는 것이다.

APEC과 ASEAN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후유증에 대처하는데 무기력함을 보였다. 미국은 APEC을 무역 자유화의 유일한 매개물로 간주했는데 APEC의 분야별 조기 무역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 Liberalization: EVSL) 절차가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실패하자 미국의 APEC에 대한 신뢰는 낮아졌고 APEC은 소외되었다(Krauss 2004; Tay 2006, 4). 경제 문제에 있어 APEC을 더욱 소외시킨 사건은 미국이 APEC에 압력을 가해 본연의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 대테러 전쟁에 찬성할 것을 강요한 것이다. 이를 가리켜 리처드 히고트(Richard Higgott 2004)는 경제 세계화를 안보화하려는 미국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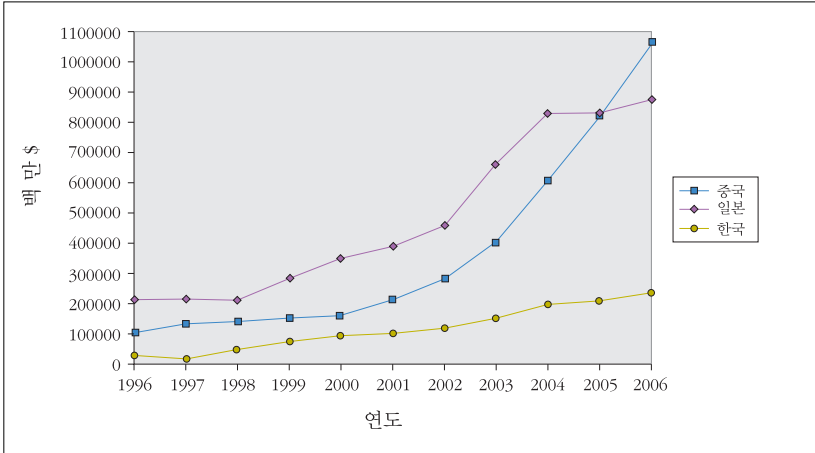
따라서 아시아 정부들은 자국 경제가 기능하는 상황에 대하여 정치적인 통제력을 증대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기관을 세우고 싶어했다. 외환위기 당시와 그 이후 미국의 행동을 고려해보면, 아시아 태평양 중심에서 아시아 중심으로 대체된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APT 절차는 추후 지역 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매개체가 되었다. APT는 1995년 중반 ASEAN이 중국, 한국, 일본과 합쳐서 유럽 연합에 상응하는 아시아 조직을 구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1997년 ASEAN 회원국 정부는 APT의 독립적 역할의 강화를 주장했다. 기존의 고위 간부 회의는 재정과 경제장관회의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북쪽의 주변국과 제도화된 연계를 형성했고 이는 연례 정상 회담으로 절정에 달했다. APT는 다양한 지역 문제에 대한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동력이었다.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은 13개국 공식회의 외에도 추가로 회의를 가졌다.

지역 내 가시적인 움직임은 금융 부문에서 먼저 일어났다. 1997-98년에 아시아국가들의 공동 외환보유고가 동원되었다면 단기적으로 문제들을 완화시키고 IMF 사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1998년, 아시아 10개국의 총 외환 보유고는 7,429억 달러에 달했고 이는 주요 3개 구제 금융 IMF 패키지 금액보다 많은 액수이다. 2006년 말, APT 국가의 보유고는 2조5,000 달러로 급증했고, 이는 세계 총 외환 보유고의 3분의 2에 달하고 2001년 1조 달러에서 증가한 금액이다. [그림 1]에는 동북아시아 주요국의 외환 보유고 증가액이 나타나있다. 중국 인민 은행(People's Bank of China)과 홍콩 통화당국(Hong Kong Monetary Authority)은 2005년 6월 1조3,300억 달러로 선두에 달했고 일본이 약 9,000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으며 대만은(APT 비회원국) 2,6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었다(*Economist*, December 23, 2006, 154; <http://www.imf.org/external/np/sta/ir/jpn/eng/cujpn.htm>); 이들 국가가 보유한 외환 보유고의 일부만이라도 공동으로 동원되었다면 여러 국가들에게는 다자금융기구의 원조를 받는 것 보다는 나았을 것이다(Henning 2002, 13).

당시 사카기바라 일본 국제금융담당 차관의 주장으로 일본은 1997-98년 외환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금융 자원을 동원하는 노력을 선도했다. 일본의 아시아 통화 기금(AMF) 창설에 대한 미국, 중국, IMF의 반대로 일본의 노력은 좌절되었다(AMYX, 2004). 일단 상황이 진정되자 다수의 참가자들은 아시아의 금융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AMF의 창설과 같은

[그림 1] 동북아시아의 외환 보유고 (금 제외)



현존 세계 통화 협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대안은 회피했다.

주요 성과는 연례 APT 회의와 연관된 2000년 5월 6일 치앙마이 구상 (Chiang Mai Initiative)이었다. CMI는 기존의 ASEAN 스왑 협정을 확장했고 ASEAN +3 국가간 양자 스왑 협정을 추가했다. 이는 미래의 위기에 대비해 응급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Amyx 2007; Grimes 2006; Pempel 2005b; Pin 2007).

CMI가 실행되자 스왑에 연관된 제한된 통화량과 대부분의 스왑이 IMF 규정과 일치해야 된다는 기본 요구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2005년 초 CMI 하에 390억 달러에 달하는 약 16개의 양자 스왑 협정이 체결되었다. 2005년 5월 5일 칼라룸푸르(Kuala Lumpur)에서 열린 APT 제 8차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기존 스왑 협정의 금액을 두 배로 올린 총 800억 달러에 합의했다. 현 협정은 종합적인 지역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지 못하고 IMF에 구체적인 도전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이는 아시아가 미래의 통화위기에 대비하고 IMF와 IMF의 정책 규정에 대한 의존을 축소시키는 능력을 확실하게 했다. 종합적으로, 스왑은 지역통화와 금융협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했다.

아시아의 선진경제들은 지역의 중앙은행을 통해 아시아 채권기금을

(Asian Bond Fund) 조성하려고 노력했으며 CMI는 아시아 채권시장구상(Asian Bond Market Initiative)을 추진했다. 이 둘은 추가적인 지역금융협조 메커니즘을 제공하고 외환 보유하고, 통화 바스켓, 국제 거래에 있어 아시아의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것이다. 2003년 6월 2일, 동아시아 태평양 중앙은행 임원회의(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10억 달러의 아시아 채권 기금의 창설을 발표했다. 첫 ABF는 11개의 아시아 중앙은행이 참여했고 기금의 규모는 10억 달러에 달했다. APT 재무 장관 회의는(APT Finance Ministers' Meeting) 지급 결제 시스템, 채권 등급 평가, 거래 시스템 등을 포함한 지역 통화 채권 시장의 개발을 추진했다(세부사항 Pemple 2006a; Grimes 2006 참조).

이와 같은 금융 시장의 움직임은 일본, 한국, 중국뿐 아니라 ASEAN의 10개국들을 포함했다. 그렇지만 역시 상당량의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가진 동북아의 3개국 이 새로운 기구의 발전에 핵심적이다. 이는 하위 지역 내에서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들간 보다 가까운 금융 관계와 기술 협력을 가능하게 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기구의 움직임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이다. APT의 지지 하에 동아시아 비전 그룹(East Asia Vision Group)이 제안한 EAS는 2005년 12월에 첫 회의를 개최했다. 목표는 경제 협력과 발전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은 다수의 이슈에서 협력할 동아시아 공동체의 창설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불균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일본, 인도네시아,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APT 국가들에 대응해 EAS는 APT로부터 분리되었고 EAS 회원국은 인도, 뉴질랜드, 호주로 확대되었다. 첫 회의는 말만 많고 실질적인 결과는 부족했다. 2007년 1월 마닐라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회의에서는 다수의 이슈에서의 협력을 위한 틀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EAS의 전체적으로 확대된 회원국간의 경제 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일본의 포괄적 경제연대협정(Comprehensive Partnership in East Asia) 제안에 대한 고려가 포함되어 있다(Frost & Rann 2006).

새로운 기관들의 누적효과는 아시아 태평양의 개방적인 구조에서 아시

아에 국한된 보다 폐쇄적인 구조로의 변화였다. 외환위기 이후 APT 국가들은 새로운 지역 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APT는 CMI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의 주도세력이다. 또한 태평양 동쪽해안 국가들(미국, 캐나다 및 기타 APEC 회원국)을 제외하도록 ABMI를 물고 간 EMEAP 11개국의 배후 세력이다. CMI는 외환위기 이후 만들어진 민간차원의 동아시아 싱크 탱크 네트워크(Network of East Asia. Think Tank: NEAT)가 시작되게 했다. 폐쇄적인 아시아 모델의 예외는 자유무역협정이다. 다수의 자유무역협정은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도 많지만 동아시아 국가와 그 외 지역 국가 사이에도 그만큼이나 많다.

2002년 10월 1일 상위 30개 경제국 중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일본, 중국, 한국, 대만, 홍콩(Pemple & Urata 2006) 5개국에 불과했다. 그 후 동아시아 국가와 연관된 양자, 지역, 특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거나 추진되었다. 외환위기 전 ASEAN 자유무역협정 (AFTA)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정부주도 이니셔티브였다. 세계은행의 그린우드(C. Lawrence Greenwood, 2006, 6)에 따르면 2006년 동아시아 관련 약 95개의 양자 및 지역 FTA가 체결되었거나 협의 중이었고 그 수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아가월(AGGARWAL 2006년 12월)이 주장하듯, 동아시아의 자유무역 지지자들은 시애틀과 칸쿤 WTO 회의의 완만한 진전으로 인한 미국 시장에 접근의 감소와 진보적인 지역 무역 창구 개발의 욕구로 인한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의 축소를 우려했다. 다른 이들에게 자유무역협정은 NAFTA와 EU가 세운 반 아시아 무역 장벽에 대한 방어와 다른 국가를 따라잡으려는 행동을 대표했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 관련 FTA가 급증했다. 2006년까지 제안되었거나, 체결, 혹은 협상 중인 FTA의 수는 중국과 한국 20개, 일본 18개, 그리고 대만 8개였다. 이중 4개가 남아시아 국가와의 FTA이고, 12개는 ASEAN 국가들, 22개는 비 아시아 국가들인데 이중 4개만이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의 협정이었다(<http://aric.adb.org/10.php> 검색일: 2007.5.10). 이는 동북아시아 국가 정부들이 역내 역할을 증대하고 무역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적극적이지만 동북아시아의 경제관계에

대한 정부의 승인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국가간의 적대와 민족주의의 고조는 동북아시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지속적으로 지배하고 이는 현재 경제협력을 확대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방해가 된다.

동북아시아의 3대 시장, 일본, 중국, 한국이 양자간 FTA를 추진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긴밀한 경제 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동북아시아 국가들과 세계의 주요 무역 파트너국 간에도 관계가 진전된다).

동북아시아 공식적 외교관계의 취약성의 모순적인 예외는 6자 회담이다. 6자 회담의 주요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이고 이는 경제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중국, 북한, 그리고 어쩌면 러시아의 부차적 목표는 북한과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다. 한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관계의 확대를 통해 현 북한체제가 핵개발과 자급자족의 주체 경제 정책을 폐기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보다 부유하고 평화로운 지역은 성공적인 협상의 결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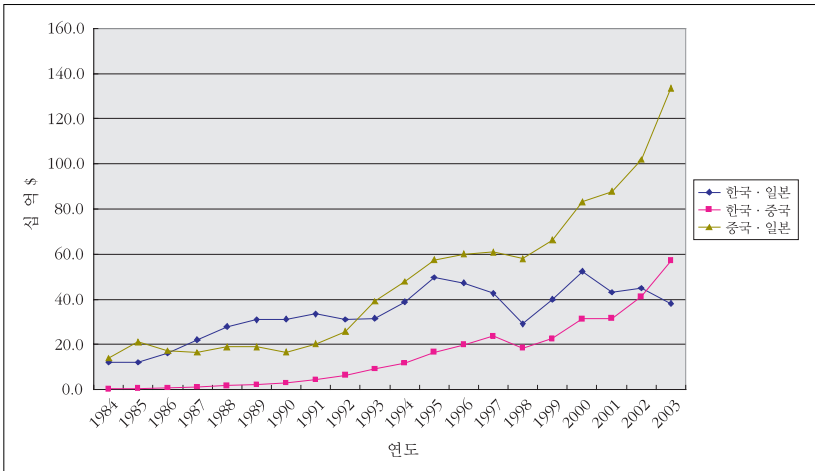
이런 측면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37%이고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32%에 달한다는 것이다(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5). 그리고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이런 교류의 많은 부분을 시장화했다. 중국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과 상품의 무상지원 대신 북한과의 무역을 택했고 이는 2002년 북한이 행한 시장 개혁의 내부 동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공식적인 정부간 협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무역과 투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 일본과 중국간의 양자 무역은 1998년 이후 증가했고 한국과 중국간의 무역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서 미국을 제치고 수출 대상국 1위가 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가장 큰 수출 파트너인 중국은 한국 총 수출액의 22%를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대만의 1위 수출 대상국이고 2006-2007동안 대만 총수출의 27.2%를 차지한다. 일본은 중국의 수출 2위국이고 중국의 1위 수입국이다. 한국은 전체적으로 대만의 5위 무역국이

다(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2007). 다시 말해, 경제 관계는 역내 경제적 상호 의존성을 심화시켰다.

아시아의 경제 관계는 계속해서 심화되고 확장된다. 그러나 금융 및 제조업에서의 일본의 우위가 외환위기 이전의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에 기여했다면 십 년의 경기 침체, 중국의 높은 성장률, 적극적인 지역 참여는 일본의 한때 독보적인 역내 우위를 무너뜨렸다. 한국도 전자와 자동차와 같은 다수의 부문에서 일본의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했다. 동남아시아는 자본 투자의 적지로서의 매력을 잃었으나 중국은 다국적 생산 체인의 지역 기지로 부상했다.

[그림 2] 동북아 역내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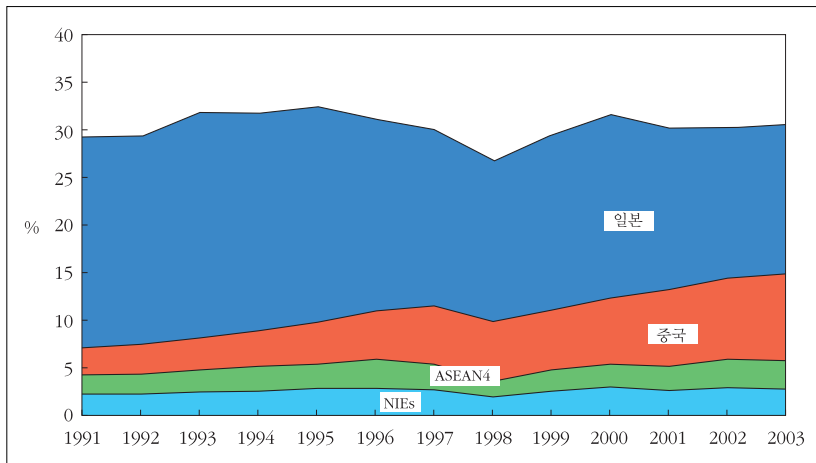
출처: Bank of Korea (1965-2003), *Economic Statistics Annual Report*, Seoul: Bank of Korea; 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1965-2003), *Korean Principal Statistics Index*, Daejeo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1965-2003), *Weekly Economic Trend*, Seoul: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동아시아 역내 무역은 1996년 43%에서 2005년 55.3%로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의 대부분은 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중국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고 이는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을 반영

한다. 외환위기 이후 중국은 더욱 매력적인 역내 투자지로 부상했다. 중국은 이제 동아시아의 가장 왕성한 가공 센터이고 역내 많은 곳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역내의 보다 부유한 국가나 역외 국가로 수출한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 동아시아가 세계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0년대 초 이후 거의 일정했던 반면 중국은 그 비중이 급증했다.

[그림 3] 세계 제조업 생산에서 동아시아 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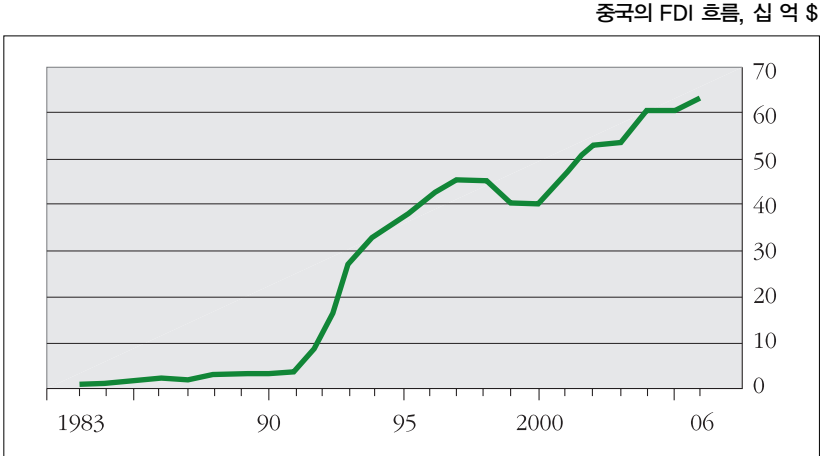
- 주: 1. 생산량은 달러 기반 부가명목산출 가치를 반영한다.
 2. NIE는 한국, 홍콩, 싱가포르이다. ASEAN4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이다. 동아시아는 NIE, ASEAN4,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다.
 3. 세계 생산량은 세계 은행 자료에 기재된 160개국을 포함한다. 전년 생산량 자료를 구할 수 없을 시 그 전년 자료가 사용된다.

출처: WDI (World Bank).

중국 제조 능력의 향상은 중국으로의 외국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유입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이는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중국에는 일본보다 막대한 양의 FDI가 유입되었다.

경제력과 지역 전략을 결합시키는 데 중국의 중요한 성공은 2000 ASEAN 정상회담에서 ASEAN-중국 FTA의 제안이었다. 심리적으로 이 제안은 17억 인구의 잠재 시장에서 중국이 동남아시아와 윈-윈 경제 협력을

[그림 4]



출처: 중국 통계국; UNCTAD.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배가시켰다. 중국의 협상가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농산품에 대한 낮은 관세를 제시했다. 농산물 수출이 동남아시아 국가들(특히 신 회원국)의 성장 전략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의 움직임은 정치적으로 좋은 접근이었다. 그리고 일본, 미국, 한국은 더 부유하지만 민주적인 시스템 내에서 국내 농업 부문의 로비 때문에 이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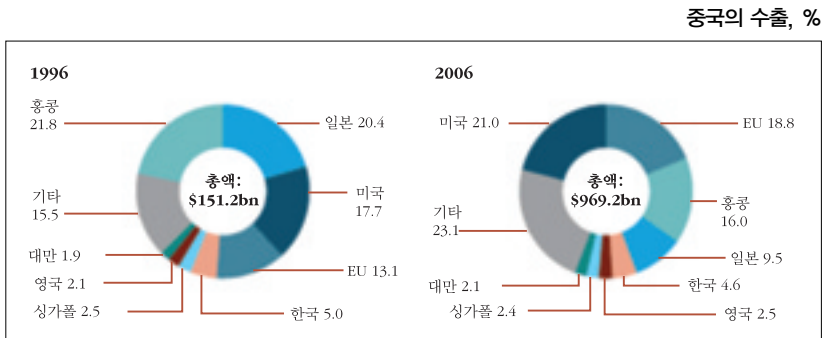
동남아시아 밖에서 중국의 가장 큰 성공은 한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것이다. 북한과의 오랜 우방국인 중국은 1992년 한국과 “종합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했다. 그 특히 외환위기 이후 양국은 더욱 빠른 속도로 무역, 투자, 관광, 교육, 문화 교류 등과 같은 부문에서 협력했다. 2003년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을 제쳤고 한국 FDI의 제 1 투자처로 부상했다.

다른 중요한 점은 대만과 중국의 계속되는 경제 관계의 통합이다. 오늘날 중국은 대만 수출의 40%를 사들이고 있고 2002년 이후 대만 FDI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했다(Ross 2006, 143). 약 백만 명의 대만인들이 중

국에 체류하고 있고 두 경제의 연계는 강화되고 있다. 비록 중국내의 대만인 소유 공장의 생산품이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지만 이 관계는 지역적이라기 보다는 양자적이다. 이와 같은 통합을 심화시키는 데 있어 양 정부의 정책은 시장만큼이나 중요하다. 동남아시아의 수출 대상지역으로서의 중국의 역할도 증가했다. 90년대 초, 일본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주요 소비자였다. 1993년 일본은 ASEAN 생산품의 15%를 소비했고 중국의 소비는 2.2%에 불과했지만 최근 십 년 동안 이 관계는 역전되었다. 일본의 소비가 2005년 11.2%로 감소한 반면 중국은 홍콩을 제외하면 8.1%로, 홍콩을 포함하면 13.6%로 증가했다. 절대적 수치로 보면 동남아시아의 대일본 수출은 지난 12년 동안 두 배로 증가했고 ASEAN의 대중국 수출은 10배 이상 증가했다(Plsek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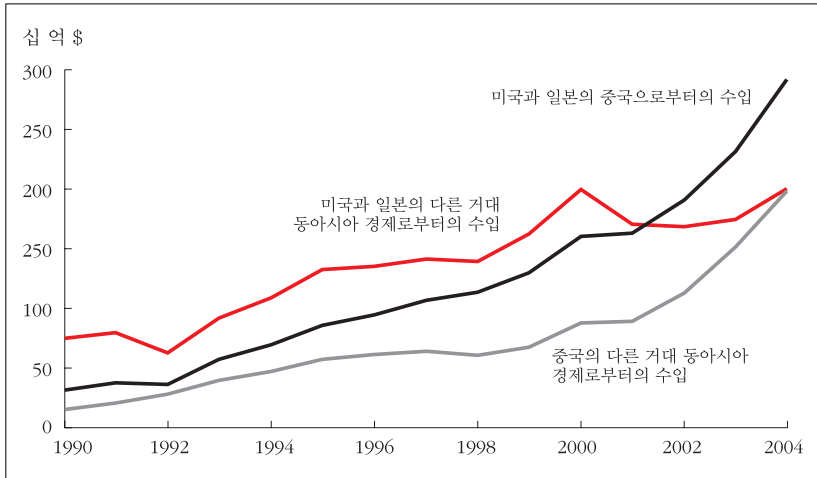
중국의 수출은 점점 부유한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5]에서 보여지듯, 1996년 중국의 최대 수출 시장은 홍콩이었고 그 뒤를 이은 일본은 20.4%로 2위였다. 미국(17.7%)과 EU(13.1%)는 그 뒤를 이었다. 2006년 홍콩과 일본(9.5%)은 순위가 하락한 반면 미국(21%)과 EU(18.8%)는 1,2위로 상승했다. 2005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의 제 1 수출국이 되었다. 그리고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일본으로의 총 수출은 증가하고 있고 중국의 수출은 다른 동아시아 국가의 수출을 앞지르고 있다.

[그림 5] 10년간의 변화



출처: Nation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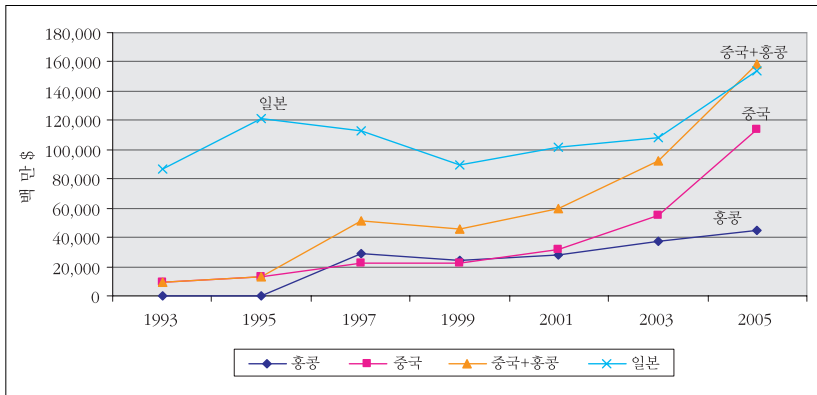
[그림 6] 미국과 일본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90년대 초 이후 일부 동아시아 교역국의 대중국 및 대홍콩 제조품 수출의 증가는 중국과 홍콩의 대미국 및 대일본수출 증가와 동반되었다.

[그림 7]의 통계는 상대적인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하락을 보여준다. 이는 양국에 대한 ASEAN의 수출을 포함하는데 2005년 중국은 일본만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했다.

[그림 7] 홍콩, 중국, 일본과 ASEAN의 총 무역량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아시아의 절대적인 경제 역동성을 보여주고 중국의 상대적인 부상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에서 하락하는 일본의 위상은 FDI 와도 연관이 있다. 80년대부터 90년대 말까지 일본의 대 아시아 투자는 1위였다. 80년대에는 [표 1]에서 보여지듯 일본의 대 아시아 투자가 미국의 4배에 달했다. 90년대에도 삼분의 일만큼 더 높았다. 그러나 그 이후 미국이 일본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표 1] 대아시아 주요 직접 투자의 변화

백 만 \$

	1980 - 2003		1980 - 1989		1990 - 1999		2000 - 2003		2003	
1	일본	103,358	일본	19,684	일본	65,426	미국	35,368	미국	7,432
2	미국	85,444	미국	4,821	미국	45,255	일본	18,248	일본	5,351
3	영국	23,288	영국	3,055	영국	14,133	벨기에	8,112	벨기에	5,049
4	독일	15,234	독일	648	스위스	10,643	독일	6,722	영국	2,280
5	프랑스	12,083	프랑스	561	독일	7,950	영국	6,100	한국	1,684

주: 1. 아시아는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인도임.

2. 2000-2003년의 벨기에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함.

3. 통계의 변화로 인해 2000-2003년 벨기에는 2000-2001년 투자액임.

출처: *Kensho: Nihon No Higashi Asia Eno Keizaireki Kouken*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December 2005).

동시에, 중국의 상대적 부상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ASEAN과 아시아에서 FDI와 경제력 측면에서 중국을 앞서고 있다. GNP, 기술력, 조직력 등에서 일본은 아시아의 개발 도상국에서 제공하는 정부 개발 원조를 통해 막대한 지역경제의 지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제 발전의 형태를 형성하는데 지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정책이 계속해서 일관성을 유지할지 그리고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성장 잠재력이나 일본의 현 우세에 만족해 할지는 모른다.

맺음말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살펴보았다. 무역과 투자 흐름에서 알 수 있듯, 역내 주요 경제간의 심화되는 상호 의존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본 논문은 최근의 전개 상황이 어떻게 주요 경제를 더욱 제도화, 아시아화, 중국 중심으로 만들었는지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동북아시아 자체로 국한되기 보다는 동아시아 전체를 잇는 움직임의 일부를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추세가 명백하지만, 전체적인 제도화는 제한적이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역내 경제대국이고 동북아 국가들은 동남아 국가들 및 미국과 긴밀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 동북아는 세계 경제관계의 사실상 강력한 허브이다.

참고문헌

- Frost, F., & Rann, A. 2006. "The East Asia Summit, Cebu 2007: Issues and Outcomes." http://www.aph.gov.au/library/intguide/FAD/eastasia_summit.htm.
- Grieco, Joseph M. 1997. "Systemic Sources of Variation in Regional Institutionalization in Western Europe, East Asia, and the Americas."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Ed. Edward D. Mansfield, Helen Miln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64-87.
- Hamilton, Gary. 1996. *Asian Business Networks*. Berlin: Walter de Gruyter.
- Higgott, Richard A. 2004. "US Foreign Policy and the 'Securitization' of Economic Globalization." *International Politics*. 41: 147-75.
- Kahler, Miles. 2000. "Conclusi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Legaliz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54(3): 661-683.
- _____. 2000. "The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Its Limits."

-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Structure of Global Finance*. Ed. Gregory W. Noble, John Ravenhill.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35-60.
- Katzenstein, Peter J. 2005. *A World of Regions: Asia and Europe in the American Imperiu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atzenstein, Peter J. and Takashi Shiraishi. 1997. *Network Power*.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Beyond Japan: The Dynamics of East Asian Regionalism*.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Krauss, Ellis S. 2004.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APEC's EVSL Negotiations: Regional Multilateralism and Trade." *Beyond Bilateralism: US-Japan Relations in the New Asia-Pacific*. Ed. Ellis S. Krauss, T. J. Pempel.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72-295.
- MacIntyre, Andrew and Barry Naughton. 2005. "The Decline of a Japan-Led Model of the East Asian Economy." *Remapping East Asia*. Ed. T.J. Pempe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77-100.
- Pempel, T.J. 1997 "Transpacific Torii: Japan and the Emerging Asian Regionalism." *Network Power: Japan and Asia*. Ed. Peter J. Katzenstein and Takashi Shiraishi.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47-82.
- _____. 1999.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Remapping East Asia: The Construction of a Region*. Ithaca, Cornell: Cornell University Press.
- _____. 2006. *Firebreak: East Asian Institutionalizes Its Finances*. Conference on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 Making the Impossible Possible?, September 20-22, United Nations University and Aoyama Gakuin University.
- _____. 2006. "The Race To Connect East Asia: An Unending Steeplechase." *Asian Economic Policy Review*. 1(2). 239-254.
- _____. 2006. "A Decade of Political Torpor: When Political Logic Trumps Economic Rationality." *Beyond Japan: The Dynamics of East Asian*

- Regionalism*. Ed. Peter J. Katzenstein, Takashi Shiraishi.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37-62.
- Sophorl, Pete Pin. 2007. "Post-Crisis Regionalism in East Asia: The Chiang Mai Initiative."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Berkeley.
- Plsek, Ivo. 2007. "Japan and China and in Southeast Asia: The Change in Economic Leadership?" Unpublished paper, University of Berkeley.
- Taiwan Bureau of Foreign Trade. 2007. Trade Statistics. http://cus93.trade.gov.tw/english/FSCE/FSCE040R.ASP?rptName=FSCE040R&typ=A&B YEAR=200701&EYEAR=200702&USER_ID=&intType=1.
- Tay, Simon S. C. 2006. "An East Asia Community and the United States: A View from ASEAN." Council on East Asian Community International Workshop. June 26, Tokyo.
- The Economist*. May 5, 2007. "Economic and Financial Indicators."
- Winters, Jeffrey A. 1999. "The Determinant of Financial Crisis in Asia." *The Politics of the Asian Economic Crisis*. Ed. T.J. Pempe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79-97.
- WTO. International Trade Statistics, 2005. http://www.wto.org/english/res_e/statis_e/its2005_e/its2005_e.pdf.

노무현 정부의 경제 공동체 건설 이니셔티브: 기회, 도전과 전망

이경태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FTA와 공동 시장과 같은 경제 통합체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이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통합의 두 축을 만들어 역내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줄 동북아 시대 구상(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을 제안했다. 두 축은 1) 평화 공동체와 2) 경제 공동체이다. 동북아시아 시대 구상은 역사적 유산으로 인한 불신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철학에 기반한다.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달성하려면 오랜 기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상의 성과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몇 가지 진전과 진보가 있었다. FTA에 있어서의 진전, 금융 협력, 에너지 및 환경 협력이 있었고 철도와 항만과 같은 인프라 개발에서는 진보가 거의 없었다.

서론: 구상의 배경과 역사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FTA와 공동 시장과 같은 경제 통합체를 구축하지 않은 지역이다. 90년대 이후 동북아의 주요 3개국, 중국, 일본, 한국은 에너지, 물류, 환경 등과 같은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1999년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 협력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러나 통합 절차는 정치적 장벽과 기타 장애로 인해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공동체 의식의 부재, 주요 국가간 경쟁관계, 역사 유산 및 안보 문제, 리더십의 부재, 민족주의의 확산으로 동북아의 제도적 경제 통합은 지연되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동북아 시대 구상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동북아 시대는 경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번영의 공동체를 달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의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이는 평화의 공동체로 발전할 것이다 (2003.2.25).”

이 구상은 두 개의 축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자 한다. 두 개의 축은 평화 공동체와 경제 공동체이다. 그 후 동북아시아 경제 공동체는 한국의 최우선 국정 과제가 되었다. 참여 정부는 “대통령자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번영, 금융 및 물류 허브 구축, FDI 유치, 에너지, 철도, 환경 등 분야에서의 경제 협력과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데 주력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불안정한 안보 상황은 번영에서 평화로의 변화를 다소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장애를 고려, 정부는 번영과 평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전략을 택했고 위원회 이름을 “대통령자문동북아 시대위원회”로 바꿨다. 이 위원회는 두 개의 목표를 조정하고 달성하는 임무를 맡았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는 동북아 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한 한 축이고 그 목표는 공존과 공동의 기반을 쌓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달성은 동북아 국가들간에 강력한 관계와 공동의 비전을 구축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현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동북아의 경제 통합은 분명 장기적 목표이다. 그러나 90년대부터 어떻게 더욱 심화된 협력을 위한 기반을 쌓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역내 학자들은 동북아가 유럽의 경우처럼 경제 통합을 통해 세계의 3대 경제 블록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

다음에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비전, 목표, 전략을 검토하고 구상과 그 성과를 검토한다.

1. Ahn and Lee(2003), p. 422.

동북아 공동체 비전과 전략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비전과 전략은 최근에 더욱 공고해졌다. 비전, 전략, 로드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위원회의 2006년 4월 28일 대통령 보고서에 제시되어있다. 아래 보고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전, 목표, 혜택, 원칙, 로드맵을 소개한다.

1. 비전, 목표, 혜택

동북아 경제 공동체 설립 비전은 동북아의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한 기반을 쌓는 것이다.² 경제 공동체 구축 구상은 경제 협력과 통합을 통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구축하는 지역 전략이다. 이는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혁신과 경제 개혁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증진하는 국가 전략이다. 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 달성의 교량, 허브, 중재자 역할 및 경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비전은 동북아가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역사적 유산으로 인한 불신을 극복해야 된다는 철학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치적 장애물을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시장이 창출될 것이며 이는 세계의 우수 산업 및 기업들이 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게끔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주요 동인이 될 것이다.³

동북아 경제 협력 목표는 다양한 부문에서 경제 통합을 촉진함으로써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 협력은 무역, 투자, 서비스 자유화를 포함한 종합적인 경제 통합의 제도화를 향한 단계로 간주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경제 협력 기구(Economic Cooperation

2. 김양희(2007), p. 100.

3. 유종일(2003).

Body)를 설립해 환경, 에너지, 물류, 지역 격차와 같은 공동의 지역 문제를 의논하고 역내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는 경제 공동체를 구축해서 단기적으로 공동의 무역 정책을 채택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동 통화를 만들고 인력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이다. 두 단계 접근법은 유럽 연합과 같은 다른 지역의 경제 통합의 선례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이다. 역내 협력 정신의 부재를 감안하면 첫 단계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몇 가지 잠재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경쟁력이 역내 국가들의 경제 협조를 통해 향상되고 무역이 원활해질 것이다. 둘째,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동의 문제, 예를 들어 통화 시스템 위기와 환경 문제를 다자적 논의와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설립은 국가들로 하여금 서로 화해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개방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통일 절차를 가속화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으로서의 동북아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세계적 이슈와 관련하여 주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 가지 기본 원칙

동북아 경제 공동체 창설을 위한 세 가지 기본 원칙이 있다. 단계별 접근, 동시성, 그리고 공동체 구축을 남북한간 경제 협력과 연계하는 것이다.⁴ 단계별 접근은 단순하고 쉬운 프로젝트로 시작해서 더욱 고도의 프로젝트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양자 FTA의 확산에서 지역 FTA로의 변화가 좋은 예다. 동시성 또는 동시적 추진은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 공동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양자 FTA와 협력 프로젝트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동북아 경제 협력과 남북한간 경제 협력을 연결하는 것은 북한이 동북아 경제 협력을 통해 개방하고 경제 개혁 조치를 취

4. www.nabh.go.kr.

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남북한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기획은 동북아 경제 협력과 남북한간 경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3단계 로드맵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유럽이 숭한 장애물과 도전을 극복하고 통합을 이루기까지는 반 세기가 걸렸다. 따라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 달성의 노력은 많은 시간과 점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3 단계 로드맵을 제안했다.⁵

첫 번째 단계는 경제 통합을 제도화하고 한·중·일 FTA의 적절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시기이다. 이 시기의 주요 목표는 산업, 정부, 학계간 공동 연구를 마치고 한·일 FTA를 재개하고, CMI(Chiang Mai Initiative)를 다자화하고, 공동 통화 시스템 구축, 중국 및 러시아와 에너지 협력, 북한, 중국, 러시아와 에너지 개발 협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경제 협력의 제도화가 이 시기에 실행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주요 목표는 한·중 FTA 와 한·일 FTA의 체결이고 이는 한·중·일 FTA로 이어질 것이다. 공동 통화 시스템 준비, 지역 개발 협력 기금의 조성,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 한반도중단철도(TKR)와 중국횡단철도(TCR) 연결은 또 다른 과제들이다. 세 번째 단계는 동북아 경제 협력을 동북아 경제 공동체로 확대하는 시기이다. 주요 임무는 단일 시장과 통화 시스템과 공동 경제 정책의 구축, 의사 결정을 위한 초국가 기관을 창설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통합 과정을 통해 동북아 경제 협력은 경제 공동체로 성공적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5. 박종철(2006), p. 353.

성과와 평가

동북아 경제 공동체 달성이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점에서 성과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만족스럽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분야별 성과를 검토하고 결과를 평가한다.

1. FTA

FTA 체결은 제도적 경제 통합의 첫 단계이다. 동북아에서는 3개의 FTA가 고려된다. 한·일 FTA, 한·중 FTA, 한·중·일 FTA, 한·일 FTA 협상은 농업 부문의 입장 차이로 인해서 중단되었다. 한·중 FTA에 대해 2007년 초에 기업, 정부, 학계의 공동 연구가 착수되었고 현재 진행 중이다. 한·중·일 FTA에 관한 기업 학계 공동 연구도 진행 중이다. 한·중 FTA를 중기적으로 시작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중·일 FTA 공동연구에는 학계, 경제계뿐 아니라 정부도 참여했다. 이는 공동연구의 구상으로 달성된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의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 시점에서 일본은 한·중·일 FTA 공동 연구를 공식적인 기업-정부-학계 공동 연구로 추진하는데 조심스럽다. 동북아 경제 협력을 촉진하려면 조기에 한·중 FTA 공동 연구를 끝내고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⁶

한·일 FTA 협상이 재개되어야 한·중·일 FTA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미국이 동북아 공동체의 개념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를 어떻게 동북아 경제 공동체에 유익하게 활용할

6. 중국과 일본은 동북아 경제통합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 중국은 한·중·일 FTA에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반면, 일본은 한·중·일 FTA에 적극적이지 않다. 대신에 일본은 ASEAN+3,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연대(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n East Asia: CEPEA)를 추진해왔다.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대안을 찾아서 일본과 중국에게 한·미 FTA가 동북아 경제 통합을 증진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한다.

2. 금융 협력

금융 협력의 목표는 역내 금융 위기를 방지하고 세계 성장에 기여하도록 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지역 통화 시스템 안정화, 장기적으로 단일 통화 출범, 외환 보유고 풀링 협정(reserve pooling arrangements) 메커니즘의 구축은 부가적 목표이다. ASEAN+3 포럼에서 금융 협력이 논의되었다. 이 부문에서의 성과로는 CMI의 다자화로 인한 양자 스왑 시스템의 다자 스왑 시스템으로 확대, 지역 통화 단위에 관한 유익한 논의와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 그리고 아시아 채권 시장 구상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금융 협력에서의 진전은 주목할 만하고 아시아 경제 통합의 여러 가지 특성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무역 통합은 대부분의 경우 금융 통합보다 앞서간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금융 통합이 무역 통합을 앞서왔다. 미래 통합을 위해서는 다자 통화 협력 시스템의 제도화가 진척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 통화의 사용을 확대하고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3. 에너지 협력

동북아는 중국과 러시아 같이 막대한 에너지 자원과 광대한 영토를 가진 그룹과 한국과 일본처럼 에너지 자원을 수입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에너지 협력을 통해 두 개의 그룹은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가스, 석유, 전기와 같은 에너지 자원 협력 관련 현재 추진중인 프로젝트가 많은데 한국은 몇 개의 에너지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2004년 9월에 체결한 한·러 가스 협정(Korea-Russia Gas Agreement) 하에 한국은 가스를 들여오기 위해 중국 및 러시아와 협력한다. 장차 한국은 러시아의

동 시베리아 석유 공급 개발 프로젝트와 사할린 석유 및 가스 개발 프로젝트에의 참여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4. 지역 개발 협력

과거의 지역 개발 협력은 다소 느리게 진행되었고 성과도 많지 않았지만 동북아 국가들은 최근 지역 개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중국은 철도 및 도로의 건설과 동북 3성 개발 계획하에 자유 무역 지대의 구축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는 TSR-TKR 연결과 새로운 항만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지역 개발 협력에 참여하기 위해 세부 계획과 전략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은 TSR-TKR 시범 프로젝트와 나진 항만 개발 프로젝트 참가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 중국의 동북 3성, 시베리아, 동 몽골의 자원 개발을 위한 다자 협력 모델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동북아 지역 개발은 국제 자금 제공을 통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기업은행, 일본의 미즈호은행(Mizuho Bank), 중국의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China)에 의해 설립된 동북아개발금융위원회(Northeast Asian Development Financing Council)는 다시 활성화 되어야 하고,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Development Bank)과 동북아개발기금(Northeast Asian Development Fund)의 설립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5. 환경 협력

황사 문제에 대한 환경 협력은 진전을 이루었다. 한국 정부는 중국 사막 지역에서 날아오는 황사를 막기 위해 나무를 심기 위한 기금 조성 마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환경 문제는 다자적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한다. 동북아의 악화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 국가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 일본과 동북아의 현 환경 상황에 대한

공동 연구를 하고자 한다. 특히, 황사와 황해 오염과 같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북아 환경 기금의 설립은 주변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맺음말

동북아 협력 구상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하는 최초의 제안이다. 이 구상은 역내 적대감과 불신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불식시켜서 동북아 국가들이 EU처럼 평화롭고 번영한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과 일본과 같은 역내 주요국은 지역 통합을 차치하고서도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 데 충분한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동북아 협력 구상은 획기적인 지역 제안이다. 역내 사람들에게 화합과 협력은 역사적인 과제이고 이 구상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시기 적절한 제안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동북아 경제 공동체는 동북아 국가들간의 공동 번영을 계획한다. 경제적 역동성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역내 잠재 성장률을 최대 로 달성하려면 제도적 통합을 넘어선 기능적 통합이 우선되어야 하고 이 구상은 이런 문제를 적절히 다룬다.

그러나 동북아 경제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예를 들자면, 우선, 동북아 국가들은 공동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역내 통합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역내 시장 경제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EU와 NAFTA가 성공적인 경제 통합의 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회원국들이 성숙한 시장 경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는 비전을 추진하고 회원국들을 장려해서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고 마음이 맞는 지도자들을 필요로 한다. 유럽 경제 통합의 과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예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양희. 2007. “2020 선진한국의 국가전략: 경제전략,” 『통일연구원 공동연구 최종보고서』. 서울: 통일연구원.
- 박종철. 2003. “동북아 안보경제협력의 이론적 틀,” 서울: 통일연구원.
- _____. 2006.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서울: 오름 출판.
- 안형도. 2006. “경제공동체 시각에서 본 한국의 동북아시대 구상: 이론적 기초와 체계,” 박종철 외. 서울: 도서출판 오름.
- 안효승. 2003. “동북아 경제 협력체 추진 방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 유종일. 2003. “동북아 구상의 비전과 제도개혁,” 『KIEP 국내정책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창재. 2005. “동북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ong Kong Statistics. www.info.gov.hk/censtatd/eng/hkstat/index.html.
- IMF. 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 Ministry of Commerce, People’s Republic of China. www.mofcom.gov.cn/.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1998-2004.
- OECD, *International Direct Investment Statistical Yearbook*, 2002-2004.
- Presidential Committee on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2004. “The Vision and Challenges for Promot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 _____. August 13, 2004. “Northeast Asian Cooperation Initiative for Peace and Prosperity: Vision and Strategy.”
- _____. April 28, 2006. “Building the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Short to Midterm Projects.”
- _____. <http://www.nabh.go.kr>.
- Standard & Poor’s DRI, *World Economic Outlook*, 2005.
-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www.koreaexim.go.kr/kr/).

UN COMTRADE (unstats.un.org/unsd/comtrade/default.asp).

UNCTAD FDI Database (www.unctad.org/Templates/Page.asp?intItemID=1923).

Yearly Statistics, The Republic of China, 2005.

중국과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

장윤링
(ZHANG Yunling)

다양성은 이 지역의 현실이다.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 차이점은 한 지역의 구성원을 배제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동북아 경제 협력은 제도적 및 비제도적 측면에서 다층 구조로 변모했다. 동북아시아 공동체는 단일 지역 기구가 아닌 다층 협력 메커니즘으로 대표될 것이다. 이 메커니즘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협력 프로그램, 시민 사회 교류, 제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3자 차원의 협력수준을 넘어선 동북아시아 협력을 장려해야 한다. 공동체 구축은 정치적 신뢰와 역내 국가들간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북아 지역은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양자관계에 기반한 정치적 화해를 필요로 한다. 정치적 화해의 과정은 시작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서론

공동체 구축은 동아시아에서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진 개념이다. 공동체 구축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역내 국가들이 평화롭게 살고 공동의 관심사와 운명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동북아 공동체는 역내 문제를 관리하는 권능을 가진 유럽식 지역 기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북아 공동체 구축의 목표는 평화롭게 사는 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을 통해 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공동체는 역내 국가들을 통합하고 공동 번영의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할 것이다. 역내 무역과 투자 흐름은 자유화와 협력 조치들을 통해 발전될 것이다. 동북아 공동체의 본질은 거대 지역 기구를 설립하는 것

이 아닌, 협정을 통해 규칙과 기준에 의한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필요하다면 지역 기구가 권고와 조율은 할 수 있을 것이다.¹ 공동체로 인해 동북아는 환경, 교통, 에너지 등과 같은 공동의 이슈들을 해결하는데 협력의 정신을 키워야 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공동체는 협력을 통해 동북아를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만들 것입니다. 동북아 국가들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또 동시에 슬픔과 대립을 공유해왔다. 공동체 의식을 기반으로 역내 국가들은 선린의 정책과 문화를 수립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이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공동체 구축의 과정에서 다르다고 어느 특정 지역 회원국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 존중과 관용은 동북아의 문화가 되어야 한다. 대중 매체와 새로운 정보는 현대 사회에서 공유될 수 있는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도록 기여해야 할 것이다. 중국, 한국, 일본의 실질적 협력은 동북아 공동체 건설에 필수적이므로 3개국의 지도자들은 정상적 교류와 회의를 통해 공식적인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해야 한다.

안보의 측면에서 공동체는 역내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달성해야 한다. 동북아는 아직 2가지 측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한반도 분단과 동북아 안보 구조. 공동체 구축은 한반도의 대치 상태를 해결하고 모든 회원국을 위한 통합된 안보 틀을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6자 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현존 또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동북아 공동체는 단일 지역 기구가 아닌 공식 협정, 중앙 및 지방 정부 차원의 협력 프로그램, 시민 사회 교류, 제도화된 기구로 뒷받침된 다층 구조의 협력 메커니즘을 결합한 종합적 틀로 구체화될 것이다. 동북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통합된 지역 기구의 통치를 참여국들이 어떻게 받아

1. Chang-Jae Lee, "Rational for institutionaliz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at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dited by Yoon-Hyung Kim, Chang-Jae Lee, KIEP, Seoul, 2004, p. 23.

들일 것인지 예측하기엔 시기상조이다.²

장애물이 너무 많아서 동북아 공동체 건설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공동체 구축을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정부, 사회, 시민들 간에 지역 협력과 신뢰의 가치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다. 공동체는 점진적으로 심화되고 확대되는 절차이다.

I. 경제 통합의 진전

중국, 일본, 한국은 동북아 지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국가의 경제는 통합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한국과 일본간의 무역과 다른 경제 교류의 급격한 증가에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 중국, 한국, 일본의 무역 관계

(십억 \$, 수출 및 수입)

	중국·일본	중국·한국	한국·일본
2000	83.1	34.5	52.3
2001	87.8	35.9	43.1
2002	101.9	44.1	44.0
2004	167.9	90.1	53.6*

출처: China Statistics, JETRO, Statistics and Surveys. *는 2003년 자료.

통합은 직접투자가 이끄는 역내 무역과 관련 서비스 활동을 통해 달성된다. 3국간 무역의 많은 비중이 FDI와 관련 있기 때문에 FDI 흐름은 3국의 경제를 통합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다.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기업의 40%는 중국에 투자했고 이들 기업의 무역 비중은 높게는 75%에 달한다.

2. 지역문제를 다룰 수 있는 실질적 기능을 하는 지역기구의 설립은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Zhang Yunling,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Beijing: World Affairs Publisher, 2004), p. 3 참조.

중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의 절반 가량이 상품의 75% 이상을 일본으로 판매했다.³ 비록 현재 FDI 흐름이 일본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향하고 있지만 경제 통합의 근본적인 이유는 제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있다. 생산과 서비스의 산업 내 분리는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했고, 이는 3국을 상호 의존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로 만들었다. 단순한 무역과는 다른 경제 관계가 3국 내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명백하다. 제조업의 구조조정은 금융, 교통, 물류와 같은 서비스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고 3국 간 인적 자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켰다. 중국의 경제 성장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면, 중국에서 한국과 일본으로의 자본 흐름은 증가할 것이고 이는 더욱 균형 있는 경제 통합의 구조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경제 통합은 이윤 창출과 경제적 효율성을 기반으로 사업 전략을 세우는 기업에 의한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에 의한 시장 주도형의 구조조정은 공동화 효과를 낳아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비교 우위에 의한 생산과 서비스의 새로운 구분은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었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한 국가에게도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중국은 한국의 FDI로 큰 이익을 봤다. 또한 일본으로부터는 FDI를 받음으로써 현대화된 제조업을 발전시키고 수출과 내수 시장의 경쟁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을 받았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은 장기적으로 경쟁력 향상에 도움되는 시의 적절한 구조조정으로 혜택을 봤다. 이와 같은 3국의 상호보완적 경제관계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경제 통합은 제도적 투명성과 안정성, 시장 자유화, 그리고 거시 경제적 조율을 필요로 한다. 시장주도의 통합은 완벽하지 않다. 제도적 협정 없는 거래는 관세와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장벽에 의해 차단될 수 있다. 한국, 중국, 일본에서 비관세 규제는 아직도 널리 존재한다.

3. Zhang Qi, "Major impediments to intra-regional investment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paper presented at Symposium on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Beijing, Sept. 29, 2002.

동북아시아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른 국가의 참여는 장려되어야 한다. 몽골, 러시아, 북한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다. 무역 거래, 투자 흐름, 네트워크 구축은 이 국가들로 점진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II. 경제 협력의 진행

경제 통합은 경제 협력으로 이어진다. 동북아 경제 협력은 제도적 및 비제도적 방법에서 다층 구조로 변모했다. 제도적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FTA이다. 한국과 일본은 이미 투자 협정에 조인했고 2003년에 FTA 협상을 시작했으며 2005년 말에 체결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한국은 2005년 FTA 타당성 연구에 착수했고 2006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일본만이 FTA 절차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양자 투자 협정을 우선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중국은 무역, 투자, 서비스를 포함한 긴밀한 경제 제휴 협정을 협의하기를 원한다. 3국 FTA 공동 연구 그룹은 2003년 3개국 정상 회담에 3개국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및 보고서를 제출 했다. 이 보고서는 실행 가능한 3국 FTA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고 3개국 FTA는 한국, 중국, 일본에게 긍정적인 거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3국 투자 협정의 양식에 대한 공동 연구가 실시되었다. 공동 연구 그룹은 다수의 회의를 개최했으며 3국 투자의 촉진은 각국의 내수 시장의 역동성을 증가시킬 것이고 3개국간 경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공동 연구 그룹 보고서는 3국 투자에 관한 법적 틀을 탐색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책 우선순위와 이해관계의 차이를 고려하면 비록 중국이 즉각적인 착수를 주장하고는 있지만, 한국, 중국, 일본에게 3국 FTA는 시급한 의제로 간주되지 않는다.⁴

4. 플러머(Michael G. Plummer)는 동북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지역간 무역 및 투자

중요한 성과는 2003년 10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중국, 일본, 한국 지도자 회의에서 조인된 3자 협력 진흥에 대한 공동 성명이다. 공동 성명이 지리적 근접성, 경제적 상호 보완성, 경제 협력의 증진, 인적 교류의 증가와 함께 표명하듯 3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지역 및 국제 문제에서 조율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3국 간의 협력은 관계 발전을 위한 만족스러운 모멘텀을 보여준다.⁵ 3국 지도자들은 1999년부터 비공식 회의를 가졌다. 다양한 분야의 부서들이 장관급, 고위 관료급, 실무급 회의의 메커니즘을 수립했다. 협력의 분야는 통관, 교통, 품질 감독, 감시, 검역에 이르는 부분에서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조치를 포함한다.⁶ 예를 들어 세관 당국은 무역 활성화에 대한 대화와 협력을 발전시켰다. 세관에 대한 양자 회담이 개최되었고 신속한 세관 통관을 위한 조치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한국과 중국간의 세관 상호 지원 협정(CMAA)은 이미 시행되었고 한·일 CMAA는 준비가 되었으며 중·일 CMAA는 협상 중이다. 운송 부문에서는 동북아 항만국장 회의(Northeast Asia Port Directors -General Meetings)가 2000년 9월부터 열렸다. 회의에서는 크루즈 관광 진흥, 투자 및 자유 무역 지대와 항만 시설의 신 디자인 기법에 대한 공동 연구를 실시했다. 정보 통신 기술 분야에서, 3국 ICT 장관 회의가 공식화 되었고 장관들은 동아시아 ICT 정상회의(East Asia (CJK) ICT Summit)의 틀과 보다 긴밀한 3국 협력에 동의했다. 6개 부문(차

흐름이 일본과 한국 사이보다는 주로 중국과의 교류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만약 무역이 행해져야 한다면, 협정은 3자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인다. Yoon Hyung Kim, Chang Jae Lee, eds.,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Seoul: KIEP, 2004), p. 174 참조.

5. Declaration on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among the three countries, Bali, Indonesia on October 7, 2003.
6. 대표들은 경제, 무역, 문화, 인적교류, 정치, 안보, 3자위원회의 창설 등을 포함한 14개 분야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선언에 합의했고, 3자위원회는 3국의 외무 장관들이 협력 활동을 연구, 계획, 조정, 감독하도록 구성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Joint Declaration on the Promotion of Tripartite Cooperation, Trilateral Summit, 2003 참조.

세대 인터넷 또는 IPv6, 3G 및 차세대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 및 정보 안보, 전자 통신 서비스 정책, 디지털 TV 및 방송,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실무 그룹이 창설되었고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 협력 또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도출했다: 동북아시아의 종합적인 지역 환경 협력 메커니즘, 먼지 및 모래 태풍 감시, 조기 경보 시스템, 동아시아 산성비 모니터링 네트워크 (Acid Deposition Monitoring Network), 지역 해양 및 해안 환경 보호를 위한 북서태평양 보전 실천 계획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 환경 협력을 위한 동북아시아 지역 프로그램(North East Asia Sub-regional Program for Environmental Cooperation), 동아시아 지역 해 관리 프로그램 (Partnerships in Environmental Management for the Seas of East Asia)의 틀 안에서 동 아시아 지역 해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협력이 추진되었다.

동북아 국가들이 에너지 소비와 공급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분야 중 에너지 협력은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은 아시아의 최대 에너지 소비국이다. 2004년 에너지 장관 회의가 개최되었고 3국 장관은 협력과 파트너십을 심화하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경쟁으로 인해 실질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에너지 소비자들에게뿐 아니라 에너지 공급자들을 위한 에너지 공동체는 협력적인 정신과 협력 정책에 의해 세워질 수 있다. 현실을 고려해봤을 때 주요 에너지 소비국과 에너지 수출국 그 누구도 에너지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3국간 IT 분야 협력은 기업과 정부의 노력을 통해 심화되고 있다. 3국은 동북아 IT R&D 기준 및 네트워크 (차세대 인터넷, 전화 시스템 등)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중국, 한국, 일본이 IT 공동 시장을 우선 개발해서 동북아의 실질적인 FTA의 중요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⁷

7. Kim Yong Ho, "New pattern of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최근 동북아의 관광 진흥을 위한 협력에 특별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관광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 중국, 일본 관광 당국은 3국을 하나의 행선지로 엮는 관광 진흥 프로그램을 출시했다. 이 구상으로 3국간 관광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었다. 교육, 문화 교류, 관광 진흥과 같은 분야에서 중국, 한국, 일본의 협력 또한 발전되었다. 두만강 개발 프로그램(Tuman River development program), 중·러 국경의 긴밀한 경제 관계, 남·북한 카이저 산업 개발 지구(ROK-DPRK Kaiser industrial development zone)와 같은 협력도 있다. 지방 도시와 지역사회의 항만 연계, 자원 개발, 도시 관리에서의 협력 등은 중앙 정부에 의한 노력보다 더욱 발전하고 있다. 역내 공동체 구축은 이와 같은 풀뿌리 운동에서 모멘텀을 찾는다.

현재 중국, 한국,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동북아 협력의 발전은 공동체 구축의 점진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3국의 높은 수준의 경제 통합과 상호 의존성에 비하면 이 절차의 성과는 너무 느리고 제한적이다. 정부 차원의 3국 협력은 회의나 포럼에 더욱 잘 반영된다. 거시 경제 조율, 3국 FTA, 에너지 공동체 등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실질적인 기구의 구축과 공동 행동은 만족스럽지 않다.

동북아 협력을 3국 차원을 넘어서 장려해야 한다. 잠재력이 큰 분야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중국, 러시아, 한국, 북한, 몽골을 포함한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력이다. 에너지 협력은 에너지 개발, 사용,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전략으로 고안되어야 하며 지금이 동북아시아 에너지 지도자 회의를 시작할 시기이다. 또 하나의 분야는 지역 발전이다. 예를 들어,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조치를 통하여 공동 국경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III. 동아시아 협력

동북아시아 협력을 논의할 때, 동북 아시아 협력과 동아시아 협력을 연결해서 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동북아 협력이 동아시아 협력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ASEAN+3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동아시아 협력 절차는 외환위기 이후 1997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연례 지도자 회의, 장관급 회의(10개 지역), 고위 관리 회의를 통해 지역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과 같은 골목할 만한 성과도 도출되었다. 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및 AFTA, 중-ASEAN FTA, 일본 싱가포르 간의 더욱 긴밀한 경제 파트너십 조치(JSCEP), 추진중인 일·ASEAN FTA, 한·ASEAN FTA와 같은 특혜 무역 협정, 메콩강 대유역 개발 계획과 같은 소 지역 개발 프로젝트를 통한 금융 협력에서도 실질적인 성과가 있다.

동북아 국가들이 주요한 역할을 한 경제 통합에 동아시아 협력은 기반을 두고 있다. 경제적 통합은 일본 주도의 안행형 모델(flying geese model)로 시작되었고 네 마리 용이 뒤따랐다. 이는 자본 흐름, 기술 이전, 제조 부품의 공급을 통한 수직 연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고 이는 일종의 경제 개발 연계에 기반한 역내 경제 커넥션을 형성했다. 지역 경제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잘 나갔지만 외환위기는 동아시아 시장에 기반한 통합이 취약하다는 사실과 동아시아 경제 성장과 통합의 환경과 구조를 드러냈다. 외환위기 이후 지역 협력을 추진하는 새로운 노력이 1997년 11월 팔라렘푸르에서 첫 ASEAN+3 회의로 이어졌다. 이 회의는 공동 이해관계와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지역 협력의 길을 열었다. 이는 새로이 정의된 동아시아의 지역 정체성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협력은 다층 절차로 특징지어질 수 있다. ASEAN은 지역 통합과 협력의 선구자이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동아시아 협력 절차에 편입시키는 고유의 역할이 있다. 일본은 역내 가장 큰 경제로서 모든 지역 통합의 주요 요인이다. 일본은 싱가포르와 첫 FTA 협상을 시작했고 현재 양자 및 소 지역 FTA(일-ASEAN) 협상 중이다. 일본은 앞으로 동아시아 FTA로 나

아갈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은 EAVG를 제안함으로써 동아시아 공동체를 진흥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고 더욱 적극적인 지역 FTA 전략을 채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지역 협정 가입에 더욱 적극적이다. 중국은 ASEAN과의 FTA에 다른 국가들보다 앞섰다.

동아시아 협력은 2005년 동아시아 정상회담의 개최와 더불어 더욱 빨라지는 듯하다. 지역 협력의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이 움직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실용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려고 노력한다.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지칭하는 다층 모델은 지역 현실에 부합한다. 협의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지역 기구 구축의 합법적 기반을 구성하는 지역 경제 활동의 규칙과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동아시아 협력 및 통합은 종합적인 절차이다. 최종 목표로 EU와 같은 지역 정체성을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점진적인 기구 구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절차를 통합하고 궁극적으로는 단일 지역 협정을 도출해야 한다.

동북아는 역내 동아시아의 위상을 고려하면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지하고 촉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 협력 절차를 추진시키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겠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과정을 더 빨리 추진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ASEAN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 노력에 특별한 역할을 하겠지만, 동북아의 주요 3개국의 역할을 지정해야 한다. 주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 3국은 세 개의 “10+1” FTA(중국·ASEAN, 일본·ASEAN, 한국·ASEAN)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 FTA(EAFTA)나 동북아시아 FTA를 더 빨리 추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 또한, 3국은 동아시아의 후발 개발도상국들이 시장 자유화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국력과 경제력을 증진하도록 도와주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한편, 동아시아 협력 절차는 동북아시아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10+3” 절차는 동북아 3국의 지도자들을 한 자리에 모으고 매년 공식화된 지도자 회의와 다른 정부 협력 메커니즘의 코스를 정

한다. 이런 측면에서 동아시아 협력은 동북아 국가들을 한데 모으고 더 빨리 움직이도록 장려하는 장치이다.

IV. 취약한 정치적 신뢰

공동체 구축은 역내 국가들간의 정치적 신뢰와 협력을 필요로 한다. 역사적 비극의 경험과 현재의 다양한 차이로 동북아시아 외교관계는 우선 정상화되고 진전된 양자관계에 기반한 정치적인 화해를 필요로 한다. 정치적 화해의 절차는 시작되었으나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중국, 한국, 일본 3국은 2000년부터 “10+3”의 틀 아래에서 높은 수준의 정치적 대화를 시작했다. 고위 지도자들간 대화의 메커니즘은 위에서 언급한 3국 경제 협력으로 이어졌다. 또한, 이 메커니즘은 정치적 관계를 개선하고 3국간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3국 협력에는 아직 안정적인 양자 관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특수한 역사적 요인으로 인해 신뢰 구축은 3국간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일본의 동북아 역사 문제에 대한 관점은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이는 3국 협력의 정치적 기반을 매우 취약하게 한다.

이 취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현재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은 역사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다른 동북아 국가들을 신뢰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 한국은 국민들이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각국의 관료는 국민들간의 적대적 감정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동북아 공동체 구축에 중국과 일본의 상호신뢰는 핵심적이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에 직면한 일본은 중국이 일본의 이해관계를 해칠 것이라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듯 하다. 이는 일본 정부가 중국에 대한 과감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발전에 주저하는 것은 전략적 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이

라고 한다.⁸ 중국 사람들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중국에 대한 일본의 현재 정책 의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⁹ 젊은이들간의 반일 감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도 비슷하다. 양국 정부가 양자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의견대립과 독도에 대한 분쟁은 양자 신뢰의 기반을 저해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민족주의의 발현으로 인한 것이라고 간주된다. 일본의 일부 칼럼니스트가 우려하듯, “서로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은 점점 받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¹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새로운 노력을 통해 양자관계를 증진하는 것이다. 역사는 간단히 해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를 고집하지 않는 실질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써 신뢰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영토와 영해에 대한 분쟁은 협력을 통해 대처할 수 있으며 협상에 대한 준비는 관계자간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고위급 대화와 협력에 대한 3국 메커니즘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정상회담에서 다뤄져야 한다. 이렇게 되려면 정상회담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대 정부 대화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사람 대 사람 그리고 NGO의 역할이 장려되어야 한다. 동북아는 지역 기반 민간 협력 기관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 한편, 동북아의 공동체 구축은 모든 양자 관계의 증진을 필요로 한다. 다른 한편, 절차 그 자체는 상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어야 한다. 지도자들의 성명에 반영

8. Takahara Akio, “Japan’s political response to the rise of China, Kokubun Ryosei,” Wang Jisi ed. *The rise of China and a changing East Asian order* (Tokyo: JCIE, 2004), p. 170.

9. Xu Jian이라는 중국 학자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본은 중국의 급속한 발전에 대해 너무 경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Paper presented on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peace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Seoul, January 13, 2005, Conference papers, p. 30.

10. 각주 7의 p. 41 참조.

된 경제 통합에 대한 열망이 강력한 정치적 뒷받침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상적으로, 만약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려면, 현재의 3국 협력 메커니즘은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을 공동체 구축에 참여하도록 초청하는 핵심적인 기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는 그 기반이 너무나 취약하다.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안보 문제도 잘 다뤄야 한다. 이에 는 두 가지 주요 과제가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군사적 동맹과 비동맹으로 분리된 안보 구조이다. 이는 냉전 시대의 유산이다. 한반도의 분단이 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핑계를 들 수 있지만 이는 한반도 분단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 메커니즘이 있다. 핵 문제는 수십 년간 축적된 복잡한 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종합적인 협정 없이 독립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6자 회담 메커니즘이 핵 위기를 해결하고 대치 상태를 종결 짓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해서 동북아 안보 프레임워크 협정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¹¹ 그러나 동북아 안보 프레임워크의 진짜 시험은 대결에서 협력으로, 즉 협력적인 안보 협정으로 전환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동북아의 정치적 안보 상황의 복잡성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 협력과 공동체 구축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싶어한다. 동북아 공동체는 경제 메커니즘이 비록 다른 부문보다 빠르게 성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경제, 정치 및 안보 메커니즘의 광범위한 기반을 필요로 한다.

V. 중국과 한국은 협력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동북아 공동체 구축의 두 축이고 이는 세 가지 측면에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양국의 역내 독립적 위상과 역할이고 두 번째는 상호

11. Kent Calder and Min Ye, "Regionalism and critical junctures: explaining the organization gap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4, 2004, p. 215.

관계이며 세 번째는 양국간 공동의 노력이다. 중국은 아직 개발도상국이지만, 광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 급격히 성장하는 경제로 지역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할 뿐 아니라 지역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의 안정을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역내 중국 시장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중국 시장은 무역과 FDI 흐름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을 생산 및 기업 네트워크 하에 한 곳으로 모은다. 중국은 지역 협력에 참여하고 이를 증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2001년, 중국은 경제 및 무역 장관 회의를 시작했다. 그 다음해, 중국은 중국, 한국, 일본간의 FTA의 타당성에 대한 학술 연구의 시작을 제안했다.

정치 및 안보 차원에서 중국은 평화와 발전을 장기 전략과 선린 이웃 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며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6자 회담을 개최하고 이에 참여함으로써 안보 환경을 개선한다.

OECD 회원국인 한국은 중국보다 경제적으로 선진화 되었다. IT와 다른 부분에서 중국보다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특히 중국에 대한 FDI의 중요한 원천이다. 장기적인 전략을 바탕으로 한국은 동북아 물류, IT, 다른 문화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한반도를 협력적이고 궁극적으로 통합되고 평화로운 곳으로 바꾸는 노력에 있어 한국은 고유의 역할과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하나의 동북아시아” 비전과 이니셔티브는 동북아 공동체 구축의 기반이 되는 신뢰, 상호 이해관계, 공존을 위한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된다.¹²

중·한 관계는 종합적으로 발전했다. 경제적으로 양국은 고도로 독립적인 관계를 구축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및 FDI 시장이다. 2004년, 양국간의 쌍방향 무역은 900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5년 1,000억 달러를 초과했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양국간의 무역에 있어 자본과 하이테크 상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도로 발전된 구조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한국

12. Moon, Chung In,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nd coping strategy,”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No. 1, 2005, p. 6.

에서 중국으로의 FDI는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2004년에는 중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국가였다. 누적 투자 금액은 258억 달러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한국 기업의 40% 이상이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받고 IT 중간 제품을 수입함으로써 큰 이익을 창출했고 한국 또한 중국에 투자함으로써 큰 이익을 창출했다. 중국 경제의 구조를 조정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과 한국 경제의 상호보완 관계는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다.¹³ 더욱이, 양국 경제는 내부 구조에서 더욱 통합되었으며 서로에 의존한다. 중국의 막대한 잠재력을 고려하면 중국은 한국에게 거대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미래에 서로 경쟁에 직면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 3국과의 경쟁에 대처해야 하지만 이는 윈-윈 상황이다.¹⁴

조기의 통합적이고 구조적인 FTA는 중국과 한국 모두에게 이롭다. 양국 정부는 협상을 준비하고 있고 내년에 이를 마치고자 한다. 중·한 FTA는 중·일 FTA 절차를 용이하게 할 것이고 두 개의 FTA는 3자 FTA를 원활하게 할 것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중국과 한국 간의 신뢰는 증진되어야 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차이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은 경제 부문에서만 아닌 더 넓은 측면에서 협력해야 한다. 한반도 관계의 점진적 개선을 통한 평화의 유지가 양국 모두에게 이롭다. 북한을 포용하고 북한을 지역 공동체 구축에 통합하는데 양국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동북아 공동체 구축에 있어 중·한 협력은 현재 난관에 처

13. 중국의 한국내 투자는 중국 경제의 진전에 따라 증가할 것이다.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대한 제1투자자가 될 것이다. Cao Shigong, "An evaluation on the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Northeast Asian Studies*, No. 1, 2004, p. 11.

14. 한국은 중국의 도전을 위협이라기 보다는 산업의 발달 및 국내 개혁을 위한 촉매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Nam Young-sook, "China's industrial rise and the challenges facing Korea," *East Asian Review*, Vol. 16, No. 2, summer 2004, p. 64 참조.

해 있는 것 같은 중·일 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¹⁵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북아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3국 관계가 발전하고 긴밀한 3개의 양자관계를 구축해야 하고 여기에 중국과 한국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 공동체 구축은 중국, 일본, 한국만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북한, 몽골, 그리고 러시아도 가능한 빨리 참여해야 한다. 경제 협력에서 모든 회원국을 포용하는 ASEAN+3 절차에 상응하는 협력 움직임이 동북아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동북아 안보구조도 조기에 고안해야 한다. 동북아 공동체는 좋은 의식과 실질적 행동을 통해 실현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필요로 하는 비전이자 꿈이다.

참고문헌

- Feng, Liu Xiang. 2004. "On China-Japan-ROK Free Trade Area." *Contemporary Asia-Pacific Studies*. 7. Beijing: IAPS, CASS.
- Haruki, Yoshinda, Kimura Yukio, and Aoki Hideya. 2003. *Japan's Initiative for Economic Community in East Asia*. Tokyo: JKIR.
- Hong, Jong-Pyo.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KIEP, CHAEC Research Series 04-04.
- Nam, Young-sook. 2004. "China's Industrial Rise and the Challenges Facing Korea." *East Asian Review*. 16(2).
- Yunling, Zhang. 2004.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Beijing: World Affairs Publisher.

15. Jong-Pyo Hong, "Regional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approaches to integ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KIEP, CHAEC Research Series 04-04, p. 18.

일본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제약, 기회와 전망

이토 겐니치
(ITO Kenichi)

존경하는 참석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오늘 ‘일본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제약, 기회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놓고 이렇게 뜻 깊은 포럼에서 연설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동아시아의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일본의 목소리는 하나가 아니며, 이에 대한 수많은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포럼에서 드리는 말씀은 저의 개인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일본의 입장을 대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최근까지도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 개념에 대해 무관심, 혹은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동아시아에서 지역적 협력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본은 항상 동아시아의 지역적 협력을 촉진하는 주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이러한 노력은 금융 위기 해결

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돌파구 마련에 기여한 일본의 역할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본인들이 한동안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움직임에서 뒤로 물러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온 것은 아마도 2003년 12월, 일본에서 개최된 일본-ASEAN 특별 정상회담에서 고이즈미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발표하면서부터였을 것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2003년 9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 1차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 (NEAT)'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저는 제 생애 처음으로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아시아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같은 목표를 이루고자 열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의 참가자들의 열정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일본으로 돌아온 후, 우리 일본측 회의 참가자들은 내부적인 연구 실행 및 정책 토론을 촉진하여 동아시아의 공동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에 지식토론의 장(Intellectual Platform)을 설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004년 5월 18일 도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CEAC)'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CEAC에 가입한 회원으로는 일본 국제관계 포럼, 일본 국제 문제 연구소, 일본 국제 금융 센터 등을 포함한 13개 국립 정책 연구소와 신일본제철(Nippon Steel), 도요타 자동차, 동경전력(Tokyo Electric) 등 14개 회사 대표, 그리고 학자, 언론인, 정치인 등으로 구성된 93명의 개별 회원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요청으로, 외무성, 재무성, 무역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4개 정부 부처에서도 고문 역할을 통해 CEAC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총리가 CEAC의 회장직에 제 자신이 의장직에 선출되었습니다. 모든 회원들과 고문들이 한 자리에 모인 CEAC 본 회의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정말로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을 논의했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지리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또한 열

떤 논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되고 결론에 이른 내용들을 참조하여, 저는 오늘 ‘일본과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제약, 기회 및 전망’이라는 주제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냉전 종식 후, 세계화라는 또 다른 동향과 함께 지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까지 전 세계 지역 중 두 곳에서는 그러한 지역주의 동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두드러졌는데, 이 지역들이 바로 중동과 동아시아였습니다. 중동은 아랍-이스라엘 사이의 정치, 경제, 문화적 갈등으로 지역주의를 지키기 힘들었던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으나, 동아시아에 지역주의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중동의 경우처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분명, 이 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경제 발전 수준, 전통 가치, 문화, 인종, 종교, 언어, 정치 체제 등의 다양성이라는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을 가져왔습니다. 냉전 기간 중에는 정치적, 이념적 장벽이 긴밀한 지역 협력에 장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실들은 지역 내 거대 변화를 가져온 더욱 강력한 통합의 물결로 인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냉전 이후 역내 교류와 상호 의존성의 확장으로 인해 지역 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동아시아는 역동적인 경제 발전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거주하고 있고, 이 지역은 세계 GDP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의 외화 보유액이 전세계 외화 보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997년 동아시아의 금융 위기로 인해, 동아시아인들은 국가 번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 덕분에, 우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는 다른 국가가 아닌 우리의 이웃국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지역적인 통합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ASEAN이 기울여온 노력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 통합에 있어 수많은 장

애물이 존재하는 동아시아에서, ASEAN은 항상 통합 노력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ASEAN은 ASEAN+1, ASEAN+3, PMC, 그리고 ARF 등 주요 지역 협력 포럼을 개최해 왔습니다. 이러한 포럼들은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기반을 다져 왔습니다.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북쪽에 위치한 일본, 한국, 중국은 3국간의 통합 촉진뿐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적 통합을 위해서도 자신들이 주도권을 잡고 통합노력을 기울일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규정 확립과 제도화가 통합에 원동력이 되어온 EU와는 대조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공동체 건설이라는 개념은 원래 다양한 기능적 협력의 증진에서 기인했습니다. 기능적 협력의 예로는 경제 파트너십 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s),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hiang Mai Initiative),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sian Bond Market Initiative), 아시아 브로드밴드 이니셔티브(Asia Broadband Initiative), 메콩강 유역 개발(Mekong Region Development)등을 들 수 있고, 또한 테러와의 전쟁, 불법 마약 밀매, 해적, 핵 비확산,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식품 안보, 보건, 지적 재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해 왔습니다. 공동체 건설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법은 타 지역에 비해 다양성이 두드러진 동아시아의 현실에 더욱 잘 들어맞으며, 저는 이러한 기능적 접근이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택을 가져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공동체 건설은 단순히 기능적 협력을 증진하는 것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장의 힘이나 중재적인 외교 협상에만 맡겨둔다면, 우리의 목표는 표류하고 방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공동체 의식’ 또는 ‘동아시아인으로서의 공동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독일인 친구가 저에게 유럽이 통합되면 자기는 유럽인이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럽 통합 후에는 독일인이라는 정체성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동아시아인들은 아직도 ‘경제적인 통합’, 기껏해야 ‘경제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단계입니다. 기능적인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는 곧 '에너지 공동체'와 '환경 공동체', 그리고 수많은 다른 종류의 '공동체' 구축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 건설을 향한 방향을 지시해줄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기능적 협력의 확산만으로는 어떠한 진전도 이루기 힘듭니다. 물론, 기능적인 협력이 이른바 '그물망(enmeshment) 작업'을 촉진하는 것이 사실이며, 이는 동아시아의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물망 작업'만으로는 공동체 건설을 향한 방향을 제시해 줄 지침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역내 국가들간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이 '동아시아의 공동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개발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공동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라고는 해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공동체 건설의 지침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공동체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의식'과 '동아시아인으로서 공동의 정체성' 확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 일까요? 유럽의 경우, 다시는 유럽 내에 전쟁을 일어나게 하지 말자는 유럽인들의 의지가 통합과정에서 그러한 지침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공동의 이해'보다 더 강력하고 '공동의 이해'를 뛰어넘은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역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할 '공동의 가치'입니다. 저는 역내 국가들이 서로에게 '존중 의식'을 갖고 '평등의 원칙'을 공유하는 것이 의미 있는 '공동체 건설'에 있어 전제조건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은 '존중 의식'과 '평등의 원칙'에 대한 반대 개념이 '우월감'과 '지배 의식'이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좀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잘 사는 나라건 가난한 나라건 모든 국가들은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크기에 상관없이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존중 의식'과 '평등의 원칙'에 기반해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동아시아

아 지역의 국가들은 우리의 이웃국이 국제 분쟁을 해결하려는 수단으로 결코 무력이나 위협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UN 헌장의 4장 2조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자국의 헌법 9조에서 '정의와 질서에 기반한 국제 평화를 진정으로 열망하는 일본 국민들은 주권으로서의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국제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위협과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법적인 틀이 아니라 그 동안 이루어진 진전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공동체 건설에 대한 진전이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한 유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EU 회원국들 사이의 국경을 살펴 보면 서로를 향해 겨누고 있는 탱크, 미사일, 또는 공격 요새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법적인 이유 외에 수많은 이유들, 즉, 정치, 경제, 및 기타 사유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전쟁 없는 공동체(no-war community)' 라 부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제 연설의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의 이해' 를 넘어선 '공동의 가치' 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 의식' 과 '평등의 원칙' 에서 시작해서, 우리는 신뢰감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국들이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 위협에 의존한다든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감은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 건설' 의 더 높은 단계로 진전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법적인 틀이 아니라 그 동안 이루어 놓은 진전 상황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건설' 노력은 '경제 공동체' 건설에서 시작해서 '에너지 공동체' 와 '환경 공동체' 로 차근차근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공동체' 라는 최종 단계에 이르기 전에 동아시아 지역 내에 '전쟁 없는 공동체' 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2장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 전망과 과제

제주평화활동센터의 역할

제주의 번영: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국제투자

제주영어마을: 새로운 발상 및 뉴욕과의 연계

제주평화활동센터의 역할

아카시 야스시
(AKASHI Yasushi)

지금 우리는 중국과 일본, 한국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증대하고 이들의 세계 평화 기여에 대한 잠재력 또한 크게 확장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또한 UN의 전후 평화구축 활동뿐 아니라 평화 유지 활동에 대한 요구가 점차 확대되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 국가의 주요 수도 및 도시에 대한 지리적 근접성, 현대적 역사 및 빼어난 경관과 온후한 기후를 갖춘 제주도가 국제 평화 유지, 외교 중재, 갈등 예방 및 평화 구축 활동에 있어서 연구 및 교육 등 소지역(sub-region) 활동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제주도에 그러한 센터를 설립하는 것 자체가 관련 국가들 사이에 자신감 및 협력을 구축하는 중요한 행위가 될 것이며, 평화 창조, 평화 구축 및 평화 유지에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이고 조율된 UN의 노력을 향한 세계적인 움직임에 아태 지역의 참여와 기여를 증진시킬 것이다. 제안된 평화 센터의 활동은 UN 중심의 평화 활동의 이론과 실습을 잘 실행하고 있는 수많은 시민, 경찰, 군인에 대한 교육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변화

21세기는 1990년대부터 10년 동안 지속된 인종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을 이어받았다. 그러나 동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중인 역동적인 프로세스의 극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사실, 앞으로 최소한 10년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놀라운 성장은 아시아의 힘의 균형뿐 아니라 세계적인 균형점이 될 수 있는 폭넓은 영향력으로 인해 지대한 관심의 대상

이 되어 왔다. 중국 경제는 일본의 경제보다 규모는 작지만 구매력 측면에서는 이미 일본을 앞서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새로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출현하면서, 경제적 몰락의 위기에 몰려 있으면서도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상당한 협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북한의 상황에 다른 국가들, 특히 6자 회담 참여국들이 적응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우리는 수많은 자유 무역 협정과 경제 파트너십 협약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러한 경제 협력은 관련 국가에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다. 긴밀한 경제 협력을 향한 동력이 더욱 돈독한 정치적 협력을 이끈다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에서는 현재 ASEAN+3와 ASEAN+6 체제 등 소지역 중심의 협력 차원을 넘어선 여러가지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은 향후 동북아시아 국가 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제도적인 틀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를 '동남아'에서 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동아시아'조차도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하게 자립적인 지리적 위치라 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APEC이 OSCE와 비슷한, 좀 더 만족스러운 포괄적(Umbrella)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태평양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과 일본은 새롭고 진정한 평등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메이지 유신 때부터 1945년 일본이 패망하기까지 100년간 지속된 일본의 동북 아시아 지배뿐 아니라 메이지 유신 전 1000년 동안 지속된 중국의 지배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또한 동북아 지역은 신뢰감을 주는 역동적인 증진국으로 부상한 한국의 놀라운 도약에도 익숙해 져야 한다. 중국의 성장이 경제 영역을 훨씬 뛰어 넘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사회의 정치적 민주화는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에, 중국은 불균형한 국내 경제 개발, 엄청난 환경적 도전 과제, 그리고 에너지 수요의 증가와 같은 여러 문제들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균

예산은 지난 14년 동안 지속적으로 2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군 예산 증가는 중국의 풍부한 자원력과 더불어 이웃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역내 국가간 친선 필요성

한·중·일 3국은 서로간의 양자적 관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소지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 또한 증진해야 한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이 지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UN활동에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UN이 직면하는 도전 과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와 중앙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카리브 해에서의 평화유지 활동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동북 아시아 국가들은 UN 활동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일 3국이 2000년 발표된 브라히미 보고서(Brahimi Report)에 담긴 권고안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권고안 중 특히 중요한 부분은 UN의 유서 깊은 평화유지 3 원칙을 준수하라는 것이다. 이 3원칙은 (1) 관련국의 동의, (2) UN의 형평성, (3) 자기 방어를 위한 최소한의 무력 사용 및 좀 더 '강력한' 교전 수칙 적용이다. 모순되어 보이는 이러한 요건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는가 하는 것은 어려운 질문으로, UN 평화유지활동이 향후 좀 더 효과적이고 적절해 지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i) 갈등 방지 및 조기 참여에 초점
- (ii) 인권 준수에 대한 영향력
- (iii) 평화구축에 대한 기여 능력 증진
- (iv) 복잡한 작전을 전장에서 좀 더 빠르게 전개하기 위한 역량 강화

- (v) '법치주의'에 대한 강조의 측면에서 민간인 경찰 모니터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방법

지역적 신뢰구축의 확대

동북아 국가들은 상호 신뢰 구축 방안을 증진하고자 하는 강력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투명성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보 분야의 공동 연구 및 교육 활동을 증진하려는 역내 국가들의 노력은 개별 국가들뿐 아니라 지역 전체에도 이익이 될 것이다. 한반도와 중국, 일본 사이에 중심적인 지리적 위치를 가진 제주도는 이 지역의 중심지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제주도의 복잡하면서도 비극적인 현대 역사는 자연 재해와 인류 갈등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공동노력과 평화와 화해를 촉진시키는 상징적인 촉매가 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 빼어난 자연 경관과 친근한 분위기는 심도 있는 대화와 토론에 유익한 환경이 될 것이다. 현 UN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배출되었다는 사실 또한 제주도가 평화 유지를 위한 역동적인 소지역의 중심지로 선정되어서 UN의 활동에 기여하고, 지역 및 소지역 과제에 힘쓰도록 해야 하는 좋은 이유가 될 것이다.

제주의 번영: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국제투자

고성규

한국의 아름다운 섬 제주는 동남아시아의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동북아시아의 허브 도시가 되고자 꿈꾸어 왔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는 지금의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다. 프로젝트가 실현가능하고 적절한 보상을 가져오는 한, 국내 및 국제 투자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시장성이 있는 새로운 개념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제주는 자국으로부터 고객과 경영,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주도로 끌어올 수 있고, 마케팅 전문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를 찾고 있다. 제주는 안정적인 수익만을 추구하는 금융 투자를 원하지는 않는다.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제주를 진정한 국제자유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시장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보여줄 때 성과를 낼 수 있다. 만약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전국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때문에 투자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시장은 '제주 국제자유도시'라는 제주의 공식적인 명칭에서 '자유'와 '국제'라는 단어를 지워버릴 것이다."

I.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꿈

A. 기본 전략과 노력

일반적으로 국제자유도시란 사람, 상품, 자본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국경도 없고 제한도 없는 도시'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국제자유도시란

비즈니스 활동에 있어서 최고의 편리성을 제공하는 특별한 지역이며, 무역, 제조, 국제 금융, 거주 및 관광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이다.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홍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전략을 채택하였다.

- 국방 및 외교를 제외한 중앙 정부의 모든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로 단계적으로 이양한다.
 - 차별화된 권력 집중화를 통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은 제주가 지역 상황에 적합한 발전 전략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 홍콩과 싱가포르 같은 여타 국제 도시에 대한 제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글로벌 표준에 맞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을 통해 제주는 관광, 교육, 의료 서비스, 깨끗하고 환경 친화적인 1차 산업, 그리고 첨단 산업(IT, BT) 등의 핵심 산업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가지의 전략을 통해 한국 정부는 다음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제주를 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최대의 자유를 제공하는 동북 아시아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한국 경제의 개방과 자유화의 기반으로 설립한다.
- 제주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 도민의 수입과 복지를 향상시킨다.
- 의료 서비스 및 교육 등의 관련 산업을 발전시킴으로써 관광 업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은 지역개발 프로젝트로일 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인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제주에 확립하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한 후, 본론인 외국인 투자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한다.

한국 정부는 2001년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특별법을 입안했고, 제주

를 세계적인 물류, 금융 및 관광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중앙정부에 의존적인 전략과 한국의 여타 경제자유구역과 차별화된 제도적 경쟁력 결여로 인해 그러한 노력의 성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에 그쳤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현 정부는 2006년 2월 제주 특별자치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을 마련하고, 제주특별자치도를 설립했다. 또한 제주도 개발위원회가 국무총리실 부속 기관으로 설치되어 중앙 부처와 제주 지방정부의 관계를 조율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자유시장 경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인 진전을 심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에 대한 국제 투자 증진을 위한 주요한 제도적 개선점과 달성 가능한 노력들은 다음과 같다.

- 제주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및 강화
 - 현재 기업세(13~25%)를 경쟁국가 수준(싱가폴 22%, 홍콩 17%)으로 낮춘다.
- IT, BT,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세금 감축 및 면제 대상에 포함
 - 세금 감축 및 세금 면제 대상이 되는 투자금액 요건을 현재의 천만 달러에서 5백만 달러로 줄인다.
- 관광산업 부활을 위한 환경 조성
 - 무비자 입국 국가 수를 현재의 169개국에서 180개 국으로 확대한다.
 - 항공 자유화 정책(open sky policy)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내국인 관광객을 위해 JDC 면세점에서의 구매 제한을 완화한다.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업 양성 및 규제 완화
 - 제주 영어마을을 건설한다.
 - 글로벌 교육 실현을 위한 국제 학교 및 유명 외국 의료 기관 유치를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B. 제주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

지금까지의 노력과는 별개로, 제주의 꿈, 즉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제주 도민들의 좀 더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인천을 외국인 투자 유치 조달에 의존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우리에게 교훈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투자 환경 측면에서는 제주보다 훨씬 나은 송도 국제 도시도 지난 4년 동안 실질적인 외국자본 투자 유치 건수가 2건밖에 없었다. 송도는 서울 등 여러 대도시들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과도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다. 주요 개발 프로젝트는 재정경제부 산하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였는데 이환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 바 있다. 그는 특히 외국인 자본 유치의 어려움에 대해 호소하였는데, 우리도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완벽한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제한으로 인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지 못했다. 정부 지원이 부족했고, 엄격한 규제와 행정적 제약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다. 경제자유구역의 원래 목적은 국내 경쟁력이 아니라 상하이, 싱가포르, 홍콩 같은 국제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가 균형발전정책, 대도시규제정책 및 부동산판매규제정책 등 수많은 제약들이 국제자유도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에 적용되어 왔다. 만약 우리의 목표가 국제적인 경쟁이라면, 똑같은 한국의 법과 규제를 국제자유도시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제자유도시는 법과 규제 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

현재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관이 중앙정부 부처와 경제자유구역청, 인천시까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어렵고 행정 처리 절차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 사업 허가 하나를 받는데 6개월 정도 걸리는 수준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에는 자유가 없

다라는 불만이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인텔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세계 최고수준의 기업이나 연구소를 유치하려면, 특별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국내의 다른 도시들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하면서 어떻게 글로벌 도시들과 경쟁하겠는가? 게다가, 여타 글로벌 시티에 비해 출발이 20년 이상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별로 없는 편이다. 중국, 싱가포르, 인도, 베트남에서는 대통령과 총리들이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발전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자유도시의 꿈을 이루려면 우리도 그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법적, 제도적 제약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면 단호하게 폐지해야 하며, 인프라 구축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이 증가해야 한다. 다른 국가의 도시들보다 더 매력적인 세금 감축 및 면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한국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의 논리가 국내에서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는 예외를 두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II. 제주의 꿈을 이루는 JDC

A. 투자 촉진에 있어서 JDC의 역할

2002년 5월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특별기구로 설립된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특별기구로서 아일랜드의 IDA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다. JDC는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의 지원 사유가 책임기관의 부재 및 예산지원의 부족 때문이라는 정부 분석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다.

JDC는 설립 이후 제주의 핵심 산업 개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데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즉, 이른바4+1 산업이라 불리는 관광, 의료 서비스, 교육, 환경 친화적인 1차 산업과 첨단 기술 산업으로 구성된 핵심산업 개발 프

로젝트에 매진하여, 국내외 투자 유치, 투자 조달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개발자금확보를 위해 제주공항 내 면세점 운영 등에 힘쓰고 있다.

개발 프로젝트는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 프로젝트와 전략 프로젝트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조기에 실현 가능한 핵심 프로젝트에는 리조트형 주거단지 프로젝트, 제주신화역사공원, 서귀포 관광항 프로젝트, 건강마을 프로젝트 및 외국교육기관의 캠퍼스마을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중장기 계획인 전략 프로젝트는 프리미엄 쇼핑아울렛 프로젝트, 생태공원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 각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 리조트형 주거 단지 프로젝트

JDC에서는 9억 달러를 투자, 천혜의 경관과 기후를 갖춘 중문 관광단지 부근에 주거, 레저, 의료 기능이 복합된 세계적인 수준의 리조트형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민간 기업 파트너 후보들과의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며, 협상에 성공할 경우 올해 안에 조인트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부지 건설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신화역사 공원 프로젝트

JDC는 현재 서귀포시 안덕면 근처에 전설, 신화, 역사 등 제주의 문화 유산을 활용한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개발 중이다.



우리는 미국 투자기업인 GHIL 과 영화테마파크 건설에 대하여, 그리고 홍콩 투자기업인 GIL과 차이나 타운을 중심으로 한 국제문화테마파크 건설에 대하여 12억 달러의 투자계약 동의 각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며 올 해 부터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다.

• 서귀포 관광항 프로젝트

서귀포 관광항 프로젝트는 아름다운 서귀포의 자연 경관 위에 세계 최고의 미항이자 유명 해양 관광지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이다. 예술적 경관을 중시한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곧 시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 프리미엄 쇼핑몰 프로젝트

JDC는 내국인 관광객과 중국인 및 일본인 등 해외 관광객을 위한 쇼핑 관광을 활성화 시키고, 지역 경제를 부활 시키기 위한 프리미엄 상품을 갖춘 쇼핑 단지를 개발할 것이다.



• **제주 건강마을 프로젝트**

JDC는 건강을 테마로 한 세계 수준의 의료 리조트 단지를 서귀포 시 근처에 건설할 계획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위원회가 구성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 **외국 교육기관 캠퍼스 마을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한국과 동북아시아의 영어권 국가 유학 희망자들을 흡수하여 해당 국가의 교육 및 생활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하고, 국제자유도시 실현에 필수적인 ‘일상적인 영어 사용’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계획 단계에 있으며, 중앙 정부의 영어마을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고려되고 있다.



• 첨단과학기술단지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제주의 풍부한 생물 자원과 청정 환경을 활용하여 제주도 아라동 근처에 IT·BT와 같은 지식기반 첨단과학기술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의 비즈니스 활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싱가포르와 독일 등 다른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학공원과의 협력 계약이 진행 중이다. 현재, 부지 공사가 61% 정도 완료되었으며, 입주 기업 모집은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B. 제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장점과 약점

1) 장점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 아시아 국가간 경제 협력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입지와 제주에서 비행기로 1시간 이내에 서울, 상하이, 오사카가 위치하며, 이 세 도시를 연결하는 삼각 지대의 중심부에 제주가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북아 허브로서 제주의 지리적 중요성을 뒷받침해준다. 뿐만 아니라, 송도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에 참여한 피에트로 도란

(Pietro Doran, Doran Capital partner의 CEO)은 창의적이면서도 설득력 있는 ‘황해경제권(Yellow Sea Economic Basin)’ 개념을 만들어 냈는데, 다음은 그의 인터뷰를 인용한 문구이다(*Korea Times*, 2004년 10월 26일).

“황해경제권(YSEB)이란 환황해권 200마일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YSEB에는 중국, 한국, 북한 및 일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역의 총 인구는 2억에 달한다. 2001년 기준으로 이 지역의 경제 생산총액은 1조 3천억 달러에 달했다. 새롭게 부상한 이 지역에는 베이징, 청도, 상하이, 서울, 부산, 평양, 후쿠오카 등 인구 백만 이상의 도시가 60여 개 위치해 있다. 이 도시들은 모두 비행기로 2시간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YSEB 개념은 지역 허브의 의미에 영향을 미쳐왔는데, 이 개념에 따르면 송도가 허브가 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송도가 한국에만 속해 있다는 개념에서 탈피해야 한다. 사람들은 ‘허브’ 개념에 대해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으며, 시장, 서비스, 그리고 제품 측면에서 매우 독특한 전문성을 가진 YSEB와 같은 경제지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홍콩과 싱가포르가 전문화된 지역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YSEB 또한 지역 전체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핵심 역량에 초점을 맞춘 전문화된 허브를 필요로 한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YSEB와는 관련이 없는 도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송도와 홍콩, 싱가포르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도란은 송도가 글로벌 비즈니스인들이 일하고 생활하는데 있어서 이상적인 장소로 발전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러한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YSEB의 중심부에 위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청정 자연환경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송도경제자유구역과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송도와는 또 다른 지역 허브로서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외국인 투자의 중요성

한국을 포함하여 전 세계는 과도한 자금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의 경우,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고액인 2천억 달러를 돌파했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고 있는 유동성 자금이 5조 5천억 달러에 달하며, 유보금 순위 상위 10위 회사들의 유보금 합계는 1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실현 가능성이 있고 적절한 보상을 보장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만 있다면 국내의 자금원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대부분의 국제자금은 국내자금에 비해 위험요소를 더 크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외국자본의 조달 비용 또한 더 높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주에서 원하는 국제 자금은 안정적인 수익만을 추구하는 금융 투자자들로부터가 아니라, 국제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경영 및 기술적인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투자가로서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인 투자자들이다.

JDC에서는 투자의 주요 유인을 포괄적인 마케팅 활동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마케팅 활동으로는 한국에만 특화된 신제품의 기획, 개발을 비롯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국내외의 제품 홍보 및 판매 활동, 그리고 A/S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2) 약점

• 프리미엄 아일랜드로서 제주의 새로운 브랜드 구축

과거에는 제주가 '3다 3무의 섬'으로서 국내에서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는 그러한 제주의 이미지가 내외국인 할 것 없이 큰 이목을 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동의 해외 홍보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즉, 제주의 이미지는 한국의 내륙지역과는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게다가, 차별화 전략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동북아 최고의 프리미엄 도시로서 제주의 새로운 브랜드를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라산이나 청정 해역과 같은 축복받은 자연 환경뿐 아니라 제주의 관문 역

할을 하는 아름답고 편리한 공항과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제공되는 편리한 교통 표지와 통일된 거리 간판들, 그리고 독특한 건물 디자인과 제주도민들의 친절함 미소 등 여러 가지 요소에 기반한 제주만의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주는 싱가포르의 부패 없는 투명사회와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 홍콩의 시장친화적인 정책, 상하이의 성장하는 국제 시장 및 거대 내수 시장 등의 요소 또한 갖출 수 있어야 한다.

•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 개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1단계가 완료되는 2011년까지 우리가 목표한 연간 천만 관광객 유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통해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프리미엄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성공한 프로젝트들을 참조 또는 모방할 경우, 관광객들은 더 이상 제주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좀 더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찾게 될 것이다. 프리미엄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목표 마케팅(Target Marketing)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국, 일본, 중동과 같은 목표 시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고, 프로젝트의 계획 초기 단계부터 이 투자자들과 공동으로 프로젝트 홍보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적합한 프로젝트 부지의 희소성

단시일 내에 여러 개의 거대 프로젝트를 실행하면 환경 및 생태적인 문제점 때문에 더 이상의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하기가 매우 힘들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 부지의 희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IT 관련 산업과 같은 지식 기반 산업을 서둘러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제주의 특성에 맞고,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유비쿼터스 도시라든가 모바일 테스트베드 프로젝트 등을 개발해야 한다.

III. 향후 과제

제주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국내 도시들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의 세계적인 도시들과 치열한 경쟁을 필요로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이루어야 할 여러 가지 필수 요건들 가운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투자환경 개선

한국정부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과 규제는 글로벌 표준에 맞춰야 하며, 마스터 계획 또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검토작업을 거쳐야 한다. 제주에 대한 국내외 투자를 다시 활성화 시키게 되면, 다른 외국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제주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의 꿈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계속해서 균형발전 전략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수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시장은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공식 명칭에서 ‘자유’와 ‘국제’라는 단어를 삭제할 것이다.

B. 강력한 의지와 자신감

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은 지역 발전뿐 아니라 국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전략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는 일부 정부 관료 또는 지역 지도층의 노력만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 및 지방 정부, 관련 기관, 제주도민을 포함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프로젝트 참가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도전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 환율, 유가 등 외부 환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내부적으로 통제 가능한 여건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의 자신감과 강력한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모든 제주도민들은 우리 차세대의 번영을 바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비전과 전망의 폭을 제주에서 아시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성공적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위해서 우리는 단순히 다른 성공적인 글로벌 도시를 모방만 하지 않고 제주의 고유한 특성을 최대한 잘 활용해서 새로운 개발 모델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독창성을 만들어 나가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동북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대한 강력한 믿음을 피력하며 이 글을 맺고 싶다.

제주영어마을: 새로운 발상 및 뉴욕과의 연계

다니엘 밥
(Daniel E. BOB)

본 자료는 한국의 제주도에 뉴욕의 마을과 도시, 그리고 명문 공립학교 및 대학과 직접 연계되고, 제임스타운(Jamestown), 쇼토카 학원(Chautauqua Institution), 뉴욕 주립대학(SUNY) 및 뉴욕 주 전역의 최상위 K-12 공립학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될 영어마을 건설을 위한 기본 개념을 제공한다. 이 영어마을의 설립 목적은 미국 대학에 가려는 한국인들과 기타 아시아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준비시키는 것이며, 세계화 시대에 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제주도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음악, 춤, 극장, 강의 등 문화, 교육, 예술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들이 제공될 것이다. 영어마을은 뉴욕 주와 한국의 인적 친분관계를 형성하고, 환경친화적인 공동체로서 건설, 기획되며, 인적 접촉 및 공동체 의식이 이 영어마을 설계의 핵심이 될 것이다.

I. 개념

A. 제주도와 새로운 영어마을 건설

한국의 제주도에 뉴욕의 마을과 도시, 그리고 명문 공립학교 및 대학과 직접 연계되고, 다음의 교육 기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영어마을 건설

- 제임스타운(Jamestown) 및 제임스타운 커뮤니티 칼리지(Jamestown Community College)

- 쇼토카 학원(Chautauqua Institution)
- 뉴욕 주립대(SUNY) 시스템
- 뉴욕 주의 최고 공립 K-12 학교들
- 학생들은 이 새로운 한국의 영어마을에서 부모나 가디언과 함께 생활 할 것이며 부모가 함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숙이 가능하다.



SUNY 버팔로 캠퍼스

B. 미국 대학 입학에 준비하는 학생 교육

한국 및 기타 아시아지역에서 온 영어마을의 학생들은 뉴욕 주에 위치한 최고 공립학교와 연계된 영어학교에 등록하게 된다. 이 영어학교에서



SAT 대비과정과 미국 아이비리그 학교 지원에 대한 안내 또한 준비될 것이다.

는 학생들이 미국 일류대학 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며, SUNY 대학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뉴욕 주 주민과 동등하게 대우한다. SUNY시스템은 미국의 최대이자 최고의 주립대학 시스템으로 그 학생 수가 400,000명(유학생 10,000명 포함)에 달하며 주 전역에 64개의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다.

C. 뉴욕 주 공립학교와의 직접적 연계 형성

뉴욕 주의 최고 공립학교와 직접적인 연계를 형성하고, 이들 학교 출신의 최고 교사들이 새로운 제주 영어마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게 한다. 뉴욕 주의 공립학교 시스템이 미국에서 최고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동산 세금 부과로 인한 자금 지원이 잘 되기 때문이다. 2004년의 경우, 뉴욕 주에서는 공립학교 학생 한 명당 연 평균 \$12,930를 썼으며, 이는 미국의 50개 주에서 뉴저지 주 다음으로 높은 금액이다. 사실, 브롱스 과학고등학교(Bronx High School of Science), 맨하탄의 스타이브샌드 고등학교(Stuyvesant High School), 그리고 버팔로의 시티 아너스 스쿨(City Honors School) (5~12학년) 등 뉴욕의 수많은 공립학교들이 미국 내 모든 사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통틀어 최고 학교로 손꼽히고 있다. 뉴스위크지(Newsweek)에서는 해마다 미국 내 공립고등학교에 대한 순위를 매기고 있는데 시티 아너스가 국내 4위를 차지했다.



브롱스 과학고등학교
The Bronx High School of Science



스타이비센트 고등학교
Stuyvesant High School



시티 아너스 스쿨
City Honors School

D. 교환 프로그램 개설

뉴욕 주와 여타 미국 주 및 여타 국가의 교사들은 새로운 영어마을 학교에 지원해서 가르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엄격할 것이고, 최고의 교사들만이 통과할 것이다. 지원자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사들의 월급이 고국의 학교에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높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한국으로 와서 단기간 일하는 교사들은 차후에 한국에서 교사업무를 마치고 귀국할 때 뉴욕의 학교에서 직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뉴욕 학교들과 계약을 맺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해외체류기간은 뉴욕 주 은퇴 및 연금 프로그램 계산에도 반영될 것이다. 뉴욕에서 엄선한 고등학교들과 학생교환, 홈스테이 및 1년간의 해외체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영어마을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전이라도 미국에서 상당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E. 문화, 교육, 레크리에이션 및 예술 프로그램

제주도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음악, 춤, 연극, 강의를 포함한 문화, 교육, 레크리에이션 및 예술 프로그램 제공할 것이다 1)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도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영어마을의 호소력을 크게 높일 것이다. 관광객들의 꾸준한 방문으로 영어마을의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2)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새로운 공동체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제공될 것이다. 제주영어마을의 설계는 미국의 지식 및 문화사에 있어서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해온 쇼토카 학원(<http://www.ciweb.org/>)의 양식을 따르고, 또 이 학원과 연계해서 건설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F. 적절한 도시계획은 성공의 열쇠

제주영어마을의 성공의 열쇠는 적절한 도시계획과 건축의 우수성이다. 쇼토카 학원의 수많은 빅토리아 시대 주택과 게스트 하우스, 호텔, 그리고 다른 건물(현재 미국에서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을 모아놓은 최대 컬렉션으로 각광받고 있음)을 복원하고 유지해온 건축가들과 건설업자들이 제주 영어마을 설계에 전문지식을 제공할 것이다. 쇼토카에서는 출입하는 차량 수와 건물 디자인, 학원의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상호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쇼토카 전통 건축물

G. 쇼토카 학원 소개

쇼토카 학원은 쇼토카 지역사회의 관문 역할을 해 왔다. 방문객들은 학원 행사나 활동에 참여하려면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입장권을 구입해야 한다. 일요일에는 수많은 종교 예배나 기타 프로그램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된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입장하면 방문객들은 대부분의 행사와 활동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연극과 오페라는 별도의 요금을 내거나 티켓을 구매해야 한다. 쇼토카의 주민들도 연회비를 지불하여 학원이 계속해서 저명한 문화, 학계 인사들을 초대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기여한다. 바로 이 시스템이 한국의 영어마을에도 채택될 것이다.



쇼토카의 전경, 2007

제주처럼 쇼토카 또한 해변에 위치해 있어서 방문객들과 주민들이 다양한 해양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즐길 수 있다.

쇼토카 학원(Chautauqua Institution)은 일종의 교육적인 실험학교로서

아테니움 호텔



쇼토카의 대중교통: 도보



브라톤 극장

〈2007〉 소토카 학원의 주간계획
 셋째주: 중국과 인도의 부상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JULY			
8 10:45 – Service of Worship & sermon. The Rev. Alastair H. Symington 10:45 – Ronnie Chan, chairman, Hong Kong Properties, Hong Kong Church, Troon, Scotland 2:15 – Theater. “Ah, Wildemess!” 2:30 – Washington (Pa.) High School Steel Band 5:00 – Vespers 8:00 – Theater. “Ah, Wildemess!” 8:00 – Sacred Song Service: “Carols at the Manger”	9 9:15 – The Rev. Alastair H. Symington 10:45 – Ronnie Chan, chairman, Hong Kong Properties, Hong Kong Church, Troon, Scotland 2:00 – Arun Gandhi, founder, M.K. Gandhi Institute 4:00 – Seth Waxman, former solicitor general of the US 4:00 – Janaki String Trio 7:30 – Opera. The Elixir of Love 8:15 – Music School Festival Orchestra. Timothy Muffitt, conductor	10 9:15 – The Rev. Alastair H. Symington 10:45 – Richard Celeste, president of Colorado College, former ambassador to India and Peace Corps director 2:00 – Anantanand Rambachan, chair, dept. of religion, St. Olaf College 5:00 – FES: In, Jest: Comedy Variety Show with Nels Cremean 7:00 – FES: In, Jest 8:15 – Chautauqua Ballet Company. Jean-Pierre Bonnefoux, director. Chautauqua Symphony Orchestra	11 9:15 – The Rev. Alastair H. Symington 10:45 – Elizabeth Economy, C.V. Starr senior fellow and director of Asia studi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0 – Traleg Kyabgon Rinpoche IX, president and spiritual director, Kagyu E-Yam Buddhist Institute 4:00 – Contemporary Issues Forum: Raul Fernandez, CEO, ObjectVideo 8:15 – Ragamala Music and Dance Theater “From Temple to Theater”	12 9:15 – The Rev. Alastair H. Symington 10:45 – Shashi Tharoor, under- secretary-general for communications and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2:00 – Traleg Kyabgon Rinpoche IX 4:00 – CLSC Roundtable/ Lecture: Jeanne Braham: <i>The Light Within the Light</i> 8:00 – New Play Workshop 8:15 – * Amp Piano Recital: Alexander Gavrilyuk	13 9:15 – The Rev. Alastair H. Symington 10:45 – Morning Lecture 2:00 – Dean Sloyter, Buddhist prison chaplain and film critic 4:00 – New Play Workshop 8:15 – An Evening with Irish Tenor Roman Tynan	14 2:15 – New Play Workshop 3:00 – Contemporary Issues Forum. Louise Richardson, exec. dean, Radcliffe Institute for Advanced Study 8:15 – Chautauqua Symphony Orchestra. Uriel Segal, conductor; Alexander Gavrilyuk, piano <i>Public Radio Day</i>

쇼토카 레이크 주일학교집회(Chautauqua Lake Sunday School Assembly)라는 이름으로 1874년에 설립되었다. 비영리기관인 쇼토카 학원은 뉴욕주 남서쪽의 쇼토카 레이크 옆에 위치한 교육센터로, 750에이커 규모로 건축되었다. 9주 동안의 시즌 기간에는 약 7,500명이 거주하며, 이 기간에 일정이 잡힌 공개 행사에 참석하는 인원은 142,000명에 달한다. 쇼토카 학원은 국가유적지명부(National Register of Historic Places)에 등재된 국가유적지(National Historic District)이며, 이곳은 1989년 6월 30일 국가역사기념물(National Historic Landmark)로 지정되었다. 해마다 8,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쇼토카 여름학교에 등록해서 이곳에서 제공하는 미술, 음악, 댄스, 연극, 작문, 및 다양한 특별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독서클럽인 쇼토카 문학 및 과학 교우회(Chautauqua Literary and Scientific Circle: CLSC)는 5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0,000개의 독서 서클을 후원해 왔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대통령은 1936년 원형극장 (Amphitheater) 연단에서 'I Hate War' 라는 제목의 유명한 연설문을 발표한 바 있다. 1880년에는 쇼토카 플랫폼 (Chautauqua platform)이 공공 문제와 국제 관계, 문학과 과학에 대한 공개 토론을 위한 국가 포럼의 장으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쇼토카에는 한 시즌 동안 약 100명의 강사가 강의를 한다. 1929년 설립된 쇼



토카 심포니 오케스트라(Chautauqua Symphony Orchestra), 는 현재 5,000 명의 청중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에서 솔로리스트와 함께 일주일에 세 번씩 공연을 하고 있으며, 쇼토카의 프로그램 센터인 쇼토카 발레단(Chautauqua Ballet Company)도 게스트 예술가를 초대하여 원형극장에서 공연을 한다. 쇼토카 악단(Chautauqua Conservatory Theater)은 브라톤 극장(Bratton Theater)에서 시즌 공연을 한다. 1929년 설립된 쇼토카 오페라단(Chautauqua Opera Company)은 노튼 홀(Norton Hall)에서 영어로 공연을 한다. 쇼토카는 독특한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방학 중 학습, 중급 학습 및 전문가 수준의 학습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쇼토카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더 많은 학습기회가 존재하여, 음악, 미술, 종교, 레크리에이션 및 지식의 추구가 모두 가능하다. 나이에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공개적이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학습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도 그들만의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다.



H. 인적 연계 형성

뉴욕 주와 제주영어마을 주민들간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뉴욕 주의 제임스타운에 특별한 연계를 형성한다. 영어마을 학생과 주민들이 뉴욕 주에 머무를 수 있는 홈스테이 및 교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반대로 제주영

어마을은 뉴욕 주 참여자가 영어마을에 머무를 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제임스타운은 25,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뉴욕 주 서부의 작고 안전한 커뮤니티로 쇼토카 학원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쇼토카의 활동 시즌은 매년 여름 10주 동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임스타운의 시장은 제주의 새로운 영어마을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I. 제임스타운 소개

제임스타운은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대법원 재판장으로 불리는 Robert Jackson 의 고향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제임스타운에 설립된 로버트 잭슨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영어마을에 컴패니언 센터(Companion Center)를 오픈하고 제주영어마을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James Audobon 이후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류학자인 Roger Tory Peterson 또한 제임스타운에서 성장했다. 로저 토리 페터슨 인스티튜트(Roger Tory Peterson Institute)에서는 그의 업적 및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을 기리고 있는데 역시 제주영어마을에 컴패니언 인스티튜트(Companion Institute)를 오픈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로버트잭슨 센터, 제임스타운



로저토리페터슨 인스티튜트, 제임스타운

내셔널풋볼리그(National Football League)의 신임 위원장인 Roger Goodell도 제임스타운 출신으로, 풋볼과 같은 미국 스포츠에 대한 연계도 확립될 것이다. 제임스타운에는 국제 대회를 개최하는 중요한 아이스링크가 있어 아이스 스케이트 또한 강조되고 있다.

또 다른 제임스타운 출신 유명인사로는 영화와 TV 스타로 한 때 이름을 날렸던 미국 코미디언인 Lucille Ball이 있다. 루실 볼 박물관 (Lucille Ball Museum)에서는 그녀의 활약상과 미국의 대중 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 제주영어마을과의 연계를 확립할 가능성이 있다.



J. 제주영어마을의 국제화

뉴욕과 다른 주의 주민들이 영어마을에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미국인들을 제주영어마을에서 일하고 거주하게 하면 학생들과 주민, 방문객 모두가 학교 밖에서도 영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며, 미국과의 연계가 한층 더 확대되고 심화될 것이다. 1) 뉴욕 주민들에게는 제주영어마을에 기업의 해외지사를 개설하거나 서비스업 제공 시 우선권이 부여될 것이며, 특히 제임스타운과 쇼토카 학원의 주민들은 최우선권을 부여 받을 것이다. 하지만 제주영어마을에 거주를 원할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미국 시민이면 누구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거주신청을 할 수 있다. 2) 영어 마을에 거주하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미국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한국으로의 무료 왕복 티켓과 주택 보조금을 제공받을 것이다. 3) 제임스타운과 제임스타운 커뮤니티 칼리지(Jamestown Community College)에서는 한국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국 문화 및 역사교육 집중 과정을 제공하고 제주영어마을로의 이사를 도와줄 지원센터를 설립할 것이다.

K. 제임스타운 커뮤니티 칼리지(JCC)의 위성 캠퍼스 설립

제주영어마을에 제임스타운 커뮤니티 칼리지(JCC)의 위성 캠퍼스를 설립한다. JCC는 두 개 캠퍼스에 4,000여 명의 학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뉴욕 주립대학(SUNY)과 특별 협정을 맺어 JCC의 2년 과정의 학위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에게는 SUNY의 4년제 대학에 입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JCC의 저렴한 학비로 인해 JCC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SUNY 캠퍼스에서 학위를 마치는 학생들의 경우 학사학위 취득 비용이 크게 절약된다. JCC는 고급반 학생들에게 미국 고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AP와 IB코스 이상의 칼리지 수준의 코스를 들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브랜치 캠퍼스를 새로운 영어마을에 설립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수한 과목은 미국 내 모든 대학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학사 학위 취득 시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JCC가 거의 모든 학생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제주영어마을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도 원한다면 SUNY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이다.

L. 환경 친화적인 도시 개발

영어마을을 글로벌 시민(global citizen)을 배출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범적인 커뮤니티로 설계한다. 새로운 영어마을의 설립 목적은 진

정한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영어마을이 한국에 위치해 있고 아시아 지역에 특별히 포커스를 맞추긴 하겠지만, 출신 지역이나 국가에 상관 없이 학생과 주민들 모두에게 개방될 것이다. 영어마을은 그린 커뮤니티로 기획, 설계되어 1인당 에너지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및 오염원 배출량도 최소화하여 환경 피해를 줄이도록 할 것이다.

II. 프로젝트 현황 및 기타 고려사항

2006년 9월 18일부터 25일까지 뉴욕주 제주영어마을 파트너(NYROK Partners)의 한국 측 대표 및 CEO가 뉴욕 주를 순방하여 제임스타운 관료들, 쇼토카 학원 대표, 주지사, 주 의회의원, 뉴욕주립대학(SUNY) 대표, 및 뉴욕 주 상하원 의원들을 만났다. 제주영어마을에 대한 아이디어는 예외 없이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대부분은 매우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후로, NYROK에서는 제주영어마을 프로젝트 현황과 관련하여 핵심 관료들과 연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뉴욕 주는 많은 다양성을 띠고 있으며 미 대륙에서 가장 큰 애디론댁 산악 공원(Adirondack Park),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버팔로와 시라쿠스와 같은 중소 도시와 문화적으로는 중서부에 속하는 미 서부의 작은 마을과 커뮤니티들이 포함되어있다.

현재 미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두 명의 정치 지도자들, 즉 힐러리 클린턴 미 상원의원과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또한 뉴욕 주 출신이다. 클린턴 상원의원 측에서는 제주영어마을과 뉴욕 시 연계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힐러리 클린턴의 지지를 통해, NYROK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지원도 모색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미국의 가장 명망 있는 정치가 두 명의 지지와 협력을 얻음으로써, 제주영어마을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 또한 NYROK 파트너의 CEO가 뉴욕 주 전역의 다양한 인사들과 긴밀한 인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영



나이아가라 폭포

어마을은 뉴욕 주의 지원과 협력을 얻는데 있어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NYROK 파트너의 CEO는 제임스타운에서 성장하고, 쇼토카에서 여름을 보냈으며, 제임스타운과 쇼토카를 대표하는 의원(추후에 뉴욕 주의 부주지사 역임)으로서 미 하원에서 일한 바 있고 미 상원에서도 거의 10년 동안 일하면서 뉴욕 의회 대표단(New York Congressional delegation)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 왔다.

제3장

동북아의 역사, 민족 정체성 그리고 갈등

동북아의 역사, 상충되는 기억과 화해

동북아의 역사, 민족정체성, 그리고 갈등: 중국의 시각

동북아의 역사, 민족정체성, 그리고 갈등: 일본의 시각

탈국가의 동아시아: 한국의 시각

동북아의 역사, 상충되는 기억과 화해

신기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역내 교류와 상호작용이 특히 문화와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해 왔다. 한·중·일 3국은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담과 같은 지역 기구의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수많은 논의도 존재한다. 하지만 식민 통치, 전쟁, 독재 등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상처들이 아직 완전하게 아물지 않은 상태이며, 역내의 모든 국가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 책임을 지기 보다는 남을 비난하는 태도를 종종 보이곤 한다. 중국과 한국에서는 반일감정이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식민주의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의식이 팽배하고 있다. 일본인들은 '사과 증후군(apology fatigue)'을 겪으며, 왜 6~70년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뉘우쳐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대부분이 그렇듯, 동북아시아 국가들간의 화해 또한 우선적으로 정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일본은 과거에 침략하거나 식민지화했던 국가들과 외교적 친선관계를 수립했다. 즉, 대만과는 1952년, 한국과는 1965년, 그리고 중국과는 1972년에 친선 관계를 맺었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은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국에 일부 '무상차관과 원조(grants and aid)'를 제공하긴 했지만, 과거

에 식민지배를 했던 국가들에 대해서 공식적인 배상을 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전쟁범죄와 학살에 대한 전후처리 문제를 다룬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an Francisco Treaty)에서 제외되었으며, 영토 분쟁이나 일본의 식민 통치와 같은 역사적인 사안들은 냉전 체제하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대부분 묻혀버렸다.

정의롭지 못한 과거 역사를 청산하고, 과거에 대한 견해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하면서 중·일 관계가 악화되었고, 일본의 식민 통치에 대한 한·일간의 마찰 또한 전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한국과 중국마저도 고대 고구려 왕토를 둘러싼 과거 역사를 놓고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이다. 대만 역시 과거 역사를 재검토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문제점들은 민족 정체성이라는 가장 민감한 사안을 건드리며 동북아시아에 민족주의(Nationalism)를 촉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민족주의로 인해 식민 통치 역사에 대한 주요 담론이 등장했으며, 위안부 및 강제 노역과 같은 부당한 과거 역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지배적인 틀이 형성되었다. 이는 모든 이슈들을 이원론적 틀로, 즉, 희생자와 침략자 구도로 바라보도록 제한하였으며, 다른 대안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베트남 전쟁 중 그들이 저지른 학살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은 내키지 않아 하면서도, 6.25 전쟁 중 미국에 의해 자행되었던 비슷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고구려 왕국의 영토 관련 논쟁 또한 중국의 민족주의 부상뿐만 아니라 ‘고토회복주의(irredentism)’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민족주의 경향을 반영한다.

일본에서는 냉전 이후의 안보 환경에 의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생겨났으며, 10년 간의 경제 침체로 민족주의 정치 부활의 텃밭이 다져졌다. 민족주의 성향의 학자들은 ‘일본인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교과서 출판에 앞장서고 있으며, 국기(national flag)나 국가(national anthem)와 같은 상징들을 부활시킨 것은 ‘보통 국가’가 되고자 하는 일본의 바람을 보여준다. 아베 총리가 취임 초기에 보였던 화해적인 아시아정책에 대한 제스처는 최근에 위안부 사안에 대한 그의 언급으로

문혀버렸다. 한국과 일본의 민족주의에 차이가 있다면, 일본에서는 우파가 민족주의 정치를 이끌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좌파가 그 선봉에 서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정치, 사회적 단합을 강화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근대화와 같은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데 국민을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단결력이 필요하며, 그러한 단결의 '접착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족주의다.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 지도부는 오명을 씻고 그들의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민족주의(애국주의)에 호소하고 있으며,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역내 및 역외 지역 모두에서 민족주의를 주춧돌로 삼고 있다. 영토 분쟁, 인권 문제, 핵비확산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교 사안들이 중국 지도부의 민족주의적 성향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은 아시아 이웃국들과의 관계를 위협에 빠뜨리고 싶지 않지만, 이들에게 체면을 구기고 싶지 않은 것이 현 상황이다.

따라서, 아시아국가간 교역, 문화교류 및 동아시아공동체 건설과 관련한 대화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 모두가 민족정체성에 기반한 정치를 선호하고 있다. 결국, 민족주의란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협의의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 추구의 측면에서도 번성한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토들은 항상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주권을 상징한다. 중·일간의 센카쿠섬/조어도(Senkaku/Diaoyu Island) 및 기타 영해 관련 논쟁과 최근 한·일간의 독도/다케시마(Tokdo/Takeshima) 문제로 인한 긴장고조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부당한 과거 역사에 대한 해결과 화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지만, 상충적이고, 심지어 지속적인 갈등을 유발하는 역사적인 기억들이 화해의 근본적인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모든 관련 국가들은 역사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르고, 종종 서로 상충되며, 과거 및 사건의 배경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들은 대중의 의식에 뿌리 깊이 박혀서 교육과 대중문화, 그리고 매스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일은 역내 국가들이 과거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럽의 경우, 과거(최소한 제 2차 세계 대전)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이 20년간의 전쟁을 종식하고 유럽을 하나로 통합시키는데 일조한 반면에, 동북아시아의 과거역사는 여전히 가까운 세 이웃국가를 갈라놓고 있다. 화해는 '깊이가 없는' 것이었으며, 역사적 사안들이 계속해서 지역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더 '깊이 있는'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국가들이 국민국가(Nation-state) 지향적이고, 이분법적인 희생자 대 침략자 개념과 접근법에서 벗어나 화해를 상호작용의 프로세스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의 과정에는 정치 성향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혹은 국제적으로 활동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시민단체, NGO, 희생자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둘째, 동북아 국가들은 과거에 대한 공통적인 이해가 지역적인 화해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비록 한·중·일 3국이 역사 문제를 놓고 잦은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거 역사의 구성요소들은 지역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19세기 이후로 서양 세력의 영향력에 대처해야 하는 것 또한 공통적인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근대적인 국민국가와 경제 건설의 경험 또한 3국이 공유하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근대 역사에 대한 공통적인 시각을 형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경험의 사례는 충분히 많다.

셋째, 우리는 아시아의 젊은 세대들이 자국의 과거 역사에 대해 비판적 이면서도 독립적으로 생각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는 공통적인 지역 정체성 속에 새로 자리잡을 수 있는, 상호 수용 가능한 각국의 새로운 역사를 양성해야 한다. 민족주의, 지역주의, 그리고 국제주의는 항상 공존하지만, 서로가 반드시 상충되는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중요한 변화의 시대에 공통의 시각을 키우고자 하는 우리의 바램이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협의적이고 배타적인 국가 의식을 넘어서서 이렇게 상호 강화된 이념들을 재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협의적인 국가, 정치적 이해를 넘어서는 동북아시아의 미래

비전을 구축하려면 현명한 정치 지도부가 필요하다. 과거에 대한 해석은 정치적인 색채를 띠는 것이 불가피하고, 상충된 기억을 만들어 내며, 그래서 현재의 이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치화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이 존재한다. 하지만 그 유혹이 아무리 크고, 정치적인 이득이 있고, 또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무리 심리적으로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그러한 접근법은 과거 상처를 치유할 수도 없고 미래에 대한 기반을 제공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지역의 화해를 목적으로 한, 인기 없는 정책에 대해서도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 지도부가 필요하다. 이는 특히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데, 그 이유는 진정한 화해가 역내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본이 취해야 할 최초의, 그리고 필수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새로운 동북아시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지역주의의 힘은 충분히 강력해서 지나친 민족주의가 존재하면서도 안정적인 평화 체제가 생겨날 수 있을지 모른다. 중국과 일본의 경쟁 심화에도 불구하고, 양국 모두 서로와의 갈등을 피해야 하는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투자와 시장에 너무 의존적이어서 일본과의 소원한 관계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에 위협이 될 것이다. 일본 또한 중국의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인 불안정, 환경 오염을 피하는 것이 자국의 국가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일본 지도부 내에서 정부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긍정적인 조짐은 있지만 역내 기구의 활동이 미약하고, 민족주의 정치는 지속되고 있으며, 일본과 아시아 이웃국들 사이에 과거 역사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특히 중·일간의 대립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결국,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분리시킨 부당한 과거 역사를 극복하는 것은 역내 국가들의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의미 있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번영하는 지역 공동체 건설을 위한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동북아의 역사, 민족정체성, 그리고 갈등: 중국의 시각

시아 리핑
(XIA Liping)

서론

중국의 역사적 시각에서 볼 때, 중국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 이웃국가들은 남쪽과 서쪽의 이웃국들에 비해 안보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져 왔는데 그 이유는 동쪽과 북쪽의 국가들이 중국의 정치, 경제적 중심지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반도는 중국에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 중의 하나이다. 한 편으로는, 한반도가 중국의 동북지역 국경에 대한 완충지대(buffer zone)가 되고 동북쪽 및 동쪽 해안의 보호장치가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3국이 중국을 침략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건널목 역할을 할 수도 있다. 현재의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 미국, 러시아 및 일본이라는 4대 강국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곳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은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고대 역사에서조차도, 중국 문화로 인해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동북아의 이웃국들, 특히 한반도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황제들은 주변의 이웃국들과 속국관계를 설립했다. 명 왕조 이후 중국에서는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는 중국이 한국의 불안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 3국이 한국을 건널목으로 이용해서 중국을 침략하는 상황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 이후,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여전히 이 두 가지 목표를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1950년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제3국이 중국을 침략하기 위해 한반도를 길목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이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설립 이후 중국은 속국 야심을 버리고, 그 대신에 평화 공존의 5대 원칙에 외교 정책의 초점을 맞추었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장기적이고, 평화로우며, 안정적인 안보환경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중국의 국내 경제와 사회 발전에 이익이 되는 것이다.

중·일 관계에 대한 시각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06년 10월 ‘냉랭한 관계를 종식시키는(ice-breaking)’ 역사적인 중국 방문을 하면서, 중·일 관계는 다시 본 궤도를 찾았다. 원자바오 중국총리 또한 올해(2007년) 4월 일본에 ‘해빙적인(ice-melting)’ 답방을 함으로써 중·일 관계의 분위기가 더욱 개선되었다. 양국 모두 경제, 안보 측면에서 수많은 공동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전략적 관계를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긴 있지만, 만약 양국이 민감한 사안들을 신중하게 처리하고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다면, 여러 분야의 공동의 이해 관계를 기반으로 서로 더 많은 협력을 하게 될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로 아태지역에 민족주의가 부상했다. 민족주의에는 합리적 민족주의와 비합리적 민족주의의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한다. 합리적 민족주의는 모든 국가의 애국심이다. 비합리적 민족주의는 극단주의적인 민

족주의이다. 비합리적 민족주의가 정부 정책의 주류가 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한·중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의 경우는 2005년 4월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반일 시위 중에 시위자들이 일본 대사관과 영사관에 돌과 병을 던지고, 자동차를 전복시켰던 것이 비합리적 민족주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가 일방주의 정책을 추구한 것이 비합리적 민족주의의 예가 될 수 있고,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주니치로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한 것이 비합리적인 민족주의적 행동이었다.

중국과 일본 모두가 아시아에서 동시에 강력한 힘을 누리는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현재 양국은 서로를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태이다. 중국과 일본은 윈-윈 개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상호 의존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일간의 경제 교류와 교역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커져 왔다. 양국은 ‘두 마리의 호랑이’ 모델을 포기하고, ‘두 필의 말’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수용해야 한다. 이 개념은 중국과 일본이 ‘두 필의 말’ 처럼 협동적으로 아시아를 이끌어 현대화와 통합의 아시아 시대를 열고, 장기적인 안정과 공동의 번영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두 필의 말’ 모델은 ‘두 마리의 호랑이’ 모델보다 훨씬 나은 것으로, 양국뿐 아니라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기본틀은 6자 회담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주로 국제적인 상황과 북한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6자 회담의 다른 참가국들, 즉, 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기가 시작된 이후로, 중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활발한 역할을 해 왔다. 중국은 6차례의 6자 회담을 베이징에서 개최하였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북핵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7년 2월 13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 5차 6자 회담에서는 참가국들이 공동 합의에 이르렀고, 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중요한 돌파구가 되었다. 만약 약속이 지켜진다면, 이러한 합의 사항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 위기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소지역 경제 안보 협력 기구의 동향

경제적인 세계화와 지역 경제의 통합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 및 안보 측면에서 상호 의존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동북아 지역 기구들 또한 일부 진전을 이루어 왔는데, 이는 동아시아의 경제 및 안보 협력에 이익이 되고 있다. ASEAN+3, 세 번의 ASEAN+1, 그리고 한·중·일 회의가 자유무역지대 건설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ASEAN+3 체제는 그 범위가 매우 넓고 그 깊이가 깊으며, 앞으로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래의 아시아 공동체는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개방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은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미국 또한 중국, 일본 양국 모두와 균형 잡힌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국가 이익뿐 아니라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과 미국, 일본은 더욱 균형 잡힌 3자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한·중·일간의 삼각 협력은 매우 중요한 다자주의적인 매커니즘을 제공한다. 중국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가장 큰 교역 파트너가 되어 왔다. 북한의 핵문제는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본틀은 동북아의 안보 대화 및 협력의 매커니즘으로 더욱 발전해야 한다.

동북아의 역사, 민족정체성, 그리고 갈등: 일본의 시각

타마모토 마사루
(TAMAMOTO Masaru)

일본 제국으로부터 피해를 당했던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한국과 중국에서 민족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화해를 향한 노력에서 주춤하고 있다. 역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긍정적인 행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등 어색한 경직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제, 일본에는 역사문제에 대한 새로운 요소가 존재하는 데, 이는 일본의 ‘보통국가화’ 라고 불린다. 이러한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빈틈없이 관리되지 못할 경우 역내의 차이를 악화시키고, 의심과 불안의 분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

보통국가화의 구체적인 목적은 1945년 이후 일본에서 포기했던 군사력을 외교정책의 도구로서 다시 취득하려는 것이다.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의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이 있는 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던 관계를 일반적으로 동맹에 대하여 기대되는 쌍무적 관계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인 것이다. 찬성자들은 이를 통해 일본이 세계평화와 안보에 대한 책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자국의 ‘평화(Pacifist)’ 헌법에서 무기 소유를 금하고 있는 헌법 9조를 수정해야 한다. 아베 신조 총리의 현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으

로서 헌법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통국가화에 대한 논의는 계산된 안보정책을 훨씬 넘어선다. 이는 또한 낭만적(romantic) 민족주의의 부상을 의미하는데, 바로 여기에 문제가 존재한다. 정상화에 찬성하는 모든 이들이 낭만적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들 둘을 구별하기는 힘들다. 낭만적 민족주의자들은 1945년 이후의 일본의 질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 상황을 일본의 주권과 독립성이 침해된 상태로 보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전후 질서의 청산'은 아베 총리의 취임 슬로건이기도 하다. 이들은 문화전쟁을 선언하고, 오늘날의 일본을 일본인에게서 그들의 진정성(authenticity)을 빼앗아간 전후 역사의 희생양으로 여기고 있다. 일본인들의 진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희미해졌다는 주장은 보수적인 반동의 기본 도구가 되어 왔다. 그리고 민족주의에 그토록 강력한 힘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역사의 유연성과 전통의 순응성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엄청난 번영과 사회적 안정, 그리고 전쟁 없는 세상을 가져온 전후 질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해 왔다. 최근에 아사히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 명의 응답자중 두 명이 헌법 수정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대답했다. 관심을 표명한 사람들 중에서는 대다수가 개인의 자유를 더 보장받기를 원했는데 낭만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비율이었다. 헌법상으로 애국심 및 관련된 의무를 규정하라는 민족주의적 촉구가 국민들에게는 효력이 없다. 힘든 싸움에 직면해서,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민족주의자들은 그들의 비진보주의적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그들은 학문적인 자유, 그리고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현 헌법을 수정하는 것에 관하여 교육자들이 스스로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최상위법은 미 점령군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민주주의와 비무장화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에게 강제로 주어졌다. 지금까지 60년 동안 이 헌법의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다. 즉, 일본은 외국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인 것이다. 미·일 안보 조약은 어

면 측면에서는 일본의 최상위법보다도 더 위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공약(commitment)은 전쟁 체제로 이해되는 국제 정치의 흑독함으로부터 일본에 어느 정도 완충장치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의존은 국제 정치에 대한 의도된 무지를 초래했다(이는 일본이 이웃국과 역사적인 화해를 할 수 없었던 주요 이유임). 이러한 상황은 일본과 미국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누군가가 수십 년 동안 외국 헌법하에서 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국가의 독립, 즉 다시 완전한 국가가 되고자 하는 강렬한 감정적 욕망이 일본의 낭만적 민족주의자들을 자극하고 있다. 전후 역사에 대한 이들의 문화 전쟁은 일본의 고립, 외국인 정복자가 고안한 질서에 의해 희생자가 되었다는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인이 작성한 일본 헌법의 원래 목적은 일본이 강대국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아베 총리가 글을 남긴 바 있다. 그러나 문화전쟁은 미국을 상대로 할 수는 없다. 동북아는(아직) 유럽이 아니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안보 불안이 존재 한다. 그래서 국가의 독립을 추구하는 것은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증진을 통해 일본을 미국과 '좀 더 동등하게' 만들고, 일본의 의존성을 줄이는 일련의 정책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일본의 외교 정책에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새로운 흐름이 존재한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인권과 같은 보편적인 가치 확산에 대한 요청과 함께, 일본은 '공동의 가치'를 가진 국가들에게 손을 뻗어, 호주, 인도, 그리고 NATO와 전략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을 배제하고,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며, 세력균형은 국제 정치를 전쟁의 체제라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을 고려하고 있지 않을 것이지만 세력균형적 사고는 제로섬(zero-sum) 행위의 성향을 갖는다. 이러한 새로운 일본의 외교 정책의 흐름에서는 권력정치(power politics)에 대한 거부와 강대국 협조체제, 그리고 세계질서의 법제화와 같은 유럽 모델적 사고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이 세계 평화와

변영에 최대한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중국의 변영과 다원주의를 증진시킴으로써 중국과 견고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변영하는 중산층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에 통합되어서 국경이 개방되고 국제관계가 기능적으로 차별화되어 중국경제가 더 이상 중요 이슈가 되지 않을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권력정치의 거부, 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에 대한 집중, 그리고 세계 경제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의존이라는 일본의 전후 모델을 향해 많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지역적인 변영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치권의 주요 인물들에 의한 전후 질서의 거부는 모순적인 것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볼 때, 독립과 주권을 회복하려는 일본의 민족주의적인 욕구는 '좀 더 동등' 하기는 해도 여전히 하위적 파트너로서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동북아시아 안보불안 요인의 제거, 특히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더욱 잘 실현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 협조체제, 그리고 미국을 포함시키는 법제화된 질서 형성은 분명 바람직한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일본의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은 앞으로 수십년간 성공적인 중국에 의존할 일본의 모습을 우려하며 흔들리고 있다. 세력균형이라는 일본의 외교정책 이니셔티브는 과거 60년 동안 보호자였던 미국과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국제 안보와 정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본이라는 국가의 부차적이고 일시적인 움직임일 뿐이기를 바란다.

탈국가의 동아시아: 한국의 시각

임지현

1999년 겨울, 일본의 한 신민족주의 단체에서 새로운 역사 교과서의 시험판으로 ‘국가의 역사(The History of Nation)’를 발간했다. 이 책은 일본의 중학교에서 사용될 교과서들 중 하나로 곧 허가를 받을 예정이었다. 이 책에 대한 출판 허가는 일본의 식민주의 역사에 대한 긍정적 시인, 뻔뻔스러운 민족주의, 그리고 1939년 난징 학살과 한국의 ‘위안부’ 또는 ‘성노예’와 같은 전시중의 잔악 행위에 대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인해 해외와 일본 내부에서조차 비평과 분노의 반응을 일으켰다. 이렇게 시끄러운 논쟁의 정점에서 일본의 보수 일간지인 산케이 신문이 새 역사 교과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동아시아의 역사교과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일련의 기사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일본의 수정주의 역사학자들에게 공식적인 한국 역사 교과서를 일본 교과서에 대한 모델로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었다.

산케이 신문은 한국의 역사교과서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중심의 역사해석이 아니라 국가의 역사와 민족 중심주의에 강력한 기반을 둔 서술적 전략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한 10여 개의 기사에서 산케이 신문 특파원은 한국역사교과서를 반복적으로 언

급함으로써 ‘신편 일본사’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그는 주요 해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묶는 공통점이 ‘우리 민족(our nation)’이 역사의 주체라고 서술하는 점임을 발견했다. 사실, 한국의 역사교과서들은 역사교과서가 국적을 가진 모든 어린이들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우리 역사에 대한 사랑’을 가르쳐야 한다는 그 특파원의 신념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광대극 같은 에피소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적 민족사의 대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일부 현안들은 제쳐 두고, 동아시아의 공통적인 과거를 찾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논쟁은 역사적 사실의 ‘옳고 그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상반되는 민족주의적 해석들의 불가피한 충돌로 발생한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의 장면들 뒤로 한국과 일본의 민족사는 ‘반목적인 공모(antagonistic complicity)’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100여년 동안의 상충적 역사문헌에서 문화 이전과 적대적인 문화적 변용의 예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사실, 반식민주의 운동의 기본 개념은 제국주의 문화의 추론적 산물인 경우가 많다.

동아시아의 역사교과서가 가르치는 것은 역사라기 보다는 정치적인 사고(idea)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더 이상 역사가 아닌 것이다. 역사적 논쟁들은 동아시아에서 부상하는 민족주의 조류를 일으킨 독도(다케시마섬) 및 센카쿠(다이아오유)섬에 대한 영토 분쟁과 겹쳐지곤 했다. 민족주의는 서로의 민족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민족사들이 ‘반목적인 공모’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 동아시아에서 계속해서 주요 담론으로 남게 될 것이다.

동아시아의 역사학자들은 역사 교과서가 학생들 사이에 이웃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인종적 불관용을 양성했다는 발칸 반도 역사학자들의 자기비판에서 면제될 수 없다. 역사교과서가 발칸 반도의 야만적인 인종 청소로 최근 정점에 치달은 인종간 갈등과 폭력을 유발한 잠재적 원인 중 하나라면, 동아시아의 역사교과서는 국경선을 따라 지역 갈등을 유발해 왔다. 결론적으로 동아시아의 민족적 갈등은 인식론상으로 각국의 역사 교육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간 갈등에 대한 대중의 자발적인 개입

을 초래했다.

다른 곳에서도 그렇듯이, 동아시아의 ‘역사’는 국민국가(nation-state)에 대한 학문적인 변론이 되었고, 국민들은 국민국가에서 절정을 이루는 인류 진보의 대의를 밝히기 위해 국가의 역사를 살피기 시작했다. 이는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 역사의 진행 속에 자리잡고 국가 권력의 패권에 종속되고자 하는 열망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국가의 역사는 국민국가의 대의를 위해 대중을 훈육시켰고, 대중은 국가 갈등의 현장에 자발적으로 동원되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전문 역사가, 정치평론가, 학교 교사, 그리고 교과 과정 사이에서 국가의 역사가 탈국가적인 역사로 패러다임상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국가 갈등과 인종적 증오가 없는 동아시아를 이루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학문으로서의 민족사가 더 이상 시대적 비판을 견디어 낼 수는 없겠지만 제도로서의 국사는 그대로 남아있다. 동아시아의 국사 교육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국사 교육이 국가의 갈등을 가져오고, 국가 갈등이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국사 교육의 정당화를 유발하는 식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동아시아 공동의 고향(common home of East Asia)과 같은 정치 프로젝트는 근본적인 결점을 가지게 된다. ‘국가 역사를 초월한’ 학문적인 프로젝트가 없으면 ‘국민국가를 초월한’ 정치프로젝트는 밑으로부터의 대중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정치가와 지식인들만의 상명하달식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동아시아의 탈국가적 역사가 동아시아의 탈국가 공동체 건설의 전조가 되는 것이다.

학문으로서 탈국가적 역사는 누가 역사문헌에서 어떻게 과거를 정확하게 나타낼 것인가 하는 확인적인 문제(constative problematic)뿐 아니라, ‘탈국가적인’ 또는 ‘국가’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역사가들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수행적인 문제(performative problematic)도 추구하고 있다. 초국가적인 역사는 결코 동아시아의 공동의 과거에 대해 일관적인 관점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화적 전환’, ‘대리이론(agency theory)’, ‘국경의 역사’, ‘관계사(Beziehungsgeschichte)’, ‘세계 시스템 이론’ 등을 통해 통찰

해보면, 초국가적인 역사는 패러다임이라기 보다는 성향(orientation)에 가깝다. 동아시아 공동의 과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은 서로 상충될 수가 있다. 만약 그러한 충돌이 국경을 사이에 두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면, 과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은 서로 공존할 수 있고 확인적인 문제 차원에서 학문적 우수성을 놓고 서로 경쟁할 수 있다.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행적인 차원의 갈등이다. 역사학자들이 민족사의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한, 역사적인 논쟁은 정치적인 논쟁과 긴밀하게 얽히게 된다. 그러나 더 안 좋은 경우는 정치적인 논쟁이 역사적인 논쟁과 합쳐져 정치 지도부에서 대중들에게로 내리 전달되는 경우이다. 진실과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웃국가에 대한 강경책이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개 정치 지도자들이 아니라 대중들이다.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국사 인식을 버리지 않고는 동아시아의 탈국가적 공동체 건설은 상상할 수 없다. “역사는 핵물리학 만큼이나 위험하다”라고 말했던 에릭 홉스봄(Eric J. Hobsbawm)은 옳다.

제4장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 체제의 미래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 체제의 미래: 일본의 시각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 체제의 미래: 러시아의 시각

북핵문제의 해법: 희망과 난제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 체제의 미래: 미국의 시각

북한의 핵 게임과 끝나지 않은 문제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 체제의 미래: 일본의 시각

타나카 히토시
(TANAKA Hitoshi)

2006년 10월 북한의 충격적인 핵실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얼마나 취약한 상태인지를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었다. 핵실험의 후유증에 대한 포커스가 대부분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 정권이 지역의 안보에 미칠 위협에 맞춰졌지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핵 개발이 NPT의 미래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이다. 2003년 북한이 NPT조약에서 갑작스럽게 탈퇴를 하고,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면서 거의 40년 동안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NPT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더욱 약화시킬 잠재성이 있는 두 가지 심각한 사안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이란이 서서히 개발하고 있는 핵 프로그램이고, 다른 하나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란이 NPT에 대한 위협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이란이 조약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는 상태이다. 이란은 NPT에 명백히 제시된 권리인 평화적 목적의 핵 기술을

추구하는 것뿐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이 유엔안보리(UNSC)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국제기구에 계속해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과 이란의 '평화로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해 주겠다는 국제사회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적인 회의론과 의심을 낳고 있다. 이란이 핵확산금지 노력에 대한 중기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HEU) 프로그램에 진전이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우리에게 더 크고 더 압박한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임이 분명하다.

2006년 10월 북한의 핵무기 실험은 역사상 전례 없는 사건은 아니었다. 과거 인도(1974)와 파키스탄(1998)이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실험을 감행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NPT에 한 번도 가입한 적이 없었던 인도나 파키스탄과는 달리, 북한은 NPT에 가입했었다는 점이다 (1985년 가입, 2003년 탈퇴). NPT 회원국이었다는 과거 이력으로 인해, 만약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 보유가 허용된다면, 핵확산금지에 대한 세계적인 노력은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북·미 제네바 협정(US-DPRK Framework Agreement), 남북 공동선언(North-South Declaration), 그리고 북·일 평양 선언(Pyongyang Declaration)과 같이 핵 문제 관련 협약들의 오랜 역사를 살펴볼 때 더더욱 그러하다. 만약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실패한다면, 이러한 협약들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즉, 북한이 NPT 탈퇴 후 핵무기를 개발하고도 처벌받지 않을 경우, 이러한 북한의 선례를 따르는 NPT 회원국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NPT에 대한 북한의 행위가 세계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넘어서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핵무기로 인해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인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5년 9월 성명서를 기반으로 작성된 2007년 2월 13일 공동성명서에서는 '입증 가능한(verifiable)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동성명서에서 북한에 영변 핵 원자로 '봉인'과 기존의 모든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해

체 대신)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2.13 공동성명서는 단순히 과도기적 협약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이 더 이상의 핵확산 활동과 핵 기술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단순히 핵확산금지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완전하고(total), 입증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비핵화로부터 한 발짝 물러난 듯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지역 안정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합리적 억지 이론(rational deterrence theory)’ (즉, 북한이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지 않고 있는 이상,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처절한 보복 공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북한과 같은 국가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왜냐하면 북한이 궁지에 몰릴 경우, 필사적으로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상태로 만들 수 없을 경우 역내 국가간 그리고 국가 내부적으로 동아시아의 안보와 향후 NPT 체제 자체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논란이 발생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 공격 시 그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이기 때문에 단 하나의 핵무기라 하더라도 한반도내 핵무기의 지속적 존재는 일본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며, 일본이 핵 전쟁 억지 목적으로 핵무기를 취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국내에서 큰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전후 역사 내내 평화주의와 강력한 반핵(anti-nuclear) 입장을 취한 일본이 그러한 논란에 심각하게 휩싸이는 것 자체가 지역 안정에 역효과를 미칠 수 있다. 또한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과, UNSC 제재, 그리고 거의 확실한 NPT체제의 붕괴 등 일본이 감당해야 할 엄청난 정치적인 비용(무엇보다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동북아 국가들이 핵 보유국이 되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일본이 이러한 길을 갈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여론이 그들이 바로 앞에 직면하고 있는 명백하고,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여 정확히 어떤 반응을 보일지는 불분명하다. 특히,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비록 가능성은 낮지만, 핵무기에 대한 대중들의 생각이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한반도의 입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길은 멀고도 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실패로 인한 결과는 너무나 심각해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 체제의 미래: 러시아의 시각

블라디미르 나자로프
(Vladimir NAZAROV)

의장님, 내외 귀빈 여러분, 아태지역의 안보와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주요한 비공식 대화 매커니즘으로서 제주 평화포럼의 활동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책 실행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가와 외교관들에게는 아이디어뱅크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일반적인 관점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은 국제 안보에 대한 가장 위험하고 어려운 위협들이 보편적으로 인식되는 매커니즘, 무엇보다 유엔의 매커니즘을 이용하여 함께 해결되어야 성취 가능합니다.

핵확산의 위협은 인간의 존재 자체에 대한 주요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세기 국제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험한 도전 과제 중 하나가 핵확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불행히도, 일부 정부들은 핵 무기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제 사회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세계를 위협하여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더라도 하듯, 핵무기 소유는 여전히 권력정치의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이러한 도미노 이론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국제 문제에 있어서 부정적 동향이 나타나서 군축 및 핵확산금지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강제력(force)의 요소가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제 안보의 측면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문제를 해결한다는 구실로 외부에서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는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따름으로써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불행히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이 아직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냉전기의 핵무기 경쟁은 이미 끝났어야 하지만, 세계 강대국들은 계속해서 핵 군사잠재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군축 및 핵확산을 막는 수단들이 테러분자들이 WMD를 보유하게 될 위험을 포함, 국제 안보에 대한 새로운 위협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핵확산과 기타 민감한 기술 문제들은 지속되고,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NPT는 힘든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역내의 주요 이슈 중 하나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마-인도간 핵 거래 및 이란을 둘러싼 상황 전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에게 이들 국가들과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댈 경우, 자국의 핵 프로그램 추구권을 방어하기 위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 유엔이 새롭게 취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이 두 개의 '핵 위기'를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러한 태도가 이란에게 완전한 핵 보유를 위한 '성전(holy struggle)'을 벌이는 것이 자국 혼자만은 아니라고 오판하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고 핵 실험을 감행하였습니다. NPT조약 하의 이란의 의무와 관련하여 제기된 수많은 질문들은 아직도 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란과 파키스탄은 아직도 NPT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이스라엘은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인해 다른 국가들은 핵 잠재력이 그들의 국제적, 지역적 위상을 높이는 주요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엘바라데이(M. Al-Baradei) IAEA 사무총장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는 약 30여 개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핵비확산이라는 목적의 투명성으로 인해 모든 관련 국가들이 이 문제를 솔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제된 표현에 대해서, 이해 당사국들은 무엇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1968년의 NPT조약을 위반하고 또 약화시키고 있는지 근본 원인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거의 40년이나 된 낡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NPT는 핵 분야 뿐만 아니라 국제적 안정에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NPT가 그토록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핵 위기 해결을 위한 정치적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와서 NPT를 수정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핵보유국과 핵 비보유국들이 NPT에 서명함으로써 그들 각각에게 생겨난 의무들간에 존재하던 미약한 균형이 깨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NPT를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우선, NPT는 IAEA의 안전조치체제를 강화하고, IAEA와의 안전조치협정(Safeguard Agreement)에 대한 추가 의정서를 보편화시키는 작업에 지원을 함으로써 개혁될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현재 IAEA협정에 따라 운영되는 시스템은 비밀 핵 활동을 탐지해낼 수 없습니다. 1997년까지 IAEA에서는 안전조치협정에 핵무기와 핵 활동을 탐지하는 능력을 크게 강화한 추가 의정서의 모델을 만들어 냈습니다. IAEA에서는 관련 정보와, 핵 원자로 및 기타 핵 물질이 있는 곳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부여 받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추가 의정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100여 개 이상 존재합니다. 의정서 조항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는 핵비확산 분야에서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가들에게 핵 에너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조치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 가능한 매커니즘과 관련하여, 국제 조약과 양자간 조약, 수출통제체제 및 기타 약정들을 결합시키는 현존 핵비확산 시스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핵확산을 막을 효과적인 조치를 마련하려는 진지하면서도 공정한 바램만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있었던'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 이후에 일종의 침체상태에 놓인 영역에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한만을 주장하는 것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진보와 개발에 대한 좋은 대안이 없어 보입니다. 핵에너지 사용에 대한 우리 사회와 세계의 전반적인 태도변화, 그리고 새로운 핵발전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일부 국가들의 마음가짐과 열망을 보면서 저는 평화적 핵 기술이라 불리우는 모든 것을 단순히 금지할 수만은 없다는 저의 믿음을 확인하곤 합니다. G8과 일부 국제 포럼에서는 핵 야심을 추구하는 일부 국가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개도국들에게 어떤 종류의 지원을 어떻게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나머지 국가들에게 비핵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모범이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한 평화로운 움직임 중 가장 모범적인 최근의 사례는, 2006년 중앙 아시아의 세미팔라친스크(Semipalatinsk) 지역을 비핵지대(Nuclear Free Zone)로 선언한 것입니다. 1995년 동남아시아 비핵무기금지대에 대한 방콕조약(Bangkok Treaty on South East Asia Nuclear Free Zone) 또한 좋은 사례입니다. 동북아시아도 바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불행히도, 핵보유국들이 나머지 국가들에게 핵비확산을 강하게 요구할 경우 불신의 차가운 반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0년 NPT 검토회의(NPT Review Conference)의 준비 과정에서 전개된 최근의 상황은 이러한 인상을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핵비확산 프로세스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으며, 모든 관련국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핵비확산의 목적을 엄격하게 추구하고,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 목적을 구체화하려하지 않는다면, 가장 복잡한 핵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이슈에 대해 접근하기 전에, 우선 모든 외교적, 비군사적 방법들이 사용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핵비확산의 목적을 준수하겠다고 선언한 일부 국가들의 정책이 과연 얼마나 진지한 것일까요? 이들은 혹시 자신들의 미래를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회를 강제로 민주화시키기 위한 의도로 비핵화의 안보 제공이라는 목적을 대체하려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이라크의 “급속한 민주화”의 결과가 무엇인지 목격했습니다. 이라크의 평화로운 발전은 아직도 먼 미래에 불과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을 포함하여 현재의 세계 상황에서는 좀 더 효과적인 국제적 매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핵비확산 및 군비축소 분야의 조약과 협정들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새로운 위협과 도전이 활개치게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오직 집단적 협력을 통해서만이 국제적인 재래식 무기의 감축에 도움이 되면서도 법적인 진공상태를 막고 또한 새로운 무기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핵비확산 체제를 우리가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핵비확산 체제를 강화하는 장기적인 첨단 조치 중 하나는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이니셔티브로, 미국의 세계 핵에너지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IAEA가 통제하는 우라늄 농축핵센터 국제네트워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비핵화 지역을 만들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NPT를 격상시켜 참가국들에게 합법적으로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

리는 각국이 자체적으로 핵 연료 사이클 시설을 개발하지 않도록 이들에게 정치 제도와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6자 회담(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및 한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핵 문제를 보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상의 해결방식입니다. 이러한 보편적인 해결 방식에는 역내 모든 국가들에게 지속적이고 믿을 만한 안보 장치를 제공하는 것과 북한의 정상화, 북·미 관계 개선, 북한과 역내 전체가 평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요소는 4차 협상의 결과를 기반으로 2005년 9월 19일 작성한 공동 성명서 내용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할 일련의 조치들을 반영할 현실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작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6자 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는 동북아의 안보와 협력에 대한 영구적인 대화 매커니즘을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러한 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반도의 비핵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역내 모든 국가들간의 포괄적인 협력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5개의 실무그룹(러시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실무그룹을 이끌고 있음)을 결성하기로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회담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해결의지가 없으면 어떤 회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가 평화롭게 해결되지 못한다면, 이는 아시아태평양 전 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적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모든 관련 당사국들은 각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미 일방적인 행동이 6자 회담 프로세스 전체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다시 궤도에 오르기까지 수년이 걸렸습니다. 북한문제의 경우, 우리는 협상 과정의 결렬로 인해 거의 10년을 소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점에서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부담까지 안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워싱턴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Institute of Science

and International Security)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David Albright)와 케빈 오닐(Kevin O'Neil)이 작성한 '북핵문제 해결(Solving the North Korean Nuclear Puzzle)'이라는 보고서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저자들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안보 태세의 변화 없이 포용정책이 성공할까?'라는 최종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답은 아마도 '아니오'가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추구하는 북한의 안보정책상 입장 변화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의 폐기 그리고 재래식무기 감축 등인데, 이러한 일은 오직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의 안보정책 입장이 변화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1953년 휴전협정 및 그와 관련된 다자주의적 한국정전위원회(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같은 제도로부터의 전환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며, 또한 주한미군 감축(북한은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고려하며, 한·미관계의 미래를 더욱 면밀히 지켜본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결국, 동북아시아의 영구적인 안보를 구축하고자 하는 진정한 바람과 핵심 국가들 사이에 상호 신뢰가 없다면 비핵화 과정이 반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자주의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며 투명한 협력을 통해서만 더 안전하고, 더 안정된 세계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핵문제의 해법: 희망과 난제

양첸슈
(YANG Chengxu)

북핵문제의 해결 전망

2007년 2월 13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제5차 6자 회담의 3단계 회의가 공동 합의문과 함께 마무리 되었다. 공동 합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한(DPRK)은 핵무기 포기라는 최종 목적을 가지고,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을 폐쇄하고 봉인한다.
- 한국(ROK), 중국, 미국, 러시아는 북한에 중유 백만 톤 상당의 지원을 제공한다.
- 북한과 미국, 북한과 일본은 양자 관계를 위한 양자 대화를 시작한다.

이 합의문은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들은 2.13 공동 합의문이 한국의 핵 문제 진전에 돌파구가 되어 비핵화에 관한 6자 회담을 '약속 대 약속' 단계에서 '실행 대 실행'의 단계로 끌어올렸다고 믿었다. 콘돌리사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러한 합의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는 희망적인 발걸음이며, 한반도의 비핵화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 회담이 끝난 후, 제 6차 비핵화 6자 회담의 1단계

회의가 3월 19일부터 22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는데, 의장성명서에 나와 있듯이 모든 참가국들은 잠깐 동안 회담을 휴회했다가 최대한 빨리 다시 속개해서 다음 단계를 향한 행동 계획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 회담에서 떠오른 장애물들은 무엇이었을까?

북한에서는 60일 이내, 즉 4월 14일까지 영변 핵시설을 폐쇄, 봉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과, 방코텔타아시아(BDA)에 동결된 2천5백만 달러의 북한 자금 이체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BDA 사건의 골자는 2005년 9월 북한이 BDA 계좌를 이용, 돈세탁과 미국 달러지폐를 위조한다고 주장하며 미 재무성이 미국의 모든 금융기구에 대해 BDA와의 비즈니스 거래를 차단했고, 결과적으로 북한이 BDA에 송치해 놓은 미화 2억5천만 달러가 동결되면서 BDA와 북한의 거래에 지장이 초래된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미국은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미국 법이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결은 쉽지 않았다. 6월 6일,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돕겠다는 제안을 해왔다. 러시아는 한편으로는 북한이 제안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문제해결을 위해 개입할 러시아 은행에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은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할 역량과 방법을 갖추게 되었다.

2.13 공동 성명서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핵심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 모두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진지함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 회담에 즈음하여, 양측은 베를린과 미국에서 서로를 직접 대면했다. 만약 모든 일이 문제없이 진행된다면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차관보가 북한의 초대를 받아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2) 한동안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도 다시 시작되었다. 북한 화물선이 처음으로 부산항에 들어섰고, 남북 철도가 개통되어 56년간 중단되었던 철도 시범운행도 마쳤다. 남북간 경제 협력을 위한 회의도 평양에서 개최되었다.

북한의 핵실험 봉쇄로부터 일종의 도미노 효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작년 10월 8일,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했고, 실제로 국제 사회에서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발생했다.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자민당 정책수석은 일본의 핵 무장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고, 아소 타로 외무장관은 일본의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 후로,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핵무기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하긴 했지만, 일본인들의 ‘핵무기’에 대한 논쟁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만약 2.13 공동 성명의 합의내용들이 제대로 실행된다면, 일본에서는 핵무기 반대 세력이 강력한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노력이 많이 드는 것은 바로 첫걸음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6자 회담 참가국들의 공동 노력을 통해 이 사안이 궁극적인 해결책을 향해 한 단계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봉인하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더욱 힘들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북한의 핵 문제만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핵 문제 또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명히, 이 문제에는 미국이 한반도에 핵무기를 배치할지 여부와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의도가 있는지 여부가 포함된다.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국가 대 국가 관계 향상의 측면에서 볼 때, 상호 신뢰는 장애물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 생겨날 것이다. . 상호 신뢰 관계가 형성된 다음에야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미래에는 가능해질 것이다.

중국의 기본 입장은 북한의 핵 보유가 도미노 효과로 인해 세계적인 비핵화 노력을 허사로 만들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는 늘 반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핵문제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에서 비핵화가 실현되고, 관련 국가간 관계가 정상화되며, 동북아시아의 평화 안보 매

커니즘이 협상을 통해 수립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한 6자 회담에서 '협상 및 평화 촉진'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다. 만약 이 목표가 실현된다면, 분명 굳건한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 핵 도미노 관리와 NPT 체제의 미래: 미국의 시각

존 박
(John S. PARK)

I. 개요

이 논문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핵도미노 현상의 전망과, 강화된 NPT체제를 지원함으로써 수평적인 핵확산의 위험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강대국들의 역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핵심 논점은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 계획이 북한의 핵 역량의 현실과 결합되면서, 핵에 대한 일본의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가속화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모니터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다자주의적인 시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는 동북아시아에서 완전한 핵 폭풍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II. 제1단계 북핵위기와 제2단계 북핵위기의 주요 차이점

북핵위기의 제1단계(1992~2002년)와 현재 진행중인 제2단계(2002년~현

재) 사이의 핵심적인 차이점을 분석해보면 역내 핵확산 문제의 현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배경을 알 수 있다. 1990년대 초에는 미국과 IAEA 사이에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이 있었다. 즉, 1단계 위기 당시, 클린턴 정부는 IAEA와 미국의 첩보정보를 공유하고, IAEA 기술팀에게 미국의 핵 연구실을 개방한다는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라크의 핵 프로그램 탐지 실패에 대한 거센 비난의 와중에 만들어진 재강화된 검증 체제는 향상된 첩보 기량과 결합되면서 IAEA로 하여금 핵무기와 핵장비에 대한 북한의 첫 신고(Initial Declaration)에서 실제와 다른 점을 탐지할 수 있게 하였다. 첫째, 처음부터 국제사회의 대응은 IAEA, NPT 그리고 UN의 통합된 틀 내에서 신중하게 마련되었다. 국가들은 비엔나와 뉴욕에서 다양한 장소와 다자주의적인 외교를 통해 반응을 보였다. 둘째, 한국의 김영삼 정부는 1단계 핵 위기 초기에 클린턴 정부와 비교할 때 북한에 대해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김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유화 정책의 어리석음에 대해 미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기까지 했다.

반대로, 2단계 핵위기의 초기에는 2002년 10월 평양에서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와 강석주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만난 후 미국측이 상당히 일방적인 대응을 보였다. 세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으로, 평양은 NPT 체제로부터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게다가 미국과 한국의 접근법에는 큰 반전이 있었다. 9.11사건 이후, 미국은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로 다루면서, 북한에게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이킬 수 없는 해체를 통한 즉각적인 핵 포기를 요구했다. 한국은 북한에 대한 햇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고, 포용을 심화하는 작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했다.

현재, 6자 회담 과정은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매커니즘이 되고 있다. NPT체제의 경우, 비록 IAEA를 비핵화 과정에 다시 개입하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부차적인 매커니즘이다. 6자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 데 있어서 이념적인 접근법이기는 보다는 대표적인 실용적 접근법이다.

III. 동북아시아 핵 도미노의 전망

북핵 위기를 분석해보면, 국가 차원의 핵 정책에 대한 지역 강대국들간 역학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북한: 북한의 경우, 2006년 미사일 실험, 2006년 10월 핵실험, 그리고 영변 원자로의 지속적인 핵 물질 생산 활동이 6자 회담의 진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최근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은 회담에서 더욱 확고해진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중국: 중국은 현재의 노후화된 핵무기를 현대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착수하고 있다. 표면적인 목표는 무기의 양 보다는 질을 개선한다는 것이지만, 중국의 국방 예산 증가로 인해 이러한 중국의 현대화 프로그램이 급격한 핵무기 증가의 서곡이 될지 모른다고 미국과 일본은 우려하고 있다. 만약 미국과 일본의 해석과 예측이 현실이 된다면, 두 국가의 반응은 의도치 않은 결과(unintended consequence)를 가져올 수 있다.

일본: 첨단 민간 핵에너지 프로그램과 상업 위성발사에 대한 전문 지식의 측면에서, IAEA는 일본이 핵무기 개발을 통한 핵억지력을 보유하기로 정치적 결정을 내리면 핵 억지력 보유에는 6~8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이웃나라들, 특히 중국에 있어서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방어정책 변경 및 장거리 작전능력 강화 움직임은 놀라운 전환으로 받아들여진다. 역내에는 군사정책의 변화로 인해 일본 내에서 핵억지력에 대한 논쟁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존의 북한의 핵개발과 중국에서 감지되고 있는 핵 능력 증강의 분위기 속에서, 첫 번째 의문은 전통적인 요소들, 즉 핵무기에 대한 금기 및 미·일 동맹과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강력해서 일본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논의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고 단순히 논의 주제로서만 남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한국: 한국은 1970년대에 추진했던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미국의 강렬한 반발을 경험한 바 있다. 한국은 핵 보유국이 될 경우 이로 인해

한·미 동맹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핵보유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고 또 압력을 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한국의 도덕적 권한과 입지를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러시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핵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더 이상 과거처럼 역내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현재 그러한 영향력을 우선순위로 추구하고 있지 않으며, 극동 지역의 경제 개발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역 안정을 추구하고 핵확산을 막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철도 건설 및 송유관 거래 등은 상업성이 있을 뿐 아니라 역내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신뢰구축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 된다.

대만: 한국과 일본처럼, 대만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쓰이는 첨단 기술을 보유하기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후 그러한 기술을 보유해 왔다. (1970년대에도 대만에서 핵무기 개발을 추구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협을 완화시켜 주는 요소는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이 미국에서 제공하는 안보 보장을 받지 못하고 또 미국산 무기를 구매할 수 없게 되는 위협을 무릅쓸 가능성도 작을뿐더러, 실제 핵 능력을 보유하게 될 때까지 핵 프로그램을 비밀로 유지하기는 더 더욱 힘들 것이다.

IV. 동북아시아의 핵 도미노 전망과 관련된 핵심 요소

북한과, 중국, 그리고 일본은 핵확산 잠재력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국가들이다. 이 세 국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한다. 핵 도미노 발생의 견지에서 보면, 북한은 이미 검증이 된 상태다. 즉, 북한은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지는 못할지언정 실질적인 핵 보유국으로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중국은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

다. 일본의 경우는 북한의 핵 실험과 중국의 핵무기 현대화로 인해 느껴지는 취약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지스 구축함이 제공하는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안보 역량을 가질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 상태다. 일본이 미사일 방어 체제에서 핵억지력을 갖기로 전환하게 되는 계기는 무엇이 될까? IAEA에서 일본의 핵억지력 개발이 단기간에 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을 감안할 때, 역내의 새로운 위기관리 능력은 전례 없는 방식으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만약 일본이 핵억지력을 갖게 되면, 그러한 핵확산은 역내의 핵 균형(status quo)을 크게 뒤흔들고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더불어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양적인 확대와 중국의 질적인 개선에 대비하여 일본의 핵무기까지 역내에 추가된다면, 이는 거대한 핵 폭풍이 야기될 가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즉, 일본의 핵무기가 결과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더 많은 핵 확산 활동을 유발하면서, 그러한 사이클론 효과는 급속히 가속화될 것이다.

V. 향후 과제

우선, NPT체제가 재활성화 되어야 한다. NPT 체제는 지지를 받는 만큼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즉, 미국과 기타 국가들의 지지가 없으면 NPT 체제는 중요성이나 우선 순위가 낮아질 것이다. 이 체제에 대해 왜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가?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다자주의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접근방법은 핵비확산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임시변통적 접근방법을 채택하는 것도 대안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이러한 입장은 각 국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기 때문에 외관상 공정성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중 잣대와 예외사항의 존재는 NPT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완전한 지지를 얻을 경우, NPT체제는 상당한 복원력과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지도부는 다자주의적인 기구들과 접근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 받고 있다. 자원과 역량 측면에서, 일방주의적인 접근법은 자원을 많이 필요로 하고, 또 그만큼 유지하기가 어렵다. 미국은 처음에는 이 문제에 많은 집중을 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다른 특수 상황들이 발생을 했고, 점차 그 집중도가 떨어졌다. 다자주의적인 핵비확산 접근법은 처음에는 시행하기가 꽤 어렵지만, 실질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낼 수 있는 기회는 증가한다. 둘째로, 지역적인 핵비확산 기구, 즉, IAEA와 긴밀한 조율을 유지하는 6자 회담의 6번째 실무그룹으로서 구축될 가능성이 큰 지역적인 핵비확산 기구가 필요하다. 이 기구는 핵 투명성과 다자주의적인 대화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중국이 발표한 핵 무기 업그레이드 계획은 다른 국가들이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서, 지역의 핵 균형(status quo)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기구가 이에 대한 대화를 더 많이 갖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한 역내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모델은 유럽의 재래식 무기회담(Conventional Forces in Europe)과 아세안 지역 포럼(ASEAN Regional Forum)과 같은 신뢰구축 기관으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모델들을 비핵화 문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안보문제 해결, 투명성 향상, 커뮤니케이션 증가를 위해 이 모델에서 이용하고 있는 절차와 매커니즘을 검토하여 교훈을 얻고 또 그러한 교훈을 적용할 수 있다. NPT체제를 부활시키고 지역에 CBM중심 기구를 구축하기 위한 협동 작업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거대 핵 폭풍의 전망은 크게 감소될 수 있다.

북한의 핵 게임과 끝나지 않은 문제

김태우

축복인가 파멸인가?

부시 미 대통령이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치의 양보 없는 강경론자에서 유연성 있는 실리주의자로 갑작스럽게 변했을 때 미국 내에서는 안도의 한숨과 환성이 터져 나왔다. 일부 미국인들은 2.13합의가 진작에 있었어야 할 부시 행정부의 신보수주의 성향으로부터 실용주의적 핵 외교에로의 전환이라 여겼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러한 태도 변화가 이라크 전쟁과 국내 정치에 실패한 부시 대통령의 굴복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이분법이 등장하고 있다. 일부 한국인들은 부시 대통령이 신보수주의를 버리고 평화적인 대북정책으로 돌아선 것이 이익이 되며, 남북간 화해에 있어 주요 장애물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이들은 이러한 입장변화가 북한에게 사기적인 핵 게임을 더 끌 수 있는 시간만 제공할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당연히, 전자는 방코 델타 아시아(BDA)문제가 해결되기를 열렬히 바라고 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질문은 BDA 문제 해결과 북한의 2.13합의 실행이 과연 한반도의 핵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2.13협약은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가 아니다.

제 5차 6자 회담의 3단계 회의에서 도출된 2.13협약은 매혹적인 것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분명히 고무적인 소식이었다. 이 협약은 최소한 북한의 비핵화에 조금 더 가깝게 다가서게 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외부간섭 없이 자유롭게 플루토늄과 핵폭탄을 생산할 수 없게 되면서 국가 안보가 크게 증진될 수 있다. 이 협약에서 북한은 핵 시설과 핵 프로그램을 폐쇄, 봉인하며, IAEA 사찰단을 60일 이내에 다시 수용하고, 추후 핵 시설을 불능화시키겠다고 합의했다.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가국들은 북한에 에너지 지원을 약속했다. 미국에서는 북한을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양국 관계정상화를 위한 양자 회담을 개최할 것이며, 북한과의 교역에 더 이상 적성국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3합의는 일부 지리발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9.19성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2.13합의는 ‘폐쇄(shutdown)’, ‘봉인(sealing)’, ‘불능화(disablement)’ 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한 내재적인 모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 폭탄과 플루토늄,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관측가들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농축 프로그램의 제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 협약은 또한 북한의 NPT복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2.13합의를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CVID와 같은 결과를 낼 수도 없을뿐더러 북한이 다시 NPT회원국으로 완전히 복귀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유용한 잠정협정(modus vivendi)로서 2.13합의 자체의 가치를 간과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는 엄연한 사실이다.

승자로서의 북한

북한은 최소한 단기적으로나마 이 핵 게임의 승자임에 틀림이 없다. 핵

실험 직후, 북한에서는 UN안보리 결의안 1718을 즉각적으로 거부하고, “위대한 지도자”의 핵실험 성과를 축하하는 거대 행군을 벌였다. 2.13합의와 그로 인한 평화적 분위기는 북한의 대남 정책의 폭을 넓힐 수 있게 할 것이다. 한국에 대해 전략적 우월성을 유지할 수도 있고, 한국 정부의 유화 정책을 새롭게 자극하여 북한에 대한 원조 재개 또한 기대할 수 있다. 2.13합의를 준수한 후에도 북한이 계속해서 가지게 될 최소한의 핵억지력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가 가진 기술적 경제적 우위를 여전히 압도할 것이다. 매년 40~50만 톤의 쌀과 30만 톤의 비료를 공급받는 것 또한 빼먹거리는 북한 경제에 무시할 수 없는 도움이 될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 BDA 이슈를 다자간 협상을 중단시키거나 시간을 좀 더 벌기 위한 유인책으로 이용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자금 문제가 해결되면, 북한은 다시 당당한 모습으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 “이제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충족시켰다”라고 말할 것이다. 북한은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시점까지는 ‘폐쇄’나 ‘봉인’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데, 표면적인 이유는 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2천 5백만 달러의 자금을 6자 회담의 운명을 걸고 있다고 믿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것이다.

북한의 승리는 부시 대통령의 대북정책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극명한 대립이 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그어놓은 대북정책상의 ‘한계선(red line)’을 최소한 두 번이나 철회한 바 있다. 1990년대 초에, 미국은 북한에게 “플루토늄을 생산하지 말라”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2000년대 초에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핵폭탄 실험을 하지 말라”라고 요구했다. 2006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후에는 부시 정부가 북한에 핵확산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부시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확고한 원칙으로서 공언했던 ‘3No정책’을 포기해야 했다. ABC(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 정부 정책을 모두 배격한다는 의미)슬로건을 앞세우고 “북한과의 직접 협상은 없다,” “악행에 대한 보상은 없다,” 그리고 “CVID외에 다른 거래는 없다”

라고 공개적으로 맹세한 바 있는 부시 대통령은 이제 NBC(Nothing But Clinton, 클린턴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정책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지난 1월, 부시 행정부는 북한과의 직접 회담을 위해 베를린으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초청했고, 2월에는 핵실험에 대한 다양한 보상을 약속하고, CVID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2.13협약에 서명했다. 부시 대통령의 실용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막대한 희생을 치르고 겨우 얻은 힘겨운 승리에 불과했다.

위기에 처한 NPT

NPT는 이미 위협에 처해 있다. 여기 저기서 도전과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미·러 미사일방어(MD) 논란, 미국과 러시아의 핵 우위를 따라잡기 위한 중국의 필사적인 노력, 2006년 미국 인도간 핵협력 협정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란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딜레마가 되고 있는 것은 NPT하에서 해당 국가가 평화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겠다고 약속하는 이상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활동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며, 또 불법시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북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군사적 의도가 입증될 때까지는 그러한 활동을 합법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활동을 불법화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미국은 농축과 재처리 활동의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어 국제원자력파트너쉽(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GNEP)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기본 논리는 사용자 국가(user state, 농축 및 재처리 시설이 없는 국가)들은 그러한 시설을 획득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핵연료 국가(fuel cycle state, 그러한 시설을 보유한 국가)들은 시설을 사용자 국가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자간 합의를 통해 사용자 국가에 대한 새로운 핵연료 공급과 핵폐기물 제거가 보장이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만약 핵무기의 '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나눈

NPT에 뒤이어 이 프로그램이 농축과 재처리 문제를 갖고 세계를 다시 '보유국' 과 '비보유국' 으로 갈라 놓는다면, 그 미래 또한 불확실할 수 밖에 없다.

미·러 MD논의와 다탄두재돌입 핵미사일(MIRVed Nuclear Missile) 개발을 위한 중국의 필사적인 노력, 그리고 1월 11일에 있었던 중국의 위성 요격(ASAT, anti-satellite) 무기 실험은 '수직적인 핵 확산(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 을 촉발시킬 수 있는 휴화산과 같다. 또한 '이중잣대' 논란을 촉발할 가능성이 큰 2006년 3월 2일 체결된 미국 인도간 핵 협력 협정은 NPT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미국이 사실상 인도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마-인도 협정에서는 인도가 22개의 핵 시설 중 14개 시설에 대한 평화로운 협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 나머지 8개의 핵 시설에 대한 인도의 군 기밀을 눈감아주겠다는 약속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인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떼어내고자 하며, 이로 인해 NPT의 정당성은 더욱 손상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일부 미국 분석가들은 이 협정을 '핵비확산 원칙을 압도한 권력정치(Power Politics)의 승리' 라고 부르고 있다. 북한의 핵 야심을 막지 못한 파문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북핵문제의 미래

부시 대통령이 '3No원칙' 을 고집했을 때, 북한이 가진 선택은 2가지뿐이었다. 하나는 핵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국제 제재에 맞서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보상을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평화의 바람' 을 느끼며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경우 국제 사회가 제공할 모든 대가를 추구하면서도 최소한의 핵억지력을 지키고자 하고 있는지 모른다. 만약 북한이 2.13합의를 준수하고 평화의 바람이 계속해서

붙어 준다면, 이러한 가정은 실현될 수 있을지 모른다.

2007년 3월 5일 미국측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미국이 인도의 핵무기를 용인했으므로 북한의 핵무기도 용인할 것을 요구했다. 평양의 끊임 없는 핵 야심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놀라운 소식이 되지 못했다. 사실 그 이전에도 비슷한 암시가 있었다. 2006년 10월 핵실험에 뒤이어, 북한은 핵폭탄을 제3국에 판매하거나 확산시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핵무기통제회담을 갖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러한 메시지는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받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김계관 부상은 2007년 3월 5일 아시아 소사이어티(Asia Society) 연설에서 이른바 ‘북·미간 전략적 관계’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미국측 정치가들의 의중을 떠보고자 했다. 미국의 묵인 하에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보유하고 그것을 새로운 현상(status quo)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던 점을 지적하며, 북한은 ‘미국의 승인’을 구하고자 했는지 모른다. 무엇보다, 이 세 국가가 옳지 않은 수단으로 얻은 영향력이 북한 정부로 하여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과 협상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들었을 수 있다.

만약 북한이 세 번째 시나리오를 선택한다면, 북한은 BDA 문제에서 보여주었던 약간의 계략과 지연책을 쓸 지연정, 2.13합의 내용을 실행할 것이다. 미국이 완벽한 비핵화 약속을 지키라고 요청할 경우, 북한은 어떤 구실로든 약속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양국이 대등한 핵보유국의 입장에서 별도의 핵무기 통제 회담을 시작해야 한다고 반박할 것이다.

끝나지 않은 문제

한국의 입장에서 세 번째 시나리오는 군사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해가 될 수 있다. 안보 측면에서 보면, 2.13합의 실행 후 북한에게 남겨진 최소

한의 핵억지력 조차도 한국에게는 비대칭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햇볕정책 이후로 점점 크게 부각되고 있는 ‘보수진보간 분열’을 심화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한국인들은 부시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확산과 추가적인 핵폭탄 생산을 억제한다고 약속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폭탄을 용인하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해주었는가?”하고 말이다.

세 번째 시나리오를 포함하여 북한에서 핵폭탄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면,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불확실성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좌절감에 끝이 없는 고뇌가 추가될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이 핵무기뿐 아니라 우라늄농축과 재처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for Denuclearization)에 따라, 한국은 핵무기 보유 및 농축, 재처리활동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핵폐기물 처리 문제를 포함하여 원자력 산업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북한이 공동선언을 무시하고 2006년 핵실험을 감행, 핵무기 보유국이 될 때까지, 한국은 일방적으로 공동선언을 준수하고 있다. 모욕적인 상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현재, 남한의 핵 과학자들은 두 가지 임무를 동시에 부여 받고 있다. 그것은 ‘재처리 공장 없이 엄청난 수의 폐핵연료봉을 어떻게 영구적으로 처리할 것인가?’와 ‘핵비확산 규범을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국에서는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이 폐핵연료 재생처리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이 일방적으로 추구하는 핵 기술력과 잉여 플루토늄은 일본 원자력 산업의 군사적 잠재력과 결합되어 또 다른 긴장 요인이 되고 있다.

만약 북한의 핵 문제가 지속된다면, 군비경쟁이 새롭게 촉발되고, 중국에는 핵무기 경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핵무기 국가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일 동맹의 ‘병마개(bottle cap)’ 역할은 여전히 강력하다. 핵무기 개발에 대한 일본 내부의

반대, 시민들의 과민 반응, 그리고 핵무장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비핵화를 강력히 지지할 것이며, 일본의 핵무장화에 대한 재고를 막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본이 북한의 핵폭탄에 인질화된 상태에 놓이길 거부한다면, 중·일간 핵 경쟁이 발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는 황량한 갈림길로 무자비하게 떠밀릴 것이다. 만약 핵무기 경쟁이 가속화되면, 비핵국가인 한국의 전략적 소외는 불가피한 결과가 될 것이다.

핵확산 도미노 예방

가장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의 핵 악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핵비확산을 위해서는 특정 강대국에 의한 일방적인 기술력 독점보다는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s)의 분배가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일본은 자국이 첨단 핵 기술을 추구할 경우의 지정학적, 심리적, 외교적 결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북한의 경우, 핵폭탄 보유가 장기적으로는 핵폭탄을 보유하여 북한이 유지하려고 하는 바로 그 정치체제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2.13 협정 자체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2.13협정은 북한의 NPT 체제 복귀와 완전한 비핵화를 이끄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자동차 산업과 지역협력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한·중·일 기업간 협력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한·중·일 정책 협력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한·중·일 기업간 협력

이타미 히로유키
(ITAMI Hiroyuki)

I. 규모 감각

지난 10년간 중국 자동차 생산량의 엄청난 증가는 실로 놀랍다. 미국의 자동차 생산은 서서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은 천천히 증가, 한국은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1]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2006)

순위	국가	생산량 (단위: 백만대)	
		2006	1997
1	일본	1148.4	1097.5
2	미국	1126.4	1213.1
3	중국	718.9	158.0
4	독일	582.0	502.3
5	한국	384.0	281.3
세계총 생산량		6912.7	5311.7

2006년에는 한·중·일 3국 모두가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 순위 내에 들었고, 세계 자동차 총 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천2백6십만 대를 이들 동북아시아 3국이 생산했다. 동북아 지역은 이미 세계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이다. 중국의 급속한 생산량 증가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놀라운 성장에 기인한다. 2006년, 7백2십만 대의 자동차가 판매된 중국 시장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고, 3위인 일본을 앞질렀다.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일찌감치 세계 최대의 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수시장의 거대한 수요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생산은 양국 모두 국내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생산은 주로 중국 기업과 주요 외국 자동차 회사간 조인트 벤처 기업들이 이끌고 있다. 일본과 한국 기업들은 국내에서만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해외에서 천 백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는데, 미국과 유럽이 주 무대였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본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2천2백5십만 대를 생산해 냈고, 이는 세계 자동차 총 생산량의 3분의1을 차지한다. 한국 기업들은 2006년 국내 공장에서 3백8십만 대의 차량을 생산했으며, 해외에서 추가적으로 백만 대를 생산했다.

2006년 일본, 한국, 중국 기업들(조인트 벤처 포함)의 전세계에 걸친 생산량을 다 합한 값은 3천4백5십만 대였고, 이는 세계 자동차 총 생산량의 절반에 해당된다. 이것이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한·중·일 3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규모이다. 이렇게 엄청난 규모를 가진 이 지역의 자동차 제조업체간 협력은 역내 경제 성장과 안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세계의 환경, 지구 우주선(Spaceship Earth)을 위해서도 바람직하고 불가피하다.

II. 중심지로서의 중국

원칙적으로 기업간 협력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존재한다. 1)조인트 벤처, 2)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3)기술 라이선스 및 부품 공급. 하지만, 근시일 내에 초점은 중국 내에서의 조인트 벤처 기업이 될 것 같다. 중국 시장은 일본, 한국, 중국 기업들간 협력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산업정책과 놀라운 속도의 시장 성장을 통해 한국, 일본, 중국 기업간 협력을 ‘밀어 부치고’ 있다. 중국의 산업정책은 자동차 수입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며, 외국 기업의 자동차 생산은 중국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기업들은 미국인, 독일인들과 함께 다양한 조인트 벤처를 통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고 있다.

III. 중국의 복잡한 형태의 조인트 벤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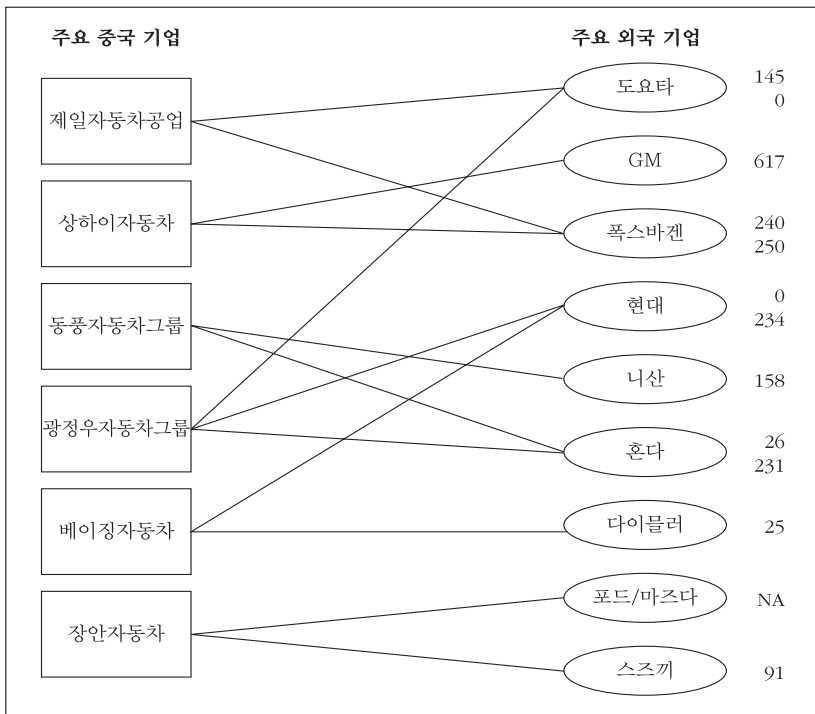
중국에는 ‘3+6’ 이라 불리는 중국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이 존재한다. 처음 3은 중국의 빅3로 북쪽의 제일자동차 공업 (First Auto Works: FAW), 상하이 지역의 상하이자동차 (SAIC: Shanghai Automotive Industry Corporation), 그리고 중부 지역의 동풍자동차그룹 (Dongfeng Motor Group)이다. 이들 기업은 이전에 국영 기업이었으며, 정부의 선정을 받아 중국 자동차 시장의 기반을 닦는 창립 기업이 되었다.

- 규모가 조금 더 작은 나머지 6개 기업 또한 정부로부터 다양한 특혜를 부여 받았다. 이 중에서 베이징 자동차 (Beijing Automobile Works), 광저우 자동차 그룹 (Guangzhou Automobile Group), 그리고 장안 자동차 (Changan Automobile)가 외국 기업들과 활발한 조인트 벤처 활동을 하고 있다.

- 체리 자동차 (Cherry Automobile)와 같은 국내의 독립 기업들도 6대 기업에 포함되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 이러한 주요 자동차 회사들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동차 제조사가 100개 이상 존재한다.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외국 기업과의 조인트 벤처 형태는 매우 복잡하다. 주요 자동차 기업 각각은 2개 이상의 외국 기업들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고 있는데, 대부분 승용차 생산용이다. 다른 외국 기업간의 조인트 벤처도 있지만 그 수는 월

[그림 1] 얽히고 설킨 중국의 조인트 벤처 관계



- 각 라인은 기업들 간 조인트 벤처 관계를 보여준다. 한 개의 라인이 여러 개의 별도의 법인 (legal entity)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 회사 이름 옆에 있는 숫자는 2005년 조인트벤처의 승용차 판매(단위:1000대) 대수이다. 위에 나온 숫자는 상위 라인 벤처에 해당한다.

씬 적다. 중국 자동차 기업의 조인트 벤처 현황은 아래의 표에 나와 있다.

그림에 나온 판매 대수는 승용차에 대한 것으로 2006년 6월 29일 일본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Japan)의 조사보고서에 나온 자료이다. 도요타와 현대의 생산대수가 0이라는 것은 이 조인트 벤처가 매우 최근에 생겨났고 아직 창립 과정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 생겨난 이 두 개의 조인트 벤처들은 둘 다 남쪽의 광저우 자동차 그룹과 합작한 것으로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중국에서도 특히 이 지역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인트 벤처를 시작하는 타이밍 측면에서는 폭스바겐(VW)이 선두였고, GM이 그 뒤를 따랐다. 도요타는 후발 주자였다. 이러한 조인트 벤처의 출발 시점은 여전히 승용차 시장의 시장 점유율에 반영되고 있다. 혼다와 현대는 출발이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 사업이 매우 성공적이며, 지난 5년 동안 승용차 시장의 상승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비록 조인트 벤처기업들이 중국 승용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의 독립 기업들 또한 승용차 시장에서 빠르게 부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다음은 2002년과 2005년 중국에서 승용차 판매에 대한 기업 유형별 시장 점유율이다. 유럽(VW)과 미국(GM) 조인트 벤처(JV)기업들의 급속한 하강과 중국의 로컬 기업 및 한국 조인트 벤처 기업들의 인상적인 성장이 주목할 만하다.

[표 2] 중국 승용차 시장의 기업 유형에 따른 점유율 (%)

	2002	2005
유럽/미국 JV	63.7	34.9
일본 JV	14.9	17.9
한국 JV	0.3	8.7
중국 로컬 기업	18.8	38.3

출처: Marklines.

IV. 주요 고려 사안들

기업간 협력, 특히 중국의 조인트 벤처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과정은 어쩔 수 없이 '경쟁적 협력'이라 부르는 관계가 되겠지만, 그 영향은 경쟁적 성과 이상이 될 것이다. 다음은 잠재적인 영향을 나열해 놓은 것이다.

- 중국 내 자동차 생산을 위한 국내 기술력 향상에 필수적인 기술이전 및 기술 확산
- 중국의 자동차 산업 인프라
 - a. 자동차 생산 인프라는 수많은 기계관련 산업에 대한 기초가 되고, 전반적인 중국의 산업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 b. 지역의 미래 번영은 중국 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달려있다.
-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및 분업
 - a. 우리는 중국 내부의 산업구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중국의 거대 시장과 최종 조립 역량, 그리고 일본과 한국에 이미 자리잡고 있는 거대 부품 및 공작 기계 생산 네트워크로 인해 동아시아 전 지역에 걸친 분업 구조와 국제적인 생산 네트워크가 생겨날 것이다.
 - (1) 예를 들어, 일본은 전 세계 공작기계 생산량의 절반을 생산하고 있다.
 - b. 국제 분업의 범위는 3국 기업들의 기업 행위뿐 아니라 3국 정부의 산업 정책에 달려있다.
- 환경 문제 감소
 - a. 중국 자동차 시장의 막대한 생산량과 급속한 성장은 역내에 심각한 환경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잠재력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우려 사항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일 것이다.
 - b. 일본과 한국은 중국에서 생산되고 사용되는 자동차로 인해 유발되는 온실가스 배출문제를 줄이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 중국이 한국

과 일본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동쪽으로 부는 제트기류의 상류 쪽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기오염의 영향은 중국의 국경선을 훨씬 넘어선다.

- c.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판매되는 수많은 자동차와 이 3국의 기업들이 세계 각지에서 생산하는 수많은 자동차에서 나오는 온실 가스 문제가 있다.

V. 핵심 요소

중국 시장에 초점을 맞춘 경쟁적 협력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적 성과와 기타 영향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중국의 산업 정책:** 1) 중국은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100% 투자를 허용할 것인가? 2) 경쟁적인 입지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존재하는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 이러한 업계 개편에 있어서 유통 채널이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 **중국의 지적재산권 정책:** 기술이전이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이긴 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기술이전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도록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바로 지적 재산권 보호이다. 이는 기술 이전에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

환경 보호 등 국제적인 영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는 다음과 같다.

- 정부 및 관련 기업 모두가 가진 환경적 우려에 대한 깊이
- 동아시아의 분업구조를 위한 3국 정부의 산업 정책

이러한 정책들은 동북아시아의 경제공동체 구축이라는 더 큰 이슈와 연관이 되어 있다.

VI. 향후 전망

동북아시아(중국, 일본, 한국)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가 되어있을 것이 확실하며 그 때쯤에는 이 지역의 자동차 생산이 세계 총 생산량의 40%까지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중·일 3국의 기업들이 전세계적으로 생산하는 자동차 대수는 향후 10년 동안 세계 총 생산량의 3분에 2가까이 될 것이다.

복잡하게 얽힌 조인트 벤처 관계 또한 중국의 산업 개편 및 국제 분업을 촉진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조인트 벤처들의 미래는 약간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산업 정책에 크게 의존적이다. 최고의 시나리오는 주요 외국 기업들이 중국의 자동차 생산에 더 많이 참여하고, 다양한 단계의 주요 부품 생산이 동아시아에서 폭 넓은 분업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동차의 연비 개선 및 기타 친환경 기술이 중국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는 지구 우주선이나 일본, 한국 같은 이웃국들의 미래 환경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는 동아시아 지역 기업들의 건전한 경쟁적 협력과 3국 정부의 신중한 산업 정책에 달려있다. 이 지역의 주요 자동차 회사들, 특히 일본의 도요타, 한국의 현대, 그리고 중국의 제일 자동차공업(First Automotive Works)등의 주요 자동차회사들은 이러한 경쟁적 협력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 인식해야 한다. 이들은 기업의 투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뿐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책임이 있다. 중국 정부뿐 아니라 일본과 한국 정부 또한 이 지역의 자동차 산업이 역내 산업 발전과 세계적인 환경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한·중·일 정책협력

무롹핑
(MU Rongping)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1980년 이후로 커다란 변화를 겪어왔다. 2006년 중국에서는 7백 2십 8만대의 자동차를 생산했는데 이는 1999년에 비해 3.9배, 1980년에 비해 28.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중국의 자동차 생산능력 확대는 상당부분 외국인 직접투자, 기술이전, 기술 면허 및 컨설턴트, 그리고 기술 인력 교류 등의 채널을 통한 선진 외국 자동차 기술의 지속적인 도입으로 인한 것이었다. 자동차 산업의 부가가치는 중국 GDP의 1.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1]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FDI

(단위: 백만 달러)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프로젝트 수	213	329	578	865	1134	1015
계약상 금액	861	930	1708	4142	6112	5486
실제 사용된 금액	1090	1018	1230	2003	3353	34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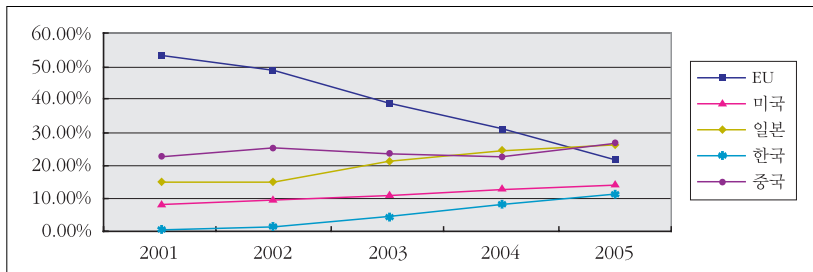
출처: 2006년 중국 FDI 보고서.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두 승용차 제조업체들은 조인트 벤처 기업들이었으며, 다국적기업들이 중국의 승용차 시장에서 거의 모든 인기 브랜드와 제품 기술을 장악해 왔다. 2005년 중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총 외국인직접투자(FDI)의 24%는 홍콩 특별행정구역(SAR)으로부터 온 것이었고,¹ 그 뒤를 이어 한국이 20%, 일본이 15%, EU국가에서 9%, 대만이 7%, 그리고 미국이 7%를 각각 투자했다.

1. 일본과 한국의 기술 도입을 통한 중국 자동차제조업체 및 공급업체의 발전

일본의 브랜드와 기술을 가진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들은 광저우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에, 한국의 브랜드와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주로 베이징과 산둥성에 집중되어 있다. 대개 EU와 북미 국가의 자동차 업체들은 전세계적으로 자재와 부품을 조달하지만, 중국과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총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사의 자재 및 부품 공급체계를 직접 설립하는 것을 선호한다.

[그림 1] EU, 미국, 일본, 한국 및 중국 브랜드 자동차들의 중국시장 점유율



출처: 중국자동차기술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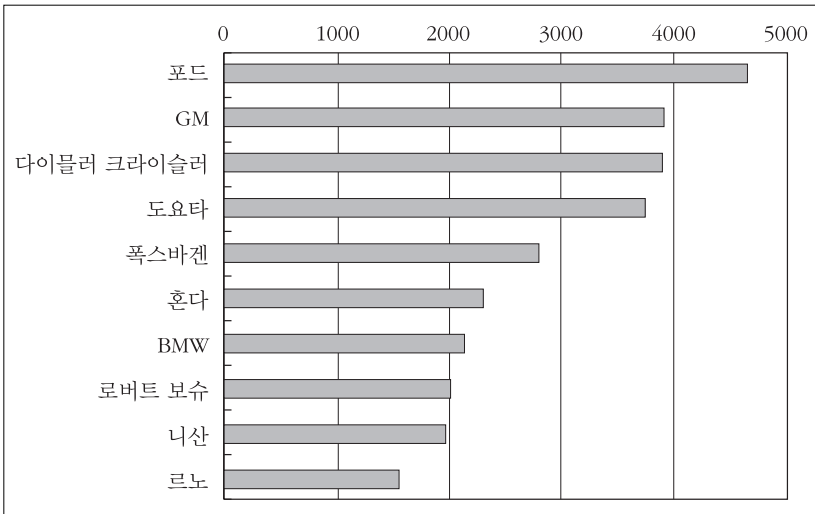
1. 출처: 중국 상무부.

II. 중국 자동차 산업 정책의 발전

중국은 1994년에 첫 번째 자동차 산업 정책을 실시했고, 2004년에 두 번째 정책을 실시했다. 첫 번째 자동차 산업 정책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자동차에 대한 가족의 필요성 충족' 및 '자재와 부품의 국내 생산 장려'와 같은 부분에 진전이 있었다. 두 번째 자동차 산업 정책은 '자동차 산업, 관련 산업, 교통 인프라와 환경 보호 부분의 조화로운 발전 촉진'과 '자동차 산업의 혁신역량 강화'라는 명백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 후로, 중국의 자동차회사들은 R&D, 특히 신차 개발 부분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R&D투자와 혁신역량 측면 모두에서 다국적기업에 경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림 2] 2006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최상위 10개 R&D투자 기업들

(단위: 백만 달러, 미화)



출처: http://www.innovation.gov.uk/rd_scoreboard/.

사회와의 상호작용에 관련해서, 중국의 자동차 제조업체들과 공급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 소음 절감 및 교통 안전 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용할 사회적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중국 정부에서는 다른 기업들도 각자의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법과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II.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정책조율: 중국, 한국 및 일본

국가간 정책 조율은 국제 경제 및 기술 협력에 있어 핵심 사안중의 하나이다. 국제적인 정책 조율의 일차적인 목표는 갈등을 피하고, 낭비를 줄이는 것인 반면에, 더 궁극적인 목표는 서로 다른 정책 사이에서 상호보완성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낸다는 것이다. 국제적인 정책 조율 활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바로 WTO나 OECD와 같은 정책조율 기구들의 조율 활동(집행력을 가진 조율활동)과 APEC과 같은 정책협력 매커니즘(집행력 없는 조율활동)이 그것이다. 국가간 정책 조율의 동향을 살펴보면, WTO와 같은 매커니즘을 활용하여 일반적인 혜택을 추구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특별한 혜택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중·일 FTA협상은 여전히 준비 단계에 있지만, 이들 3국간 산업 협력은 많은 진전이 있었다. 예를 들어, 정기적인 3자 각료회의(triple minister meeting) 및 워크숍 등이 동북아시아의 정보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이 중국 장춘에서 자동차 포럼을 개최한다는 지 자재/부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는 등 서로의 협력과 발전을 향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 분야에 이들 3국간의 효율적인 정책 조율 활동은 없었다.

한·중·일 3국간 자동차 산업의 정책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사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1) 자동차 산업의 정책조율 매커

니즘 및 정책 조율 기구에 대한 전략적 연구 시작, (2)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한 3국간 정책 조율 매커니즘 및 정책 조율 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 (3) 3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오리엔탈 자동차(Oriental Car)의 모델 개발을 위한 3국의 자동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 사이에 협력 촉진.

제6장

싱크탱크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 건설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1.5트랙 외교의 시도

지식 공동체의 중요성:
동아시아 협력 과정에서의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제: 모스크바의 시각

싱크탱크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 형성: 일본의 시각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EACD): 1.5트랙 외교의 시도

수잔 셔크
(Susan L. SHIRK)

1990년대 초는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였다. 냉전이 종식되었고, 일부 미국인들은 국내 문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었다. 한반도와 대만 해협이 전쟁 발발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중미 관계가 천안문 사태로 인해 악화되었다. 부상하는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여전히 주요 강대국으로 남아 있었지만, 아시아인들은 떠오르는 중국의 위협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클린턴 정부는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 협력에 대한 유용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1993년 UC-샌디에고의 캘리포니아 대학 국제분쟁 및 협력 연구소(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 에서는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 협력의 가치를 탐구하기 위한 2번째 실험으로서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를 설립했다. 에너지부의 동북아 핵비확산 담당국에서 NEACD에 자금을 제공했고, 국무부와 국방부에서는 부차관보급 관료들을 대화에 참석시키는데 동의했다. IGCC에서는 NEACD에 동북아시아의 안정에 있어 가장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가진 6개국, 즉,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한국 및 북한만 참석하도록 제한을 했다.

NEACD의 참가 자격은 각 국가별로 외무부 관료 한 명, 국방부 관료 한 명, 군 관료 한 명, 학계 전문가 두 명으로 정해 놓았다. 관료들은 정부 대표로서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데 바로 이 점 때문에 서로 솔직한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된다. 또한 토론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의해 이러한 솔직한 대화가 더욱 가능해진다. (토론의 내용은 각국의 참가자들에 의해 정부에 내부 보고가 되며, 이를 통해 정책 과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처음 NEACD 대화를 가졌을 때, 참가자들은 언론 성명 문제를 놓고 힘들어 했었다. 또한 성명서에 대한 토론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NEACD에서는 언론 보도 관행을 버리기로 한 것이다.

NEACD회의는 항상 각국 정부 관료들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작되며, 각각 1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그 후에는 약 15분간의 날카로운 질의응답 세션이 진행된다. 이러한 의견 교환을 통해 사람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우려사항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알 수 있으며, 정부는 정책적인 의사 결정에 대한 목적을 밝히고 관련 배경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둘째 날에는 전문가들이 진행하는 한 두 개의 간단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후 특정 안보 관련 주제에 대해서 참석자들이 논의를 하게 된다.

1993년 이후로, NEACD에서는 17번의 회의를 가졌으며,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제도화가 잘 된 안보대화체제로 발전했다. 회의 장소는 참가국들이 번갈아 가며 제공하고 있다. IGCC에서 회의를 준비하기는 하지만, 회의 어젠다나 연구 프로젝트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된다. NEACD 회의 전후로는 방위정보공유연구프로젝트(Defense Information Sharing Study Project)라 불리는 군사대 군사 소그룹(military-to-military subgroup)이 이들간의 회의를 갖는다. NEACD에서는 또한 추가적으로 에너지, 교통, 해양 무역, 그리고 가장 최근의 북한 경제 문제에 이르기까지 안보 영향을 가진 특정 경제 주제에 대해 하루 정도의 워크숍을 개최하는 경우가 많다.

제도 구축

처음부터, IGCC는 NEACD가 동북아시아의 공식적인 안보 협력 과정에 대한 기틀을 다져주기를 바래왔다. 6개 국가, 그 중에서도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은 동아시아 전체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권력 균형을 형성한다. 이는 또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부상하는 지역 강국들과 책임을 공유하게 할 것이다. 제도 구축은 항상 NEACD 어젠다에 들어 있었다. 지난 10년 이상 외무부 관료들은 회의 둘째 날 점심을 함께 하면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공식적인 다자주의 체제에 대한 전망에 대해 논의를 해 왔다. 이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모든 참가국의 외무부 대표들은 그러한 공식적인 다자주의 체제가 설립되는 것은 단순히 시간 문제라고 믿게 되었다.

북핵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은 부분적으로는 NEACD의 경험에 의해 영감을 얻어 고안되었다. 중국 외무부 아시아부 고위관료인 잉 푸 대사가 제 1차 6자 회담에 뒤이어 중국 청도에서 개최된 NEACD회의에 참석해서 NEACD를 ‘그림자 6자 회담’이라고 칭한 바 있다. NEACD연구 프로젝트에서는 각국 정부들에게 트랙 원 (Track 1) 공식 과정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시했다. NEACD에 대한 각국 정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정부 관료라는 사실로 인해 NEACD는 트랙 투(Track 2) 대화라기 보다는 트랙 1.5 대화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참여

2006년 4월 도쿄에서 열린 NEACD회의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은 언론에 북한이 NEACD의 창립 멤버라고 말했다. 1993년 UCSD에서 개최된 제 1차 NEACD회의 참가 당시 북한은 매우 열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

었다. (훨씬 덜 열정적이었던 중국은 마지막 순간에 회의 참가를 결정했으며 하급 외교관을 참가자로 보냈다.) 1993-4년 핵 위기가 있는 후, 북한은 다른 참가국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NEACD 참가를 중단했다. 북한은 2002년 고이즈미 총리 방문 및 제임스 켈리 차관보의 평양 방문 후 NEACD로 복귀했다.

NEACD회의가 개최되면서, 북한 참가자들의 안정 수준(comfort level)이 계속해서 높아졌다. 북한의 참가자들은 리더만 대표로 이야기를 하던 모습에서 탈피해 다른 참가자들도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질문에 대답만 하는 대신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에게 질문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참가자들이 점점 더 편안하고 활발한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북한측 참가자들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NEACD의 성과

NEACD에서의 논의 내용은 결코 한반도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NEACD의 14년 역사 중에서 북한은 8년 동안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토론 주제의 대부분이 중·일 관계(특히 전역미사일방어 및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사안들에 대한 미·일 협력) 및 역내의 미국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타 공식 회의에서 회피하거나 표면적으로만 다루었던 수많은 난제들이 NEACD에서는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전통적으로 중국과 미국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다자주의에 대해서 가장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 이 문제가 자국의 이익에 관련이 있음을 깨닫고 점점 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참가자들은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 왔다. 일레로,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순찰을 위한 지역국가들의 공동노력을 들 수 있다. NEACD 참가자들은 인권, 항해의 자유, 핵비확산 문제 등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일련의 원칙을 채택했다. 대부분의 외교 업적들이 그렇듯이, NEACD가 이루어낸 가장 극적인 진전사항을 꼭 짚어 말하기는 쉽지 않다. 2006년 4월 도쿄 회의에서는 6자 회담 협상 담당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 큰 화제가 되었으나, 중단된 공식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이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 하지만 뉴스가 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NEACD에 참석한 9명의 북한 대표단은 핵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의 경제 개혁에 대한 전망을 포함한 여러 주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NEACD의 미래

만약 동북아시아에서 영구적인 다자주의 매커니즘이 설립된다면 NEACD는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해체되어야 할 것인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NEACD의 기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외무부 관료들이 점심을 함께 하며 이러한 질문에 대해 논의할 때마다 이들은 NEACD를 버리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비록 공식적인 논의과정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이고 즉흥적인 의견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NEACD의 기능은 다른 어떤 공식회의에서도 따라 하기 힘든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이다. NEACD는 계속해서 동북아시아 외교문제와 관련하여 담당자들이 한 발짝 물러나 학계 전문가들과 의견교류를 할 수 있는 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NEACD에서는 또한 연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참가 관료들로 하여금 회의에서 제시된 제안들을 행동에 옮기도록 촉구함으로써 공식적인 다자주의의 임무를 보충할 수 있다. 6자 회담의 에너지 및 경제 실무 그룹의 한국측 담당자와 평화 및 안보 매커니즘 실무그룹의 러시아 담당자들은 NEACD가 실무그룹이 하는 일에 대해 이러한 종류의 지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해 왔다.

지식 공동체의 중요성: 동아시아 협력 과정에서의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쥬리춘
(ZHU Liqun)

냉전 종식 후, 세계는 권력 구조의 측면뿐 아니라 국가간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성 측면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경험해 왔다. 우리는 현재 다수의 글로벌 행위자가 존재하고, 상호 연관이 점차 커지는 세계 질서 속에서 살고 있다. 이 행위자들은 더욱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더 큰 활동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지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는 그러한 복잡한 네트워크의 하나로 국가, 지역 및 국제적인 사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피터 하스(Peter M. Haas)에 따르면, “지식 공동체는 특정 영역에 뛰어난 지식과 역량을 갖추고, 그 영역이나 이슈 분야의 정책 관련 지식에 대해 영향력 있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크”이다.¹ 지식 공동체는 정책 혁신, 선택, 보급 및 지속성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정책결

1. Peter M. Haas, “Introduction: Epistemic Communities and International Policy Coordination,”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Winter 1992), p. 3.

정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² 이에 대한 좋은 사례가 동아시아의 지역 협력 과정의 트랙 투(Track 2) 채널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싱크탱크네트워크(NEAT)라고 할 수 있다.

I. 지식 공동체로서의 NEAT

NEAT는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이 제안한 17개의 단기 조치 중 하나로, 그 기본적인 기능은 ASEAN+3 참가국 학자들의 지식을 모으고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2003년 말 필자가 몸담고 있는 중국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CFAU)이 NEAT의 중국측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04년 8월 NEAT의 제 2차 연례회의에서 CFAU와 태국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이 NEAT의 공동 특별 책임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지난 몇 년 동안 NEAT는 제 기능을 발휘하며 트랙 2 기관으로 자리잡았을 뿐 아니라, 심도 깊은 연구를 실행하는 지식 공동체를 건설하고, ASEAN+3 및 APT 정상 회의 지도부에 중요한 정책 제안을 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아시아의 협력을 효과적으로 촉진시켜왔다.

첫째, NEAT는 지식 공동체 건설을 관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구축에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왔다. NEAT에서는 운영 지침이 되는 강령(charter), 즉 기본 규정과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며, 연례 회의와 국가별 담당자 회의 및 실무 그룹을 개최하며 업무 매커니즘 또한 개발해 왔다. 작년에 우리는 8개의 실무 그룹을 만들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에너지 안보, 금융 협력 및 투자 협력 등과 같은 다른 분야에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 실무 그룹들이 작성한 보고서와 제안한 정책들은

2. Emanuel Adler and Peter M. Haas, "Conclusion: Epistemic Communities, World Order and the Creation of a Reflective Research Program," *International Organization*, Vol. 46, No. 1 (Winter 1992), p. 375.

NEAT의 최종 보고서에 포함되었고, 10+3 정상 회의에서 배포되었다.

둘째, 중국외교학원(CFAU)은 NEAT의 웹사이트³ 설립 권한을 부여 받았다. 왜냐하면 NEAT 회원국들이 지식인들과 엘리트들 사이에 의견을 교환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지식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그 과정에서 대중 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는 우리가 사회적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we-ness)’라는 개념을 키우며,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셋째, NEAT에서는 또한 독특한 연구방식을 개발해왔는데, 이는 행동 중심적이면서 정부, 기업 및 학계의 지식을 한 데 모으는 방식이다. 지역 협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NEAT에서는 그 동안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한 실행 조치 및 제안사항을 포함한 중요 분야에 우선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의 협력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에는 동아시아의 협력 프로세스에서 금융 협력의 가능성과 실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왔으며,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개의 주요 리스크, 즉 에너지 부족 및 환경 악화 문제를 식별해 냈다. 에너지 안보는 커다란 우려 사안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동아시아의 석유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외 지역으로부터 석유 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동아시아의 취약한 석유 비축 시스템으로 인해 자기조정(self-adjustment) 매커니즘이 부족한 상태이다. 게다가 ‘아시아 프리미엄(Asian Premium)’으로 인해 동아시아는 특히 불리한 입지에 처하게 되었다. 에너지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략적 석유 비축 체계 설립, 에너지 절약 기술에 대한 협력 추진, 재생가능 에너지 자원 개발 및 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실행, 그리고 동아시아 석유 선물시장 건설과 같은 지역협력을 강화하

3. NEAT의 웹사이트는 <http://www.neat.org>이다. 관련자료 및 행사정보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다.

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과제 중 또 다른 한 분야는 환경 보호 문제이다. 자연 재해의 빈번한 발생은 상당부분 자연 환경의 지속적인 악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또한 최악의 환경 악화 및 자연 재해를 경험해 왔다. 우리는 특히 환경 보호기술과, 재난 구조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실행하고 전문지식을 공유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으며,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 공유 및 조기경보 시스템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넷째, NEAT는 지역의 지적 자원을 끌어 모으는데 활발한 역할을 해 왔다. NEAT는 역내 회원국들의 싱크탱크를 네트워크화하였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투자포럼(East Asian Investment Forum), 동아시아 협력에 대한 공동 연구 회의(Joint Study Convention of East Asia Cooperation), 동아시아 협력 및 미·러 관계에 대한 세미나(Seminar on East Asian Cooperation and Sino-US Relations)와 유럽통합 및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에 대한 컨퍼런스(Conference on Rethinking European Integration and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등 수많은 학술 활동에 대해서도 공동 후원 및 공동 조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NEAT의 활약으로 인해 동아시아 국가 및 다른 지역의 학자들 사이에 이해와 연계가 크게 향상되었다.

II. 유럽보다 동아시아에서 더 중요한 지식 공동체

지식 공동체는 공동체 건설과 지역 통합에 대한 공감대와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유럽과 동아시아 모두에 해당되지만, 동아시아의 경우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프로세스가 겨우 10년 전에 시작되었고 아직도 준비 단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식 공동체는 동아시아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동아시아 프로세스는 역내 국가의 지도부와 국민들로부터 서로에 대한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더 많은 공감대와 더 많은 의견을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의 협력 프로세스는

유럽의 통합과정과는 완전히 다르다. 법적인 의무가 따르는 유럽 통합과 비교해서 동아시아 협력은 '아시아 방식'⁴이라 부르는 색다른 접근법과 색다른 특성을 가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⁵

- **작은 국가들의 주도:** 10개의 ASEAN국가들과 한·중·일 3개 동북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ASEAN은 이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계속 이끌어 왔다. ASEAN의 이러한 선도적 역할은 참가국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 왔고, 참가국들 모두가 ASEAN이 동아시아 협력의 성공에 있어서 중심 역할을 한다는데 동의했다. 협력 프로세스에 있어서, 국가의 규모나 빈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들이 동등하게 존중 받으며,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
- **사회적인 상호작용:** 사회적인 신뢰구축이 사람들 사이에 긴밀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증진되어 왔으며, 사회규범 또한 서서히 모든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었다. NEAT회원국들이 공감대를 도달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부상하는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다. 쟈민우(Wu Jianmin) 대사는 이것을 5 'C' +1 'O' 로 요약했는데, 5개의 'C' 는 협력(cooperation), 협의(consultation), 긴밀함(closeness), 공감대(consensus), 안정 수준(comfort level)이며, 1개의 'O' 는 그리고 개방(openness) 또는 개방적인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의미한다. 이러한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동아시아 협력이 오늘날의 성과를 이룰 수 있었고, 향후 동아시아 협력 발전 및 동아시아 공동체 추구 시에도 계속해서 정체성 인식이 강화될 것이다.
- **프로세스에 대한 집중:** 동아시아의 협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긴 하지만 협력 프로세스는 이미 시작되었다. 프로세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권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안정 수준(comfort level)에 큰 중요성을 부과하고 있지만, 동아시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의사 결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누군가는 ASEAN방식을 비

4. Amitav Acharya, *Constructing a Security Community in Southeast Asia: ASEAN and the Problem of Regional Order* (London and NY: Routledge, 2001).

5. Qin Yaqing and Wei Ling, "Structure, Process and Socialization of Power: China and East Asian Cooperation," *World Economy and Politics*, No. 3 (2007).

난하면서, 이것이 쓸모 없는 토크 쇼라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프로세스는 특히 신뢰와 정체성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지식 공동체는 동아시아에서 특히 더 중요한데 그 이유는 동아시아가 더 큰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도전 과제 중 주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시아는 권력 이양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동아시아 국가들이 갈등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명히 긴장과 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할 것이다. 둘째, 아직도 동북아시아에는 냉전의 유물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 각 국가들이 각자의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경제 관계가 점점 더 상호의존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안보 문제들이 여전히 이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셋째, 민족주의의 부상이 명백한 지역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지역 통합에 이로운 정도를 넘어서서 지나치게 확산될 수가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은 민족주의와 국제주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여전히 직면해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협력을 가져오고 지식 공동체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러한 모든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식공동체로서 NEAT가 기능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간 조율의 습관을 양성하고, 국가간 의견차를 줄이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통합 프로세스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정보 및 자원 공유를 위한 역내 학술 기관들의 교류 증진
- 공동체 건설에 있어서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점과 리스크 연구에 대한 중요성 부각
- 정부와 기업, 학계 및 일반 대중들 사이의 상호작용 강화
- 개방화되며 타 지역 기관들과의 교류 및 그들의 경험을 통한 교훈 습득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의제: 러시아의 시각

겐나디 추프린
(Gennady CHUFRIN)

현재 논의 중인 동아시아의 지식 공동체 건설에 대한 제안은 다양한 이유와 필요로 인해 이루어졌다. 그 중 하나는 동아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치, 안보 또는 경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역내 국가들이 국가 차원에서 수행했던 지적 노력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구 소련 붕괴 후 1990년대에 맞닥뜨린 심각한 국내 문제들을 대부분 극복하고, 동아시아의 지역 정치 및 경제적 삶에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러시아의 이해관계는 향후 수십 년 동안 더 빠른 속도로 시베리아와 러시아 극동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긴박한 필요성에 의해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에서는 평화로운 국제 환경과 다양한 분야의 사안에 대해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동아시아 정책의 기반으로서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러시아는 이곳에서 기존의 갈등을 해결하고 안보 위협을 최소화 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공식적인 형태뿐 아니라 트랙 2(Track 2) 채널을 통해서라도 지역의 협력과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유지하고, 주요

정치, 경제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에 활발하게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이해 당사국들 사이에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심도 깊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매우 중요하고 힘든 사안들이 여러 개 존재한다. 그러한 대화는 공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학문적인 차원의 비슷한 노력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사실상 대체되어야 한다.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이종 트랙 분석을 필요로 하는 지역 및 세계적인 중요성을 가진 사안들로서 북한 핵 문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 또는 남북한의 통일 문제들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한 대화의 필요성은 공식적인 차원이건, 학문적인 차원이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사안들에 대하여 역내의 다양한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상충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이러한 차이와 모순을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한국의 통일 문제를 국제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이야기 하면서, 누군가는 수십 년 동안 분단되어 있던 두 국가들, 즉 베트남과 독일이 지난 반 세기 동안 그러한 분단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릴 지 모른다. 베트남의 통일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종식되며 찾아온 반면에, 독일인들은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부 세계에 있어서도 분단 해결에 있어서 독일의 통일 방법이 훨씬 더 선호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현재 진행중인 북핵문제에 대한 6자 회담이 국제 사회가 한반도와 주변 문제들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도구일지 모른다. 이 회담에서 이루어진 진전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전에 대한 굳건한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통일에 대한 전망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프로세스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에 대한 초안을 잡을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외부 권력과 특히 남북한의 이웃 나라들이 그들의 궁극적

인 통일과 통일의 방식에 대해 진정한 관심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혹시 한반도 통일의 결과를 현재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외부 세계에 지금보다 더 당혹스러운 상황을 가져오지는 않을까? 즉, 지금 남북한이 국제 관계에서, 특히 동북아시아에서 각각 혹은 함께 보여주고 있는 역할과 비교할 때, 남북한의 통일은 더 크고, 더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국가를 탄생시켜서, 이전과 다르게, 훨씬 더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자 할지 모른다.

한반도 통일 프로세스의 현 상태를 보고 판단할 때, 그러한 질문들은 시기 상조처럼 보인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질문들이 이미 다양한 출판물과 발표문을 통해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즉, 이것은 국제 사회의 관점에서 남북통일 문제가 지난 반 세기 중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매우 객관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물론, 한국의 통일에 대한 전망은 무엇보다 남북한의 상황에 달려있으며, 남북대화가 오랫동안 한국인들이 갈망해온 남북 화해의 목적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남북대화는 그 대화 자체가 중단되는 경우도 많고, 상충적인 경향이나 전개를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지지되어야 한다. 이것은 남북 화해 프로세스에 있어서 외부 세력들의 역할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북 통일의 실현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위에서 언급된 독일 통일의 경험을 따를 것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그러한 독일 통일의 장점은 결코 절대적일 수 없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이 NATO의 동쪽 확장의 서곡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만 생각해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독일 통일에 대한 국제적인 조건이 한번도 제대로 성문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과 러시아의 국가적 안보는 법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한국 통

일의 경우에는 독일 통일의 긍정적인 측면(평화적인 특성)을 강화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은 피하고 그 과정에서 모든 관련 국가들의 국가적인 안보 문제가 균형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긴장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 더 커질 수도 있다.

미국이나 일본, 또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한국의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견해와 안보 우려들을 반영한 의견들, 매우 다양하고 종종 상충되기까지 하는 이러한 의견들을 비교해 보면 위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수많은 분석가들이 표현한 의견을 보면, 미국이 가장 선호하는 한국 통일의 시나리오는 북한이 정치, 경제적으로 몰락한 후 한국에 흡수 통일되는 것이다. 그 경우, 미국은 새로운 한국이 외교 및 안보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친미 성향을 보유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통제하는 정치 및 안보 체계 네트워크가 대부분 현 상태로 남게 될 것이고, 향후 미국과 통일 한국의 관계 또한 현 체계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통일 시나리오는 중국 측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우선, 중국은 북한을 미군이 중국 국경에 주둔하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완충지대로 여기기 때문에 북한의 몰락을 원치 않는다. 둘째, 북한이 주권 국가로서 몰락하게 되면, 수많은 북한 주민과 가족들이 중국 국경을 넘어 오게 될 것이고 중국 영토 위에서 대규모의 인권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다. 셋째, 동아시아에서 대만의 미래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미국과 대결하는 것을 감안할 때, 중국은 중국의 동맹국 북한이 몰락하도록 내버려둠으로써 미국의 입지가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당분간이나마 현상 유지를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통일의 전망에 대한 일본의 시각은 매우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편으로는 북한의 몰락을 환영할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통일로 인해 강력한 민족주의에 기반한 정책을 구사하는 국가가 탄생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즉, 그러한 민족주의 정책으로 통일 한국에 반일

감정이 치솟고, 그 결과 현재의 지역 상황이 일본에 불리하게 돌아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반도에 가장 근접한 이웃국들 중 하나로서, 러시아 또한 한국의 통일 방식에 무관심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한반도는 러시아의 안보·정치, 군사 및 경제적 안보에 매우 중요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고려 사항은 남북간 정치·경제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촉진 과정들을 포함하여 이 지역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 문제에 대하여 러시아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상황을 유지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러시아에서는 최근에 남북한 양국 모두와 파트너십을 맺는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을 해 왔다. 러시아가 처음에 북한을 지지했을 때(구 소련 시대), 그리고 나중에 한국을 지지했을 때(1990년대에) 보였던 한국 문제에 대한 기존의 일방적인 접근방식은 남북대화와 한반도의 협력 과정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제한했다.

남북통일을 지지하는 러시아는 남북 통일이 남북한 간에 건설적인 정치적 대화의 과정에서 합의된 수많은 연속적인 단계를 통과한 점진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볼 때, 한국과 북한의 경제협력의 증가는 한반도의 정치적인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남북간 경제관계의 진전은 정치적인 화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양국간의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시키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에 대한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낼 것이다.

러시아의 관점에서 남북 경제 협력의 진전은 러시아 국경이 근접한 지역의 국제적인 긴장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경제상황이 개선되면 러시아에도 잠재적인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 실행 또한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베리아 횡단 및 남북횡단 철도(TSR-TKR) 프로젝트가 실현될 경우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참가국들에게 분명한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올 것이다. 또 다른 남북한 및 러시아를 포함한

대규모 다자주의 경제 프로젝트로는 사할린에서 러시아 연해주(Maritime province of Russia) 지역을 지나 한반도까지, 또는 러시아 Kovytkino 가스전에서 중국과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 한국까지 가는 가스 파이프라인 설치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지원하고, 또 남북한이 주요한 상호 차이를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시나리오가 실현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은 러시아 학계에서 담당할 수 있다. 러시아 학계의 중심적인 역할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Sciences)와 IMEMO, 러시아 극동 연구센터(Institute of the Far East) 또는 동방학 연구소(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등에서 담당해야 한다. 한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러시아 학자들 대부분이 이러한 연구 센터에서 한국 역사와 문화, 언어, 전통, 그리고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의 현대 정치, 안보, 경제 사안들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실행해 왔다. 그들의 노력은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르크, 블라디보스톡 등지의 수많은 러시아 대학에서 실시한 한국에 대한 연구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이러한 학계 및 대학 연구 센터의 학자들은 순수한 학문적 업무뿐 아니라 지역의 국제 상황, 그리고 남북한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한 실용적인 문제점까지도 다루고 있다. 분명히 남북 통일과 남북통일을 실행할 수 있는 대안적인 시나리오가 그들의 연구에서 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러시아 학자들과 분석가들의 주된 의견은 궁극적으로 한국의 통일이 2차 대전 후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국제 갈등을 종식시킬 것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진전 사항으로 여겨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2003년에 남북관계에 대한 주요 연구 논문을 발표한 저명한 러시아 학계 전문가들이 내린 것으로, 이들은 그 연구 논문에서 러시아가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일 한국이 국제 관계에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IMEMO, 모스크바 주립

대학, 그리고 외무부 산하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MGIMO) 출신의 다른 많은 학자들도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북한의 핵 문제가 최종적으로, 그리고 만족스럽게 해결 될 때까지 북한과의 대규모 경제 협력, 특히 다자주의적인 차원에서의 경제 협력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남북한의 정치적인 친선 관계에 있어 눈에 띄는 진전사항도 핵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내의 학계/대학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들의 비슷한 연구소에서 일하는 학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렇게 중요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물론, 북한의 정치학자들이 이 과정에 참여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다시 말해, 한국 통일문제는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의 어젠다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안건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싱크탱크 네트워크와 동아시아 지식 공동체 형성: 일본의 시각

야마모토 타다시
(YAMAMOTO Tadashi)

일본국제교류센터(JCIE)는 1970년에 설립된 일본의 몇 안 되는 국제업무 분야의 진정한 비영리·비정부 기관이다. 당시 일본에서는 부흥하는 선진국가로서 일본이 경제력에 걸맞은 더 큰 국제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이 새로운 조직을 출범시킨 관계자들은 일본이 국제사회 및 지역사회에서 명백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국제 교류 및 대화 노력을 기반으로 한 강화된 국제협력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일본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그리고 나아가 국제사회 내의 연구기관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와 동시에, 미국과 유럽의 정치 및 지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의 국제관계 관리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데이비드 록펠러(David Rockefeller), 지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등은 JCIE에 새로 제안된 국제기구인 삼자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의 일본사무국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위원회는 3개 선진산업 지역간의 긴

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광범위한 국제 체제 내에서 공동의 리더십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삼자위원회의 북미 및 유럽 단체들 중에는 주요 싱크탱크의 대표들을 포함하였으며 주요 활동(task force activity)에는 이들 싱크탱크의 정책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였다. 일본은 많은 준비도 없이 갑작스레 싱크탱크의 네트워크에 가입이 되어버린 셈이었다.

엄청난 도전에 직면한 JCIE는 1986-1987년 종합연구개발기구(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로부터 많은 지지와 자금후원을 받고 '국제업무에 대한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에 관한 주요 연구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과 유럽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대서양 국가간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공동체 창설에 기여하는 것을 우선과제로 여긴 JCIE는 미국과 유럽이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해 만든 정책 연구 및 대화 연구기관 네트워크의 경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빌더베르그 회의(Bilderberg Conference), 대서양연구소(Atlantic Institute), 디칠리 재단(Ditchley Foundation) 등의 유명 회의 및 연구기관이 포함되었다.

JCIE는 1970년 설립 이후 재빠르게 정책연구기관간의 지역협력 업무에 착수하였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연구기관 및 지적 지도자들도 유사한 지역협력 활동을 목표로 한 이니셔티브 개발에 뛰어 들었다. 이들은 정책연구 분야의 지역 조직을 설립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안보 분야에서 CSIS-자카르타는 다른 ASEAN 국가들과 함께 일하는 연구기관으로서 1988년 ASEAN-ISIS 설립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이후 5개의 아세안 정책 연구기관의 협력을 통해 1993년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가 탄생하였다. 마찬가지로, ASEAN-ISIS 회의 때 아세안지역포럼(ARF)에 대한 개념이 처음 제안된 이후 아세안 정부들에 의해 공식적으로 채택되었다. 1994년 ARF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포럼으로 출범되었다.

경제 분야에서 태평양무역개발회의(PAFTAD)와 관계된 정책 지향적 경제학자들은 반(半) 공식적인 태평양경제협력협의회(PECC)와 정부간 조직

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APEC) 포럼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태평양무역개발회의는 지역 내의 연구기관들과 관계된 경제학자 및 연구자를 위해 1968년 설립된 포럼이다. 1980년에 설립된 PECC는 20개 이상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를 대표하는 위원회를 갖고 있으며 주로 지역 내의 한 개 이상의 싱크탱크 및 경제연구기관과 연관된 포럼 및 실무그룹이 매우 많다. APEC은 주로 비정부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 연관된 네트워킹 활동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APEC 관련 연구기관으로 태평양저명인사그룹(Pacific Eminent Persons Group), 태평양비즈니스포럼(Pacific Business Forum), APEC연구센터, 인적자원개발 네트워크 등이 있다.

제4회 제주평화포럼의 주제가 ‘유럽 경험의 탐색’이라는 점과 대서양 국가간 관계로부터 배우고 설계된 JCIE의 ‘국제업무에 대한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 프로젝트를 고려했을 때 JCIE가 연관된 몇 개의 유럽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1975년 첫 회의 장소로부터 ‘하코네 회의’라는 별명을 얻게 된 유럽-일본 회의(The Europe-Japan Conference)는 여러 유럽정책연구기관과 JCIE의 긴밀한 협력 하에 출범되었다. 왕립국제문제연구소(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Chatham House), 프랑스국제관계연구소(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독일국제관계연구소(Research Institute of the German Society for Foreign Affairs) 등의 협력으로 설립된 이 회의는 삼자관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일본은 미국 및 대서양 국가들과의 관계에 비해 유럽과의 관계는 매우 약하고 일방적이었다. 1975년부터 1995년 사이 15차례 개최된 회의에는 유럽연구기관의 대표들과 지식 및 정치 지도자들이 참가하여 유럽과 일본간의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최근에는 1996년 3월 제1회 아셈회의 때 제안된 요청에 따라 아시아유럽협력협의회(Council for Asia-Europe Cooperation)가 설립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및 유럽의 싱크탱크 각각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제한된 공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싱크탱크간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도전과제와 기회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는 것은 어렵

다. 그러나 몇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언급을 해야만 한다. 해당 지역의 싱크탱크들이 직면한 주요 도전과제 중 하나는 객관적인 공동 정책분석 및 대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둘째, 비정부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재정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셋째, 싱크탱크는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개발하여 정부에게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고 대중 및 시민사회에 정책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을 쥐야 한다.

마지막으로, 1995년 7월 당시 코노 요헤이 외상이 브루나이에서 개최되었던 ARF 및 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떠나기 직전에 한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에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의 모든 측면에서의 교류 및 대화를 장려해야 하며 연구자 및 연구기관간의 지적 교류를 지원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와 함께 그는 지역 내의 주요 교류 단체들에게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을 위해 역내 공동 연구 및 대화 증진을 위한 어젠다 논의, 네트워크 구축 지원, 공동연구 프로젝트 수행, 젊은 연구자 교육”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어젠다프로젝트가(Asia-Pacific Agenda Project) 설립되었으며 코노 전 외상이 언급한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다.

제7장

동북아에서의 에너지 협력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동북아시아

중·미 관계에서 에너지에 대한 상호 관심사 조명

중·일 에너지 관계: 경쟁인가 공생인가?

러시아 에너지 전략과 동북아시아

이고르 톰버그
(Igor TOMBERG)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에너지'는 최근 지배적인 역할을 갖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높은 수출액과 국제정치에서 높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석유 및 가스 수출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재조정해야 한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결과 러시아는 유럽국가들과의 관계 속 긴장을 완화하고 우선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의 동방 국가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에너지 자원 공급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서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은 기회의 창을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석유 수입국가들의 전통적인 수입원(중동 및 아프리카)의 공급 안정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명 러시아는 이 기회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 잠재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출의 최대 30%는 동쪽으로 수출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동부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석유시장의 6-6.5%를 점유할 수 있다. 게다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 혁명에는 러시아 내의 필수 조건들이 존재한다. 러시아 경제공간의 통합 및 통일성 보존은 지역통합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쪽으로의 에너지 확대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러시아의 국제 위상의 변화

러시아는 현재 매우 독특한 위치에 놓여 있다. 새로운 세계 석유시장에서 영향력 있고 독립적인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주요 석유생산국가다. 그러나 이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연료 및 에너지 집합

체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세계에너지시장 내의 러시아의 위상에 따른 경제적 혜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정책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에너지 수출량의 증가에 따른 수익 증가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오늘날 핵심은 세계 에너지 공간 내의 러시아의 위상 증대에 따라 새롭고 더욱 강력한 지정학적 위치에 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찍이 2003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방콕에서 개최된 APEC회의 때 러시아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안보의 주요 보증인(prime guarantor)으로 세웠다. 2005년 부산 APEC회의 전날에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주요 전략적 방향에 대해 지적했다. “우리는 에너지와 교통 등의 공통 활동 분야에 대해 매우 진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 러시아는 지리적 위치 및 원자재, 기술, 지식 등의 자원 잠재력을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새로운 교통 및 에너지 구조 형성에 주요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파트너들의 잠재력과 투자를 활용하여 그들과 함께 이것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¹

러시아가 G8의 의장국을 맡은 이래 가장 중요한 결과는 모스크바가 국제 에너지 안정에 있어서 러시아 연료 및 에너지 복합체의 특별한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유럽의 에너지 자원 공급에서 지배적인 위치에 서 있는 러시아의 입장을 감안할 때,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진출은 기회의 창을 넓히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석유 수입국가들의 전통적인 수입원(중동 및 아프리카)의 공급 안정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명 러시아는 이 기회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 잠재력을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화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은 매우 중요하며 커져가고 있다.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34% 이상 그리고 석유매장량의 13%가 전체 지구 인구의 3% 미만이 거주하는 지구 면적의 13%에 매

1.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Vladimir Putin, “Russia-APEC: Broad Horizons of Cooperation,” (November 17, 2005) in *APEC-countries*.

장되어 있다.

러시아는 세계 천연가스 무역의 선도국이자 현재 제1의 석유(석유 제품) 수출국이다. IEA, CERA 등 주요 국제에너지조직들에 대한 분석 결과, 러시아 정부는 미래에 에너지 안보 상황이 다음의 두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지어질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첫째, 세계 경제는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할 것이다. 2030년에는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수요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중국만 30%). 둘째, 2030년까지는 화석연료가 세계 에너지 구조를 지배할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세계 석유 및 석유 제품 시장에서의 러시아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 추정에 의하면 2015년 러시아의 석유 생산량은 5억3천만 톤 그리고 수출은 3억1천만 톤에 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 기간 동안 서부 시베리아의 석유 및 가스 매장 지역이 러시아의 주요 산유 지역이 될 것이다. 동시에 동부 시베리아와 사하공화국(야쿠치야)에 신규 석유산업 중심지가 형성되어 2015년까지 5천만 톤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이 지역에는 사할린 대륙붕(2500-2600만 톤), 바렌츠해, 카스피해 러시아 쪽이 해당된다. 티마노-페체르스카야(Timano-Pecherskaya) 지역의 석유 생산도 증가할 것이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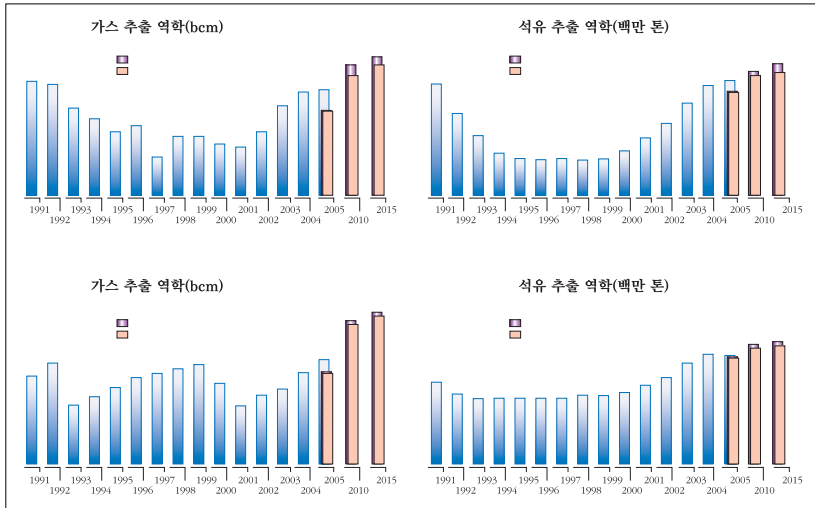
러시아 정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 지역의 탄화수소 매장량의 개발이 핵심적이라 여긴다. 다음의 요소들은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에너지 분야를 개발해야 하는 지경학적 및 지정학적 필요성을 결정짓는다.³

이 시장의 기대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에너지전략이 세운 수출품 다양

2. Viktor Khristenko, 러시아 산업에너지장관, “탄화수소 수송 시스템의 개발 전망 및 활용 및 가공에 따른 제품.” 연료에너지복합체 정부위원회 회의 당시 언급(2006년 9월), <http://www.minprom.gov.ru/eng/appearance/36>.

3. Nodari Simonia, “Russian energy policy in East Siberia and the Far East – The Energy Dimension in Russian Global Strategy,” The James A. Baker III Institute for Public Policy of Rice University (2004).

[그림 1] 석유 및 가스 추출 및 수출 역학 1991~2015



화 및 수출량 증가(2400만 톤에서 2900만 톤으로 증가)의 목표로 유럽 시장 석유 공급량은 유지하되(2억3500만 톤)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물량은 8천만 톤으로 증가하고 미국으로의 물량은 1200만 톤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그 결과 러시아는 유럽 석유 시장의 20% 이상, 중국의 5% 이상, 미국의 1.0%를 점유하게 될 것이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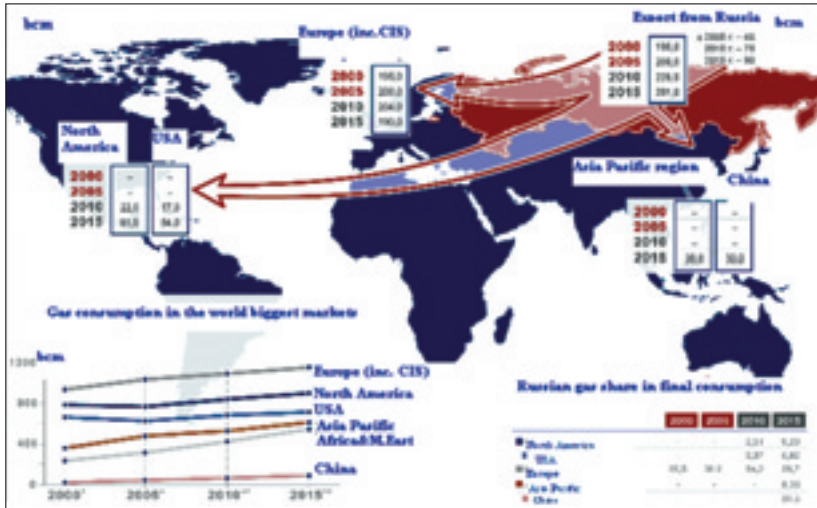
세계가스시장 발전의 추세와 러시아의 가능성 그리고 수출물품의 다양화 전략은 본질적으로 러시아의 가스 수출 구조를 변화시킬 것이다. 동부 러시아(사할린-1 및 -2)와 쉬토크만 가스전의 자원 개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과 미국 동부해안으로 수출되는 천연액화가스의 양이 610억³m³에 달할 것이다(전체 수출의 22%); 중국으로 가는 서부 경로를 따라 300억 m³(11%)가 수출 될 것이다.⁵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 대한 통일된 가스 추출, 수송, 공급 체제

4. Viktor Khristenko, 러시아 산업에너지장관, 제23회 세계가스회의 연설(2006년 5월, 암스테르담).

5. 석유 및 가스 산업(2007.03.13).

[그림 2] 러시아 가스 수출의 지역 구조



의 구축이 설계 단계 직전에 있다. 이 체제는 중국 및 기타 아시아태평양 국가로의 가스 수출도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러시아 전체 지역 내의 지리적 탐사, 추출, 가공, 헬륨 저장, 가스 수송에 대한 총 자본투자액은 270-590억 달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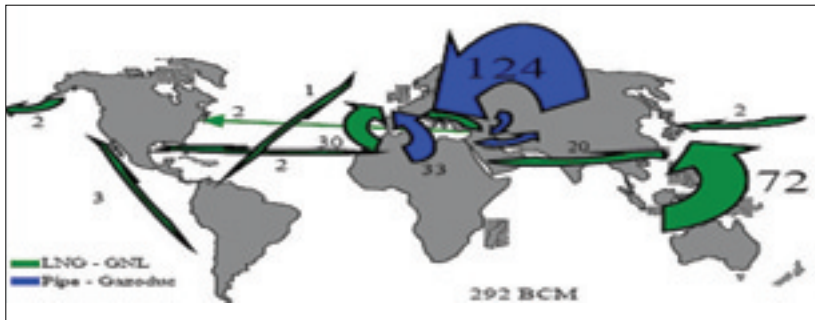
현재로서는 에너지 자원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 관련 프로젝트의 설계 및 시행에 대한 복잡하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을 갖고 있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법은 러시아 에너지 전략의 우선과제와 개념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접근법은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에서의 가스 생산, 수송, 공급의 통일된 체제를 실현시키고 중국 및 그 외 아시아태평양지역 시장에 대한 수출 잠재력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의 탄화수소 매장량을 탐사 및 임대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동부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네트워크 건설에 적용되기도 한다.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상당량의 천연가스는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가스 생산 지역의 설립을 가능하게 한다. 이 지역의 가스 생산량은 2015년에는 현재 수준의

10배 그리고 2020년에는 15배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가 석유 생산 지도자의 대열에 합류한 것은 독립적인 지정학적 의미를 지닌다. 이로 인해 에너지 기반시설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결정은 러시아의 사회 및 경제 개발에 대한 발전 전략에 통합된 요소가 된다.

러시아는 지리적 위치 덕분에 유라시아 대륙 내의 에너지 자원 이동에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동서 및 남북 방향으로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에 대한 잠재력은 세계경제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그림 3]



출처: IGU.

에너지 자원 수출의 새로운 향방에 따른 문제점은 주요 석유 수출국으로서 러시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일과 연관되어 있다. 주요 요인은 구소련 시절에 구축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가 오늘날의 탄화수소 시장의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생산 및 소비 센터의 이동을 위해서는 연료 물류(fuel logistics)에 따른 새로운 조건들을 충족해야 한다. 서부 및 남서부 방향으로의 송유관 기반시설은 점점 증가하는 반면, 동쪽에서는 부족 현상으로 서부 시베리아 자원의 개발이 매우 완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추정에 의하면 러시아 내의 채굴 가능한 석유 자원의 54%가 서부 시베리아 그리고 20%가 대륙붕에서 발견된다. 동부 시베리아는 세 번째로 가

장 많은 지역으로 러시아 석유 자원의 14%가 매장되어 있다. 다시 말해 채굴 가능한 석유 매장량이 약 100억 톤이다. 가스의 경우, 서부 시베리아의 독특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러시아 대륙붕, 특히 북극 대륙붕은 가스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다. 카라 및 바렌츠 해의 첫 탐사에서 세 개의 매우 큰 매장지역이 한 번에 발견되었다. 동부 시베리아의 매장량은 40%를 조금 넘는다. 대륙붕은 약 30%를 차지한다. 그리고 서부 시베리아, 야쿠치야, 사할린에서는 약 20% 혹은 40조 m³를 차지한다.

그러나 자원의 추출 및 사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시베리아과의 석유·가스지리연구원의 산정에 의하면 서부 시베리아 탐사를 위해 최소 145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적어도 145억 달러를 투자해야 동부 시베리아에서 2030년까지 8천만 톤의 석유를 생산할 수 있다. 사할린 대륙붕의 경우 동일한 양의 생산을 위해 28-30억 달러가 필요하다. 시베리아 전문가들은 석유 가격이 배럴당 26달러라 가정할 경우 이는 판매된 석유 가격의 2%에 불과하다(석유회사가 일반적으로 지출하는 금액보다 훨씬 낮음). 따라서 탐사의 효과는 보장되며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들을 아직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계획에 따라 2005-2007년 이 지역에 대한 투자는 약 10-15억 달러에 불과했다.⁶

시장 다양화: 전략적 조치

만약 러시아가 잠재 경쟁력의 기반을 원자재 수출에 둘 것이라면 세계 경제를 위한 단순한 원자재 공급자가 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6. 동부 시베리아 석유·가스 복합체 형성 및 러시아 동부 지역에 강력한 에너지산업 센터 설립-러시아 경제 개발 및 유라시아 내의 입지 강화에 대한 전략적 문제. 전력 전략 및 화력발전소 개발에 관한 러시아 상업·공업위원회 자료집(2005년 5월).

한다. 수출 수익에 대한 러시아 경제의 의존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장 다양화를 해야 한다. 한쪽으로 석유를 수출하면서 세계 석유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 전체 탄화수소 수출의 95%가 유럽으로 간다. 이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점유율의 일부를 잃을 위험이 있다. 유럽의 탄화수소 소비 성장률은 전세계만큼 빠르지 않다. 게다가 지난해 EU는 연료 공급원의 다양화에 관한 표준을 채택하였다. 다른 국가의 지역을 통해 수출하는 것은 정치적 위험이 따른다(예를 들어, 보스포러스 해협 문제).

마지막으로, 2005년 11월 프랑스의 이민자 소요사태와 다른 국가로의 확산은 EU내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분석가들은 무슬림들이 계속해서 유럽 도시로 이동할 것이라 경고한다. 그 결과 경제활동이 감소하고 유로의 가치가 떨어지며 연료 수입이 줄어들 것이다. 유럽의 불안정 요인은 또한 물가, 쿼터제, 안전성 문제와 결합되어 유럽 시장에 대한 러시아 탄화수소 수출의 독립화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러시아 석유 수출의 유럽 편중에 대한 위기가 명백하기 때문에 이러한 독점을 극복하는 것이 러시아 해외경제전략의 중요한 요인이다. 푸틴 대통령은 2005년 9월 독일 방문시 러시아가 곧 태평양쪽으로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의도, 계획 및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파트너와의 합의 정도에 따라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정해질 것이다. 다시 말해, 유럽이 러시아와의 정치적 상호관계가 덜 유연할수록 탄화수소 이동의 재분배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유럽 다음으로 중요한 시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며 그 영향력은 점점 커질 것이다. 정치적 결정은 푸틴 대통령에 의해 내려졌다: 러시아의 아시아 석유 수출량은 오늘날의 3%에서 2020년에 30%로 증가할 것이며(예, 절대 양은 1억 톤 증가) 천연가스 수출은 5%에서 25%로 증가할 것이다(650억³로 증가).⁷

7. www.opec.ru (May 19, 2007).

[표 1] 러시아 탄화수소 수출

(단위: 백 만 톤)

	2000		2010		2020	
	러시아 총계	아시아 비중	러시아 총계	아시아 비중	러시아 총계	아시아 비중
수출	303	3.4	505-525	30-45	500-570	80-155
- 총계	38.3	0.5	50	3-5	47-48	9-16
그 중	148	3.4	300-310	20-30	300-330	50-105
- 석유	45.7	1.5	60	5-8	60-61	12-25
- 가스	155	-	205-215	10-15	200-240	30-50
	33.2		37-38	2-3	35-36	6-9

출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에너지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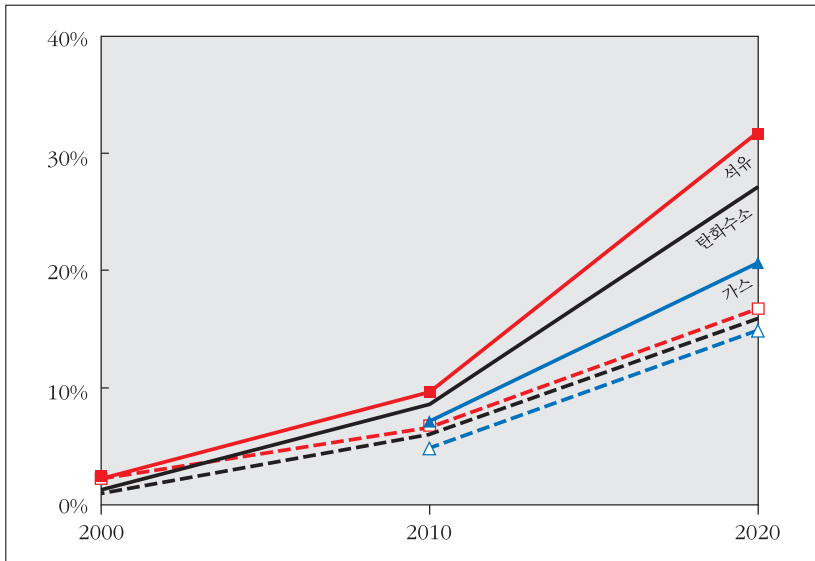
러시아 에너지 수출의 수송 인프라를 개선시키고 파이프라인의 “동방 전략”에 대한 상당한 노력은 좀 더 일반적인 현상으로 통합된다. 바로 ‘동쪽을 향한 러시아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수출의 다양화 및 신규 시장 개발의 문제점 외에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에너지 수송에는 명백한 러시아 내의 원인이 있다. 러시아 분석가들에 의하면 가장 큰 내부 위협은 러시아 동부지역인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현 상태다. 이 지역의 경제는 큰 위기에 직면해 있고 인구 감소와 탈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의 질도 낮아지고 있다. 국가의 통일성이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 공간의 통합과 통일성 보존은 대규모 경제·산업단지와의 연관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일된 통신 시스템, 송전,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등이 통합의 기본 예시다. 파이프라인과 산업단지의 경우 이것은 영토보존의 인프라 지원에 대한 모든 시스템의 안정성을 손상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동부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사할린 프로젝트 포함) 개발 프로그램, 시베리아와 태평양 연안을 연결시키는 동부 송유관 프로젝트 등의 에너지 부문의 계획은 동부 러시아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기반시설은 산업 개발의 수단이 되어 매장된 자원의 개발에 추진력을 준다. 그 중앙에는 원자재 가공업자와 산업 단지들이

있다.

이 지역 개발 전략이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가스 및 석유 산업의 개발은 탄화수소가 전통적인 연료로 사용된다는 것과 석유·가스 가공 및 석유화학 산업이 새로운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다. 특히, 현재 동부 시베리아-태평양 파이프라인의 최종 목적지에 있는 신규 정제소의 토목공학 설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인프라의 개발은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연료 및 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고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의 지역 개발을 위해 시급하다.

[그림 4] 러시아 탄화수소 수출의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비중



출처: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에너지연구소.

러시아 분석가들은 러시아의 지역 통합 문제가 21세기에는 러시아의 동부지역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한다.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이중 통합'을 이루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러시아 영토의 일부로 유지하는 동시에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지역

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계에서 러시아의 위상이 굳혀지기 위해서는 우랄(TransUral) 지역의 엄청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과정의 주요한 지정학적 배경에는 중국과 인도의 빠른 성장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만큼이나 이들 국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06년 푸틴 대통령이 그의 고향인 상트 페테르스부르크에 G8 지도자들을 초대했을 때 중국 및 인도의 지도자들은 정상회담의 특별손님이었다. 이 기회를 통해 러시아는 세계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국가로 세계 무대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⁸

아시아태평양 에너지 시장: 뛰어난 잠재력 vs. 가시적인 위험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에너지’는 최근 지배적인 역할을 갖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높은 수출액과 국제정치에서 높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석유 및 가스 수출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재조정해야 한다.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결과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선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의 동방 국가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는 달리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출의 최대 30%는 동쪽으로 수출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바와 같이, 러시아는 동부시베리아-태평양(ESPO) 송유관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석유시장의 6-6.5%를 점유할 수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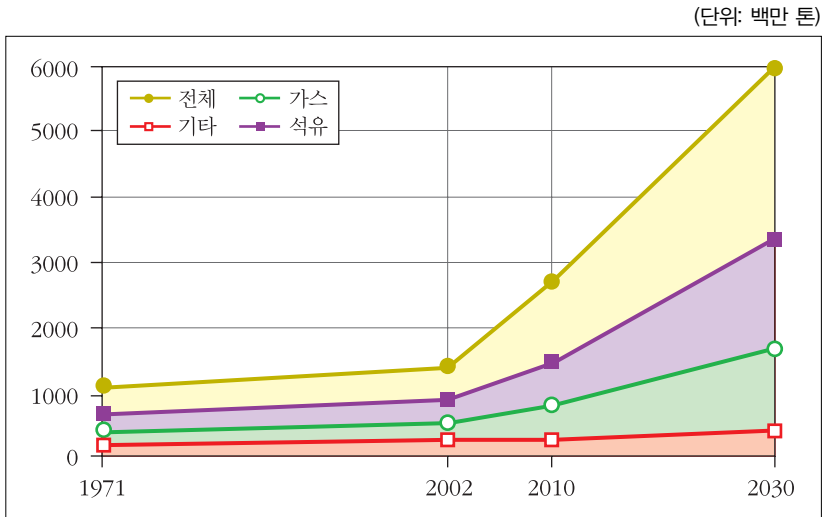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2003년에 10억 톤이 넘는 석유를 구매하였다.

8. Igor Tomberg, “Geopolitics of Pipeline Communications in Eurasia,” *World Affairs*, Vol. 10, No. 1 (2006).

9. Priorities of the “Oriental Policy,” Oil and Gas Industry (Mar. 13, 2007).

신흥국가들인 중국과 인도의 수요 증가는 국제석유시장 변화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의 30%가 중국의 몫이었다. 중국의 GDP 성장을 기반으로 한 추정에 의하면 2020년에는 석유 소비가 2배가 되고 2030년에는 매년 23-24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증가율은 최대 1.5배 그리고 일본은 이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게다가 일본의 석유 소비는 신기술 덕분에 실제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림 5] 중국의 주요 에너지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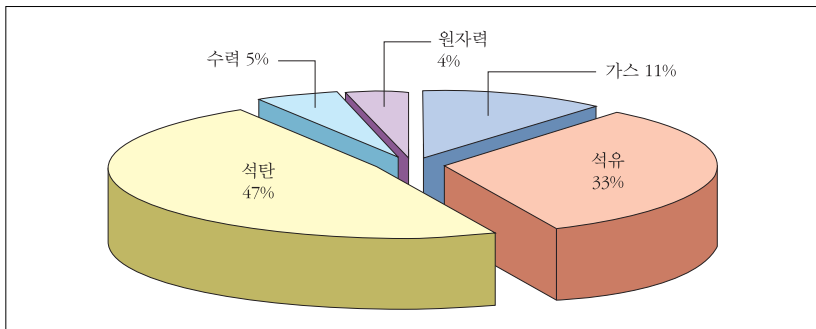
출처: IEA.

2006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0.7%였으며 연료 수요는 점점 증대하고 있다. 국내 석유 매장량은 빠르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 수입의 중요성이 부상하고 있다. 2003년에는 중국이 일본보다 석유 수입이 많았으며 세계2위의 석유 수입국이 되었다. 높은 경제성장률에 의해 2006년 석유 소비는 9.3% 증가했다. 그 해 중국은 전체 연료 소비의 47%를 차지하는 석유를 1억6287만 톤 수입했다.¹⁰ 중국의 주요 석유·가스 기업인 CNPC의 전

문가들은 2010년에는 석유 수입이 2억 톤으로 증가하여 전체 연료 소비의 50%를 차지하게 되고 2020년에는 매년 2억4천3억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¹¹

인도의 석유 수요는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세계 석유 소비의 아시아 비중은 90% 증가하였다. 2010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가스 소비는 7700억-8200억m³까지 증가할 수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비중은 340-390 bcm이다. 중국 정부는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매년 1억m³ 씩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¹² 현재 중국의 천연가스 연료 비중은 2%이고 향후 5년 이내에 10%까지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림 6] 아시아·태평양 지역



출처: Accounts of Institute of Natural Monopolies Research.

가즈프롬(Gazprom)과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는 2006년 3월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이동하는 천연가스에 관한 보고서”를 체결하였다. 보고서를 통해 가스 수송의 조건, 양, 경로(동부 및 서부), 가격 결정방식에 대해 합의하였다. 가스는 가즈프롬의 통일된 수출 방식을 통해 수송될 것

10. 중국 상무부(2007.05.14), <http://www.k2kapital.com/news/er/172329.html>.

11. 중국 에너지 통계 연감(2006).

12. 中石化集團與中海油集團簽署天然氣合作框架協議, “시노펙(Sinopec)과 CNOOC는 천연가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를 체결하였다.” Xinhua(May, 2007).

이다. 현재 당사자들은 상업적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가즈프롬이 서부 시베리아의 자원 기반에서 추출한 가스는 주요 경로인 서부 경로(프로젝트 '알타이')를 통해 가스를 중국으로 수송시킨다. 두 번째 단계에서 가스 수송은 동부 경로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양 경로를 통해 수송되는 가스의 양은 매년 68bcm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1차 가스 수송은 2011에 이루어질 예정이다.¹³

러시아 천연가스의 대규모 중국 수송 계획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지금껏 가스 수요를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스로 충족시킨 중국에는 가스 배급에 필요한 충분한 기반시설도 없으며 발표된 가스 양에 대한 미래 수요를 장담할 수도 없다. 몇 년 사이에 중국에서는 가스 소비에 대한 큰 전환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의 가스 추출 및 소비가 약 40bcm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2010년 이전에 천연가스를 수입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공급자가 구매자의 조건을 수용했을 경우에만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일부 전문가에 의하면 러시아의 가스 파이프라인, 카자흐스탄 및 투르크메니아의 파이프라인, 중국의 동-서 파이프라인은 중국의 가스 수요 충족보다는, 이들 국가의 시장에 대한 접근과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에 가스를 전달하기 위한 전략적 이유에서 필요한 것이다.

발표된 가스 양의 공급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부러시아로 가스를 수송시킬 필요가 없으며 예상도 하지 않고 있다. 현재의 수출량인 207bcm에서 300bcm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10년 동안 많은 투자가 필요 하지만, 가즈프롬의 투자계획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¹⁴

따라서 무엇이 위험 요소인지는 분명하다. 중국은 대규모 가스의 양이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러시아는 그만큼의 가스가 없을 수도 있다. 반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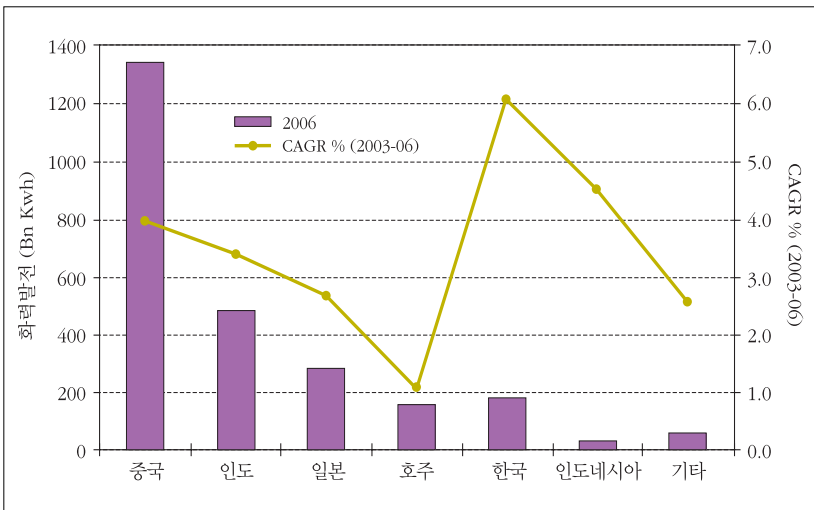
13. www.gazprom.ru.

14. Igor Tomberg, "The Basic Tendencies of Russia - China energy dialogue," *Economic Aspects of Power Cooperation of Russia with Other Countries and Security* (Moscow: IMEMO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2006).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러시아의 제한된 가능성은 에너지 자원 수출의 발표된 성장률(현재 전체 양의 3-30%)과 관련하여 관찰될 필요가 있다.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매년 6천만 톤의 석유와 65bcm의 가스를 수송해야 한다. 향후 10년 동안 이 문제는 전문적으로 매우 복잡하며 러시아 기업의 투자 가능성 및 상업적 편법¹⁵의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도 불확실하다.

아래의 그래프에서 보듯,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에너지 구조에서 석탄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이제는 생태학적 이유 때문에 더 수용 가능한 다른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러시아의 탄화수소에 대한 수요도 미래의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림 7] 아시아·태평양 화력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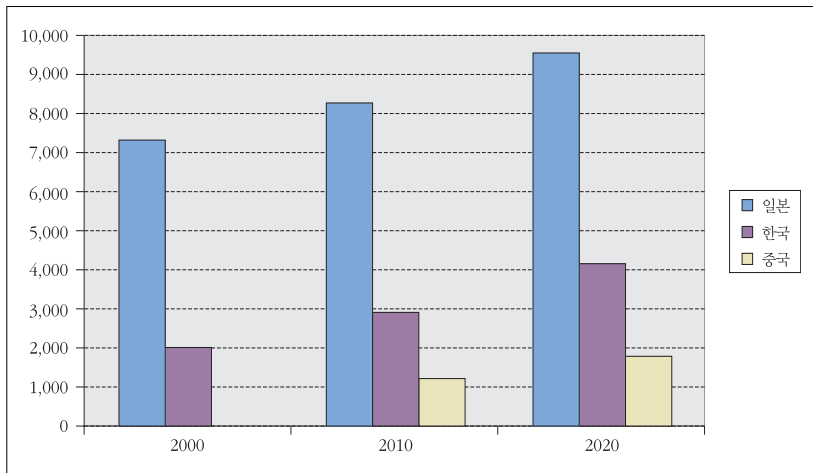
출처: Power Equipment Decision Support Database, Frost & Sullivan.

15. 2007-2017 러시아 개발의 외부 조건-에너지 분야의 상황, Rio-Centre의 자료, Moscow 2007. <http://www.riocenter.ru/energy.doc>.

중기적으로 러시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도 실제적인 도전과제는 LNG 생산 및 수송에 연관된 기술의 부족이다. 현재 LNG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전력 기업들은 화력발전소의 연료인 석탄 및 석유를 LNG로 대체하여 그 비중을 증가시키려 한다. 화력발전소 연료의 LNG 비중은 향후 5년 동안 43%에서 47%로 증가될 것이다. 2020년에 LNG는 파이프라인 가스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될 것이다.¹⁶

러시아의 LNG 프로젝트의 이행 정도를 본다면 부정적이다. 사할린-2 프로젝트(가까운 미래에 착수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러시아 LNG사업)의 범위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LNG 양은 선매된다.

[그림 8]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LNG 수요(b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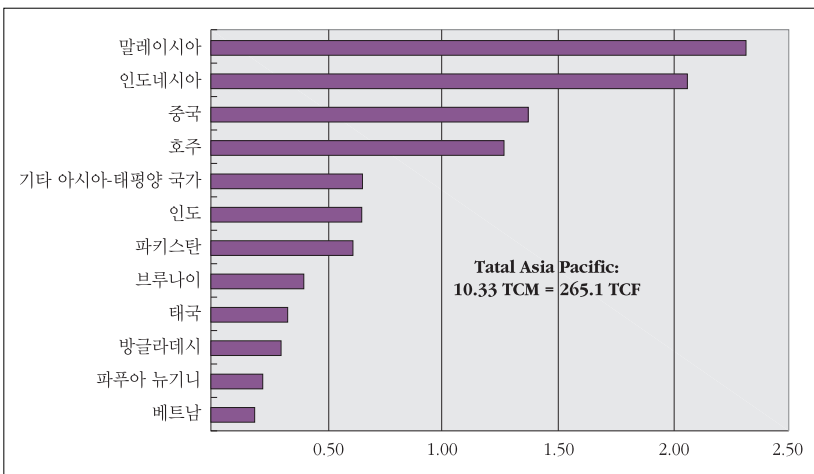
출처: Institute of Natural Monopolies Research.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의 가스 사업 확대에 일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지역의 가스 자급자족 상황이다. 가스가 풍부한 서남아시아 지역과 가스 추출 잠재력을 지닌 호주만으로 이 지역 가스 수요의 큰 부분을 충족

16. www.oilru.com (May, 2007).

시킬 수 있다. 아세안 파이프라인 사업을 제외한다면, 주요 추세는 LNG 이동¹⁷이며 이로써 러시아와 기타 구소련 국가들이 탄화수소 거래와 관련된 상업적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다. 아래에 언급된 바와 같이, 러시아 기어들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으로 활동 영역을 돌릴 것이다.

[그림 9] 2000년 아시아·태평양 가스 매장량(TCM)



출처: BP Statistics 2002. TCM: (10·12) cubic meters, TCF: 10·12 cubic feet.

러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의 가스 관련 프로젝트로는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석유 및 가스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것이다. 중국에 이에 대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연료원을 확대할 필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원은 다양하지 않다. 석유는 주로 OPEC 국가에 의존하며(일본, 한국) LNG는 중동에 의존한다(일본, 한국). 한편, 러시아는 심해항구, LNG 수출 전

17. 실무위원회 10 국제가스연맹의 “가스 및 개발도상/통과경제 국가,” 가스 수입 경제의 관점에서 본 아세안 파이프라인, 2000-2003.

[그림 10] 제안된 중앙 아시아 파이프라인



출처: 국제에너지기구.

략, 동쪽으로는 석유 및 가스 수송 기반시설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시아 시장은 러시아로부터 연료를 수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중국 국경에 출입지점 혹은 태평양 연안에 항구 등 동쪽 국경에 신뢰할 수 있는 출입지점 없이 광범위한 지리적 수출 다양화를 이루기가 어렵다. 따라서 송유관이 생긴다면 두 개의 과제가 충족된다.

- 전략적으로 필수적인 PreUral 및 TransUral 지역의 지역 및 경제 통합 수행이 가능함.
- 수출의 경쟁력을 높이고 연료·에너지 단지를 고려한 저렴한 천연자원을 활용한다. 기반 시설 설치(파이프, 도로, 전력전송선로) 시스템의 구축 및 집중화는 개발 잠재력에 기여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러시아 정치의 동경은 정해져 있다. 동쪽을 향한다. 문제는 러시아가 국제 석유 시장에서 자신의 새로운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안정적으로 연료를

동아시아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송시키는 것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러시아의 역할이다.

동향(東向) 대도약의 전제조건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은 동부 시베리아 수출을 가능토록 하여 동부 시베리아 및 사하(야쿠치야)에 새로운 석유 지역을 형성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에너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2005년 12월 러시아의 에너지 전략의 틀 내에서 동부 시베리아-태평양(ESPO)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길이는 4,670 km(1단계 2764 km, 지름 1067/1220 mm)이며 1단계 설계용량은 3천만 톤이고 완공 시에는 8천만 톤에 이를 것이다. 2006년 4월 28일 파이프라인 시스템의 시작 부분의 공사가 개시되었다. 2007년 4월에는 파이프 약 1000km를 놓았다. 게다가 트랜스네프트(Transneft)는 특화된 석유 수송 항구인 코즈미노(Kozmino)¹⁸ 프로젝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다.

오늘날 러시아의 우선과제 중 하나는 중국쪽으로 에너지 자원을 이동시키는 계약 의무사항의 이행이다. 이를 위해 트랜스네프트는 ESPO 파이프라인 최종 목적지에 연간용량이 2000만 톤인 수출 지향적 정유 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 2007년 말까지 트랜스네프트는 스코보로디노에서 중국 국경까지 이어지는 지선 파이프라인 건설을 위한 투자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보고서는 2006년 봄에 체결되었다. 트랜스네프트측은 의향서를 작성하여 중국측에 이미 전달한 상태다. 트랜스네프트는 중국으로 가는 지선 파이프라인 공사와 1단계 건설 공사를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지선 파이프라인의 완공 예정 시기는 2008년 말이다. 그러나 러시아 정제소에 대한 석유 수송의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국내 수요에 대한 수송은 높은 수준

18. www.transneft.ru.

을 유지할 것이다. 콤소몰슬온아무르(Komsomolsk-on-Amur) 정제소에는 매년 최대 700만 톤 그리고 카바로브스크(Khabarovsk) 정제소¹⁹에는 최대 500만 톤이 수송된다.

동부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 중국 및 기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 대한 수출 가능성을 지닌 가스 생산, 수송, 공급의 통일된 시스템 설립에 대한 프로젝트가 준비되었다. 프로젝트 실현에 따라 사할린, 야쿠트, 이르쿠츠크, 크라스노야르스크 등 새로운 가스 추출 지역이 개발될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및 가스화학 생산(2030년에 1300만 톤 이상)이 개발될 것이다.

[그림 11] 가스 수출의 지리적 다양화



출처: 국제가스연맹.

현재 러시아 동부에 새로운 가스 수송 시스템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 사할린 대륙붕의 개발로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를 신규 동부 지역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으로 수송이 가능해질 것이다. 2020년에는 러시아 석유 수출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이 현재 수준의 30% 증가할 것이며

19. www.minprom.gov.ru.

천연가스 수출은 25%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²⁰

현재 가즈프롬은 야심 찬 목표를 갖고 있다. 바로 향후 25년 동안 가스 수출을 두 배로 늘리는 것이다. 2030년까지 가스 산업의 개발 계획은 적절한 정도의 GDP 성장(국가 경제의 낮은 에너지 효율)이 있을 경우 유럽,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국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의 수출량을 현재의 155bcm에서 310bcm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또한 과도한 정도의 성장이 생길 경우 3억7500만으로 증가할 것이다.

언급된 바와 같이, 극동지역 및 동부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보스톡-25와 보스톡-50은 2030년까지 중국의 동북지역 및 보하이만과 한국에 25bcm은 적당한 변수, 50bcm은 강한 변수를 통해 가스를 수송할 것이다. 양 변수를 통한 LNG 수송은 27bcm이 될 것이다. 중국의 중앙, 동부, 남부 지역은 알타이 가스 파이프라인을 통해 30bcm을 받을 것이다.²¹

러시아의 전망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매장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시장과 상대적으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연료 시장은 러시아에게 좋은 전망을 제공한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의 유전은 동북지역의 소비자들과는 상당한 거리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오히려 중국 동북지역으로 석유 수송을 하는 것이 매우 매력적이다. 인도와 중국 대표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두 국가는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자원에 대한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은 계획되어 있는 8천만 톤의 석유를 ESPO 파이프라인과 교환하여 중국으로 수송하는 것을 환영하는 바이다. 또한 중국은 중국에

20. “국제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 국제회의에서 A.G. Reus 성능에 대한 논문,” KOPA Week (Houston: Feb. 2007).

21. www.gazprom.ru.

대한 러시아 석유의 철도 수송을 매년 3천만 톤으로 확장할 계획인 러시아 철도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의 수송량은 다소 적은 편이지만 늘리는 것은 가능하다. 2006년에 러시아는 중국에 약 1600만 톤의 석유를 수출했고 이는 2005년 수준보다 25% 증가한 것이다. 이로써 러시아는 중국에 석유를 네 번째로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²²

인도는 이보다 입장을 보류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 국내 석유 수요의 3/4를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2006년 10월 인도의 멀리 디오라 (Murli Deora) 석유가스장관은 모스크바 방문시 매년 5천만 톤의 러시아 석유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²³ 인도는 현재 대규모 석유 및 가스 프로젝트 참여를 활발하게 모색 중이다. ONGC는 석유 및 가스 자산을 구매할 장기계획을 갖고 있다. 러시아 내에서의 ONGC의 활동은 성공과는 거리가 멀다. ONGC는 소액주주로서 '사할린-1' 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다. ONGC 경영진은 '사할린-3' 사업 지분의 49%를 취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다. 약 720bcm의 가스와 4억5300만 톤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키린스키 블록은 인도에게 관심의 대상이다.²⁴ 인도 내에서는 가스에 대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러시아와 인도간의 에너지 대화는 이제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다. 인도가 파이프라인 변수 또는 LNG 수송 무엇을 선택하든 러시아에게는 중요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러시아의 가스프롬, 스트로이트란스가스, 자루베즈네프트, ITERA는 이미 인도 가스 산업 내에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의 참여 정도는 미비하다. 그러나 다섯 가지 기본 방향을 통해 돌파구를 뚫을 수 있다.

- 이란-파키스탄-인도 가스 파이프라인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가스프롬

22. Rusenergy.org (Dec. 2007).

23. Rusnet.nl (Nov. 2006).

24. Lenta.ru (Jan. 2007).

의 참여.

- 베네갈만의 가스 생산에 대한 가스프롬의 참여.
- 아라비안해 연안에 탈가스화 터미널 건설. 썬테라(ITERA와 인도 투자 그룹인 Sun Energy Resources간의 합작사업)는 이미 구자랏주 석유회사와 연간 500만 톤을 수송할 수 있는 5억6500만 달러 규모의 터미널을 건설하기로 합의하였음.
- 사할린-1 사업의 범위 내에서 LNG 10bcm 수출.
- 인도 가스 수송 및 배송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러시아 기업의 참여.

러시아의 석유를 일본과 한국에 수송하는데 핵심이 되는 것은 지리적 접근성이다. 2007년에 로즈네프트는 KNOC와 합작투자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 러시아 기업은 한국의 정유산업에 대한 참여에 관심이 있다. 미래에 로즈네프트는 가공을 위해 한국에 원유를 수송할 계획이다. 그 대가로 KNOC는 러시아 내에서의 위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본 기업들은 2007년 초기부터 북부 사할린에서 진행되는 러시아석유 사업을 통해 석유를 구매하기 시작했다. 사할린 석유 구매 합의는 6개의 일본 대기업에 의해 정해졌다. 일본이 석유 수입의 90% 정도를 불안정한 중동으로부터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원의 다양화는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 게다가 사할린에서 석유를 수송하는데 5-6일 밖에 걸리지 않는 반면 중동에서는 그보다 네 배나 소요된다.

가스프롬은 2006년 10월 한국에 첫 LNG 물량을 수송했다. 가스는 일본의 미쓰비시에서 구매하여 145,000m³(천연가스 약 9200만m³)의 가스를 한국가스공사의 탈가스화 터미널 ‘펜텍(Phentek)’으로 수송하였다. 아무런 근거 없이 한국가스공사를 파트너로 정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한국은 세계 LNG의 약 15%를 소비한다. 따라서 한국 내의 가스 수입의 러시아 비중은 100%에 달한다.²⁵

한국에 러시아의 파이프라인을 통한 가스 수송은 2012-2013년에 이루어

25. RBC Daily (Dec. 2006).

질 수 있다. 예상 수송량은 연간 10bcm이며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장기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²⁶ 가스프롬은 2006년 8월 일본으로 첫 LNG 물량을 수송했다. 미쓰비시로부터 가스를 구매하여 145,000 m³(천연가스 약9200만m³)의 가스를 주부전력회사(Chubu Electric Power company, Inc.)의 치타 탈가스화 터미널로 수송하였다. 여러 국가에 대한 LNG 수송을 통해 가스프롬은 가장 큰 상품시장들을 탐사하고 있다.

일본의 아사카가스는 이미 사할린-2 사업과 계약을 연간 20만 톤의 가스를 획득하였다. LNG 미래 생산의 98%가 벌써 판매된 셈이다. 일본은 2008년 4월 1일 첫 수송을 시작으로 LNG를 23년 동안 받게 된다. 가스는 오사카 항구로 수송될 예정이다.²⁷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일본에 가스를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 1970년부터 일본과 러시아간의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다. 홋카이도에 소재한 작은 기업인 일본파이프라인개발기구(JPDO)는 가스프롬과 2006년에 일본 시장 내의 천연가스 소매무역을 위한 합작투자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한 계약 체결 이후 특별 정부간 합의도 체결할 계획이다. 일본 가스 시장에서 이 합작 투자의 비중은 10% 이상에 달할 수 있다. 첫 단계에는 연간 8bcm의 가스를 홋카이도로만 수송할 것이다. 가스프롬은 홋카이도까지의 가스 수송 시스템 건설을 책임지게 되며 사업 예산은 26억 달러로 예상된다. 두 번째 단계(현재 연구 중)는 혼슈에서 도쿄까지 가스 파이프라인을 연장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송량을 16bcm으로 늘릴 수 있다.

가스 파이프라인의 초기 용량은 연간 3bcm이 될 것이다. 공사는 2008년에 시작되어 2011년에 수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마도 사할린 사업 중 하나가 이 프로젝트의 가스 공급의 원천이 될 것이다. 2006년 말, 알렉산더 메드베데브 가스프롬 대표는 NHK방송 인터뷰에서 가스프롬은 일본에 대한 수출을 줄이고 가스를 다른 국가의 기업 및 민간고객(이미 다른

26. Vremya Novostey (Oct, 2007).

27. Reuters (Feb, 2007).

국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에게 판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²⁸

동남아시아 국가들 내의 가스 추출 및 소비에 대한 발전 전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러시아는 2005-2006년 이 지역에 활발하게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동남아시아 파트너는 베트남이었다. 양국간 활동은 비엠포브페트로(Vietsovpetro)라는 석유회복(oil recovery)·가스 합작투자기업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 합작회사의 첫 단계는 석유회복이고 두 번째 단계는 천연가스이다. 이에 따라 2006-2010년에 베트남은 베트남 대륙붕에서 가스 6.5bcm을 추출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 11월에는 2010년까지 베트남내의 지리 탐사와 가스 생산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시기에 가즈프롬과 페트로베트남은 천연가스의 탐사, 추출, 수송, 가공, 배분 그리고 베트남의 가스 수송 인프라 개발에 관한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2005년 11월에는 가즈프롬과 브네쉬이꼬놈뱅크(Vnesheconombank)는 타이PTT와 천연가스, 석유, 기타 에너지 자원의 탐사, 수송, 배분 그리고 파이프라인 및 석유·가스 저장시설의 건설, 공동배송망 구축에 관한 협력 협약을 타결하였다. 푸틴 대통령은 2005년 6월 핫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술탄과 가스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협상하였다. 현재 가즈프롬과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는 양해각서 체결을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측은 페르시아만에 있는 남부 파르스(Southern Pars) 매장물의 두 번째와 세 번째 개발 단계에만 참여해왔다. 2006년 9월 ITERA 및 자루베즈네프트는 MOGE 및 인도의 션그룹과 미얀마 마타반만의 M-8 구역의 탄화수소 가공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²⁹

러시아의 동남아시아 내에서의 전략적 목표는 천연가스 및 헬륨의 수송 증가 그리고 해당 지역 최종 소비자 시장에 대한 진출이다. 그러나 이러한 확장은 현지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과 합작투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동

28. Gazeta (Jan. 2007).

29. Institute of Natural Monopolies Research, 러시아 가스 산업의 월레 평가(Nov. 2006).

남아시아에서 러시아 석유·가스 기업들이 성공하려면 다음의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 매장물의 공동 개발
- 대규모 국제 프로젝트 등의 가스 수송 인프라 구축
- 제3국으로의 현지 LNG 수송

동남아시아에서 러시아 가스가 수송될 실제 확률은 매우 낮다. 이 지역의 가스 자급자족률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빅틴스키 및 차잔딘스키 매장물 개발의 경우 러시아는 화학산업에 이용되는 헬륨 및 희귀 가스의 수송을 통해 이 지역에서 점차 중요한 위치를 잡아갈 수 있다.

결론

러시아의 외교정책에서 '에너지'는 최근 지배적인 역할을 갖게 되었다. 간단히 말해 다른 국가와의 협상에서 에너지 요인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뜻이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높은 수출액과 국제정치에서 높은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석유 및 가스 수출을 유럽에서 아시아로 재조정해야 한다. 일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그 결과 러시아는 유럽 국가들과의 긴장을 완화하고 우선적으로 중국과 인도 등의 동방 국가들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에너지 혁명에는 러시아 내의 필수 조건들이 존재한다. 통일된 통신 시스템, 송전, 고속도로, 파이프라인 등 러시아 경제공간의 통합 및 통일성 보존은 지역통합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쪽으로의 에너지 확대의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에너지 협력은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상호관심 분야 중 가장 전망이 좋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에게 풍부하고 지리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러시아의 매장물은 많은 가능성을 내포한다. 또한 거리상 멀고 불안정한 중동 및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송 위험을 줄이고 에너지 부족 현상을 피할 수 있는 기회다. 지금 러시아는 전통적인 탄화수소 공급자들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자리잡고 있다.

중·미 관계에서 에너지에 대한 상호 관심사 조명

짜다오지웅
(ZHA Daojiong)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에너지와 관련 지리전략적 사안에 대한 상호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현재나 미래에나 충분한 양의 외국인 석유에 대한 방해를 용인하지 못한다.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미국에게 가장 큰 도전자다. 중국 또한 외국 에너지 공급의 상당한 감소 혹은 의도적인 중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과거에도 그랬듯, 미국과 중국의 석유회사들은 앞으로도 제3국에서 동일한 석유·가스 자산을 얻기 위해 경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에너지 분야에는 상호독립성이 결여되어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양국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목표에 못 미친다. 대신 미래의 활동 및 프로그램은 상대방에 대한 포용 전략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5년 9월 로버트 졸릭 미 국무부 부장관은 미국-중국 관계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했다. 미국은 ‘책임감 있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중국과 지역 및 국제 사안에 대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중국을 ‘이해관계자’로 대한다는 것은 중국을 계약이나 견제의 대상으로 봤던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¹ 여기서 핵심단어는 당연히 과연 미국의 시각에서 중국이 ‘책

1. Robert B. Zoellick, “Whither China: From Membership to Responsibility?” Remarks to the National Committee on US-China Relations (New York, September 21, 2005). Available from www.state.gov/s/d/rem/53682.htm.

임 있는' 태도로 행동하는가의 여부다. 외국 에너지 대한 중국의 태도에 대해 줄릭은 미국에서 대중적인 의견을 인용하였다. 그는 중국이 전 세계의 에너지 자원을 가둬두고 중상주의(重商主義) 전략을 취한다고 했다. 많은 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수단에 대한 중국의 석유 투자와 수단의 악화된 인권 상황에 대해 수단 정부에 UN의 제재조치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는 중국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중 경제안보검토회위원회가 2000년에 설립된 이래 미의회는 외국 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추구하고 양자, 지역, 국제 외교의 함축된 내용에 대해 수차례 조사를 해 왔다.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청문회에서는 에너지 공급과 미국의 일반적인 외교정책에 대해 중국이 얼마나 큰 위협을 주는지에 대한 만장일치의 결론이 생성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에너지 안보 추구하고 대(大) 미 외교정책 목표에 관한 중국의 영향에 대해 일관된 우려를 하고 있다. 2005년 여름에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는 캘리포니아 소재의 우노칼(Unocal)의 석유 자원을 취득하기 위해 쉘브론과 경쟁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의 의도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² 우노칼 사태에 대한 CNOOC와 쉘브론의 대결은 종결되었다. 미의회와 행정부에서는 계속해서 경제분야에서 중국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대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 동안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외교를 추구하고 2006년 11월 초에는 아프리카 48개국의 지도자들을 북경으로 초청하여 중국-아프리카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앞으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에너지는 점점 더 논쟁거리가 될 확률이 높다. 미국에서는 지금부터 2008년 대선까지 석유 수입에 대한 미국의 의존은 공화당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로부터 많은 정치적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최근의 외교위원회 연구에서도 제안했듯이³ 효과적인 에너지 정책

2. Editorial, "America's Summer of Discontent," (*New York Times*, August 11, 2005), p. A22.

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National Security Consequences of US Oil Dependency," (October, 2006).

은 국내 비중을 포함해야 하지만, 미국은 현재나 미래에도 충분한 양의 외국산 석유에 대한 방해를 용인하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 시기까지 중국은 외국 에너지 물량의 감소 또는 공급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국과 중국의 석유회사들은 제3국에서 동일한 석유 자산을 두고 서로 경쟁해야 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상호 불안감은 에너지와 관련 지리전략적 사안에 관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리전략적 불안감을 불러 일으키는 분야에 대해 다루기 전에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에너지 분야에 대한 상호의존의 부재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너지 상호 의존성의 부재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 미국의 석유회사들은 중국에 석유를 공급하는 유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공급원이었다. 미국 석유 지질학자들은 중국의 석유 탐사에 참여하여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탐사 결과 중국 대륙에는 대규모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무역금지 조치를 내리고 해상봉쇄를 취했다. '누가 중국을 잃었는가' 논쟁에도 불구하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의 첫 북경 방문 때까지 중국 시장은 관심 있는 미국 석유회사들에게 접근 금지였다. 반면에 중국은 1960년대 중반에 석유를 자급자족하게 되었다.

미국은 외교 정상화 이후 중국의 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에 다시 관심을 보였다. 미국 에너지부가 설립된 1년 후인 1978년에 제임스 슐레진저 에너지부 장관은 북경을 방문해 중국과 석유 및 가스 공동생산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다. 답례로 중국정부는 1979년 초반에 석유산업을 담당하는 부총리를 워싱턴으로 보냈다. 이후 1980년에 중국은 근해 석유 및 가스 개발을 외국에 개방했다. 일년 후 아르고산타

페는 남중국해의 하이난 근처 대륙붕에서 석유를 탐사할 수 있는 협약을 중국과 체결한 최초의 미국 기업이 되었다.⁴ 1980년대 초반부터 미국 석유 회사들은 중국 기업과 여러 차례 합작기업을 설립해 지질학 조사를 실시하고 중국의 정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⁵ 미국 소재 에너지 기업들은 중국의 석탄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고 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로 옥시덴탈석유회사가 1982-1991년 중국 섬서의 석탄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다.

중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주요 석유 생산국이었다. 국내 석유생산은 1985년 절정에 달했고 2005년에는 세계 6위의 생산국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 및 외국 기업들의 국내 석유 자원 탐사 및 개발에 제한을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법에 의해 현지 파트너 없이 외국의 석유기업은 중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으며 합작투자의 다수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석유생산국들은 국내 석유 탐사 및 개발에 대한 외국의 참여에 한 개 이상의 제한을 두고 있다.⁶ 오늘날 문제는 중국을 어떻게 하면 더 큰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중국 역시 점점 더 많은 석유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0년 이후 몇 년 동안 중국 원유 수출의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국가는 미국이었다(일본이 첫째). 1993년 중국 원유 수출의 15%가 미국으로 이동했지만 전체 미국 수입에 대한 기여도는 미비한 수준이었다.⁷ 그 이후 중국의 석유 수출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중국에 석유를 제공하는 주요 국가가 된 적이 없고, 중국과 미국 둘 다 석탄을 자급자족한다. 중국의 경우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천연가스는

4. Bob Williams, "Arco, Santa Fe Sign Pact to Drill off China," *Oil and Gas Journal* (June 15, 1981), p. 52.

5. Department of Energy, "National Security Review of International Energy Requirements" (February 2006), p. 53. Archived at <http://www.pi.energy.gov/pdf/library/EPACT1837FINAL.pdf>.

6. Ibid., pp. 47-50.

7. Haijiang Wang, "China's Impact on the World Crude Oil Market," *The Journal of Energy and Development*, Vol. 19, No. 1 (Autumn 1993), pp. 85-86.

수입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상적인 에너지 교역에서 양국 간에는 상호 의존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러한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외교적 관점에서 중국과 미국은 독립적으로 각자의 국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켜 왔다. 적어도 1973년 이후 미국은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위해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회원국과 G7 국가들과 많은 거래를 해왔다. 1996년이 되어서야 중국과 공식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 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G7이 창설된 1975년 이후 10년 동안 중국은 직접적인 관계보다는 정황에 관계된 국가였다. 중국은 G7이 점점 더 많은 지정학적 사안들을 다루게 되면서 G7이 직면한 적대적인 환경의 일부를 구성하였다.”⁸ 중국은 순수 수출국이었을 당시 OPEC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한 IEA의 회원 규정에 따라 OECD 회원가입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IEA와의 관계 개선에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

상기의 간단한 역사를 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의 에너지 관련 불안감의 지리전략적 성격을 알 수 있다. 에너지 교역의 상호의존성 부재는 에너지 때문에 정치적·외교적 긴장감이 생길 때 미국 비즈니스 로비단체들은 미국이나 중국에 교훈을 주는 것에 대한 이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비즈니스 로비단체들은 1979년 이래 양자관계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경계를 위한 무의미한 배경을 제공한다. 상대방에 대한 물질적 혜택이 매우 적고 커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냉전 이후 미국과 중국 관계의 구조적 변화에 비춰볼 때 중국의 해외 에너지 획득은 “국가의 부와 영향력을 늘리고 현재 지배적인 미국의 희생을 대가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서기 위한” 중국의 대전략의 일부로 봐야 할 것이다.⁹ 중국 내에서 중국이 에너지 공급 안보, 권력 향상,

8. John Kirton, “The G7 and China in the Managemen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vailable at <http://www.g7.utoronto.ca/scholar/kirton199903/china3.htm>.

9. Warren I. Cohen, “China’s Power Paradox.”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2006), p. 129.

아시아 내의 위상 향상 등을 이루는데 미국을 장애물로 보는 사람은 적다. 그러나 에너지는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관계에서 특히나 민감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가장 대두되는 두 사안은 제3국 공급시장에서의 경쟁과 해상이동경로의 이용이다.

미국을 대가로 한 중국의 “나가기”?

2002년 11월 불안정한 국제석유시장 속에서 중국정부는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및 천연자원 개발, 도전과제 달성 등의 전략의 핵심을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 이후 ‘나가기’라는 문구는 중국 밖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많은 미국 분석가들은 단기간에 미국을 포함한 기존 강대국들과의 갈등을 피하면서 국가의 권력 구축을 위해 외국 에너지 공급을 중국 대전략의 필수 요소로 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자원외교는 “아시아와 세계 무대에서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다루어야 할 한 요소”이다.¹⁰

중국의 ‘나가기’에 대한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겠다. 중국의 정치 용어에서 ‘나가기(走出去)’는 말 그대로 ‘해외 시장에 나아가기’를 뜻하며 ‘외국 경제를 중국으로 초대하기’를 뜻하는 경제 성장 전략인 ‘들여오기(請進來)’와 쌍벽을 이룬다.¹¹ 정부정책 이니셔티브로서 이 두 전략은 주요 중앙정부 경제정책이 중국 기업들이 국내 및 해외 시장, 천연자원을 활용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계획하면서 1984년에 처음 발표되었다. 다시

10. Aaron L. Friedberg, “Going Out: China’s pursuit of natural resources and implications for the PRC’s grand strategy,”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Analysis*, Vol. 17, No. 3 (September 2006), p. 34.

11. “China Will Do Better Job in ‘Bringing In’ and ‘Going Out,’” *People’s Daily* (November 8, 2002), available at http://english.people.com.cn/200211/08/eng20021108_106486.shtml.

말해, 중국 기업들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서 국가의 자급자족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중국에는 ‘나가기’ 보다 ‘들여오기’가 더 많았다. 이는 국가의 국영기업들의 개혁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이다.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G7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내린 금수조치를 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991년 중국정부는 국내경제의 세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게다가 차기 클린턴 행정부는 중국 인권 현황에 대한 미국의 검토와 미국시장에 대한 중국의 정상 접근을 연결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국영기업을 포함한 중국 기업들을 부추겨서 중국 밖으로 ‘나가라’고 하면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의 정상외교를 변경하지 않고 심지어는 다변적 외교 분야에서 미국과 발생하는 인권 갈등에 있어서 중국을 동정하는 태도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희망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와 국내 에너지생산이 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의 국영 에너지 및 천연자원 개발 기업들은 1990년대 초반에 적극적으로 해외에서의 기회를 모색하였다.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은 1992년 캐나다에 투자함으로써 첫 ‘나가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¹² 1990년대에 CNPC와 그 밖의 중국 석유 회사들은 12개 이상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석유 탐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출범 및 발표하였다.¹³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원추출사업의 세계에서 잠재적 유전을 탐사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발표 후 실제 생산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그 결과 계약하는 회사의 주식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탐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개발을 위해 계약된 유전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다시 말해, 발표된 계약과 실제 계약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에너지 및 자원에 대한 ‘나가기’에 대한 정확하고 믿

12. Zha Daojong, "China's Oil Diplomacy in Africa," *International Politics Quarterly* (Guoji Zhengzhi Yanjiu) (December 2006), pp. 59-61.

13. Erica Downs, *China's Quest for Energy Security*, Santa Monica: RAND (2000), pp. 21-23.

을 만한 기록은 없다. 이는 중국 에너지산업 관리에 대한 정부 관료제도가 변했기 때문이다. 1988년 중국은 석탄 및 석유 관련 부처를 없애고 에너지 부를 설립했으나 이것도 1992년에 폐지되었다. 그 이후 에너지산업과 해외투자활동에 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기능을 할 장관급 기관이 없었다. 어느 분석가가 말했듯이, 중국의 불안정한 에너지 상황은 여러 정부 부처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주요 역할을 하면서 혼란이 가중되어 생긴 결과다.¹⁴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해외 관찰자들이 독립적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 에너지기업의 해외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기란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렵다. 물론, 중국정부는 해외에서 중국에너지기업들이 이뤄낸 성과를 공개해야 자국의 '나가기' 정책에 대한 외국의 우려가 완화될 것이다. 이러한 투명성은 중국이 미국과 기타 주요 석유수입국가들에게 주는 시장 차원의 도전과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은 더 이상 중국의 외국 석유자산에 대한 투자를 우려하지 않는 듯하다. 일부의 경우, 중국석유회사들이 "탐사 및 생산 계약을 얻기 위해 때로는 국제석유기업들보다 훨씬 많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등 고가를 지불할 의지를 보이고"¹⁵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점에서 중국석유기업들이 이토록 적극적인 이유가 궁금해진다.

한 가지 추측은 중국석유회사들이 제3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할까 봐 후발 주자로서 프리미엄을 기꺼이 내겠다는 생각이다. 2003년에 CNOOC가 국제적인 석유기업들과 함께 카스피안해 유전의 탐사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한 것을 보면 이를 알 수 있다. 뉴욕 타임즈에 의하면

“CNOOC는 3월에 북카스피안해 프로젝트에서 BG(그룹, 前 브리티쉬가스) 지분의 1/6을 6억1500만 달러에 인수하기로 BG와 합의했다. 이 사업

14. Bo Kong, "Institutional Insecurity," *China Security* (Summer 2006), pp. 64-88.

15. Flynt Leverett and Pierre Noel, "The New Axis of Oil," *The National Interest*, 84 (Summer 2006), p. 66.

에는 약 150-200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 5위의 유전인 카사간이 해당된다.”¹⁶

소규모 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명 CNOOC는 BG의 파트너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어차피 그룹의 기존 회원들이 만든 규정을 준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기존 파트너들은 BG가 판매한 CNOOC의 지분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었다.” 이 사례가 가장 주목할만하고 이러한 사례 중 대중에게 알려진 유일한 사건이지만 세계의 에너지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더 이상 제한하기 전에 중국기업들이 먼저 나가야 한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더 심각한 사안은 세계 석유 산업에서 중국과 같은 후발주자가 해외 석유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산업과 국가의 에너지 공급 안보에 혜택을 주는가 하는 것이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중국의 해외 석유 투자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가 없다. 중국 석유산업 전략가들은 해외 석유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이다.¹⁷ 반대로 미국 분석가들은 해외 자본 투자가 원칙적으로는 석유기업의 성장 전략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외국 석유 자본 보유는 국가의 석유 공급 보장과 관계가 적다고 한다.¹⁸

중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한 미국의 불안감은 미국 시장에 석유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국제적인 석유기업(IOC)들이나 반면 ‘나가기’ 전략을 시행하는 중국 석유 기업들은 국영 석유 기업(NOC)이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다. NOC의 고위경영진은 정부를 위해 적극적으로 비즈니스 에이전트로써 사업을 하기 보다 정부의 통제를 받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이미지를 갖는다. 게다가 중국의 NOC는 이란, 수단, 베네주엘라 등 미국과 외교적·정

16. “China Oil Giant Dealt a Setback,” *The New York Times* (May 13, 2003).

17. Linda Jakobson and Zha Daojiong, “China and the Worldwide Search for Energy Security,” *Asia Pacific Review*, Vol. 13, No. 2 (2006), pp. 64-65.

18. Kenneth Lieberthal and Mikkal Herberg, “China’s Search for Energy Security and Implications for US Policy,”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Analysis*, Vol. 17, No. 1 (April 2006).

치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국가들과 협상을 많이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은 불편하면서도 불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중국이 NOC를 외교 대리인으로 활용하게 되면 미국의 외교적·전략적 이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중국은 외교적 측면에서 미국의 우려 사항에 대해 다루어야 한다. 중국의 전체 외교경제관계를 보면 미국과 마찰을 완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정치적·전략적 경쟁을 하려는 중국의 NOC의 영향을 확인하기 전에 미국 분석가들이 중국의 외교적 의도에 대한 평가를 자제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에너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중국의 '나가기' 정책에 대하여, 비평가들은 다음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진출한 국가들로부터 우려와 비판을 사지 않고 중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디에 있는가?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수단은 중국 NOC가 탐사, 생산, 수송, 정제까지의 모든 과정을 운영하는 유일한 국가다. 중국 NOC가 제3국의 IOC로부터 하청을 받고 인력 및 기술 용역을 제공할 경우 중국의 '나가기'에 대한 평가가 많지 않다. 그렇다면 중국 밖에서 중국 NOC가 하청 이상의 일을 하는 것은 용납이 되는가? 중국 석유 기업의 내부 분석가들이 중국 NOC 해외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응할 때 이러한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해상 수송 경로: 중국과 미국의 공동 사용?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에너지 관련 상호불안감의 더 심각한 측면은 해외에서 취득한 석유를 자국 영토로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3국의 유전에 대한 나쁜 경쟁이 국제석유산업의 비즈니스 역학 덕분에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해상경로를 통해 석유를 수송하는데 상대방의 취약점에 집중하는 것은 전략적 영향을 위한 제로섬 경쟁으로 변질될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과 중국간의

군사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따른다.

중국과 미국은 페르시아만에서 수입된 석유에 의존해왔으며 앞으로 그럴 것이다. 이러한 의존은 전 세계 석유 매장물의 지리적 존재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프리카와 러시아는 세계 시장에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페르시아만의 물량을 대체하지 못한다. 이 지역으로부터의 석유 수입량을 줄인다고 이러한 의존의 성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사실 의존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실현시키는 것보다 쉬운 일이다. 외국 석유기업들은 애초에 페르시아만에서 석유를 수입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했다. 이러한 석유생산기업과 석유가공산업은 기술적으로 의존하도록 하는 비즈니스 경로를 만들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주요국가의 정부도 자국의 석유회사로 하여금 정부의 지리전략적 선호사항을 따르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과 미국이 공급 안보 관리에 대한 각국의 전략을 아무리 설계하고 추진하더라도 페르시아만에서 국내 시장으로 석유의 물리적 흐름을 보장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중국은 1983년부터 오만으로부터 페르시아만의 석유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석유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려는 미국의 노력은 없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이 지역의 미군 주둔 덕분에 페르시아만에서 중국 연안까지 해상경로를 통해 아무 차질 없이 석유를 수송할 수 있었다. 페르시아만과 중동지역에 미군 주둔을 비평하는 중국 논평자들은 미군이 이 지역에 가져오는 안정적 효과를 미처 인지하지 못 하고 있다. 1979년 한 페르시아만 연안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의도적으로 채굴한 사건이 반복되더라도 이는 중국의 관심 밖이다.

해상 석유 수송에 대한 중국의 취약성을 평가할 때 미국이라는 요소가 방정식에 대입된다. 이는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1971년에 화해하기 20년 전 중국에 대한 종합적인 금수조치를 내렸다. 중국은 홍콩과의 사실상 지하경제관계를 통해 금수조치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다. 당시 홍콩의 식민정부였던 영국은 마오쩌둥이 중국의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홍콩의 항만을 장악할지도 모른다는 사회적 불안감에 대한 두려

움 때문에 이러한 불법거래를 묵인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이해관계는 어느 정도 홍콩에서 수렴되었다.¹⁹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통치하에 홍콩은 더 이상 과거의 완충제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대신 홍콩은 이제 중국에 대한 가설적인 새로운 종합 금수조치에 포함되었다.

중국이 페르시아만과 아프리카로부터 구매한 석유를 해상으로 수송할 때 취약함을 가중시킨 또 다른 핵심 수로는 말라카 해협이다. 여기서도 미국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군의 접근성 때문에 평가 방정식에 대입된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1970년대 이후 미국을 포함한 그 누구도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이용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위협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해상 해적의 공격이 난제로 남아 있지만 이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간에 지리전략적 경쟁이 생기고 있다. 미국도 이 지리전략적 경쟁에 포함되어 있다.²⁰

2003년 11월 후진타오 주석을 의장으로 국가의 경제 상황을 검토하는 회의에 대해 익명의 개인들이 제공한 기억을 요약한 한 신문기사 덕분에 최근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평가 시 말라카 딜레마에 대한 논의가 늘어가고 있다. 말라카 해협이 중국 에너지 수입에 대한 급소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견과 일부 선진국(미국과 동아시아 동맹국이라 암시함)이 해협을 통제하려고 한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말라카 해협에 의존함으로써 생기는 취약함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²¹

말라카 해협은 중국의 에너지 공급 안보를 유지하는데 분명 중요하다. 페르시아만과 아프리카에서 오는 석유는 중국 수입 석유의 80% 이상을 차

19. Yun-Wing Sung, *The China-Hong Kong Connection: the Key to China's Open Door Poli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chapter 2.

20. Zha Daojiong and Hu Weixing, *Building a Neighborly Community: Post-Cold War China, Japan, and Southeast Asia* (Manchester, UK: Manchester University Press, 2006), chapter 6.

21. Wen Han, Hu Jintao Cu Po 'Maliujia kunju' [Hu Jintao Urges Dealing with the 'Malacca Dilemma'], *Ta Kung Bao* (January 14, 2004).

지하는데 말라카 해협을 통해서만 중국에 도달할 수 있다. 또한 장거리 해상수송의 경우 중국은 주로 직물 등의 경공업 제품을 수출하고 가공을 위해 원자재 및 반제품을 수입해왔다. 그 결과 중국은 석유 수송을 위해 외국 소유의 유조선에 의존해왔다. 2005년에는 외국 소유 유조선이 중국에 수입된 석유의 90%를 수송하였다.

중국은 15년 이내에 수입하는 석유의 3/4를 수송할 수 있는 유조선단을 만들 계획에 있다. 재정적으로 이것은 야심찬 목표지만 중국의 조선술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중국이 구매하여 수입하는 석유를 중국 소유 유조선에 이용해 수송하는 것이 지리전략적으로 매력적이었지만 이러한 계획은 현명하지 못하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석유를 중국으로 들여오는 사업 이외의 복잡한 절차와 위험 요소는 외국 유조선에 소유하고 운영하는 기업들이 담당해야 한다. 다시 말해, 이런 상황 덕분에 중국이 사용해야 할 외교적 자원을 낭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여기서 모순이 되는 점은, “국가 소유의 유조선단을 이용할 경우 오히려 중국의 에너지 공급 통상금지에 대한 취약성을 증가시킬지도 모른다”는 것이다.²²

‘말라카 딜레마’에 대한 논의로 중국과 미국 내에서는 군사전략적 추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 총괄평가국(Office of Net Assessment)에서 2005년 위탁한 보고서 ‘아시아의 에너지 거래’에 의하면 중국은 ‘진주 띠’ 해상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진주 띠”는 남중국해에서부터 말라카 해협을 통해 인도해와 아라비아 만에 걸쳐 있는 항만 및 비행장에 대한 접근 개선, 특별 외교관계 형성, 군의 현대화를 통해 중국의 커져가는 지정학적 영향의 현시(顯示)에 대해 설명한다.²³

22. For example, Gabe Collins, “China seeks oil security with new tanker fleet,” *Oil and Gas Journal* (October 9, 2006), p. 20.

23. Christopher J. Pehrson, “String of Pearls: Meeting the Challenge of China’s Rising Power Across the Asian Littoral,” Strategic Studies Institute of the US Army War College (July 2006). <http://www.strategicstudiesinstitute.army.mil/pdffiles/PUB>

이러한 특징으로 결론은 한 가지뿐이다. 중국은 해상수송 보안 및 안정의 민감한 여건을 지닌 이들 지역에 대한 미국의 지리전략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군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국의 소위 ‘진주 띠’ 전략으로 미공군사관학교의 한 논문에는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데 있어 미공군도 역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⁴

이러한 관점은 미정부 혹은 미군 당국의 공식적 정책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간의 신뢰 구축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학적 환경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중국 분석가들의 경제적인 수사와 대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현재의 상황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에너지는 매우 민감한 전략적 사안이며 향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심스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래의 방향: 전략적 혁신

에너지 무역 상호의존도가 매우 낮은 주요 석유수입국인 중국과 미국은 해외에서 석유를 취득하고 해상을 통해 석유를 자국으로 수송하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고 있다. 상호 불안감은 시장 차원을 넘어서 전략적 수준에 이르렀다.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런 전략적 예측이 가시화 될 가능성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양국간 경쟁을 좀 더 이성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많이 연구하는 일은 매우 고무적이다.²⁵

정부간 외교로 기업간 경쟁을 대처하는 이상적인 방법 중 하나는 중국

721.pdf.

24. Major Lawrence Spinetta, “The Malacca Dilemma: countering China’s ‘String of Pearls’ with Land-Based Airpower,” *US Air Force Academy* (June 2006). <https://research.au.af.mil/papers/ay2006/saas/spinetta.pdf>.

25. Flynt Leverett and Jeffrey Bader, “Managing China-US Energy Competition in the Middle East,” *The Washington Quarterly* (Winter 2005/06), pp. 187-201.

과 미국 석유회사들로 하여금 제3국 시장에서 협력하도록 하는 정책에 대해 양국이 함께 모색하고 구상하는 것이다. 양국 기업들이 상대방을 편하게 대할 수 있을 때 어느 한 기업의 행동 뒤에 있는 정치적, 전략적 정부 정책의 역할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편안함이 증가되면 미국과 중국의 외국 정책입안자들은 석유산업에 간접적으로 연관된 관찰자들이 일반적으로 모르는 통찰력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다.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장려하는 과학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사실 미국은 중국의 에너지 산업 발전에 지난 30년 동안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1979년 지미 카터 대통령과 덩샤오핑이 체결한 과학기술협력협약으로 3,000여 개의 과학사업이 미국과 중국의 에너지 관련 연구기관 및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업은 미국과 중국의 전문가들이 전문지식과 에너지 기술 및 에너지 정책 사안에 대해 공유하는 이점이 있어 이들의 협력은 정세 변화에도 덜 흔들리게 된다. 중국 에너지 소비의 낭비, 환경적으로 유해한 성장을 막는데 미국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이득이 된다. 분명 중국이 오늘날 직면한 엄청난 환경 및 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이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와 협력한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더 넓은 의미에서 중국의(그리고 미국의) 효율적인 소비로 절약된 에너지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부담을 줄이고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전략적 차원에서 중국의 해외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중국의 부상'의 지정학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 미국은 자국의 세계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에 도전하는 중국을 묵인할 수 없다. 한편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더 많은 권력과 지위를 가질 수 없다.²⁶ 반

26. Wang Jisi, "China's Search for Stability with America," *Foreign Affairs* (September/October 2005), pp. 39-48.

면 미국이 중국의 개발 어젠다를 방해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국은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중국의 기대에 못 미치게 된다.

오늘날 중국과 미국간의 모든 정책 대화 메커니즘은 반드시 에너지를 주제로 한다. 그 중 세 개는 에너지 정책, 석유·가스 산업, 핵기술의 평화적인 사용 등 에너지에 초점을 둔다. 대부분은 긍정적 또는 공격적인 전략적 의도의 암시를 찾거나 상대방을 탐색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은 양국의 경쟁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부족하다. 대신 미래의 활동과 프로그램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전략적 의도를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의 전략적 의사결정 집단들은 에너지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회 단체들의 성장과 성숙에 긍정적인 정치적 여건을 형성할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양국의 안정적인 전략적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양국간의 차이점은 더 적절하게 관리될 것이다.

중·일 에너지 관계: 경쟁인가 공생인가?

켄트 칼더
(Kent E. CALDER)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으로 석유·가스 시장이 점점 긴축되면서 1980년대의 에너지 협력 경향과는 달리 아시아의 경제 거인들인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경쟁을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긴장과 이해 충돌이 예상되는 지역은 중동, 러시아와 동중국해다. 에너지 자원 개발과 관련해 지정학적 경쟁 관계는 서로간의 차이점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일 에너지 관계는 포괄적인 양자관계를 위한 양날의 칼이다. 양국은 대조되는 자원 및 에너지 정책에 기반을 둔 협력 관계에 있다. 일본은 오랫동안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오염의 예방을 강조해왔다. 일본은 중국에서 상당히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갈등의 근원이 되는 동중국해의 유전 및 가스전은 자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중국 동남해 연안에서 가장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이 지정학적·경제학적 관점을 넘어서 양자관계를 원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

일본과 중국은 복잡한 정치·경제 관계에 있는 아시아의 경제·정치 대국들이다. 두 국가는 이 지역 경제생산의 2/3를 차지하며 국방비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중·일 무역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이며 지난 5년 사이 두 배 이상 늘었다.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으로 석유·가스 시장이 점점 긴축되면서 아시아의 두 경제대국인 중국과 일본의 에너지 경쟁은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협력의 전망도 보이고 있다. 중·일 관계에서 에너지 관계는 양날의 칼과도 같기 때문에 매우 흥미

로운 점을 갖고 있다. 이 두 거대한 정치·경제 사이에 협력 또는 갈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조되는 보유 자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일본은 5900만 배럴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에너지 자원 부족 국가다. 이는 현재의 소비량을 감안했을 때 약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¹ 반면, 중국의 에너지 자원 보유 상태는 이보다 훨씬 낫다. 최대의 석탄 매장물을 자랑하는 미국과 유사한 양의 석탄을 보유하고 상당한 석유 매장물도 갖고 있다.² 중국은 세계 6대 석유 생산자이며 최근 고갈 상태에 가까워지는 다칭(Daqing)의 대규모 동북부 유전에서 시추를 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세계 제1의 석탄 생산자이자 소비자다. 그러나 환경적·기반시설 관련 문제와 외국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진 시추 기술을 이전받지 못함으로써 중국은 에너지 생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매장물, 특히 석유는 [그림 1]에 표시된 바와 같이 북부와 서부에 위치한다. 반면 남부와 동부의 에너지 수요는 치솟고 있으며 중국의 새로운 중산층이 대부분 밀집한 지역이다. 게다가 국가의 한 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를 수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와 파이프라인은 아직 덜 개발된 상태다. 동·남중국해의 유전은 이러한 에너지 딜레마로부터 조금은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으나 중국의 이웃과 지역 갈등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중국의 석탄 매장량은 석유보다 많으며 중국 1

1. 일본은 2004년에 약 535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했다. 미국 에너지부 참조. *Country-Analysis Brief*, <http://www.eai.doe.gov/emeu.cabs/china.html>.

2.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edition. at: <http://www.bp.com/productlanding.do?categoryId=6842&contentId=7021390>.

차 에너지 전체 소비의 70%가 석탄에 의존한다.³ 그러나 석유와 마찬가지로 석탄의 완전한 탐사에 있어 수송이라는 장벽이 존재한다. 장거리 수송은 석탄의 부피 때문에 특히 성가신 문제가 된다. 최대 탄전은 북동쪽, 특히 산둥(Shandong)과 산시(Shansi)에 있으며 에너지 수요는 동남부 해안을 따라 수 백 마일에 걸쳐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림 1]



출처: 에너지부 화석연료과.

3. Ibid.

서로 다른 에너지 안보의 중점

중국과 일본은 보유한 자원과 세계 정치·경제 속에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안보에 대한 개념도 대조된다. 각국의 현대사에 따라 세부 내용이 다르며 그 결과 인센티브 구조도 매우 다르다. 이러한 차이점은 지난 두 세대에 걸쳐 아시아의 두 대국 사이에 변하는 협력과 갈등의 관계를 나았다.

일본은 GDP가 4조 달러 이상으로 아시아 최대의 경제다. 큰 경제에도 불구하고 국내 에너지 자원의 부재로 일본은 아시아 최대의 석유 수입국(400만 배럴 이상/1일)이며 LNG 수입도 전 세계 수입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석유·가스는 주로 중동에서 수입하며 석유의 90%와 가스의 1/3을 이 지역에서 수입한다. 일본의 민간 에너지생산 분야는 개발이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된 에너지는 일본 무역회사 또는 다국적 에너지기업을 통해 조달된다.

일본의 경제 규모는 크지만 지난 15년 동안 많은 성장을 하지 못 했다. 에너지 측면에서 중국과 비교했을 때 추적자이기보다는 개척자다. 일본은 이미 수 년 전에 세계 속의 입지를 굳혔으며 확장해야 할 필요를 제한적으로만 느낀다.⁴ 일본의 에너지에 대한 관심은 보수적이며 제한적이다. 특히 페르시아만에 그렇다. 지정학적으로 이러한 관심은 일본의 주요 동맹국인 미국에 의해 보호받고 있어 일본은 미 해군이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만에서 요코하마까지의 해로에 의존하는 것이 편리하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 상의 중점은 일본과 상당히 다르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경제로부터의 에너지 수요가 훨씬 크다. 중국의 석유 소비량은 2005년 2.9% 증가했고 이는 일본

4. 다른 산업적 문맥에서 적용된 이 용어의 예를 보려면 다니엘 오키모토, '개척자와 추적자: 미·일 반도체산업 진화와 국가의 역할' 참고(Stanford: Stanford University Northeast Asia-United States Forum on International Policy, 1983).

소비량의 1.4%에 불과하다.⁵

절대적인 관점에서 낮은 일인당 에너지 소비 때문에 큰 인구에 비해 놀랍게도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낮다. 2005년에 중국은 하루 평균 700만 배럴 이하의 석유를 소비했다. 이는 미국 전체 소비량의 1/3 정도이고 일본의 1일 평균인 536만 배럴보다 약간 많다.⁶ 그러나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아직 미국의 1/5, 일본의 1/10 수준임을 감안할 때 누적 수요량은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중국은 10-20년 후 현재보다 훨씬 커질 경제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에너지원을 모색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중국은 일본보다 강력한 공급확장(supply-expansion imperative)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국의 에너지원은 일본만큼 부족하지 않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에는 석탄 등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다. 단기적으로 중국의 에너지 안보 문제는 일본보다 더 큰 인프라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중국은 에너지를 수송할 철도, 항만, 파이프라인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일본은 이를 이미 갖추고 있다.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 인센티브 구조상 세 번째 주요 차이점은 지정학적인 것이다. 일본은 국제 해로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의 동맹국인 반면,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그 결과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미국이 지배하는 해로를 피해 지상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중국은 일본과는 달리 이웃 국가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을 잇는 지상 파이프라인을 특히 선호한다.

5. 세계 에너지에 관한 BP 통계 리뷰(2006년 6월), p. 11.

6. Ibid. 일본의 명목적 GDP는 중국의 3배였지만, 석유 수요는 1/3 정도 밖에 많지 않았다.

에너지 협력의 역사

최근의 지정학적 경쟁과는 모순적으로 국내 보유 자원을 감안했을 때, 중국과 일본은 오랜 에너지 협력의 역사를 갖고 있다. 중국은 4대 현대화에 의한 경제 가속화가 이루어지기 5년 전인 1974년부터 일본에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에너지 공급 관계는 30년 동안 유지되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천안문사건까지 중·일의 긴밀한 지정학적 관계를 돌이켜 보면 중국과 일본은 거의 20년 동안 매우 중요한 에너지 파트너였다.

1970년대의 오일쇼크 이후 일본에 대한 중국의 석유 수출은 양국 모두에 매력적이었다. 일본은 서방 국가로부터 전체 석유의 65%를 수입했는데 중국을 통한 수입원 다양화를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일본은 수입을 통해 중동 의존에 따른 전략적 취약성을 상쇄시키면서 생산국 및 석유 메이저와 낮은 가격을 협상하는데 영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신일본제철 등의 영향력 있는 일본 제조업자들은 중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함으로써 중국 석유 수출업자와 중국의 철, 일본의 기계 수입과 연결시켜 일본 제품의 수출을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했다.⁷

중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을 통해 외환 거래와 일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972-1974년 일본에 대한 석유 수출이 시작될 무렵 일본은 중국과 비료, 석유화학 등 17개 산업공장을 매각하는 4억7천만 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석유 공급은 가스 수출로 점점 확대되었다.

이러한 상호 에너지 의존 관계 속에서 중국과 일본은 상대방에 대한 지역 분쟁을 완화하였다. 중국은 에너지 수출을 통해 일본이 구소련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하면서 동중국해와 디아오유/센카쿠(Diaoyu/Senkaku)에 대한 분쟁을 잠시 멈추었다. 한편 일본은 중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석유

7. Tanaka Akihiko 홈페이지에서 인용한 중·일 관계 관련 법률 문서: <http://www.ioc.u-tokyo.ac.jp/~worldjpn/documents/texts/JPCH/19780216.O1J.html>.

를 수입할 것이라는 기대와 국내 연안의 석유 탐사 실패로 동중국해에서의 자원 탐사를 자제하였다.

중국의 경제성장이 지정학적 정세에 가져오는 변화

일본과 중국 사이의 교묘한 에너지 공생은 1990년대까지 계속되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90년 중국으로부터 연간 10억 달러에 달하는 석유를 수입했다. 사우디산 경질원유가 석유, 항공 연료, 기타 첨단 원료로 더 적합했기에 중국산 원유는 품질이 아닌 일본 무역회사들에게 생기는 무역 확대의 기회 때문에 매력적이었다. 석유는 중국 생산자들에게, 간접적으로는 중국정부에게 경화를 벌게 해줬고 이는 중국의 산업 발전에 필요한 기술, 공장, 기계 등으로 교환이 가능했다.⁸

결정적으로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 관계를 경쟁으로 바꾼 요인은 4대 현대화에 의한 중국의 폭발적이고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었다. 이는 엄청난 새로운 에너지 수요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잠재적 국내 매장물, 지리적 불균형, 기반시설 악화로 인해 중국 생산자들은 자국의 국내 수요에 공급할 수가 없었다. 중국의 거대한 석탄 매장량을 감안했을 때, 동중국해 건너의 새로운 경쟁자는 놀랍게도 석유와 가스에 초점을 두었다.

1993년 중국의 오랜 국제 석유무역흑자는 적자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은 [그림 2]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후 10년 동안 심화되었다. 2005년 말 중국은 일본의 전체 양의 2/3 또는 하루 338만 배럴을 수출하고 있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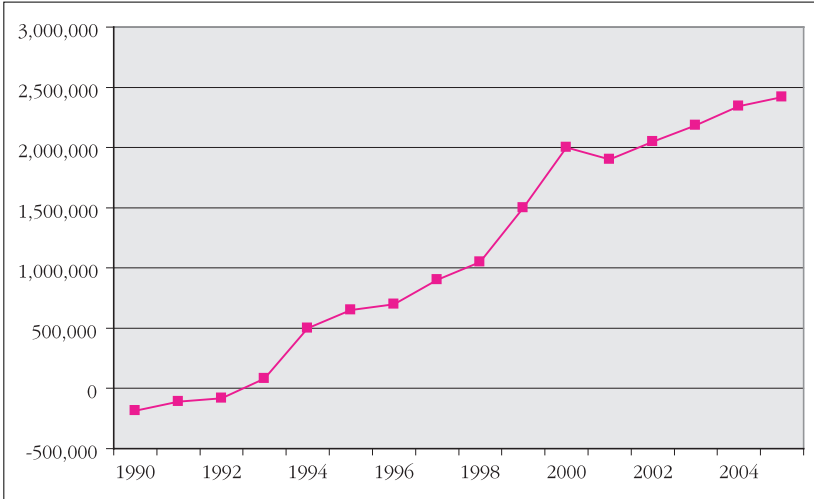
2000년과 2005년 사이 중국의 석유 수요는 세계 수요 증가분의 약 1/3 이상을 차지했다.¹⁰ 늘어나는 자동차 소유자 수와 석유화학 생산으로 중

8. 중·일 경제협회 홈페이지: <http://www.jc-web.or.jp/lt/2.htm>.

9.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June, 2006), p. 20.

[그림 2] 중국의 석유 순수입

(단위: 배럴/1일)



출처: 중국 통계 연감(2003년까지) 및 세계에너지에 관한 BP 통계 리뷰, 2005년도 및 2006년도판 (2005년까지).

국의 석유 소비량은 2002년에 일본을 넘어섰고 2005년에는 하루 평균 약 700만 배럴에 달했다. 동년도 일본의 소비량은 하루 평균 540만 배럴이었다. 앞서 언급한 국내 공급 제약 때문에 수요 증가분은 주로 수입에 의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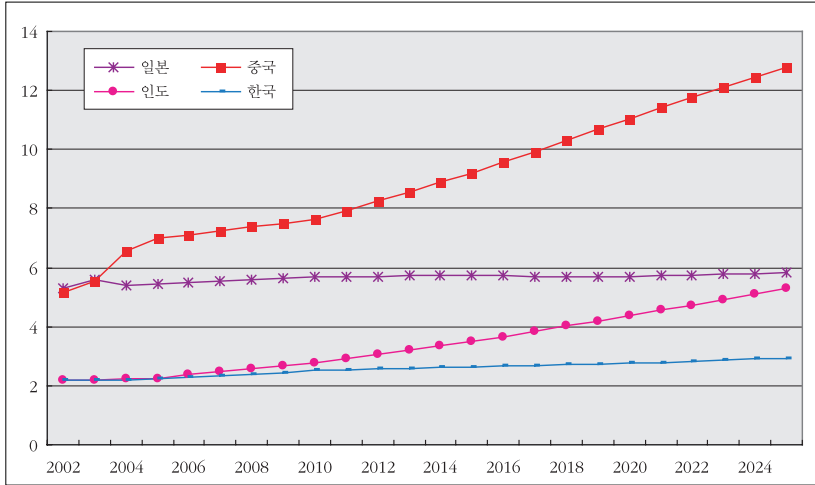
[그림 3]에서 보듯, 산업 및 소비자 수요로 중국 석유 수요는 앞으로도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2005년 중반 휘발유 소매가는 갤런당 1.80달러로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이다.¹¹ 정유공장들은 필요한 투자를 억제하는 가격 통제에 대해 늘 불평한다. 현재 중국인 1인

10. B.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 (2006), <http://www.bp.com/productlanding.do?categoryId=6842&contentId=7021390>.

11. 경제학자들의 비판으로 중국 정부는 2003년 이래 도매 휘발유 가격을 12번 올렸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압박으로 물가 조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제시장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January 15, 2007).

[그림 3] 중국 석유 수요 상승 전망

(단위: 백만 배럴/일)

출처: 미 에너지부, *Annual Energy Outlook*, 2005년판.

당 연간 2배럴의 석유를 소비한다. 반면, 미국의 경우 1인당 28배럴이지만, 중국의 사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해로(海路) 의존의 현실

일본은 근세기 동안 동남아시아 및 중동의 에너지 해로에 의존해 왔다. 중국은 석유 및 가스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중국은 거의 7천만 톤의 원유를 수입했으나 그 중 7%만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철도로 수송되었다. 나머지 93%, 하루 평균 약 200만 배럴은 해로로 수송되었다.

에너지 해로 의존은 일본 내에서 아주 적은 불안감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정치적 동맹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경제적 근거가 된다.¹² 그러나 해로 의존은 중국의 해상에서의 전략적 취약성 때문에 불안감의

원인이 된다. 명백한 정치적·군사적 상황 외에도 중국은 해로 의존에 따른 여러 취약한 부분이 있다. 수입되는 석유의 10%만이 중국 유조선으로 수송되며 나머지는 외국 유조선을 이용한다. 중국 석유 수입량의 80-85%는 가장 좁은 부분이 1.5마일 밖에 안 되는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다. 매일 1100만 배럴의 석유와 400억m³의 천연가스가 통과하는 말라카 해협은 테러리스트의 공격 대상이자 외국 파트너와의 충돌 시 저지 장소가 된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중국은 에너지 의존을 좋아하지 않으며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고 있다. 1950년대 소련 자문들은 중국 석유산업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1960년 중·소 관계 악화로 고문들이 떠나면서 중국에 심각한 에너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중국은 정제된 석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새로운 적인 소련에 의존하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가 지난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몰도바, 벨라루스 등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지정학적 요인으로 사용하면서 중국도 조금은 암전해졌다.

중국의 급성장하는 에너지 수요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을 당장은 피할 수 있겠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미국을 잠재적 위협 요인으로 보고 있다.¹³ 미 해군은 중국 석유 공급의 절반이 통과해야 하는 상하이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이르는 7,000마일의 해로를 장악하고 있다. 중국이 최소한으로 볼 때, 2005년 여름 중국국영석유회사(CNOC)의 우노칼에 대한 입찰 거부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중·미 에너지 상호의존 사안을 긍정적으로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

12. Kent E. Calder, *Pacific Defense: Arms, Energy, and America's Future in Asia* (New York: William Morrow, 1996).

13. Aaron L. Friedberg. "Going Out: China's Pursuit of Natural Resources and Implications for the PRC's Grand Strategy,"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NBR Analysis*, Volume 17, Number 3 (September, 2006), p. 30.

에너지 취약성 감소: 비교 관점에서의 중·일 접근법

개념상의 관점에서 일본과 중국은 향후 에너지 분야의 국제적 압력으로 부터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최소 5개의 전략이 있어야 한다. (1) 에너지 효율성 증대, (2)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원자력, 수력, 천연가스(해로 통상 금지의 가능성이 적음) 등의 자원 다양화; (3) 에너지 공급원의 다양화; (4) 국제 메이저의 의존도 감소 및 자국의 유조선을 통해 수송되는 에너지 수입량의 증가; 그리고 (5) 군사력 개발을 통한 국내 에너지 공급량 보호 등이 있을 수 있다.

양국은 상기 가능한 대안 중 에너지 안보 보장에 대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매우 상이하다. 이점은 에너지에 대한 향후 갈등이 더 세부화된 부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한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해안의 석유 개발, 파이프라인 및 제3국 채굴권에 대한 경쟁 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의 접근법의 차이는 또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는 향후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내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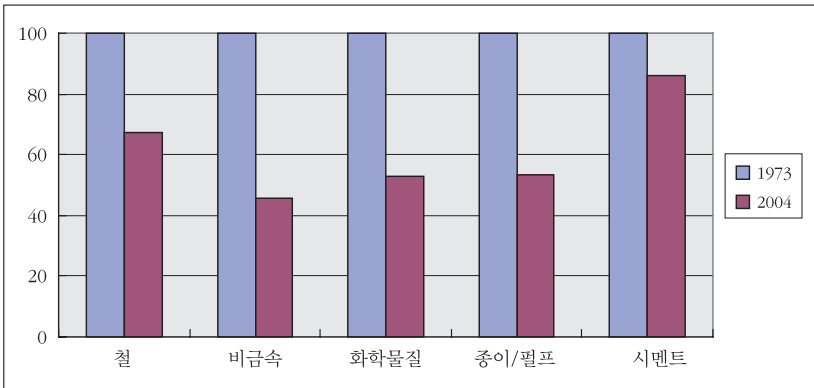
일본은 에너지 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변화를 우선과제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3가지 정책 우선과제가 특히 강조되고 있다. (1) 에너지 효율; (2)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는 대체 에너지의 개발; 그리고 (3) 에너지 집약적 분야에서 지식 집약적 분야로 산업구조의 전환이 그것이다. 해당 분야의 이니셔티브들은 일본으로 하여금 1970년대 중반부터 경제의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효율성 증대 및 10년 이상의 경제 침체로 일본은 국제 에너지 및 원자재 시장에서 과거만큼 공격적으로 경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¹⁴

[그림 4에 나타나듯이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분야간 일본 에너지 효율의 향상은 놀라운 수준이다. 일본 에너지소비 유닛당 산업생산지수(IIIP)는

14. Raymond Vernon, *Two Hungry Giant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the Quest for Oil and Ore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1970년대 수준의 40% 정도 떨어졌다.¹⁵ 예를 들어, 일본은 2004년 비철금속 생산으로 1973년 생산 유닛당 에너지의 45.8%만 소비하였다. 화학물질의 경우 이 비율이 53.1, 종이/펄프 53.6; 철 67.5; 그리고 시멘트는 86.1이었다.¹⁶

[그림 4] 일본의 에너지 효율 개선



비고: 1973년 기준(=100).

출처: 에너지절약센터. 일본 에너지·경제 통계 핸드북, 2006년판, pp. 68-69.

일본의 산업구조는 철 및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 집약적 원료 분야에서 전자제품 등 에너지 소비가 적은 분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은 일본의 총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일본의 非원자재 집약적 산업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원자재 집약적 산업의 두 배나 성장하였다. 두 산업간의 차이는 1975-1985년에 특히 많았으며 이는 당시 산업정책의 결과였다.¹⁷ 그 결과, 1975-2005년 시멘트 및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 집약적

15. Agency for Resources and Energy, Japan's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Energy White Paper* (2006), <http://www.enecho.meti.go.jp/topics/hakusho/2006EnergyHTML/html/i2120000.html>.

16. Energy Conservation Center, *Handbook of Energy and Economic Statistics in Japan* (2006), pp. 68-69.

17. Energy Conservation Center, *Handbook of Energy and Economic Statistics in Japan* (2006), pp. 62-63.

원료 분야의 비중이 33%에서 21%로 감소한 반면, 에너지 소비가 적은 기계 분야는 30%에서 53%로 증가했다.¹⁸

일본은 또한 탄화수소 수입으로부터 벗어나는 대체에너지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였다. 그 중 원자력에 대한 지원이 프랑스, 스웨덴, 러시아, 한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보다 특히 주목을 받았다. 1973년 일본 에너지 공급의 0.6%만이 원자력이었으나 1998년에 13.7%로 비중이 늘었다.¹⁹ 아시아 외환 위기로 인한 경제 불안감, 정치적 갈등, 비규제화 이후 일본정부는 최근 원자력을 재조명하였으며 이를 지원하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외교·경제정책은 상업주의를, 국제경제 사안에 대한 일본의 국가전략은 그에 따른 상당한 효과를 오랫동안 강조해왔다.²⁰ 그러나 에너지 분야에서 놀라운 점은 일본의 국영기업 또는 국가 정책 기업들이 거의 눈에 띄지 않고 국가 지원을 많이 받지 못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나 미국과 비교했을 때, 아베 행정부 이전까지 일본정부는 에너지 외교를 위해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다.²¹

일본과 중국은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접근법이 매우 다르다. 지리적 다양화와 관련하여 일본은 이미 중동 석유에 의존해야 한다는 장기적 시장 논리를 받아들였다. 일본은 페르시아만 산유국,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란에 전체 석유 수입량의 80% 이상을 의존해왔다.²²

18.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Agency for Resources and Energy, *Energy White Paper* (2006), <http://www.enecho.meti.go.jp/topics/hakusho/2006EnergyHTML/html/i2120000.html>.

19. Energy Conservation Center. *Handbook*, p. 36.

20. Chalmers Johnson. *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21. Stephen Krasner, *Defending the National Interest: Raw Materials Investments and US Foreign Poli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8). 2005-2007년에 크라스너는 미국무부 정책계획과장으로 재임했다.

22. 2004년 일본 석유 수입량의 89.5%는 중동에서 수입한 것이었다. 26.2%는 사우디아라비아, 25%는 UAE, 15%는 이란에서 수입했다. *Handbook*, pp. 152-153 참조.

반면, 중국은 중동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통해 2005년 이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45%였으며 이는 일본 의존 비중의 절반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이 일본과 이란의 특별한 관계를 침해하기 위해 미국과 이란간의 지정학적 긴장을 어느 정도 이용한 적은 있으나,²³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이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는 중국과 아프리카 에너지 생산국과의 새로운 관계의 활력소이다. 중국은 2005년 전체 석유 수입의 1/3을 아프리카로부터 얻었다.²⁴ 그러나 아프리카가 일본에 공급하는 양은 매우 적다. 2006-2007년 앙골라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막상막하로 중국의 최대 석유 수입국이었다. 앙골라로부터 수입한 석유의 양은 2005년 700만 톤 이상으로 2002년 수준의 3배 이상이었다.

아프리카와의 심화되는 에너지 상호의존 관계를 비취봤을 때, 중국은 아프리카에 대한 외교를 우선적으로 한 결과, 양국의 에너지 상호의존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2006년 말, 중국 내에서 아프리카-중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48개국 정상이 참가하였다.²⁵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주요 산유국인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에 대한 3차례의 아프리카 순방을 통해 아프리카 에너지 생산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고 있다.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일본이 UN상임이사회 위원이 되는 것에 대한 아프리카의 지지를 얻는 것에 초점을 두어 아프리카 순방시 주요 에너지 생산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중국은 일본보다 국가정책 기업을 더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국영석유회사(CNOC)는 아프리카와 카자흐스탄 시장에 진출하면서 매우 활발한 해외 활동을 하고 있다. CNOC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일본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은 덜 역동적이며, 때로는 이란과의 외교적 마찰로 발전을 더디게 한 경우도 있다. 중국

23. 예를 들어, 중국은 아자데간 유전에 관한 일본과 이란의 협상 당시 중국은 이란에 접근했다. 이란은 일본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중국에 넘기겠다고 협박했으나 이란은 결국 그러지 않았다.

24. *Financial Times* (October 19, 2006).

25. *AFP* (November 5, 2006).

은 명목상 사회주의 국가지만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국제시장에서 CNOC와 같은 공공기업의 힘을 활용하고 있다.

중·일 경쟁의 위기 상황

지난 10년 동안 중·일 에너지 경쟁이 일본 국내의 집약적 에너지 전략 전환으로 놀랍도록 완화되었지만, 향후 격렬해질 확률이 매우 높다. 급속히 늘어나는 중국의 탄화수소 수요와 더 넓은 지리전략적 긴장감이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또 한 원인은 지난 2년간 아베 행정부 하에 윤곽이 뚜렷해진 일본의 에너지 외교다.

최근 가장 극적인 중·일 에너지 경쟁은 동중국해에서 일어났다. 동중국해에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양은 정확하지 않으나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은 175조-210조 ft^3 의 가스를 예측하고 일본은 9450억 배럴의 양질의 석유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²⁶ 이 매장량은 [그림 1]에서 표시된 바와 같이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대체 에너지원이 부족한 중국 동남 해안과 가깝기 때문에 특히나 매력적이다. 동중국해의 가스 매장량은 주거용 연료로써 효율성이 높고 환경적 특성이 좋다는 점 때문에 중국에게 매력적이다.

동중국해의 중·일 에너지 갈등의 정치적 근원은 지리적 위치와 해저 자원 개척에 대한 국제원칙의 최근 변화에 있다. UN해양국제법 하에 한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해당 국가의 대륙붕으로부터 200해리 떨어진 곳이다. 그러나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일본의 가장 넓은 구간은 360해리 밖에 되지 않는다. 중국과 일본은 동중국해상의 EEZ에 대한 설정 기준이 다르다. 일본은 중간선 원칙을 채택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얇은 동중

26. Selig S. Harrison. "Seabed Petroleum in Northeast Asia: Conflict or Cooperation?" in *Seabed Petroleum in Northeast Asia: Conflict or Cooperatio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5), pp. 5-6.

국해의 대륙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²⁷

최근의 갈등은 중국과 일본 영해 중간지점에서 4km 떨어진 춘샤오/시라카바 가스전 때문에 빚어졌다. 중국은 2004년 5월부터 이곳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 작업을 시작했다. 2005년 5월 일본 경제산업부는 일본기업들에게 이 지역에 대한 탐사를 승인하였다. 2005년 9월 일본 총선 전날, 중국 군함이 가스전 근처에 출현했다. 그리고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중국은 일본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중국해 유전으로부터 가스와 석유를 시추하여 대륙으로 공급하였다.

이 갈등의 결과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타협이 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가스와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다. 신조 아베 총리가 이끄는 일본은 2006년 10월 아베 총리의 베이징 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중국과 긴장이 완화된 상징적인 관계를 원하는 것 같다. 그리고 향상된 일본의 군사적 입지를 원하고 있다. 2006년 가을 이래 양국은 고위급 협상을 통해 본 사안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동중국해 상황보다 더 난해한 상황들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는 러시아와의 에너지 관계, 특히 파이프라인 외교다.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석유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2004년 러시아는 중국의 5대 석유 수입국이었다. 그러나 일본 또한 세계 가스 매장량의 1/3을 차지하는 러시아의 가스 매장량과 석유 매장량에 대한 열망이 높다.

2003년과 2005년 사이 양국은 바이칼호수 북동쪽으로 있는 앙가르스크 유전을 잇는 파이프라인을 두고 지독한 로비전을 벌였다. 2004년에만 해도 러시아는 중국보다 일본을 선호하는 듯 하였으나, 2005년 4월 파이프라인의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일본의 120억 달러 제안을 거절하고²⁸ 규모

27. On the technical details of this conflict, see Selig Harrison, *Seabed Petroleum in Northeast Asia: Conflict or Cooperation*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2005).

28. *Kyodo News*, May 19, 2005 and April 27, 2005.

가 더 적은 중국의 제안을 택했다. 그리고 10년 넘게 지속된 일본과의 제한적 영토거래를 선호하며 기존의 입장을 철회했다. 그러나 가능한 많은 아시아 고객을 보유하고 싶었던 러시아는 결국 4,188km로 예상되는 파이프라인의 중간 지점인 스코보로디노(러시아-중국 국경과 근접)에서 지선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2천만 톤의 석유를 중국으로 보내고 1천만 톤은 철도로 태평양 연안까지 수송하여 일본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합의하에 2006년 4월 공사에 착공하였다.²⁹

러시아는 또 2006년에 미쓰비시와 미쓰이로 하여금 사할린 II LNG 사업에 대한 불리한 재협상을 하도록 강요했다. 러시아는 명목적으로 환경에 대한 우려와 일본의 에너지 추구에 있어 영향을 미칠 중국의 에너지 우려를 무기로 사용했다.

이란 또한 중·일 에너지 관계에 있어 잠재적인 위험요소다. 일본과 중국 양국은 2003-2005년 이란에서 각자 대형 유전 개발권을 받았다. 일본은 아자데간에 대한 채굴권을, 중국은 아다라반에 대한 채굴권을 얻었다.³⁰ 그러나 이란인들은 계속되는 핵위기 상황 속에서 일본과 중국이 서로 경쟁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갖고 있다. 중국은 이란과 강력한 지정학적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일본은 미·일 동맹으로 이란과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여 이는 일본의 에너지 추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중·일 관계와 심지어 미·일 관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일 에너지 관계의 핵심 사안은 페르시아만에서 이 두 아시아 거인의 역할이다. 일본은 현재 상당한 차이로 페르시아만 석유의 최대 고객이지만 중국 수요의 급성장은 상황을 바꿀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현재의 몇 배로 증가하고 중동 내의 미국 활동의 변화도 있겠지만, 일본과 중국이 페르시아만에서의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

29. *Kyodo News*, April 28, 2006.

30. 2004년 10월, 중국의 3대 석유회사인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은 이란과 아다라반 유전을 개발하고 2억5천만 톤의 LNG를 구매할 수 있는 700억 달러의 30년 계약을 체결하였다.

것인가는 2007년 4월 아베 신조 총리가 중동을 방문했을 때 일본 정책입안자들이 분명 염두에 두고 있었을 질문이다. 이란 내의 상황과 2004-2007년 걸프만연안국협력위원회(GCC) FTA를 체결하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경쟁을 볼 때 이미 중국과 일본간의 경쟁은 시작되었다.³¹

협력에 대한 전망: 너무 적고 너무 늦었나?

앞으로의 중·일 에너지 관계에는 분명 더 많은 경쟁의 소지가 있다. 특히 러시아와 중동에서 그러하다. 중·일 경쟁은 동중국해의 갈등 요소, 지역 분쟁, 대만 사태 등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 1970년대와 80년대 일본의 성공을 바탕으로 재개된 협력 벤처를 통해 중국이 모방할 만한 행동 및 방법 등을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

1970년대와 80년대와는 다르지만 여전히 중요한 협력의 재개는 특히 미국이 지지하고 있다면 보기에 좋아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에너지 절약 기술과 논쟁이 되고 있는 동중국해 유전에 대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아베 정부는 자국의 정치적·외교적 이유 때문에 중국으로 가는 비군사적 지대에 다리를 필사적으로 놓으려고 한다.

에너지 절약 외에도 청정에너지 기술도 전망 있는 협력 분야다.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에너지 소비의 70%는 석탄이며 이로 인해 일본에는 산성비가 내린다. 이런 잔인한 현실 때문에 양국은 1992년부터 METI의 '녹색원조계획'을 통해 청정 석탄기술에 관해 협력하고 있다. 2003년에 일본과 중국은 합작회사인 Fushun Hubo Clean Coal Co., Ltd.를 설립하여 요령성의 푸순市에서 청정 석탄을 생산하고 있다.³²

31. 중국은 2004년 GCC와 협상을 시작했고 일본은 2006년에 개시했다. 중국과 일본 양국은 2007년 안에 GCC와의 협상을 마무리 짓길 기대했다. *Financial Times*, September 8, 2006 and January 18, 2007.

32. *Sinocast China Business Daily News*, October 13, 2003.

2007년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개회사에서 원자바오 총리는 일본과 협력 가능한 에너지 및 환경 사안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³³ 원 총리는 빠른 경제성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지만, 에너지 및 환경 문제로 성장이 큰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고 주의했다. 중국의 현재 5개년 계획은 GDP 유닛당 20%의 에너지 소비 감소를 요하고 있다. 그러나 총리는 계획의 첫 해에 이 목표를 이루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 절약과 오염물질 방출 수준을 낮추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협력의 또 다른 분야는 원자력이다. 중국은 2006년에 현재의 8,700MW에서 2020년까지 40,000MW의 원자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원전 건설에 속도를 가하겠다고 발표했다.³⁴ 같은 해, 일본은 전체 전력 생산의 원자력 비중을 2004년의 29%에서 2030년에는 30-4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내에서 민간 원자력 개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에너지 협력의 주요 분야라고 강조했다.³⁵

이제 남은 질문은 두 아시아 거인간의 지리전략적 긴장과 불신이 너무도 커져서 과연 국제적으로 이익이 될 실용적 협력 관계가 정치적으로 가능한가를 묻는 것이다. 미국은 주요 태평양 동맹국인 일본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동북아시아의 정치·경제적 안정화를 위한 노력 차원에서 중·일 그리고 미·중·일의 에너지 협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³⁶

33. See *New York Times*, March 5, 2007.

34. *AFP* (March 2006).

35. 그 외 협력 분야로 에너지 절약, 청정 석탄 기술, 대체 에너지, 에너지 저장 등이 있었다. 자원·에너지기구 참고. “신국가에너지전략 다이제스트,” 2006. [온라인 자료 제공 <http://www.enecho.meti.go.jp/english/index.htm>].

36. 2006년 12월 베이징에너지장관회를 통해 일본, 중국, 한국, 인도, 미국의 에너지장관들은 이 방향으로 긍정적인 발전을 했다. 에너지 안보, 안정, 지속가능성, 청정석탄 및 원자력 기술에 대한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내용은 『신화신문』(2006년 12월 18일) 참조.

제8장

동북아시아의 지역 FTA 전망

동북아시아에서의 FTA 확산이 동북아시아 FTA 지대로 이어질 것인가?

동북아시아 FTA의 장애물과 변수

동북아시아 FTA와 지역화 문제: 비판적 조망

동북아시아에서의 FTA 확산이 동북아시아 FTA 지대로 이어질 것인가?

이창재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다른 주요 경제 지역과 상당히 다르다. 동북아시아 국가 사이에는 양자FTA나 역내FTA도 없다. 반면, 지역무역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경제 통합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은 뒤늦게 세계적인 FTA 대열에 올라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단시간에 여러 개의 양자 FTA를 체결하였다. 이들은 또한 동아시아 전 지역에 걸친 FTA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글은 동북아시아 교역과 관련하여 기능적 경제 통합의 경향을 분석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FTA 체결 및 확산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FTA 확산이 역내 국가간 양자FTA와 더 나아가 전 지역 FTA로 이어질 것 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동북아시아 내의 FTA 확산은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FTA 체결과 중-일-한 FTA 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최근에 체결된 한미 FTA, 협상 중인 한-EU FTA와 EAFTA를 특별히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

I. 서론

동북아시아의 지역주의는 다른 주요 경제 지역과 상당히 다르다. 지역주의는 1950년대 유럽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1/5을 차지하는 동북아시아의 어떤 국가도 2001년에 최초의 FTA를 체결할 때까지 지역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전히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FTA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FTA조차 없다. 반면, 지역 무역협정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능적 경제 통합은 상당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은 뒤늦게 세계적인 FTA 대열에 올라섰다. 일본은 2002년 발표된 일본-싱가포르 신시대경제연대협정(JSEPA)을 체결함으로써 FTA를 체결한 최초의 동북아시아 국가가 되었다. 그 후, 세 국가는 단기간 안에 많은 양자 FTA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경제연대협정(EPA)을 맺었고, 한국은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¹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ASEAN(태국 제외)과 상품교역협정을 조인했다. 중국은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하고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홍콩 및 마카오와 맺었다. 또한 이 국가들과 FTA 협상도 진행 중에 있다. 게다가 모두가 동아시아지역 FTA 구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첫째, 우선 본 글은 동북아시아 교역과 관련한 기능적 경제 통합의 경향을 분석한 후 주요 경제 지역과 비교한다. 둘째,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최근 FTA 출현과 확산을 검토해 본다. 셋째, 한·중·일의 FTA 확산을 도모하는 주요 요인에 대해 살펴봄에 동북아시아 국가간 FTA 부존의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FTA 확산이 역내 국가간 양자FTA와 더 나아가 전 지역 FTA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II. 동북아시아의 기능적 경제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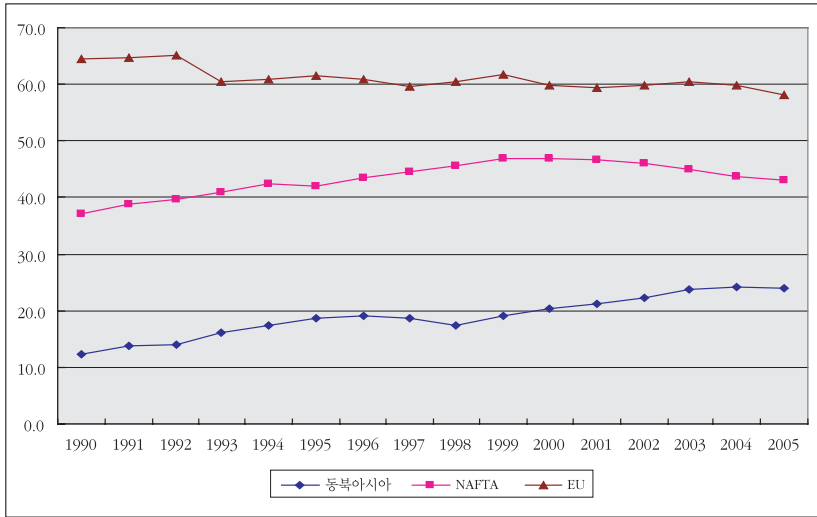
중국, 일본, 한국간의 역내무역의 중요성은 1990년 이후 상당히 높아졌다. 세 국가간의 역내무역은 1990년 12.7%에서 2005년 23.9%로 증가했다. 무역 비중은 아시아외환위기(1997-98년)를 제외하고 1990년과 2004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에 약간 떨어졌다.

그 결과 동북아시아 세 국가의 역내무역 비중과 EU² 및 NAFTA의 비중

1. EFTA는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로 구성되어 있다.

2. EU-15.

[그림 1] 동북아시아, NAFTA, EU의 역내무역 비중



출처: 부록 [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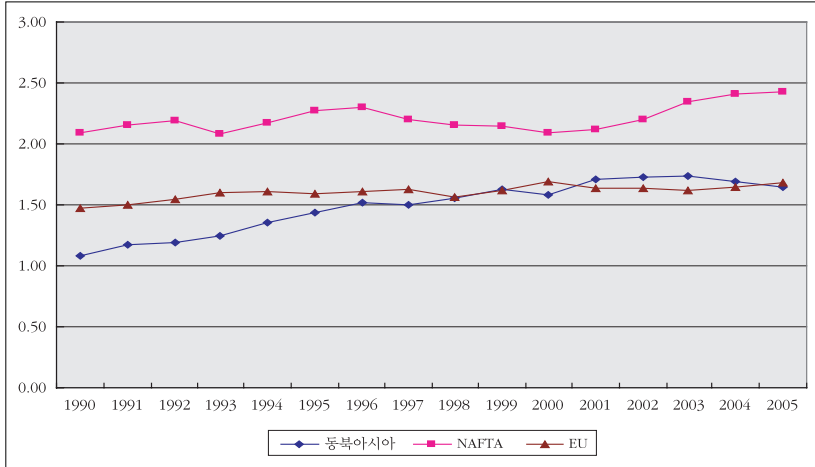
의 격차는 1990-2005년에 크게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EU 및 NAFTA의 무역 수준인 58.2%와 43.0%보다 훨씬 낮았다.

그러나, 더 큰 집단일수록 역내무역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역내무역의 비중은 지역 무역 집중도를 측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더 나은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세계무역에 대한 지역의 비중으로 역내무역 비중을 조정하고 단순 역내무역 집중비율(simple intra-regional trade concentration ratio)을 계산한다. [그림 2]는 한·중·일, EU, NAFTA의 단순역내무역집중비율의 추세를 나타낸다. 1990-2005년 한·중·일의 역내무역집중비율은 1.13에서 1.64로 증가했다. 결과를 비교했을 때 아시아 3국의 비율은 NAFTA보다 눈에 띄게 낮았지만 2001-2004년에는 EU보다 높았다.

그림을 보면 1990-2005년에 아시아 3국의 기능적 경제 통합이 무역 측면에서 강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지역적 무역 협정이 없어도 3국간의 역내무역 집중도가 1996년 이후 EU와 유사하다.

중국, 일본, 한국의 역내 무역 의존의 증가는 각국의 주요 무역국 순위

[그림 2] 동북아시아, NAFTA, EU의 단순역내무역집중비율



출처: 부록 [표 1].

에도 반영된다.³ 일본과 한국은 2005년 중국의 2대 및 4대 무역국이었다.⁴ 일본의 경우 중국과 한국은 2대 그리고 3대 무역국이었으며,⁵ 1위는 미국이었다. 반면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1대 그리고 2대 무역국이다.⁶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중국은 한국의 1대 무역국, 그리고 일본의 2대 무역국으로 부상하였다.⁷

3. Comtrade Database.

4. 2005년 일본과 한국은 중국의 3대 그리고 4대 수출국이었으며, 1대 그리고 2대 수입국이었다.

5. 2005년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2대 그리고 3대 수출국이었으며, 1대 그리고 6대 수입국이었다.

6. 2005년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1대 그리고 3대 수출국이었으며, 2대 그리고 1대 수입국이었다.

7. 1994-2004년 중·일 교역과 미·일 교역의 평균 성장률이 각각 13.8% 그리고 0.6%였다는 점과 2004년 교역규모가 각각 1,683억 US달러 그리고 1,924억 US달러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가까운 미래에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 될 것이다. 실제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은 2004년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었다(2,053억 US달러).

III. 동북아시아 FTA의 확산

지역주의의 세계적인 확산과 더불어 동아시아는 아시아외환위기 때문에 경제 지역주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에 경제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었다. 제1차 ASEAN+3(중국, 일본, 한국) 정상회의가 1997년 12월 칼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후 매년 지속되고 있다. 정상회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ASEAN+3 장관회의 및 고위급회의도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다. 이 ASEAN+3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동북아시아 3국의 지도자간 대화 채널이 최초로 생기게 되었다.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는 3개국 지도자들이 최초로 만난 역사적인 회의였다. 그 후로 이 3자간 지도자 회의는 연례적인 행사가 되었다.⁸

2000년대 초반에 일본, 한국, 중국이 뒤늦게 FTA 대열에 합류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신시대경제연대협정(JSEPA)을 체결했고 이는 2002년 11월 30일에 발효되었다. 한국은 2003년 2월 칠레와 FTA를 체결하여 2004년 4월 1일에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중국은 2003년에 홍콩 및 마카오와 경제협력강화협정(CEPA)을 체결했고 모두 2003년 7월에 발효되었다. 또한 중국-ASEAN 특혜무역협정은 2003년 7월에 발효되었다.⁹ 이후 동북아시아 3국은 여러 차례의 FTA를 체결하였다. 일본은 멕시코,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과 EPA를 체결하고, 한국은 싱가포르, EFTA, 미국과 FTA를 체결하고 ASEAN(태국 제외)과 상품교역협정을 맺었다. 중국은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FTA를 체결한 바 있다.

게다가 현재 많은 FTA가 협상 중에 있거나 연구 단계에 있다.¹⁰ 일본은 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ASEAN, 칠레, GCC¹¹와 협상에 있다. 한국은

8. Lee (2003). 2006년에는 3국간의 정치적 긴장으로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9. 2004년 12월 허용조항(Enabling Clause) 하에 WTO에 보고되었다.

10. 수 많은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공식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FTA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

11. GCC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UAE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 캐나다, 멕시코, 인도, EU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은 호주, 뉴질랜드, GCC, 싱가포르와 협상 중에 있다. 그 중, 다음의 FTA는 특별히 주목해야 한다. 한·일 FTA 협상은 2003년 12월에 개시되었으나 2004년 11월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고, 한국과 중국은 2007년 3월 한·중 FTA에 관한 공식 3자 공동연구를 출범시켰으며, 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 서울에서 시작되었다.

이 와중에 동아시아 FTA(EAFTA)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었다. 동아시아 비전그룹(EAVG)은 2001년 10월 31일 ASEAN+3 지도자들에게 제출된 보고서에 '동아시아 자유무역 지역'에 대한 제안이 들어있다. 이어 동아시아 스터디그룹(EASG)도 2002년 11월 4일 EAFTA에 대한 제안을 했다.

그러나 2004년 11월 29일 비엔티엔에서 개최된 제8차 ASEAN+3 정상회의 전까지 본격적인 노력은 없었다. 본 회의에서 ASEAN+3 경제장관들은 이 제안을 환영하는 의미에서 EA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였다. 네 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EAFTA 타당성 조사를 위한 공동전문가그룹은 2006년 8월 23일에 열린 ASEAN+3 경제장관회의에 'EAFTA를 향해: 양상과 로드맵'이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안타깝게도 경제장관들은 2006년 제10차 ASEAN+3 정상회의 때 EAFTA를 경제협력어젠다에 올리지 못 했다. 한국의 제안으로 EAFTA 스터디 단계2의 첫 회의가 2007년 5월 31일 서울에서 열렸다. 그리고 ASEAN+3 국가와 인도, 호주, 뉴질랜드를 포함한 첫 CEPEA 스터디 그룹 회의가 2007년 6월 15-16일 개최될 계획이다.

IV. 동북아시아 FTA의 동기

동북아시아 FTA의 열풍 뒤에는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지역주의와 아시아 외환위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동북아시아 내에 FTA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FTA의 혜택은 잘 알려져 있다. 무역장

벽에 대한 상호 양보를 통해 해당 국가는 더 넓은 시장 접근과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또한 통합된 시장을 통해 기업들은 경쟁이 더 심화된 환경에서 활동하게 되어, 결국 경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경제적 혜택과 더불어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일부 국가는 국내 개혁정책을 고정시키기 위해 지역 무역협정에 참여한다. 또 다른 목적은 국제 무대의 회원들의 협상능력을 올리는 것이다. 지역 경제 통합 내에서 전략적 동기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유럽 통합의 주요 동기는 유럽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었다. 이 목표를 이루는데 경제 협력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치적 역할에 기반을 둔 볼드윈(Baldwin)의 지역주의에 관한 도미노 이론도 동기가 될 수 있다.¹²

일본, 한국, 중국의 초기 FTA 활동은 '나도' 지역주의로 특징지을 수 있다.¹³ 이들 국가들은 지역주의의 세계 추세에 뒤처지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북아시아 국가간 FTA 확산의 동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오늘날의 FTA 체결은 복합적인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요인을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최근의 FTA는 지정학적 요인을 바탕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FTA가 그러하다.¹⁴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99년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의 개도국경제연구소(IDE)에 한·일 FTA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는 한·일 FTA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지 못 했다. 이후 2001년에 중국은 ASEAN-중국 FTA의 구상을 제안하여 2002년 ASEAN과 전면적 경제협력 기본협정을 체결하였다.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중국의 갑작스런 관심으로 많은 사람과 국가가 놀랐으며 새로운

12. Lee (2004); Baldwin (1999).

13. Jeffrey J. Schott and Ben Goodrich (2004).

14. 세계은행 인쇄물에 의하면 1990년대 무역블록 확산의 주요 요인은 다양한 정치적 세력 때문이었다고 한다(World Bank, 2000).

발전 사항들이 중국에 나타났다. 우선, 중국의 행동으로 일본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며 한·일 FTA 절차에 박차를 가해 2003년 12월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다.¹⁵ 반면, 한국은 2004년 12월에 싱가포르와, 그리고 2005년 2월에 아세안과 각각 FTA 협상을 개시했다.

한·일 FTA 협상 이후의 사건들은 국제정치의 역학을 기반으로 하는 ‘신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실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일종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양국은 이웃 국가와 FTA를 맺는 이 경기에서 행여나 뒤처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최근에 기존의 EAFTA 공동 전문 그룹 스터디(중국이 처음 제안했음)를 두고 CEPEA에 관한 스터디 그룹을 출범시키고자 한 시도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V. 동북아시아 FTA에 대한 FTA 확산의 여파 및 전 지역 FTA의 전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동북아시아 FTA의 확산,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와 동남아시아 국가간의 FTA는 특히 정치적 동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간 FTA의 부재는 경제적 논리의 우위에 있는 비경제적 동기로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한·중·일 FTA의 장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중국과 일본의 경쟁, 다른 정치 체제, 과거사, 공동체 의식의 결여 등 비정치적 요인이다. 위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 3국의 교역 의존성은 지난 15년 동안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3국간의 FTA는 맺고 있지 않다. 특히, 중국과 일본간의 FTA 체결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점에서 최근의 발전상을 볼 때, 동북아시아 국가간의 FTA, 심지어 한·중·일 FTA가 형성될 수 있는 긍정

15. Lee (2004).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 최근에 체결된 한·미 FTA가 비준 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FTA는 여럿 있었지만, 주요 경제간의 양자 FTA는 이것이 처음이다. 비준이 되면 한·미 FTA는 세계 제1위 경제와 제11위 경제간의 FTA로 현재 발효 중인 최대의 양자 FTA가 될 것이다.

한·미 FTA는 여러 방법으로 한국과 동북아시아 국가간 FTA 추진에 활기를 띄게 할 것이다. 한·미 FTA는 한국을 중국 및 일본에게 더욱 매력적인 FTA 파트너로 만드는 한편, 한국정부는 다른 주요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용이해졌고 이는 결국 한국의 매력을 높이는 것이다. 게다가, 앞서 말한 것처럼, 한국은 EU와 FTA를 시작하여 2008년에 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가 유익한 것처럼 EU와의 FTA는 한·일 FTA 한·중 FTA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향후 더 많은 FTA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¹⁶

따라서, 한·미 FTA와 한·EU FTA는 다음의 방법으로 간접적으로 한·중·일 FTA의 형성을 가져올 것이다. 첫째, 만약 한·일 FTA와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한·중·일 FTA 체결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 것이다. 둘째, 한·미 FTA 및 한·EU FTA가 수립된 후 미국 또는 EU가 한·중·일 FTA를 무역 블록으로 여길 확률이 낮다. 셋째, 한·미 FTA는 한·중·일 FTA의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주요 군사 동맹국인 미국은 한·중·일 FTA에 대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나 한·미 FTA 체결로 이러한 우려는 완화시킬 수도 있다.

16. 한·중·일 FTA의 분야별 영향에 관한 3자 공동연구에 의하면(2004), 주요 경제 파트너간의 지역무역협정은 추가 FTA를 가져올 확률이 높으며 이는 무역전환에 의한 손실을 최소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중·일 FTA 하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한국과 일본에 압력을 넣을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비회원국에 대해 농산물 관세를 내리는 것이 이득이 될 것이다. 이 같은 논리는 중국의 자동차 분야에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EU와 미국 등의 주요 자동차 생산국이 반드시 해당된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핵심 요인들이 관계된 한·미 FTA와 한·EU FTA는 분명 동북아시아 국가와의 추가 FTA를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한·중·일 FTA의 가장 큰 영향은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커져가는 전 지역적 FTA에 대한 관심이다. 주요 동북아시아 국가가 없는 동아시아 FTA는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아시아 FTA는 중국, 일본, 한 국간에 사실상 FTA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한·중·일 FTA는 동 아시아 전 지역의 FTA의 체결을 촉진할 것이다.

부록 [표 1] 동북아시아, NAFTA, EU의 역내교역 비중 및 단순집중비율

	중국·일본·한국		NAFTA		EU	
	비중 ¹	집중비율 ²	비중 ¹	집중비율 ²	비중 ¹	집중비율 ²
1990	12.7	1.13	37.2	2.09	64.5	1.47
1991	13.9	1.18	38.9	2.16	64.7	1.50
1992	14.1	1.20	39.7	2.19	65.2	1.55
1993	16.1	1.25	41	2.08	60.5	1.60
1994	17.5	1.35	42.4	2.17	60.9	1.61
1995	18.6	1.43	42	2.28	61.6	1.59
1996	19.0	1.52	43.5	2.30	60.8	1.61
1997	18.6	1.50	44.5	2.20	59.6	1.62
1998	17.4	1.56	45.7	2.16	60.5	1.56
1999	19.2	1.63	46.8	2.15	61.8	1.62
2000	20.3	1.58	46.9	2.10	59.8	1.70
2001	21.8	1.81	46.6	2.12	59.4	1.64
2002	22.4	1.73	46.1	2.20	59.9	1.64
2003	23.7	1.74	44.9	2.35	60.6	1.62
2004	24.1	1.69	43.7	2.42	59.9	1.63
2005	23.9	1.64	43.0	2.4.3	58.2	1.68

주: 1. 역내무역의 비중.

2. 역내무역의 단순집중비율(simple concentration ratio).

출처: IMF, 2007. 무역 통계의 방향.

참고문헌

- Baldwin, Richard. 1999. "A Domino Theory of Regionalism." *Trading Blocs: Alternative Approaches to Analyzing Preferential Trade Arrangements*. Ed. Bhagwati, Jagdish, Pravin Krishna, and Arvind Panagariya. Cambridge: MIT Press. 479-502.
- Cho, Hyun-jun. 2004. "China's Political-Economic Approach toward FTAs with East Asian Nation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Studies*. (8)1: 35-57.
- Comtrade Database.
- Development Research Center of China,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of Japan and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04. *Joint Report and Policy Recommendations on Sectoral Implications of a China-Japan-Korea FTA*. <http://www.nira.go.jp/newse/paper/joint4/report.html>
- Fukagawa, Yukiko. 2004. "Post-crisis regionalism in East Asia and Strategic Significance of Japan-Korea FTA." Position Paper for Asian Network of Economic Policy Research (ANEPR): Asia in Search for a New Order.
- Hai, Wen and Hongxia Li. 2003. "China's FTA Policy and Practic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Northeast Asian FTA*. Ed. Kim, Yangseon and Chang Jae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8-156.
- IMF. 2005.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 Lee, Chang Jae. 2002. "East Asian Economic Regionalism and the Role of South Korea." Paper presented at the Korea Conference on "Korea as a 21st Century Power," at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n April 2002.
- _____. 2003. "Towards a Northeast Asian Economic Community: A Korean Perspective." *Northeast Asian Economic Integration: Prospects for a*

- Northeast Asian FTA*. Ed. Kim, Yangseon and Chang Jae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64-284.
- _____. 2004. "Rationale for Enhancing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and Some Possible Options."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d. Kim, Yoon Hyung and Chang Jae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1
- Shott, Jeffrey J. and Ben Goodrich. 2004. "Reflections on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d. Kim, Yoon Hyung and Chang Jae Lee.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3-63.
- Urata, Shujiro. 2004. "The Shift from 'Market-led' to 'Institution-le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in East Asia in the late 1990s." *RIETI Discussion Paper Series*. 04-E-012
- World Bank. 2000. *Trade Blocs: A World Bank Policy Research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동북아시아 FTA의 장애물과 변수

후카가와 유키코
(FUKAGAWA Yukiko)

2008년 즈음에는 1차 ASEAN+3(일본, 중국, 한국) 협상이 ASEAN+1의 3개 세트로 경쟁할 예정이다. 각국의 정책입안자는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을 바탕으로 2차 협상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많은 선전에도 불구하고, 중국 FTA는 결국 시행이 불확실해졌으며, 태국은 한국과의 협상에서 물러났다. 일본은 자국의 농업분야에 대한 보호주의로 빛을 발하지 못 했다. 한·일 협상도 실패하여 한국은 미국이나 EU를 향해 방향을 전환했고 일본 역시 호주와 인도로 눈을 돌렸다. 중국의 FTA는 국제 차원의 에너지/자원 안보에 의해 위협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진정한 자유화의 내생적 장애물과 구심력을 유지하는데 정치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지역의 매우 독특한 생산 네트워크와 복잡한 분업은 성장의 진정한 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국가들이 협상하는 FTA 패키지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한·중·일 사이에서는 비효과적일 수도 있다. 생산 네트워크의 서비스 연계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능적 협력은 재정 및 물류 요인 등의 제약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표준화와 상호인정협정(MRA)은 기능적 협력의 전략적 목표가 될 수 있다. 기능적 협력은 APEC에서도 추진된 바 있으나 FTA를 보완하는 전략적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왜냐 하면 FTA 협상은 통합의 진정한 힘인 시장 진전에 있기 때문이다.

서론

외환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주의의 후발주자로 서둘러 FTA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난 지금, 각 FTA는 특정 형태를 이루거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초기의 ASEAN+3(일본,

중국, 한국)의 프레임워크 조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 프레임워크를 수립한 일본은 +3(+3(호주, 뉴질랜드, 인도)로 전환했고, 중국은 세계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과 협상하기에 급급하다. 한국은 그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최근의 한·미 FTA는 이 지역의 원심력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 흥미롭게도 이런 진전 상황은 전통적으로 유일한 프레임워크인 APEC의 '개방 지역주의'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WTO 체제에서 FTA가 예외로 존재하는 동안, FTA를 통한 통합은 단순히 APEC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APEC의 원칙은 '자발적 자유화'였다.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를 구성한 후, ASEAN은 중국, 한국, 일본(ASEAN+1)과 협상을 했다. ASEAN+3의 역내무역 비중은 약 55%로 이는 NAFTA보다 훨씬 높고 EU15의 2005년도 수준과 비슷하다. 이는 +1 FTA에 의해 더욱 높아질 것이며 ASEAN은 현재 특정 산업의 인적 자원의 이동, 물류, 상호인정협정을 통해 '심화된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전통적인 FTA 이상의 기능적 협력이 있어야 전환을 이룰 수 있다. 일본은 이와 같은 경향을 환영하는 뜻에서 2007년 5월 중국과의 심화된 경제관계를 겨냥한 '아시아 게이트웨이'를 발표하였다.

무역자유화는 FTA의 핵심이지만, 이 지역의 독특한 시장과 외국직접투자(FDI)에 의한 통합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기능적 접근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적인 FTA 정치는 피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글은 협력을 위한 어젠다를 살펴보고 기능주의를 찾아낼 것이다. 첫 부분은 동아시아 통합의 제약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이후 시장 중심의 메커니즘에 대해 다룬다. 마지막 부분은 FTA 추진을 위한 협력 어젠다에 대해 논한다. 이는 +3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I. 동아시아 FTA의 구조적 제약

2000년 즈음에 수 많은 FTA 협상이 동아시아에서 진행되었다. 무수한 다양성을 감안할 때, 각 FTA의 제도적 통합은 처음부터 쉬울 것이라 여겨진 적은 없으나 그 동안 여러 제약이 나타났다. 초반에 동아시아 국가들은 외환위기의 아픈 기억을 바탕으로 지역주의에 대한 결의를 다졌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의지는 외환보유고 누적에 대한 만족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APEC이 진정한 지역주의를 이루는데 저지했던 제약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우선, EU와 NAFTA에는 프랑스와 독일 또는 미국과 같은 핵심 경제가 존재하여 지배적인 시장 규모와 정치적 의지를 바탕으로 프레임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일·중 관계가 여전히 정치적으로 미숙하며 제한적 경제관계 관점에서도 일본이 중국을 당장 완전한 시장 경제로 인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¹ 그러나 중국이 FTA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점이 사실상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일본은 최근에 FTA 협상 명단에서 호주와 인도를 중국 위에 두면서 미국의 FTAAT(아시아태평양 FTA) 제안보다 소위 +3+3을 내세우고 있다. 불안정한 일·중 관계는 비 '자연적 회원', 즉 미국이 끼어 들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소규모 경제를 디딤돌로 삼고 있다. 태국과 말레이시도 미국에 접근할 때 일본과 중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였지만 한·미 FTA는 일반적이면서도 매우 극단적인 경우다.

상대방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FTA는 수준 높은 제도적, 체계적,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추구하기 때문에 협상시 자원에 최대한으로 집중하여 자동적으로 다른 우선순위는 밀려나게 된다. 또한 경제의 규모 때문에 미국과의 FTA는 다른 작은 경제에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친다. 세계 최대 시장에 대한 접근에 차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1. 현재의 WTO 프레임워크는 반덤핑 주장이 나올 때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 체제의 차이를 고려한다.

해외직접투자(FDI) 및 기타 자본 흐름을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FTA는 다른 국가와의 경쟁을 부추겨 결국 미국의 허브-앤-스포크(hub-and-scope) 전략이 가능해지도록 한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한·미 FTA는 일본이 아닌 ASEAN 또는 중국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한국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미국 진출은 지역주의에 대한 분산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표 1] 한·미 FTA의 영향(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거시적(Macro)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캐나다
GDP(%)	-0.14	-0.10	-0.21	-0.14	-0.18
수출(백 만 \$)	-0.18	-0.06	-0.16	-0.23	-0.16
수입(백 만 \$)	-0.17	-0.10	-0.16	-0.24	-0.18
생산(백 만 \$)					
Grain	-39.46	21.13	-0.74	-32.59	8.71
채소/과일	-24.60	-9.73	-21.23	-18.58	12.39
기타	-23.85	-15.21	-25.95	-71.74	-12.18
육류	-14.29	-3.73	-35.39	-73.86	-11.81
식품	-119.63	-66.49	-141.80	-128.47	-46.56
제조업	-83.78	-334.52	-459.88	166.58	-585.27
총계	-781.12	-867.36	-1241.70	-1031.71	-1237.45

둘째, 이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듯, 동아시아의 FTA는 내용, 범위 및 규정이 모두 상이하여 장애가 발생할 위험을 안고 있다. [표 2]와 같이, 일본, 한국, 싱가포르는 '포괄적 FTA'를 채택하고 있지만, 권리 개선²을 기반으로 하는 중·아세안 FTA는 재화 교역, 무역원활화에만 초점을 두며 서비스 및 외국직접투자에 대한 협정 체결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 한국은 성숙한 국가들과 '높은 기준의 FTA'에 대해 협상하면서 아세안과는 전혀

2. 예를 들어, ASEAN과 중국은 특정 항목이 상대방에 의해 '민감' 또는 '초민감'한 것으로 지정되면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측은 관세 절감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무역 자유화는 발표된 것보다 천천히 이루어질 것이다.

[표 2] 동아시아의 여러 FTA

	재화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상호인정 협정	경쟁정책 조율	분쟁 조정	무역 원활화	노동	교통
일본·싱가포르	○	○	○	○	○	○	○	○	○	×
일본·멕시코	○	○	○	○	○	○	○	○	○	×
한국·칠레	○	○	○	○	○	○	○	○	○	×
한국·싱가포르	○	○	○	○	○	○	○	○	○	×
한국·미국	○	○	○	○	○	○	○	○	○	○
싱가포르·미국	○	○	○	○	○	○	○	○	○	○
태국·호주	○	○	○	○	○	○	○	○	○	×
AFTA	○	○	○	×	○	×	×	○	×	○
중국·아세안	○	△	△	×	×	×	×	○	×	×
NAFTA	○	○	○	○	○	○	○	○	○	×
EU·칠레	○	○	○	○	○	○	○	○	×	○*
EU·지중해	○	×	×	○	×	○*	○	×	×	×
MERCOSUR	○	○	○	×	○	○	○	○		○

출처: 세계경제전망 2005: 무역, 지역주의 및 개발, World Bank.

주: *향후 협상이 예상된다.

다른 기준으로 FTA 협상을 하고 있다. 얼마 동안은 중·아세안 FTA 수준과 비슷했다. 그러나 이런 점은 ASEAN-10에 WTO 체제 속의 경험이 적은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가 포함될 때 불가피하게 직면하는 상황이다.

동아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ROO)이 가져올 다양한 FTA의 잠재적 비용을 가리켜 ‘스파게티볼 효과’ 또는 ‘누들볼 효과’라 부른다. FTA가 특혜협정인 이상, 협상 당사자들은 국내 사업을 우회적 수입 또는 외부 무임승차자들로부터 보호하려고 있다. 과거 FTA의 경험에 의하면 엄격한 규정에 대한 대가로 기업들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된다. 그 결과, 기업들은 무역 및 외국직접투자 전략에서 이탈하거나 최혜국 관세를 이용하려고 할 것이다. Kruger(1999)가 지적한 강력한 원산지 규정의 보호주의적 영향은 경쟁 방해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이미 여러 원산지 규정이 존재한다. 권리 지향적인 FTA가 원산지 규정에 대해 관대할 수 있으나 성숙한 경제들은 이를 오히려 복잡하게 만든다. AFTA에서 원산지 규정은 완전누적규정(full accumulation)을 갖춘 부가가치(value content)의 40%를 기준으로 하며 중·아세안 FTA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호주·태국은 누적을 제한하면서 표제번호(heading number)를 더욱 복잡하게 하였다. 일본은 일부 분야에 대해 매우 높은 부가가치를 적용하였다. 예로, 일본·태국 FTA의 가공식품 및 농산물 분야의 부가가치를 90%로 했고 누적은 매우 적다. 한·미 FTA에서는 악명 높은 섬유제품의 원산지 규정에 대한 타협이 이루어져야 하며, 태국·미국 FTA가 체결된다면 태국도 유사한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태국의 기업들은 제품 목적지에 따라 서로 다른 원산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가 행정비용이 들더라도 원산지 규정 및 적용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FTA마다 회피 방법 및 보호주의 인센티브가 나타날 것이다.

ASEAN+3에서 더 나아가 미국, 러시아, 칠레, 멕시코를 포함시키는 데에도 많은 정치적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다양성은 자연스레 외환위기 때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무역 자유화 및 협력의 구속력 없고 자발적인 특성으로 이어졌다. 빠른 무역 자유화를 고수하는 미국과 점진적인 시장 개방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아시아 국가간에는 전통적인 격차가 존재한다. 다른 기준과 내용을 가진 여러 파트너와 FTA를 맺을 때 아무런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한 성격을 지닐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FTA를 기반으로 한 지역주의는 초기에는 아시아의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그 결과 달러에 대한 의존이 높아졌다는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중국 시장의 성장은 지역통합을 통해 이러한 집중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되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적 협력이 장려되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완제품 수출 규모가 작은 반면 구매력은 미국을 포함한 수출에 의해 좌우된다(METI, 2005). 2000년도 I-O 표를 이용한 그

림에서 보듯, Kuroiwa(2006)는 동아시아 지역과 중국 산업의 연계가 일본 또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낮지만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일본은 53(전방연계 38), 미국이 17(전방연계 41), 그리고 중국은 0(전방연계 17)이다.³ 미국 시장은 IT 버블이 터졌을 때 수출이 호황이었으며 일부 아시아 통화는 다른 통화보다 미국달러에 대한 연계가 매우 높다. 중국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국을 대체하지 못하였다.

이런 구조에서 미국이 FTA에 관여하기 시작했을 때 동아시아 지역 내에 나타나는 원심력을 인정하고 일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또한 미국이 APEC의 자발주의적인 태도보다 더 넓은 시장 개방을 요하는 광범위하고 명시적인 FTA에 대해 협상하는 것도 당연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이후에도 FTA를 기반으로 한 통합의 경로의존적 개발을 가져온 지역주의의 정치적·경제적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II. 독특한 분업 네트워크를 가진 시장 주도의 통합

제도적 통합이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한 반면, 진정한 통합은 독특한 분업 네트워크에 의해 추진되는 시장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 분업 네트워크는 1990년대 말 외국직접투자 붐 이후에 형성되고 발전하였다. 플라자합의 이후 일본 산업의 재배정치, 신흥경제국의 수출산업의 구조조정, 주요 아세안 지도자들이 계기가 되어 네트워크가 나타나게 되었다. 역내 외국 직접투자는 일부 동아시아 지역, 특히 중국 내에 공업집적이 이루어졌으며 그들간에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가 구축되었다. 놀라운 점은 이 네트워크가 대형 다국적기업들의 무역이 아닌 현지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3. 일본의 경우 1990년에는 72, 1995년에는 65였다. 다시 말해, 일본은 수평적분업이 더 적합하다.

기무라(2003)는 분업 네트워크의 최근 발전상을 국제무역이론, 예를 들어 기업의 1) 단편화, 2) 복합화(agglomeration), 3) 내부화와 연결시켜 지역경제의 독특함을 강조한다. 전통적인 무역이론에서 모든 무역형태는 산업 및 위치의 비교우위와 요소부존량(factor endowment)으로 설명 가능했다. 반면, 1) 단편화 이론은 재화의 생산은 비교우위에 의해 해제되고 분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류, 통신, 행정 등 각 생산지의 연계 서비스 비용이다. 서비스 비용은 정부 정책 및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의 외국직접투자 유치는 더 좋은 정책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동아시아 분업 네트워크의 개발 과정은 외국직접투자 유치 경쟁이 도로, 통신, 산업단지 등 공공서비스의 개발을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다.

반대로, 복합화 이론은 일부 제한된 위치에서 공업집적의 메커니즘에 초점을 둔다. 2) 복잡화 이론은 생산 및 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정보 제공의 지원을 받는 규모의 경제 및 생산에 대한 집적의 장점을 강조한다(푸가 및 베나블스 1996, 후지타, 크루그만 및 베나블스 1999). 중국의 IT 하드웨어 집적과 태국의 자동차 부품 집적 현상도 일본적인 사례지만, 동아시아 각지에 서로 다른 사업의 발전사향도 많다.

비교우위가 존재하는 세계에서 위치(location)는 혁신 또는 요소부존량에 의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의 우위가 없으면 기업들은 더 나은 곳을 찾아 나선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이동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집적은 정보에 의한 내생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은 아웃소싱 전략을 기업 내부 간의 교역 및 기업간 교역의 개발을 통해 상대적으로 한 위치에 오랫동안 머문다. 이를 통해 지원 산업들은 복합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런 다음 기업들은 무엇이 내부에서 처리되고 무엇을 누구를 통해 어떻게 아웃소싱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Duning 1993). 3) 내부화 이론은 내부 생산의 단편화 및 분산화의 사례를 내포하고 있다. 동아시아 기업들의 기술 발전이 충분한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편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단편화 과정은 유연한 분배를 위한 OEM, EMS 등의 아웃소싱 형태를 제공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기업 내부 및 기업간 연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1), 2), 3)의 역동적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 메커니즘을 지닌 네트워크는 단순한 수직적 분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수직적 분업은 수입된 자재를 조립 또는 가공하고 다시 수출하는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나타난다. 첫째, 집적 형태가 세계시장에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는 다각적이다. 집중되는 기업들은 적어도 국경 넘어서 온 기업들이며 무역기업도 마찬가지다. 둘째, 집적이 시작되면 단순한 수출 절차보다 빠르게 성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발전이 경제 전체를 이끌고 그것에 의존한다. 진정한 집적은 상대적으로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분업 네트워크에 대한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이 복잡한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발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관찰이 필요하며 이론 1)~3)의 메커니즘도 살펴 봐야 한다. 그러나 공업집적은 FTA 기반의 통합을 함축하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의미할 수도 있다.

우선, 국가간 외국직접투자 유치에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었다. 이는 개선된 인프라, 규제완화, 무역원활화, 기타 첨단 행정 서비스를 가져오면서 서비스 비용을 줄였다. 인터넷, 휴대폰 등 IT기술의 신속한 도입은 네트워크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으며 생산 패러다임은 일부 산업의 모듈 시스템에 의해 개혁되거나 ISO 체제에 의해 표준화되었다. 이런 변화는 현지 기업의 외국 다국적기업에 대한 접근을 향상시키고 다국적기업의 유연한 생산을 지원하여 복합화를 가속화했다.

둘째, 전통적인 기러기행렬형 발전모델을 보면 후발주자들은 늘 선발주자를 쫓아가기 위해 경쟁을 하며 선도기업은 기업간 및 기업 내부의 교역을 통한 유연한 생산으로 격차를 유지하려고 한다. 초기 단계에서 일본 산업의 재배정은 저렴한 노동 등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주요 산업이 더 이상 경공업이 아닌 중공업이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임금상승 및 환율변동 등의 지속적인 변화 속에서도

생존하기 위해 부가가치 제품의 비중을 늘리고 네트워크를 확대하였다.

셋째, 공급망관리(SCM)가 시장 수요의 빠른 변화, 특히 IT 제품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변하면서 관리자들은 신속하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네트워크 개발 참여에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 아웃소싱의 효율성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무관세에 표준화만 존재한 동아시아에서 사실상 자유무역으로부터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IT 산업이었으며 한국, 대만, 중국 기업들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 이들은 일본기업과의 경쟁에서 따라잡고 이기기 위해 노력해왔다. 복잡하고 개방된 지역 네트워크는 동아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된 IT 생산지로 만들었다.

그러나 역동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더라도 높은 무역장벽에 직면한 많은 산업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앞선 연구에서 Kuroiwa와는 강력한 산업관계의 결합이 전자산업은 1990년 55에서 2000년 93으로 증가했지만, 자동차산업과 일반기계류산업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각각 30과 20에 머물고 있다고 보여준다. 이는 다른 국가 및 위치에서 서로 다른 사업환경에 직면한 기업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비즈니스의 다른 무역 여건을 의미하기도 한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는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수평적 분업을 가져오는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에 의한 비교우위의 축소 과정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1)~3) 이론을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는 비교우위를 완전히 제외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자유무역체제와 통제체제를 섞었기 때문에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분업 네트워크를 위와 같이 해석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통합, 특히 FTA 기반의 통합을 EU와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 독특한 분업 네트워크를 지역성장의 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현실에 대한 해석은 동아시아 FTA의 특정 분야의 우선순위를 의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완전한 공정거래법이 없는 덜 개발되고 덜 개방된 자본시장에서 국제 인수·

합병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경쟁정책의 조정은 시급한 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반면, 발전 메커니즘 때문에 역내 외국직접투자자와 연계비용을 줄이는 서비스는 이 지역의 FTA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둘째, FTA의 우선사항과 네트워크는 FTA 기반의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적 노력과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네트워크는 특성상 기본적으로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복잡한 규정과 서로 다른 FTA의 준수비용(compliance cost)의 증가는 고통스러운 점이다. 동시에 네트워크의 범위와 깊이는 여전히 다르지만, 각각의 FTA협상은 IT, 자동차 산업 등 덜 통합된 산업도 국가경제의 일부로 여겨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비즈니스는 전통적인 FTA의 적용범위로는 충분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서로 다른 환경을 요한다. 그리고 비전통적인 부분인 물류, 지적재산권, 상호인정협정, 인적자원 이동은 관세절감만큼 중요해졌다. 이런 복잡한 점을 고려할 때, 기능적 협력은 전통적인 FTA 패키지보다 시장 요인을 개선시키기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III. FTA 기반 통합의 기능적 협력

A. 동아시아의 FTA의 우선적 어젠다

위의 독특한 메커니즘에도 불구하고, FTA에 대한 논쟁은 비교우위, 심지어는 상업주의적 아이디어, 예를 들어, 어떤 산업의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은 경쟁을 일으킬까⁴ 등에 의해 지배된다. CGE 모델은 성장, 복지 향상, 무역 및 산업의 변화 등 FTA의 거시적 파급 효과를 흉내 낼 수 있다. 그러나 최고로 좋은 CGE 모델도 시장의 역동적 반응 이후 FTA의 결과를 완전히

4. 동아시아에서 FTA에 대한 상업적 인민주의(mercantile populism)는 새롭지 않을 수 있다. Baldwin(2001)은 유럽의 'FTA 도미노' 현상을 설명할 때 이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수출 지향적 개발과 그의 성공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예측할 수 없다. 오히려 CGE 모델 시뮬레이션은 FTA 협상의 거시적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 잘못 사용되어 협상가들은 협정의 특정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할 수도 있다.⁵ 그러나 분업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었고 여러 FTA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무역전환의 가능성은 있지만 결과에 따라 예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거시경제에 관한 너무 많은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으며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FTA의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뒤야 할 것이다. 개방과 경쟁이 네트워크의 성공의 기본 조건이라면 FTA는 양국의 거시적 균형을 위해 이 조건들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또한 생산자 또는 정책입안자보다 소비자의 우선순위가 명백해야 한다.

명백하고 공통된 우선순위가 필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다른 FTA를 협상하는데 존재하는 시간과 에너지의 제약이다. 다양성 때문에 서로 다른 FTA가 불가피하지만, 너무 다양한 FTA는 오히려 네트워크에 맞춰서 전환하는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시장은 이미 시장 요인에 의해 통합되었고 FTA는 WTO협상을 견제하면서 실정을 확인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이다. ‘높은 기준의 FTA’는 포괄적인 FTA인 경우, 특히 선진국에는 적합하지만, 협상의 자원 제약을 고려할 때 특정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지역에 분업 네트워크가 이미 확산되었기 때문에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우선과제를 조심스럽게 정해야 한다.

약 10년간의 FTA붐 이후, 일본, 중국과 한국의 우선과제가 발견되었다. 일본은 포괄적인 FTA 패키지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내 일본 다국적기업을 위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면서 농업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중국은 상대국으로 하여금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자원의 분배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은 +3 협상 중 가장 정치적 우선순위에 있는 개성공단 생산 물품의 원산지규정에 대한 특별 대우를 요

5. 일반적으로 협상에서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일본정부의 약속을 받는 것에만 집중하였다. 이는 협상 실패의 간접적인 구조를 만들었다.

청하고 있다. 사실 +3그룹은 싱크탱크 네트워크⁶를 통해 수 년간 3자 FTA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해 왔지만, +3 협상의 공동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과제에 대한 조정이 여전히 필요하다.

a) 우선과제 I: 간단하고 관대한 원산지규정

정책 차원의 우선과제 외에도, 생산 네트워크는 간단하고 관대한 원산지규정이 있어야 '누들볼 효과'를 예방할 수 있다. 전자제품의 경우, 이미 주요 생산국 사이에는 관세가 폐지되었거나 매우 낮으며 무역전환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언급한대로 자동차 및 일반기계류의 경우는 이와 다르며 전자제품보다 과정이 복잡한 경향이 있다. 부가가치의 기준을 높게 잡고 표제번호 변경의 기준이 복잡하면 단편화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관세보다 보호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보호주의 경향은 시행과 모니터링이 더 어려운 농산물과 농업기반의 제품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만약 원산지규정이 엄격하다면 흡수기준(Roll-up), 미소기준(De minimis), 누적기준(Accumulation) 등의 보완적 조치가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중간재가 특정 조건 하에서 생산되었다면 흡수기준은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일부 수입량에 대한 원산지기준 적용을 면제하기 위한 미소기준은 조심스럽게 설계된다면 현실적인 조치가 될 수도 있다. AFTA의 완전누적과 유사누적(diagonal accumulation)은 생산 네트워크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완화 조치들이 복잡화 비용을 추가적으로 발생시킨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은 완화 조치와 더불어 간단하고 포괄적이어야 한다. FTA 접근법은 양자 및 지역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ASEAN과의 누적기준에 대해 상당히 조심스러워 해야 한다.

6. 연구는 2001년부터 일본의 NIRA, 중국의 개발센터(Development Center),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해 진행되었다.

b) 우선과제 II: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또 하나의 우선과제는 투자자 보호다. 왜 중요한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현재 중점이 되는 것은 비즈니스 환경의 투명성, WTO 규정의 TRIMS, 내국인대우, 이행 기준 등에서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해야 하는가다. 또한 (1) 현지 조건, (2) 수출입 균형, (3) 외환 관리의 무역규제, (4) 수출 및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상의 기타 이행 결과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GATS는 외국자본 통제, 합작기업 및 기타 형태의 투자에 대한 제한, 고용 조건 등에서 서비스 모드를 규제한다. APEC은 또한 투자 전후의 내국인대우, 최혜국 지위, 이행 요구사항의 최소화, 관리직·기능직의 출입허가, 이익의 무상 전송, 압수 및 보상, 분쟁 해결, 투명성 등을 다루기도 한다. ASEAN은 2020년까지 모두를 내국인으로 대우하기 위해 아세안투자지역(AIA)을 만들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외국기업을 통제하려고 하며 이들의 활동을 이용하여 자국의 발전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외국직접투자가 개발에 큰 역할을 하면서 외국기업에 대한 통제권 상실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정당하다. 그래서 WTO는 개발도상국에 한해 TRIM 조치를 면제해준다. 또 APEC의 틀에는 비구속적 투자원칙이 있고 AIA는 '잠정적 제외품목'과 '민감품목'이 있다.

그러나 여러 요인이 외환위기 이후 이런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첫째, 여기에서도 외국직접투자 유치 경쟁이 존재하며 아세안 국가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2003년 TRIM 면제조치를 포기하기로 했다. 필리핀은 일본과의 신중 양자간투자협정(BIT)을 통해 투자하기 전에 내국인대우를 해 주기로 합의했다. 기술이전, 직원교육, 산업 발전 지원 등의 이행요건은 FTA 협력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이유가 될 수 있다.

둘째, M&A, 금융 자유화, 외환 통제의 규제완화 등을 허락하는 자본시장의 개방에 대응하여 현지 기업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다. 이것이 한국과 싱가포르가 FTA 협상에 선진 BIT 패키지를 포함시키는 주요 이유다.

일본에 이어, 신흥경제국, 주요 아세안 회원, 중국은 이미 순기준으로 자본 수출국이 되었다. 일본 및 한국과의 최근 BIT 협상에서 중국은 투자 자유화와 투명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이는 +3 FTA를 향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투자와 투명성에 우선순위를 둔 FTA의 긍정적 측면 중 하나는 양측당 사국이 주요 우려사항을 상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은 인센티브를 통해 외국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시켜야 하지만, 투자국은 필요한 경우 역량강화를 확대할 수 있다. 그러나 특혜협정의 특성상, 다른 파트너와 계속 다른 BIT를 체결하면 차별 받은 투자자들의 지속적인 요구로 재협상을 자주 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 생산 네트워크의 개방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최혜국 대우는 일반적인 투자 규칙만큼 중요하며 투명성⁷과 +1 FTA의 초기 조정 규칙은 우선순위 명단에 있어야 한다.

c) 우선과제 III: 서비스의 전략적 자유화

원산지규정, 투자 및 투명성과 비교했을 때 서비스 자유화의 중요성은 덜 명백하다. 그러나 단편화 및 복잡화 이론에 의하면 생산 네트워크에 있어서 '전략적' 자유화는 매우 중요하다.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서비스의 자유화를 빠르게 추진했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은 이를 그만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WTO내의 GATS는 모드1(국경간 무역), 모드2(서비스의 해외 소비), 모드3(외국직접투자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드4(인력이동에 의한 서비스)에 대해 155개 서비스를 규정한다. 그러나 실제로 자유화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포지티브 리스트만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 의무는 최혜국 대우와 투명성이다. 본래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더 많고 투명성은 많은 정보 공개, 참조, 운영 절차 등 재확보

7. 일본은 양자무역협정에 의해 특별 지위를 보호 받는 미국 기업들을 비판했으며 일-태 FTA에서 최혜국 투자가 주요 사안이었다.

다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사실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낮으며 미국을 제외하고 이 지역 내에서 서비스 산업에 대한 자유화 압력도 약했다. 태국은 호주와의 FTA에서 비즈니스 서비스, 유통, 교육, 레저, 건설 산업에 대한 자유화를 인정했다. 또 일본과는 물류 컨설팅, 컴퓨터 관련 서비스, 전자제품 유지보수 등에 대해 합의했으나 금융 서비스에 관한 합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태국과 한국이 미국과의 FTA 체결에 성공하여 서비스 시장을 연다면 동아시아 내의 서비스 자유화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미국의 외국직접투자와 국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모드1과 모드3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서비스 연계를 전략적 목표로 삼고 서비스 산업의 개방 방법에 대해 동아시아지역 내에서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교통, 창고, 물류, 통신, 유통, 유지보수 서비스는 연계 비용을 줄이기에 적당하다. 대부분의 국가가 FTA 내용에 우선적인 특정 서비스 분야를 포함시키는 반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 시장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 및 통제요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APEC은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여러 서비스를 추진했지만 모두 자발적 기준에 준한 것이었으며 민간 분야의 많은 접점을 두지 않았다. 많은 국가들이 생존 전략으로 물류를 장려했으나, 민간분야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내 물류의 혁신은 서로 다른 FTA 통합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B. +3 FTA의 기능적 협력

FTA는 구속력 있는 제도적 프레임워크이며 당사국의 법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로 한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 많은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EU는 개방형 자본시스템, 공정거래법, 기업법, 시민사회 등 기본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나 동아시아 통합은 오로지 시장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FTA의 제도화 노력은 각 국가의 법적 역량 내에서 현

실을 인정하기 위한 과정이다. 주권을 포기하는 '심화된 통합'도 특히 안보, 정치적, 사회적 차원에서 여전히 비현실적이다. 경제 통합에서도 만약 국가들이 자유화를 주권에 대한 도전이라 해석한다면 FTA는 예외가 많은 범위에서 제품을 포함시키게 된다. 혹은 정치적·외교적 공약에도 불구하고 이행 강도가 약하거나 APEC과 같은 주요 산업적 조정이 없는 단순한 '협력'에 불과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네트워크는 서비스 연계, 정보 네트워크, 모듈 기반의 생산, 다양한 아웃소싱 모드 등 신·구 경제 인프라에 의해 지탱되어 왔다. 만약 동아시아가 네트워크의 개발 잠재력을 최대화한다면 FTA를 기반으로 한 통합은 동시에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제도는 주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기계류 분야에서는 더욱 심화된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네트워크가 이미 국경 너머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양자간 협상을 보완하기 위한 지역적 접근은 불가피하다. 전자는 앞서 언급되었던 FTA의 특정 우선과제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후자의 기능적 협력에 의해 더 잘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후자는 새로운 FTA의 우선과제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자유화 및 원활화의 대부분이 FTA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지역적 접근은 더 많은 협력에 비중을 두고 FTA의 틀 밖에 있지만 네트워크에는 핵심적인 이슈들을 명시해야 한다. 그러면 지역적 협력의 기능은, 특히 +3 그룹의 경우, FTA의 우선과제와 더불어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다.

a) 금융협력

외환위기 이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로 금융협력이 시작되었다. 외환 보유고 스와핑 네트워크 구축, 단기간 자본 흐름 모니터링, 날짜 교환(date exchange), 거시적 감시(macro surveillance) 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제 는 협력의 압력이 사라졌으며 감시만으로도 역부족이라고 한다. 금융 자유화 및 시장 개방으로 네트워크의 기업들의 금융 환경이 개선되었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 감독 역량에 대한 의구심이 생겼다.

아시아 채권 시장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 외환위기 이후 많은 국가들은 상장기업에 대해 엄격한 정보 공개 의무, 새로운 회계 시스템,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 관리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신기업법, 투자 보호 등을 통해 시장 시스템을 개혁했다. 이런 개혁을 바탕으로 지역적 협력은 현지 외환표시 채권의 발행, 발행자 증가, 보증인 시스템, 신용 평가, 결산 등을 장려했다. 발전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채권 발행은 제한되고 기업 채권은 여전히 발행이 적다. 개혁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명성은 벤처자본의 와해, 해외 거래 증가, 관리자의 M&A에 대한 대변 등 많은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네트워크의 역동적인 발전을 위해 신용 등급을 포함한 기업 정보의 투명성과 누적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금융협력과 더불어 첨단 SME 회계, 평가 정보 교환 등의 새로운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b) 상호인정협정(MRA)

서비스 비용을 잠재적으로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MRA와 인적자원의 이동이다. WTO에는 무역상기술장벽(TBT) 협정과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이 있지만, 진정한 무역원활화를 위해 MRA를 위한 표준의 조정은 이 지역에 매우 중요하다. APEC만이 WTO 요구사항에 준수했으며 여러 양자FTA는 MRA에 대해 논의한 바도 없다. 그러나 이미 식품 안보와 환경에 대해 여러 무역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TBT 또는 SPS는 너무도 쉽게 생산 네트워크의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 동북아시아 내의 뿌리깊은 불신을 감안할 때,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MRA는 공동 연구를 통한 또 다른 전략적 협력 방안이다.

MRA는 사람의 이동과도 연관이 있다. 동아시아 내에서 사람의 이동은 EU 수준과 AFTA 수준을 훨씬 밑돈다. 일본이 이 사안에 대해 가장 달가워하지 않지만, 시장 압력에 의해 드디어 간호사, 안마사 등 일부 분야에서 숙련된 노동력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기술 자격에 관한 MRA가 시행을 뒷받침할 것이며 이중 과세 예방, 연금, 비자 문제 등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과 한국이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주도하였으며 일·중, 한·중 관계에 모범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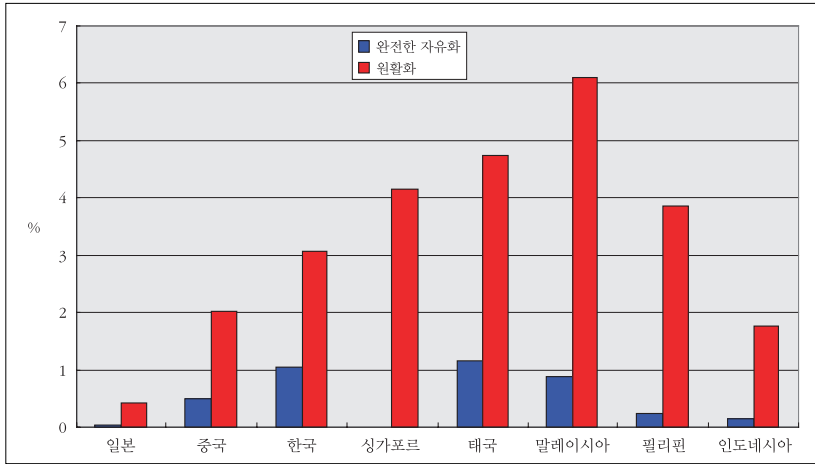
c) 상징적 사업: 동북아시아 EDI

테러를 막기 위해 미국이 CPTAT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전자문서교환(EDI)이 무역원활화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동아시아가 APEC내에서 무역원활화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각각의 FTA가 특정한 조치들을 정의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율이 필요하다. 각국의 미리 조절된 EDI 시스템은 통합 차원과 안보 차원에서 다르다. 일본, 한국, 싱가포르는 EDI 개발의 선도자다. 전체 무역 절차를 하나의 연결된 네트워크(싱글 윈도우 시스템)로 처리한다. 그러나 중국은 분산된 경제 구역과 지방과의 연계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사실, ASEAN은 무역 정보를 위해 8자리 공통 코드(ASEAN Harmonized Tariff Number, AHTN)를 만들고 있다. 이는 연결된 EDI를 위해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다. 그러나 +3는 대규모 거래량과 상당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협력에 대해 토론조차 하고 있지 않다.

지금까지 동아시아, 특히 중국은 생산비용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었다. 그러나 첨단 SCM은 EDI와 다른 선진 경제 인프라에 의한 물류에 대한 더 높은 효율성과 안전성을 요하고 있다. 외적 결과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장 주도의 통합이 포함하지 못하지만 상대적으로 강한 기술관료 및 IT기반을 갖춘 +3의 긍정적인 기여가 이루어진다. 한·중·일 EDI는 특히 중국의 국제적 외국직접투자 비중을 기반으로 했을 때,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 외의 국가들에게도 혜택을 줄 것이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EDI는 본질적으로 덜 정치적이지만 다양한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매우 기술적인 프로젝트다. 그러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적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뢰가 부족한 +3은 협력에 의한 성공을 확신시켜줄 상징적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방적 지역주의와 협력의 전통을 지닌 EDI가 이상적인 출발점이 될 것 같다.

〈부록〉

GDP에 대한 무역원활화의 영향(Ando, 2006)



참고문헌

- Ando, Mitsuyo and Fukunari, Kimura. 2003. "The Formation of Internation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Networks in East Asia." *NBER Working Paper* 10167.
- Ando, Mitsuyo. 2006. "East Asian Economy 2020: Economic Analysis of East Asian Community." *Regional Cooperation toward East Asian Community*. Ed. Urata. Japan Center for Economic Research (in Japanese).
- Baldwin, Richard. E. and Aymo Brunetti. 2001. *Economic Impact of EU Membership on Entrants: New Methods and Issues*. Boston, Dordrecht,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Cheng, Loenard K, and Kierzkowski, Henryk. 2001. *Global Production and Trade in East Asia*. Boston, Dordrecht, Lond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 Deardoff, Alan. 2001. "Fragmentation in Simple Trade Models." *North American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12: 121-137.
- Diego Puga and Anthony J. Venables. 1996. "The Spread of Industry: Spatial Agglomeration in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10(4): 440-464.
- Dunning, John. 1993.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the Global Economy*. Addison-Wesley.
- Fujita, Masahisa, Krugman, Paul and Venables, Anthony. 1999. *The Spatial Economy: Cities, Regions, and International Trade*. Cambridge: The MIT Press.
- Jones, R.W., and Kierzkowski, Henryk. 1990. "The Role of Services in Production and International Trade: A Theoretical Framework."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Essays in Honor of Robert E. Baldwin*. Ed. Jones and A.O. Kruger. Oxford: Basil Blackwell.
- Krueger, Anne. O. "Are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Trade-Liberalizing or Protectionis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3: 105-124.
- Kuroiwa, Ikuo. 2006. "Production Networks and Spatial Linkages in East Asia." *East Asia's De Facto Economic Integration*. Ed. D. Hiratsuka.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Lee, Junkyu and Lee Hongshik. 2005.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s of Korea-US FTA*. Korea Institute for Economic Policy.

동북아시아 FTA와 지역화 문제: 비판적 조망

사무엘 김
(Samuel S. KIM)

동북아의 독특한 지정학적 지리 경제학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로 그 중요성으로 인해 동북아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편안하게 지역적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주의에 대한 확산 속에서 동북아를 명명백백히 구별된 지역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동북아는 정치적 지역주의, 안보 지역주의 혹은 심지어 경제 지역주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지역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동북아 지역주의의 가능성 및 한계를 고찰하기 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작동하는 평화 체제” (Mitrany, 1966)로서의 “개방 지역주의”를 위한 기능적 접근 방법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간단히 다음과 같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역화와 지역주의의 의미, (2) 동북아 지역주의의 촉매제, (3) 진정한 동북아 지역주의를 이루는데 주요 문제점, (4) 작동하는 평화 체제로서의 개방 지역주의를 위한 점진적이고 기능적인 접근 방법의 예이다.

지역화 대 지역주의

동북아시아, 동아시아 및 아시아에서도 “지역주의”와 “지역화”에 대한 개념은 때때로 상호 호환적이고 개념적 일관성이나 명확성 없이 적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용어에 대한 개념적 구별이 필요하다. 세계주의와 마찬가지로 지역주의는 공유되는 규범, 정체성 및 제도를 일컫는 규범적인 개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역화는 세계화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비정부 주도(보통 시장 주도)의 거래 과정을 말한다. 지역화는 지역주의를 양산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주의라는 용어가 각국 정부간 대화 및 협약을 기반으로 하는 정부 주도의 협력 프로젝트를 언급하기 위해 보다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지역주의는 정부 간 협력이라는 점에서 지역화와 구별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주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각국 정부 간 협력의 약칭인 반면 지역화는 다국적 기업들에 의한 시장, 무역 및 투자에서 나오는 주요 동력에서 파생되는 경제적 통합이 진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동아시아에서 지역화와 일부 초기 단계의 지역주의는 경제적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안보 분야에서는, 비록 희미한 형태이기는 하나 냉전 체제의 잔재가 여전히 존재하면서 국가 안보 사상 및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주의 개념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

동북아 지역주의의 촉매제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후, 지역주의와 관련된 주요한 물결 두 가지가 있었다. 두 물결 모두 유럽의 연속적인 이정표라는 맥락에서 등장했다. 첫 번째 물결은 1952년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창설과 1957년 유럽 공동체 설립에서 나온 것이며 두 번째는 1986년 이후 단일 시장과 통화의 등장에 따른 것이다(단일 유럽 의정서 및 마스트리히트 조약). 첫 번째 물결(“구

지역주의”)은 주춤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점차 시들해졌다. 특히 1965년 유럽 공동체 위기와 드골의 고등 정책이 제기하는 초국가주의에 대한 도전을 계기로 더욱 약해졌다. 유럽 통합의 부활은 1986년 단일 유럽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다시 한번 통합의 초기 촉매제가 되었다.

이는 세계 정치의 변화와 관련된 수많은 주요 변화들과 함께 수반되었다. 그 변화들에는 (1) 지역 및 역내 국가들이 세계 정치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여지를 보다 많이 남겨주는 초강대국간 갈등의 종식 (2) 끊임없는 세계화 동력에 따른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의 약화 (3)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해 GATT 기반의 세계 무역 체제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 발생으로 인한 1989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결성과 1994년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의 체결 (4) 다양한 역내 경제적 여건에 대한 미국의 보다 수용적인 자세, 그리고 (5)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에 대한 태도와 정책 변화 및 이와 관련해 개발도상국과 포스트 공산주의 국가들의 수출 지향적인 발전 전략 채택이 있다.

두 번째 물결은 대다수 최근에 이루어진 상황들과 관련되었거나 이들 상황에 의해 야기된 소위 “신지역주의”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예를 들어 1997-1998 아시아 금융위기, 1999년 시애틀, 2003년 칸쿤에서 WTO 협상 좌초로 대표되는 세계 무역자유화 침체, 그리고 1999년 유로화 등장이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촉진하는 촉매제는 다양하고 상호작용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시아 금융위기가 아세안+3국(한중일) (APT)에서 동북아시아 열강들과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및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비록 중국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즉 지리적으로, 인구구성학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 중심적 위치에 남아 있기는 해도 중국, 일본 및 한국 이들 세 국가들 모두 완고한 동북아시아 이웃국가들의 틀을 깨고 보다 광범위한 지역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APT 정상회담이 아시아 금융위기가 한창 이었던 1997년 말에 처음으로 개최되어 동북아시아를 넘어 보다 친근한 동남아시아와의 협력과 경쟁을 더욱 촉진

하고 강화하는데 뜻하지 않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안보 지역주의에 대한 일부 제스처가 있었으나 이 분야에서 조차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주요 요소이다. APT 프로세스는 현재 동북아시아 3개 주요 국가들 (NEA-3)과 아세안-10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주의의 주도적 엔진이 될 잠재력이 있다. 이 프로세스는 반세계화적이지도 않고 폐쇄된 지역주의적 움직임을 갖고 있지 않으며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자원을 결합함으로써 지역의 장점을 살려 세계화의 힘에 보다 잘 대처하는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동시에 APT는 점점 강대해지는 중국을 지역 금융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의 1997년 아시아통화재단 창설과 유사한 것으로 미국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철회되었다.) 이는 중국이 WTO 가입을 통해 세계 다자간 무역 체계로 통합된 것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다. 이러한 지역적 금융 통합은 일본에서 APT의 중대한 기능으로서 확인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 APT는 보다 명확하게 안보 지향적인 ARF(아시아 지역포럼)와 더불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동아시아 식 체제로 인식된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1997년 존재했던 많은 제도적 문제점과 아세안과 APEC의 위협을 완전히 노출시키면서 동시에 중국의 부상과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동아시아 정치 경제를 이끄는 두 가지 주요 동력으로 꼽으면서 우리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간에 보다 긴밀한 통합을 형성하기 위한 초기 단계 체제의 등장을 APT에서 목도했다. APT는 동아시아의 경제적 지역주의를 형성하는 데 있어 공동 리더십 역할을 하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이 어떻게 동북아 3대 국가들-아시아의 3대 경제대국-을 설득하여 동남아시아의 개방된 지역주의로 편입시켰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사실 다른 어떤 요소 보다 중국의 부상으로 인해 아세안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동아시아 3대 지역 체제(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체(CSCAP), 아시아 지역포럼(ARF) 및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를 촉진하는 주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APT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업적은 소위 말하는 치앙마이 합의이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의 부수 회의로 2000년 5월, APT의 재무장관들은 회원국의 중앙은행 간 양자 통화스왑 협정을 확대할 것을 승인했다. 이는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막는 것을 목적이었으며, 치앙마이 합의는 현재 궁극적으로 통화동맹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아시아 통화 통합을 위한 첫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 쓰나미가 지나간 지 거의 10년이 된 2007년 5월, 13개 APT 지역 경제국가들은 역내의 엄청난 외환 보유고에서 자금을 공동 출자함으로써 보다 야심찬 다자간 통화스왑 계획에 합의했다.

앞으로의 전망

동북아시아에는 지역주의를 제한하는, 특히 안보 지역주의를 저해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다. 강대국 간 갈등 및 경쟁이 치열한 곳에는 지역적 안보 협력이 약하기 마련이다. 동북아시아가 새로운 형태의 역내 다자간 안보 대화 및 포럼에 동남아시아보다 훨씬 저항적이라는 것은 놀랄 만한 사실이 아니다. 유럽과 달리 포스트 2차 세계대전 시대 이후의 주요한 위협이 역외가 아닌 역내에 여전히 존재한다. 동남아시아의 안보 대화에 존재하는 안정적 분위기가 동북아시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웃 국가들간의 협력의 여지가 부족하여 일본, 중국 및 한국은 동남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의 개방 지역주의를 이용하고자 때때로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다.

경제적 초강대국으로서 일본은 분명 동북아의 지역 및 국제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일본이 지역의 주도적 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 전성기에 치명적인 지역주의의 잔재라 할 수 있는 대동아공영권의 오랜 그림자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시절 자행했던 잔학행위를 일본이 솔직히 인정하는 의지

와 능력의 부재도 한 요인이다.

“위대한 중국”이라는 모델은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으나 이는 앞으로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중국이 끊임없는 경제 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지 책임 있는 강대국으로 국제적 행동을 할 것인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역할 또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대만(1979년 이후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일본 및 한국과의 냉전 동맹으로 구성된 양자주의가 지속적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어떤 지역안보 다자주의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보다 신속하게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해 마련된 동아시아 지역주의를 수용하여, 일본으로 하여금 리더십 경주에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었다. 동북아 3대 국가들은, 리더십을 둘러싼 중·일 간 경쟁 유발로 인해 자유무역 협정이 가져올 경제적 혜택을 잘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 자유무역 협정을 위한 협상 시작은 고사하고 이를 추구할 가치를 숙고하는 데조차 실패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시 한번 중국과 일본이 경직된 동북아의 구도를 깨고 동아시아에서 특히 APT 프로세스의 범주 내에서 지역적 경제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이고 치열하게 경쟁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여전히 APT의 주 영역이긴 해도 말이다.

아세안-중국 자유무역 지역(ACFTA) 형성을 제안한 중국의 의도 뒤에 숨은 뜻은 바로 APT 프로세스가 중국, 일본 및 한국 간에 점점 증대되는 소 지역별 대화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연차 APT 정상 회담에서 중국, 일본, 한국의 지도자들은 별개의 “플러스 3 (Plus Three)” 회담을 개최했으며 또한 3자 외무 장관 회담도 잇달아 열렸다. 2002년 프놈펜 정상회담에서 주룽지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의 협상이 타결된 후 3자 협정에 관한 회담을 시작하고자 3자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비록 3국이 공동연구를 실시하는데 합의하긴 했지만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중국과의 어떤 협정을 고려하기 전 한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든 상황에 비추어 보면 APT 회원국들 간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은 쉽지 않을 것이다. 최근 협상 중에 있는 ACFTA는 현재로서는 그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큰 과제이다. 중국이 지역의 경제 통합에 관해 점차 긍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역동성을 주로 양자간 관계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아세안 과 일본-한국 자유무역협정의 상호체결과 기타 역내 양자협정이 사실상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으로의 더디지만 꾸준한 행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이러한 행보의 속도는 역내 강대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만약 중국이 계속 역내 기구를 통하여 협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중국의 증대되는 경제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 여건을 위한 초석을 중국에서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전면적인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모든 언론의 과장된 보도에도 불구하고 APT 프로세스는 치앙마이 합의에서 보여주었듯이 통화협력 분야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루어냈다.

앞으로의 전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 정치적 자유 및 경제 발전 분야에서 보여지는 다양성이라는 각 지역의 특징을 인식해야 한다.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진 유교 문화와는 달리, 동아시아는 여전히 희미하기는 하지만 역사적,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동북아 정권의 유형은 공고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자유적 민주주의, 노골적인 독재 국가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다양하다. 따라서, 통치에 대해 이처럼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지도자들에게서 지역적 체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은 어렵다. 특히 국내 규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체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역내 지정학이 지리 경제학보다 훨씬 분열적인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증대되는 경제적 지역화와 상호의존성은, 때때로 중·미, 중·일, 중·대만 및 심지어 한·중 관계에서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정치적 긴장을 완화하는 보루로 여겨진다.

지역의 규범적 경제적 다양성과 차이점이 지역 프로젝트의 운명을 미리 결정짓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특히 발전하고 번성하기 위한 안보 지역주의(약하게는 무역 지역주의)를 형성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안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적 협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요 국가들이 역사적 적대감이라는 오랜 그림자와 경쟁적인 정치적 정체성 하에서 협력한다면 이는 훨씬 성취하기가 어렵다.

동아시아에 맞는 안보 지역주의가 빈약하다는 것을 과장해서는 안 된다. 우선 증대되는 경제적 상호연결성이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보의 보다 광범위한 개념, 즉 경제 및 환경 문제를 포함하는 개념이 양자간이든 다자간이든 역내 경제 협정을 통해 구체화되고 확보될 수 있다. 지난 10년 동안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은 분명 향상되었다. 동남아시아에서 ARF는 아세안 국가들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 및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인도, 뉴질랜드, 러시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위한 메커니즘을 제공했다. ARF는 저작권 침해 및 해양 안보, 피난민 및 인신밀수, 평화유지 활동, 대 테러 및 일반적인 역내 신뢰구축 조치에 관한 실질적인 대화체를 개최했다. ARF의 활동이 대화와 몇 가지 실질적인 연수 세미나에 그친 면은 있으나 이는 냉전 시절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변화라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두 번째 북한 핵 위기가 역내 협력의 문을 연 반면 특히 중국은 “차이점을 유지하면서 공통분모를 찾는” 방법을 추구하는 데 있어 예방적인 분쟁관리 역할을 전에 없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다시 말해 외교적 대화와 협상이 “양-다자간” 틀 안에서 다시 재개되는 것이다.

미래의 도전과제들과 전망

동아시아에서 안보 지역주의와 관련된 요소는 지금도 소수이다. 그리고 칼 도이치의 다원적 안보 공동체와는 전혀 다르다. 심지어 지역의 안보 다

자주의 요소들은 양자외교 및 미국의 전략적 존재에 의존하는 현재의 안보 질서를 즉각적으로 대체할 요소들을 제시하지 못한다. 미국, 일본, 한국에 있어서 ARF는 양자간 방위 협력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또 다른 중요한 경향은 유엔처럼 보다 광범위한 다자간 체제에서 개발된 국제적 규범과 관행을 대체하기 보다는 보완하는 역할로서 ARF와 같은 지역의 체제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위 “아세안 방법”은 주도적인 리더십 역할이 동남아시아의 중진국들에 의해 행해짐으로써 중국의 참여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드문 예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전과제는 지역화와 세계화 사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초국가적인 지역 또는 국제 조직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도전과제는 끊임없는 분쟁의 보다 효과적인 예방, 규제 및 해결을 위한 협력을 위해 다양한 국가 및 비 국가 간에 시너지를 강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며 동시에 동아시아 공동체 창설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자간 대화 및 경제 통합을 확대하는 것이다.

실제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부작용 여파를 진정시키면서 David Mitrany의 작동하는 평화체제(조각에 의한 평화(peace by pieces))로 가는 기능적 접근방법은 상당한 수준의 경험적 지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은 포스트 냉전 시대 동안 무력분쟁을 피해왔다.

제9장

국내정치와 지역공동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국내정치와 지역공동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동북아 통합을 위한 지도자론

정국내정치와 지역공동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지역 공동체 건설: 중국의 관점

국내정치와 지역공동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고르 로가체프
(Igor ROGACHEV)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계속적으로 전통적, 비전통적 위협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현재 규모와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테러리즘과 불법 마약 매매 및 정보 기술을 이용한 범죄를 포함해 초국적 조직 범죄, 핵무기 비확산의 현재 상황 및 기타 다른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과 이들 무기의 운송수단은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안보 도전 중 하나로 남아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필요성은 다극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올 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연례 회의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통합된 공동의 안보 체제를 건설하기 위한 단계별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여건 조성을 한다는 측면에서 상호작용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목표들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하부체제의 구체적 특징과 관련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구성하는 권위있는 다자간 국가간, 비공식적인 체제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들이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SCO), 아세안지역포럼(ARF), 아세안대화 파트너십 체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포럼(APEC), 아시아 협력대화체(ACD), 아시아 상호작용 및

신뢰구축에 관한 회의(CICA),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위원회(CSCAP), 동북아시아 협력대화체 (NEACD), 태평양 도서포럼(PIF)이 있으며 평화롭고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향하는 관점을 추구하고 있다.

러시아의 의회 구조는 유럽의 의회와의 연관성을 고도로 발전시킨 체제로, 유럽 내에 있는 기구들과 양 의회간의 협력에 대한 문서와 협정이 무수히 많다. 아시아와의 유사한 관계에 관해서 러시아는 개발되지 않는 엄청난 잠재력을 보유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 외교정책에 있어 동부 지역은 유럽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계 정치 및 경제의 세계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 질서는 환경보호, 에너지 및 핵 안보, 이동통신의 발전 및 기타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간 공동의 노력을 요구한다. 러시아의 의회는 역내에서 효과적인 국제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스템과 신뢰할 수 있고 솔직한 관계를 위한 파트너십 협력에 공통의 관심이 있다. 우리는 포럼 기간 동안 천연재해의 여파를 해결하고 응급대처, 수송물류, 생태학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의 협력, 전염병과의 전쟁, 문명국가와 이종교간 대화체 발전과 같은 공동의 연구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이러한 과제들이 단순히 일부 문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소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반적인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그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요인과 같이 여전히 심각하게 평화를 저해할 수 있는 긴장의 온실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이며 도전과제이다. 저자는 서로 협력하여 북한을 포함한 모든 ARF 회원국가들의 정당 이해를 충족시키고 안정적인 진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긍정적이다. 이 문제에 있어 중요한 과제는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러

시아는 한국과 북한의 대화에 관심이 있으며 한국과 북한 간의 긍정적인 발전과 한반도의 정치적 분위기 개선에 기여하는 프로젝트를 환영한다.

러시아는 한반도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의 긍정적 역학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진전은 6자 회담 프로세스의 재개로, 지난 12월 이후 6자 회담은 적극적으로 진전을 이루어 내고 있다. 물론 과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현재 당사국 간의 상충하는 측면을 고려할 때, 6자 회담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지만 구체적인 결과를 목도하고 있다. 저자는 주로 2월 합의서의 초기 단계 조치와 주요한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5개 실무 그룹 설립을 통해 6자 회담의 제도화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다.

러시아가 지속적으로 옹호했던 북미 양자회담이 재개되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양자회담이 어려운 결정이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6자 회담이라는 틀 안에서의 행동과 더불어 양자 회담이라는 프로세스를 가동시킨다는 것은 타당한 명분이 있다. 러시아의 견해로는, 미국, 북한 및 기타 참여국들의 대담한 합의로 인해 작년 7월~10월에 발생했던 사건들 후 증대했던 긴장이 완화되었으며 대립으로의 후퇴를 예방했다는 것이 최근의 주요 업적이라 본다. 현재 협상을 통한 정치적 프로세스는 한반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유일한 선택이라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당연히 6자 회담이 모든 이들이 바라는 대로 항상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다. 일부 참여국들 간의 상호 신뢰 및 이해 부족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6자 회담은 아직까지 예기치 못한 요소들 앞에 안전하지 못하며, 회담 진전에는 돌파구와 유감스러운 중단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있다. 불미스러운 사태의 예로 마카오에 있는뱅크텔타 아시아(BDA)의 북한 계좌와 관련된 상황의 타격을 들 수 있다. 3월 베이징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생산적인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2월 합의서 이행의 지연을 초래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반드시 복잡한 모든 문제를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기술적인 조치들을 포함해 제안된 조치들의 모든 면을 철저히 살펴보는 데

집중하고, 그 후에 구체적인 이행 사항들을 협상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성취된 결과를 공고히 하고 비핵화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미국과 다른 파트너 국가들이 제안한 6자 회담 참여 국가 간 외무 장관 회담 개최를 지지한다. 회담을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면 회담은 진정한 이정표를 남기는 회담이 될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4개국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김원웅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를 준비해 주신 김태환 제주도지사님, 권영민 제주평화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제주평화포럼 관계자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평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유재건 의원님, 남경필 의원님, 멀리 해외에서 평화의 섬 제주까지 발걸음 해주신 니시무라 야스토시(NISHIMURA Yasutoshi) 의원님, 장울링(ZHANG Yunling) 위원님과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 대부분 국가의 국회에 외교위원회라는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회의 외교통상위원회에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앞에 덧붙여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분단극복이란 민족적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1세기, 우리는 식민지배, 민족분단, 한국전쟁의 비극을 겪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운명을 가름하는 중요한 결정에 우리 자신의 의사는 배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남에게 맡겨왔던 것입

니다. 지난 세기 우리 국민이 겪은 수난은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었고, 이제 겨우 우리는 지난 100년간 민족수난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2000년 남북정상 만나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우리의 운명을 더 이상 남에게 맡기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20세기 들어 1950년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민족은 현대전의 참상을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무고한 양민들이 사망하였습니다. 국토가 폐허화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헤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서로 반목과 적대감으로 반세기 넘게 대치하면서 남북은 상호간 군사력 증강에 무수한 돈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은 본질적으로 강대국의 이해에 놀아난 ‘바보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을 겪은 바 있는 한국은 이 전쟁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한국의 진정한 우방은 과연 어떤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반도 평화정착과 분단극복에 기여하는 나라가 우리의 우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 유지와 분단 극복에 기여한다는 조건으로만 주한 미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냉전시대와와는 다른 주한미군의 역할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6자 회담의 근본 목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입니다. 북핵문제가 불거졌을 때 미국의 강경파들은 대북 무력제재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유엔대북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때 무력사용의 길을 열어놓은 유엔헌장 7장 42조를 삽입하자는 주장을 강경하게 피력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네오콘은 결과적으로 한미우호관계를 훼손시켜온 장본인들입니다. 일본 정부의 일련의 태도는 한반도 평화지키기에 대한 일본의 진의를 의심받게 해 왔습니다. 특히 미국의 보수세력이, 나치협력자들과 함께 부도덕한 일제침략협력을 한 세력에 뿌리를 둔 한국내 보수세력에 동조하는 행태는, 한미우호증진에 중요한 장애가 됩니다.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난 5.18시민혁명당시 미국의 오판이 한국내 반미정서의 씨앗이 되었다는 역사적 잘못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나치에 대해서는 준엄한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침략전쟁의 전범인 일본국왕의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미국의 전략적 국익에 치중한 아시아 정책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양심과 도덕을 경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일본은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고이즈미 총리가 2006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바 있습니다. 한국, 북한, 중국 등 침략전쟁의 피해국 국민들이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의 행위를 비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백악관에서는 중립이란 입장을 표했습니다. 만약 나치 잔학행위를 미화하는 행위에 대해 다른 국가가 중립을 지킨다면 미국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었을까 묻고 싶습니다.

최근 우리는 미 하원에서 논의되는 일본군위안부관련결의안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2001년 처음 미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관련결의안이 상정된 이후 이번이 4번째입니다. 미 의회가 일본군위안부관련결의안 채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베수상은 부시대통령을 만난자리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부시대통령은 '총리의 사죄를 받아들인다'고 화답했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왜 일본은 한국이 아닌 미국에 사죄를 했을까요? 또 왜 미국은 대신 사과를 받았을까요?

1998년 햇볕정책을 내세워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보다 많은 접촉과 협력이 평화를 만든다는 믿음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2006년 남북한 왕래인원이 연간 10만명을 돌파했고, 교역액도 13.5억불로 전년대비 27.8%로 증가했습니다. 북핵문제라는 정세불안요소가 상존해 있지만 남북경협사업은 꾸준히 발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성숙된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도·도로연결사업, 개성공단사업, 금강산 관광사업 등 남북 교류협력사업들은 바로 평화를 쌓는 사업인 것입니다.

또 분단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남북한 한민족의 평화와 안정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투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이 증가되고 남북이 신뢰의 틀을 공고히 하게 될수록 북한이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돕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동북아 일원으로 제 위치하고, 세계경제속의 일원으로 연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연착륙은 바로 남북한 공히 win-win하는 전략이며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를 견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2005년 9월 19일,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6개국 대표가 베이징에서 중요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의 골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북한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위해 경제지원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어 بانک델타아시아(BDA) 문제가 불거졌고 미국정부내의 네오콘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9.19 합의를 지킬 의사가 없고, 오히려 북한체제의 전복을 꾀한다는 판단을 하게 하였고, 이로서 6자 회담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이 지체 되었습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이 자신의 정책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는 것이 목표인지, 체제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목표인지를 택일해야 합니다. 미국도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지, 북한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목표인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호함은 새로운 불신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간 걸림돌이 되었던 بانک델타아시아(BDA) 문제가 해결되었고, 2.13 합의의 초기이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13 초기이행 이후의 과정을 진척시키는데 북한핵불능화 단계와 병행하여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 문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북한경제지원문제, 북미국교정상화 문제, 북한 핵무기 및 핵물질의 완전한 폐기 등 중요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노무현정부와 부시정부 임기 만료시기를 감안하여 올 가을에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남북한, 미국, 중국 4자 정상회담을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자 정상회담의 틀 안에서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경우 생산적이 되리라고 봅니다.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해 ‘대담한 주고받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제주평화포럼이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원탁회의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여러분, 한반도 평화에 관심과 열정을 갖고 참여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북아 통합을 위한 지도자론

남경필

경제통합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 공유로 말미암아 유럽 국가들은 처음부터 통합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상 유럽 대륙의 외부에서 파생된 인식의 근원을 추구하게 한다. 유럽이 원하던 원하지 않았든 단일 체제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국제적 경쟁자인 미국의 존재였다. 미국의 존재는 바로 유럽이 단일 체제와 통합을 추구한 이유였다.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인해 약화된 유럽의 주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미국의 가파른 성장세는 유럽 국가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특히 미국의 영향력이 세계적으로 확대되자 미국의 경쟁국인 프랑스와 독일로서는 유럽 통합을 담당하고자 하는 충분한 동기가 생겼다. 유럽 통합을 가능케 했던 또 하나의 조건은 유럽 국가들 사이에 군사 안보 분쟁의 소지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었다.

동북아시아로 눈을 돌려 보자. 한국, 중국, 일본, 이들 세 국가들이 통합을 추구해야 할 중대한 외부적인 공통의 위협을 찾기 어렵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이들 세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할 것이다. 왜냐하면 3국이 동북아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과 일본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군비 경쟁과 미국과 중국 간 장기적 주도권을 향한 잠재적

경쟁은 협력을 저해하는 상호 불신의 중대 요인들이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동북아시아에서의 유럽 연합과 같은 통합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동북아 지역의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 핵 문제, 대만 독립 문제와 중·일 군비 경쟁, 이 모든 문제들은 지역의 안보 틀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분쟁 변수의 잠재적 요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역설적으로 유럽의 경험과는 달리 동북아에서의 협력은 이러한 내부적인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듯 하다.

비군사적인 분야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처럼 이러한 노력들이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2003년 10월, 한국, 중국, 일본의 지도자들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3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리고 후에 이들 세 국가들 간 경제·사회·문화 협력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2004년 11월, 3국의 세 지도자들은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3 회의에서 다시 회동을 가졌으며 연차진행보고서 제출에 합의하면서 ‘행동 전략’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들이 틀림없이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문제가 2004년 말에 다시 불거지고 2005년 3월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다케시마)” 조례를 통과시켜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증폭되었다. 이 후 10월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분노케 했다. 한편 2002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개시되었고 끊임 없이 한국인의 방어적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정치 지도자들도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 영향을 받아 그 결과 2005년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했으며 3국의 지도자들이 했던 약속은 완전히 이행되지 못했다.

정치인으로서, 필자는 그 어떤 정치인도 국민의 지지 없이 정책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중국의 동북공정이 국내 정치에서 지니는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한다는 원대한 비전을 꿈꾸는 지도자라면 여론을 쫓아

가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동북아시아는 용기 있고 비전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 갈등과 분쟁이 국내에 등장할 때마다 그 뿌리를 잘라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우리는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역사 문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며 지역의 안정성을 해치는 영토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충분한 자제력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통합과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통해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필요를 옹호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한국, 일본, 중국이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예전 보다 더욱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다. 상호 경제 의존성은 3국의 경제적 기반을 지탱한다. 경제적 문화적 교류 측면은 정부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해 왔다.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협력을 정치, 군사, 안보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가이다. 이는 정치권 리더십의 의지에 상당 부분 달려 있다. 따라서, 우리는 확고한 신뢰와 믿음을 통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국내 정치 상황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정치 지도자가 3국에서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국내정치와 지역공동체 건설: 무엇을 할 것인가?

니시무라 야스토시
(NISHIMURA Yasutoshi)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아세안 국가들, 일본, 중국, 한국, 인도, 호주 및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들의 상호 경제 관계를 공고히 하고 아시아에서 이들의 경제적 관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행보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구분 없는 경제 지역”을 실현하기 위한 아시아 전체의 경제 통합의 제도화된 기반을 설립하기 위함이다.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간 분야는 이웃 국가에 생산과 유통 네트워크를 개발해 왔으며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생산 네트워크를 아시아 전체로 확대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함이다. 이러한 국경을 넘나드는 민간 분야의 기업 활동은 이미 동아시아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실상의 경제 통합을 실현했다. 지역 경제 통합을 향한 각국 정부의 최근 행보는, 현재의 경제 관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안정화하여 실질적인 사실상의 경제 통합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적인 틀을 통해 아시아의 지속 가능한 번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개발되고 실질적인 경제 통합의 혜택을 공유하여야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경제를 발전

시킬 수 있는 윈-윈 상황이 오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1)는 유럽에서 경제 통합의 불을 지폈다. 이는 또한 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과 패전국인 프랑스와 독일 간의 “국제적 경제 관계”를 제도화하는 인위적인 틀을 만드는 기원이 되었다. ECSC의 설립은 1968년 6개 회원국들 간에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2002년 공동 통화를 발행하는 일로 이어졌다. 목도했듯 유럽공동체의 창설은 유럽의 경제 통합에 기반하여 단계별로 진행되어 왔다. 비록 실질적인 사실상의 경제 통합이 이미 이루어진 아시아와는 상황이 다르다 해도 유럽은 이와 대조적으로 인위적인 경제적으로 숙명적인 공동체가 처음 창설되었다. 유럽이 경험했던 “지역 공동체 건설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사실은 “경제”가 “지역 공동체 건설”의 프로세스에서 대단히 중요한 “열쇠”라는 사실이다.

각국은 나라마다 다른 나름의 문화와 역사가 있다. 유럽 국가들 또한 각각의 문화와 역사가 다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들은 문화와 역사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단계도 다르고 정치 체제와 시장 경제 성숙의 수준도 대단히 다양하다. 따라서, “지역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을 진행할 때 이러한 “아시아의 다양성”을 기억해야 하며 경제적 측면에 집중하면서도 지역의 경제 발전을 보다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각국 간의 경제 관계는 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 간에 무역과 투자의 규모가 여전히 확대되고 있다. 중일 간 무역규모는 10년 전 보다 3배 증가했고 중한 간 무역 규모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 무역 규모는 중·일 혹은 중·한만큼 확대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한·일 간 무역 규모 확대를 목표로 하는 한·일 EPA가 체결되면 양국에 엄청난 잠재적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일본과 한국의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혜택을 국민들에게 주기 위해 가능하면 조속히 이러한 잠재적 혜택을 추구해야 한다.

관세 철폐와 경제 관련 시스템의 조화를 통해 “국가적 장애물”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전 지역에도 분명 이득이 된다. 그러나 각국은 나름의 상황이 있으며 다양한 이해 관계와 “이익 및 불이익 갈등” 산업별, 개

인별로 나라마다 다르다는 것도 사실이다. 양자간 FTA를 체결한다 해도 이해를 조율하는 것은 전체 지역을 다루는 지역 경제 통합의 설립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점이다. 개인의 이해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국가 간의 이해를 조율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아시아 국가의 정치 지도자로서 우리에게 놓인 가장 중요한 임무는,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때때로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국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여 중국에는 성공적인 조율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개진하는 것이다.

유럽의 공동체 건설 역사가 보여주듯이 지역 공동체는 회원 국가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가져온다. 그러나,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강력한 “정치적 의지”가 분명히 필수적이다. 더욱이, 그러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에 기반하여 얽히고 설킨 내적 이해 관계를 조율하는 데 있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 유럽의 역사가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 건설을 목적으로 각국의 복잡한 국내적 이해 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치적 조치는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회안전망의 형성 및 강화, 고용 이동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고안 및 아베 내각이 추진했던 “재도전”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기반 설립이 포함될 것이다. 정책 수행을 포함해 이러한 다양한 정치적 결정은 각국의 상황에 정통한 각국 정치인인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다.

아시아의 경제 통합은 막 시작되었고 꾸준히 이루어질 것이다. 아시아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국민의 커다란 기대를 잘 인식하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각국 정책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지역 공동체 건설의 원대한 목표를 공유하고 우리를 향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임무를 성취할 때이다.

지역공동체 건설: 중국의 관점

장윤링

(ZHANG Yunling)

중국의 성공은 개혁과 개방 정책에 달려있다. 중국은 지속 가능한 모델을 채택함으로써 중국 발전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 중국은 적극적으로 역내 협력 및 공동체 건설에 참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람직한 평화와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중국에 중대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역이다. 동아시아의 구상과 정체성의 뿌리가 중국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에 있다.

중국의 신개발 전략

중국은 경제 개발에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GDP, 해외 무역, 외환 보유고 등 전체적인 규모에서 중국은 세계 상위권이다. 하지만 인구대국으로서 국민 일인당 소득은 낮다. 개발도상국으로서 경제 성과의 효율성은 세계 경제국가들 중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개혁을 추진하려는 국가로서 정치적 사법적 시스템이 현대화와 거리가 멀다. 따라서, 높은 경제적 효율성, 높은 국민 복지 및 경제 개발, 정치 및 사회 발전의 높은 통합을 이루어내는 선진 경제국가가 되기 위해 중국이 가야 할 길은 멀다.

중국은 2020년까지 복지 사회 및 중진국이 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다. 중국은 이러한 원대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향후 15년~20년의 기간을 기회로 삼고자 한다. 그러나 에너지와 자원 자격이 치솟고 있고 환경 악화

및 사회적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개발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학적 개발 구상에 입각한 지속 가능한 모델을 채택하는 것이다. 중국은 미래의 경제 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 및 사회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자본과 노동을 더 많이 투입하기보다는 혁신에 더 큰 힘을 쏟아야 한다.

중국 경제는 20년 이상 높은 성장률을 누렸다. 중국이 앞으로 그러한 고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답은 낙관적이다. 왜냐하면,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과 열린 개혁, 그리고 거시 경제 활동을 능숙하게 잘 관리하는 능력을 갖춘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은 엄청난 개발 잠재력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은 향후 20년 동안 성공적인 개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 경제 개발의 도전과제는 분명하다: (1) 비효율적인 경제 성장 부문에 대한 구조 조정, (2) 성장을 위한 새로운 지역 창출·신분야, 신지역, (3) 국내 구매력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에 있어 외부 시장에 대한 의존도 감소, (4) 균형 잡힌 경제, 정치 및 사회 개발.

장기적이고 평화로운 환경 조성의 필요성

중국에게는 원대한 현대화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적인 평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평화와 개발은 중국 정부의 중요 정책이 되었다. 중국의 부상은 중국이 평화를 추구하고 책임 있는 국가로서 할 바를 다하는 한 지역 및 세계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중국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미래 지향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을 채택했다: (1)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질서를 형성하는데 일조하는 세계 열강들, 특히 미국과의 협력적 전략 관계, (2) 양자 및 지역적 노력에 기반한 선린 정책, (3) 분쟁 및 갈등을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역할을 다하고 원조를 제

공하여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및 지역의 평화와 발전에 대한 기여도 증가, (4) 새로운 정신과 가치로 중국에 조화로운 세계와 지역을 설립한다.

중국은 지역 협력 및 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것이 바람직한 평화와 발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경제 국가로서 중국은 지역 국가들에게 증대되는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협력 및 공동체 건설을 위해 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지역 협력 및 공동체 건설은 중국과 다른 국가들 간, 특히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강력한 국내 지지

중국은 개방 정책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대외적인 전략 및 정책을 지지하는 데 있어 강력한 국내 지지를 받았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자유화의 도전에 대응하도록 한 좋은 사례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자유화에 보다 확신을 갖게 되었다. 개방 정책의 두 번째 단계로서 중국은 “해외 투자 전략”을 채택했다. 이는 반드시 지역무역협정과 다른 협력 체제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중국은 모든 다면적 기반 하에서 동아시아의 협력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동아시아는 중국에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제공하는 지역이다. 동아시아의 구상 및 정체성의 뿌리가 중국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에 있다. 비록 이것이 중국이 EU식의 지역 기구를 창설하기 원한다는 것을 꼭 의미하지는 않는다 해도 말이다.

그러나 중국은 불균형적인 개발에 직면해 있다. 이는 중국정부가 취약한 지역과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사회 정책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유화는 취약한 분야 (농업, 중소기업)와 비숙련직 노동자 (농부, 실업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이 개방 사회가 되어 감에 따라 정부로 하여금 보다 사회 친화적인 정책을 설립하도록 압력을 가할 다른 목소리가 강하게 나올 것이다. 공동체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엘리트뿐만 아니라 강력한 사회적 지지와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민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다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제10장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외교관의 시각

동아시아 안보를 번영을 위한 미국의 중장기 전략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일본의 시각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유럽의 시각(1)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유럽의 시각(2)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제: 한국의 시각

동아시아 안보와 번영을 위한 미국의 중장기 전략

알렉산더 버시바우
(Alexander R. VERSHBOW)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다. 비록 미국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속한 것은 아니지만 미국과 동북아의 역사 및 동맹관계는 미국이 동북아에 전념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지금 한국인들과 유엔 협력국들과 함께 한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싸웠던 한국전 57주년을 기억하고자 한다. 현시대의 동북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해 미국은 중장기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장기적이지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할 과제는 지역간 협력을 조성하고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동북아의 역동적인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것이다.

중기적 목표: 한반도의 비핵화

먼저 중기적 목표 과제를 살펴보자. 그것은 바로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이 말해 주듯 이는 말로 하긴 쉽지만 실행에 옮기기는 어렵다.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은 동북아에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이 되고 테러리스트들이 핵 물질을 획득할 수 있는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보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다행히 동북아는 6자 회담을 통해 조직적이고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다. 미국과 더불어 한국, 일본,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핵무기가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미치는 위해성과 이로 인해 북한 주민이 동북아의 다른 국가들의 누리는 번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 6자 회담국가들은 북한의 지도자에게 분명한 선택을 제시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비핵화를 하면 안보 보장, 경제 및 에너지 지원,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를 얻게 될 것이고, 비핵화를 거부할 경우 지속적인 고립, 제재 및 경제적 침체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선택이다.

아시아시피, 지난 주 우리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어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바로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바로 두 달에 걸친 안타까운 6자 회담 지연 후 뱅크델타아시아(BDA) 자금이 러시아의 한 시중은행으로 송금되었고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초청하여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중단 및 봉인을 감시하는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발표했다. 2.13합의의 “초기 조치” 실행으로 가는 대단히 중요한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이러한 발표를 환영했다. 그리고 다음 주 초 평양에 도착할 IAEA 사찰단이 신속하게 북한 정부와 생산적인 합의에 이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북한 정부가 조속히 영변 핵 시설을 가동 중단하여 2.13 합의의 실행에 보다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의 목적 중 하나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지체 없이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 다른 당사국들은 북한에 증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2.13 합의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13 합의 실행의 유감스러운 지연 사태로 돌아가 보자. 6자 회담 당사자국은 모두 지금쯤에는 영변 핵 시설의 가동 중단이 이루어지길 원했다. 그래서 BDA 자금이 단순히 양도되지 말고 국제적으로 송금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유감스러웠다. 하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요소도 있다. 북한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요소인 6자 회담 참여국에 대한, 특히 미국에 대한 신뢰 부족이다. 미국은 자금 송금을 준비하며 엄청난 인내심과 융통성을 보여주었다. BDA와 관련된 법적 규정으로 인해 송금 문제는 대단히 어려웠으며 더 중요한 것은 무기 확산과 일련의 불법 활동과 관련이 있는 국가와의 거래를 꺼려하는 많은 국가의 은행들로 인해 일의 진행이 힘들었다. 하지만 결국 러시아와 한국의 도움을 받아 미국은 이를 해결했다.

이와 유사하게, 힐 차관보의 평양 방문은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진전을 원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6자 회담이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할 수 있도록 미국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힐 차관보의 방문은 6자 회담의 틀 안에서 북한과의 양자 회담을 개최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번 방문의 기회는 힐 차관보가 다른 당사국들과 6자 회담 재개를 논의하기 위해 동북아를 방문하는 동안에 있었는데 한국, 중국, 일본 및 러시아는 모두 그의 방문을 잘 알고 있었다. 양지에치(YANG Jiechi) 중국 외무장관 또한 북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것이다. 미국은 이런 중국의 방문도 환영한다. 왜냐하면 미국은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함께 협력하면 할수록 우리가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는 IAEA의 감시아래 영변 핵 시설의 신속한 가동 중단을 기대한다. 그 후 6자 회담국가들(공식적인 차원과 특정 사안에 대한 실무 차원의 회담)이 만나 다음 단계를 위한 로드맵에 동의하기를 바란다. 바로 북한의 모든 핵 시설의 불능화와 북한의 모든 핵 무기 및 프로그램의 신고이며 이는 모두 3차와 마지막 단계에서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몇 달 안 일정한 시점에서 우리는 6자 회담국가 외무 장관들이 지금까지의 진전을 평가하고 비핵화 노력에 다음 단계로의 이행 촉진을 위해 회동을 갖기를 바란다. 그러나 솔직히 계속적인 앞으로의 진

전은 북한 지도자 측의 정치적 의지를 요구하는 만큼 아직 이를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하여 해야 할 많은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특히 미국 정부가 6자 회담 과정의 보다 광범위하고 잠재적인 가치를 어떻게 바라고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단기적으로 6자 회담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이 관계 정상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설립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미국은 또한 6자 회담 포럼이 동북아 지역의 지속적인 다자간 협의 및 협력의 틀이 되기를 대단히 희망한다. 5개 당사국들이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그들의 단합된 수단과 자원을 사용하는 것처럼, 동북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은 전통적인 안보 문제이든 경제적 도전이든, 혹은 조류 독감, 결핵, 사스와 같은 초국적 보건 문제이든, 황사와 같은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환경 문제이든,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대처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의 단합된 수단과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적 차이점을 고려해 볼 때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 6자 회담이라는 평화 포럼을 대표한다는 사실의 중요성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장기적 목표: 민주주의 구축과 경제 발전

미국이 동북아시아와 세계 다른 곳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는 데에도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이곳 동북아시아의 민주주의 구축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두 국가인 한국, 일본과 동맹 관계를 형성한 것은 2차 세계 대전 후였다. 전후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금융적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동시에 견실한 민주 사회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주었다. 미국의 관여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에게 고통과 소외를 안겨 준 격정적이고 폭력적이었던 시대가 끝난 후

이 지역을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강한 동맹국이며 미국이 추구하는 많은 가치와 특성(언론, 종교, 출판 및 집회의 자유, 공정하고 개방된 선거에서 경쟁하는 정당, 그리고 활기차고 자유로운 시장 경제)을 공유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들이 확산되어 동북아 전체 지역이 받아들일길 희망한다.

우리는 또한(미국의 이익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동북아 지역의 역동적 경제 발전에 참여하는 데에도 긴밀한 관심이 있다. 경제 발전은 동북아시아의 강력한 또 다른 축이다. 한국과 일본은 세계 최대 경제 국가에 속하며 중국과 더불어 3국은 세계 수입의 18%, 세계 무역의 14%를 차지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지역은 세계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성장을 이루었으며 동북의 광대한 자원으로 더 많은 성장을 이룰 잠재력이 있다. 과거 미국의 지원은 한국과 일본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 국가 의회의 비준을 받는 즉시 동북아시아의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에 동력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협상된 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심이 증가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보다 증대되는 것은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며 미국은 이에 보다 기여하고자 한다.

이 곳 한반도에서 북한과 한국 간의 경제 협력의 싹이 트고 있으며 보다 많은 협력이 이루어진 잠재력이 있다. 개성공업단지는 남북관계의 강한 상징일 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자유시장경제를 맛 볼 기회를 제공한다. 지난 달 남북한 철도 운행 개시는 북한과 한국을 아시아 전체 국가들과 연계시키고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연결한 또 다른 대단히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우리는 남북한 포용정책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 본다. 동시에 여기에서 필자가 논의하고자 했던 첫 번째 주제와 연결시켜 보자면, 미국은 “일상적” 남북관계로 돌아가기 전 북한이 2.13 합의 실행에 진전을 이루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포용정책이 결국 북한을 더 많은 개방으로 이끌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한국과 외부 세계를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고 동북아 경제 통합의 일반적 추세에 참여한다면 상당한 경제적 혜택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개성공단과 남북한 철도 연결과 같은 경제 프로젝트는 남북한 간 지속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엄청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들에게 잠재적 번영 및 보다 많은 개방을 안겨 줄 것이다. 사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증대되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보다 공식적인 경제통합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보다 광범위한 정치 협력 및 안보, 평화 대화체제의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동북아 지역 국가들은 반드시 공동의 노력을 모아 가장 시급한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바로 북한 핵 무기와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이다. 미국 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만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에 합의할 것이며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전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북한과 남한의 평화적인 통일이라는 한국의 목표를 지지하는 부분적인 이유는, 통일된 한국의 민주주의와 번영이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기도 하다.

결론

6자 회담과 APEC와 ARF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경제 협력을 통해 동북아 국가들은 이미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지역 지도자들과 미국은 최대한의 효과를 위해 이러한 다자간 협력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러시아에서 미국 대사로 역임하며, 필자는 각국 정부가 다르고 해결되지 않은 역사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 추구라는 목표로 인해 동북아 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진정한 돌파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미국은 계속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며, 역내 무역 자유화를 증대시킬 것이다. 또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와 번영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일본의 시각

오시마 쇼타로
(OSHIMA Shotaro)

I. 동북아시아: 강점과 취약점

A. 강점

a) 활기찬 경제·지역 통합

동북아는 세계의 약동하는 성장센터이다. 중국은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연 10% 이상 성장해오고 있으며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일본은 10년 이상의 경기침체 이후 괄목할 만한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국가들은 점점 통합되고 있다. 일본, 한국, 중국은 한 국가가 다른 두 국가에 최대 무역국이 아니라 각각이 경제 대국이다.

b) 역내 국가들 간의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동북아 국가들은 서로 우호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는 정부 최고위층을 포함해 모든 차원에서의 강도 높은 협의체로

강화된다. 지난 10월 취임 직후 이루어진 아베 총리의 중국, 한국 방문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대한 진전이었다.

c) 강력한 미국의 존재와 관여

동북아는 미국의 강력한 관여와 존재로 인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B. 취약점

a) 냉전의 잔재

한반도의 남북한 분단과 같은 냉전의 잔재와, 대만해협을 두고 발생하는 긴장상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보다 광범위한 국제적 파급효과를 지니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잔재들”의 부산물인 작년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10월 핵 실험으로 이어졌고 동북아 지역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했다.

b) 민족주의의 부상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각각의 민족적 정체성을 검토하는 시기를 겪고 있다. 경제적 성공은 “새로운 중산층”을 가져왔으며 각국의 전통적인 시각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이 국가적 진화 과정에서 볼 수 있는 대단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는 반면 항상 “극단주의자” 또는 “배외주의자”가 부상할 수 있다는 위협을 경계해야 한다.

II.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어젠다

아래는 동북아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들을 위한 어젠다이다.

A. 긴급한 문제 해결: 북한

미국과 함께 동북아 국가들은 북한의 핵 무기, 미사일, 한국인 및 일본인 납치 사건을 포함한 인권 문제, 위조 및 마약밀매와 같은 불법 활동과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계속해서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바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 북한이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일본은 양자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느 때라도 북한과 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는 일본의 전략적 이해이기도 하다. 동시에 일본 국민들은 북한 핵 무기, 미사일 및 납치 사건과 같은 위협이 존재하는 한 관계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북한에서 납치된 일본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

B. 대화 강화

동북아 국가들은 국가 간 대화를 강화해야 한다. 6자 회담은 주요 동북아 구성원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할 좋은 기회이다. 일본-중국-한국 3자 대화체와 같은 형식도 유용하다.

C.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 확대

동북아 국가들은 이미 에너지 개발 및 환경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양자간, 그리고 3자간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노력의 실행과 확대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성장을 활기차고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국가 간 신뢰와 상호 이해가 강화될 것이다.

D. 동북아 지역 내 강력한 미국의 존재와 관여 유지

동북아에서 미국의 존재와 관여는 앞으로도 역내 안정과 번영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일본, 한국과의 동맹관계와 같이 동북아 국가들은 계속해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유지해야 하며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관여를 공고히 하고자 함이다. 또한 미국이 중대 문제에 대해 동북아와 같은 입장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다.

E. 극단적 민족주의 억제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민족주의는 지역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미래의 노력을 좌절시킬 수 있으며 과거 결실의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동북아 안정과 번영에 치명적인 위협이다. 동북아 각국 정부는 이와 같은 민족주의가 부상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국가간에 민족주의적인 분노와 감정을 자극하는 일을 피해야 할 것이다.

Ⅲ. 동북아시아의 미래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라는 맥락에서, 즉 동북아와 유럽 경험의 상관성과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A. 상관성

동북아의 지정학적, 역사적, 전략적 구성은 유럽과 비교해 봤을 때 차별화되어야 한다.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다원주의를 채택한 것이 아니며, 동북아에는 냉전 시대에 유럽과는 달리 분명한 서-동의 대립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았다.

a) 보편성

동시에 유럽의 경험은 보편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지속 가능한 번영은 오로지 자유와 민주주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제도화된 대화와 협력의 이점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힘들다.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유럽의 시각 (1)

노바트 바스
(Norbert BAAS)

유럽연합이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는다. 이러한 전무후무한 역사적 성취는 선견지명이 있는 유럽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의 결과이며, 유럽의 시민들이 단합과 통합, 그리고 유럽의회와 유럽집행위원회와 같은 공동 기관에 주권의 일부를 이양하는 것을 통해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분열을 극복한 결과인 것이다. 유럽연합은 현재 27개 민주적인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5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최대 무역 블록을 형성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미래지향적인 프로젝트와 경제적 비중, 기술적 과학적 능력과 문화적 다양성으로 인해 역동적인 동북아시아 세계에 매력적인 파트너라 할 수 있다.

공동외교안보정책 덕분에 유럽연합은 평화를 정착시키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인권 및 법치주의 증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유럽연합의 중대한 개발 지원은 유럽연합이 평화롭고 안정적인 기구라는 개념을 얻는데 크게 기여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유럽연합은 개발도상국에 공공원조로 4백 3십억 유로를 기부했으며 이는 25개 회원국 GNP의 0.34%와 맞먹는 규모이다. 안보방위정책(ESDP)의 틀 내에서 유럽연합은 지난

8년 동안 16개의 민간 및 군사 임무를 수행했다. 이러한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유럽연합 인근국가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제에서의 임무는 아시아의 도전과제들에 지리적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일이었다.

유럽연합이 동북아와 진행하는 주요하고 가장 포괄적인 포럼은 아셈(ASEM)회의로 정기적인 아시아-유럽 회담이다. ASEM은 북한을 제외한 모든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집행위원회와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2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있다. 올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함부르크에서 열린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처음으로 고등대표관 솔라나(Solana)와 판무관 페레로-왈드너(Ferrero-Waldner)가 참여했다. 외무장관들은 국민들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중요성이 있는 분야, 예를 들면 사회 및 교육 정책 분야로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들을 촉구했다. 재정부 차관들 간 첫 회의가 한국 무주에서 최근 열렸다. ASEM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아세안에 더불어 중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인도, 파키스탄, 몽골 및 동남아시아와 같은 모든 국가들이 ASEM에 참여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아세안 사무국이 대표적이다. ASEM 공동체는 세계 GDP의 약 50%, 세계 인구의 58%, 세계 무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ASEM에서 논의된 모든 운영상의 문제는 현재 국제적 어젠다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ASEM은 유럽연합과 아시아 주요 국가들 간 양자관계의 굳건한 네트워크에 기반하고 있다. 이는 미래를 위해 내재된 강점과 잠재력에 도움이 된다. 유럽연합은 FTA 체결 및 국가간 정치 관계 강화와 동반자 관계 및 협력 협정(PCA)을 통해 아세안, 인도, 한국과의 관계를 보다 진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다. 서로가 이루어 낸 기여를 완전히 활용하고 망설이는 이를 설득함으로써 공통의 세계 도전과제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긴밀한 유대관계와 일본과의 전략적 우호관계 또한 북한 핵 문제와 같이 우리가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아시아 주제에 포함될

다. 이는 유럽연합의 중국, 러시아와의 협의 주제이기도 하다.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한국전 당시 남한의 편에 서서 유엔의 지휘 아래 싸웠다. 한국과의 관계는 건실하며 보다 많은 잠재력이 있다. 유럽연합은 현재 중국 다음으로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상대국이다.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은 북한에 7개의 외교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6자 회담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지원할 것이다. 성공적인 6자 회담의 결과에 유럽연합의 큰 이익이 달려있다. 이미 수년 동안 프랑스, 독일, 영국과 유럽연합 고등대표관(E3/EU), 3국(중국, 러시아 연방, 미국)은 이란의 비핵화를 위해 상당한 수준의 공동노력을 실시해 왔다. 6자 회담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로 보여지는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진전은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바람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관성 있는 핵확산금지 정책은 강력하고 진실한 유럽의 이익을 될 것이다.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아시아가 과연 유럽의 통합으로부터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 아세안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세안이 중국, 일본, 한국 간의 관계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또한 전적으로 이들 국가의 전략적 목표와 미국과의 관계에 따를 것이다. 오늘날 6자 회담은 이들 3개국과 미국 간 협력의 도움을 받았다. 독일은 통일의 외부적 측면을 다루는 데 있어 2+4 협상을 한 경험이 있으며, 이는 구소련의 개혁정책이 개혁과 국민들의 평화적 대변혁을 가능케 한 후 미국과 당시 구 소련 간 역사적 해빙으로 이어졌다.

언뜻 보면 한국의 상황이 이와 유사해 보이지만 중요한 면에 있어 다르다. 바로 통일의 외부적 측면이 아닌 비핵화가 협상의 주 목표라는 점이다. 그리고 독일 통일의 뒷받침이 되었던 국민의 움직임이 북한에서 아직까지 부족하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간 6자 회담의 공통 분모는 궁극적으로 남북한이 원한다면 통일이 가능한 틀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보다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의 3대 국가와 관련하여 중국, 일본, 한국 간의 다자간 협력을 넘어서는 통합을 위한 진지한 노력

은 화해를 위한 보다 깊은 책임감과 공통의 가치를 위한 굳건한 기반을 요구한다.

유럽연합은 조만간 이미 제한적인 규모로 시작된 활동들을 추구하는 데 있어 크지 않으나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의 변화의 경험에 기반하여 북한이 개혁을하기로 결정한다면 북한을 위한 소중한 충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6자 회담의 기반 위에서 안보와 협력에 관한 다자간 시스템이 한국의 평화협정 체결 후 혹은 평화협정과 병행하여 설립될 경우 유럽연합이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의 이니셔티브: 유럽의 시각 (2)

브라이언 맥도널드
(Brian McDONALD)

동아시아의 무역 및 투자 관계가 매년 증대되고 있다. 동아시아는 기업, 관광 및 대중문화를 통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으며, 이미 아세안+3, 동아시아정상회담 및 6자 회담과 같은 신생 정치 대화 포럼들이 생겨나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적인 권력 체계의 균형이 진정한 지역 경제안보공동체로 나아갈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렇게 될 때 만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20세기 전쟁의 공포에서 역사상 유례없는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진보했다. 현재 유럽연합 내 회원국 사이의 전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주권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유럽인들은 이웃국가를 잠재적 위협으로 보지 않고 우리 시대 도전과제를 해결할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한다.

지난 50년 간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어 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필자는 많은 중요한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의 부재가 통합을 가로막지는 못했겠지만, 통합을 훨씬 더디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했을 것이다.

- 공통적 가치 존재
- 통합된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
- 공동체 건설을 위한 단계적 과정 추구
- 강력한 초국적 기관 설립
- 경쟁체제에서 주권 공유 체제로 이동

비록 모든 통합 모델이 다르고 국내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만약 동아시아가 보다 깊은 통합으로 진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상당부분 이러한 원리들에 달려 있을 것이다.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제: 한국의 시각

박인국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는 21세기 가장 역동적인 경제 강국으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이들 3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GDP의 18%, 세계 인구의 23%, 세계 무역의 17%를 차지하며 유럽연합과 NAFTA에 이어 세계 경제에서 3위의 자리를 기록하고 있다. 3국 간 모든 분야에 걸쳐 상호의존성이 확대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추세이다. 이는 중국 경제가 경제 대국으로 전면적으로 부상하면서 특히 경제, 무역 및 인적 교류 분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지역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과 투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에 있어 분업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이들 3국 간 무역과 경제 성과는 동북아시아 국가 관계의 기본은제로섬 게임이 아닌 포지티브섬 게임이 되는 것이며 역동적 경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엄청난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필자는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이해당사자'가 되도록 권고한 것이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비 경제 분야에 관해서는 비록 여전히 더딘 속도로 시작에 불과한 상태이지만 아세안+3, EAS, APEC, ARF 및 ACD와 같은 지역적 다자간 틀 내에서 다양한 협력 이니셔

티브에 참여하는 국가들에 의해 긍정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동북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긍정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길에는 수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있다.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추세에 반하여 과거 역사와 이념, 안보에 잔재하는 양금은 계속해서 정치적 대립의 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진정한 공동체 건설의 가능성은 없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대부분의 대사들이 언급한 것처럼 한반도의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시금석을 놓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제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설에서 인용해 보자면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도 6자 회담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보 협력을 전담하는 다자간 협력 체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늘 필자는 동북아시아 공동체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일환으로 유럽의 통합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동북아시아 지역에 적용 여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동북아시아 공동체라는 장기적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 공동체에 관한 보다 큰 합의가 정치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전문가 및 시민 사회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동아시아 비전그룹은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에 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폭넓은 대화를 위한 비전 그룹으로 동북아시아의 지역 통합을 위한 분명한 비전과 구체적인 협력 이니셔티브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1970년 유럽의 ‘워너 보고서(Werner Report)’에서는 유럽 내에 경제 및 통화 연합을 창설하기 위한 상세한 행동 계획을 제안했다.

둘째,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동북아 국가들 간 상호 존중 및 신뢰에 기반한 다자간 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6자 회담의 동북아 평화와 안보 메커니즘에 대한 실무그룹의 출범은 의미 있는 진전이며 동북아시아의 다자간 안보협력 촉진에 밝은 미래를 안겨 주고 있다.

6자 회담은 참여국가들의 다양한 이해 해결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프로

세스이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 우리는 북한의 위협 마인드를 변화시키고 북한이 핵 무기를 포기하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설득시키기 위함이다. 어제 송 외무장관이 소개했듯이 한국과 미국 대통령은 작년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법”에 합의했다. 그러나 전략적 사고는 6자 회담의 목적과 원칙을 담은 9.19 공동 성명서에도 잘 반영되어 있다. 필자는 헬싱키 합의의 “포괄적 상호주의” 원칙이 유럽에서 그 목적을 구현하는 데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듯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법”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보다 잘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원칙이나 도구로서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우리는 보다 가시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안보와 역내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해 봤을 때, 초기 노력은 경제 분야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자유무역협정 촉진, 금융 및 환율 분야 협력, 그리고 에너지와 환경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금융 위기 이후 향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위기를 극복할 공동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소위 아시아 통화기금(AMF)의 설립이 논의되었다. 더욱이 아세안+3 재정 장관 회담이 2007년 5월에 개최되는 동안 10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 중국, 일본은 최대 8백억 달러에 달하는 양자간 통화 스왑 지역 네트워크인 치앙마이 합의를 금융위기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다자간 구조로 전환하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넷째,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유럽이 안정과 번영을 성취하도록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감안해 볼 때 미국의 참여와 기여가 동북아 공동체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동북아 국가들은 과거 역사를 부정해서는 안되며 역사에 대해 공동의 미래 지향적인 이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진지한 자기반성과 과거 역사에 대한 자책을 통해 독일은 빈번한 “전쟁과 분쟁”으로 점철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조치를 취했다. 특히 프랑스, 폴란드와 공동으로 역사 교과서를 편찬하자는 독일의 제안으로 전후 세대에 정확하

고 올바른 역사 이해를 권장함으로써 분열의 과거를 극복하고 통합의 미래로 나아가는 심리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유럽의 통합이 광범위한 협력 범위를 나타내는 NATO, OSCE, EC와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와 같은 여러 지지 기반을 두고 더욱 강화된 것처럼, 동북아 공동체 또한 공동의 우려 사항, 특히 새롭게 나타나는 비전통적인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그렇게 새로운 비재래식 위협에는 국제테러, 불법이민, 환경오염, 초국적 범죄, 전염병 및 자연재해, 황사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경을 초월한 문제들로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노력 없이 해결될 수 없다. 이러한 도전과 제들은 국가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반면, 동시에 공동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들로 하여금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고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제11장

북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언론인의 시각

북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남한에서 북한 실상 취재기: 인접국가 밀접취재를 위한 기나긴 여정

북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언론인의 시각

북핵 위기에 관한 시각

북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손지애

북한 핵 위기를 취재하는 것은 마치 제멋대로인 회전목마를 타는 것과 같다. 어느 순간에는 북핵 위기가 해결 국면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 상황이 바뀌고 여러 말들이 오가고 그러다가 결국 처음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폭발 직전까지 가면서 증오의 말들이 오고 가기 시작하고,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 실험이 실시되고, 그리고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현재의 시간과 상황에서 다시 한번 북핵 위기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혼돈과 전쟁의 시나리오 대신, 우리는 북한 정권의 미래와, 과거에는 북한 전 지도자인 작고한 김일성을, 지금은 그의 아들인 김정일을 개인 숭배하는 데 치중하는 북한에 무슨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북한이 2월 13일 이루어진 핵 협정을 잘 이행하여 국제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

당연히 이는 낙관적 견해이다. 이것은 급반전의 순간을 위한 음악인 듯 하기도 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해피엔딩을 좋아하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자. 그렇게 된다면 북한 정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특파원으로서 이러한 질문을 받고 때때로 답변을 요구 받기도 한다. 북한의 미래를 부정할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북한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는

많은 요소들이 있다.

먼저 수많은 뉴스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김정일의 건강을 둘러싼 관심이 높다. 김정일의 심장질환과 당뇨병 악화에 대해 한국과 외신의 최근 보도자료가 있었다. 한 기사는 중국에 머물고 있는 그의 아들들 중 한 명이 김정일과 한 전화통화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김정일이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지에 대한 언급은 우려할 만한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기사는 독일 의사들의 북한 방문에 관한 것으로 이 기사에서는 독일의사들이 김정일의 심장수술을 하기 위해 그 곳에 갔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독일에서는 즉각적으로 반박했다. 김정일의 건강을 둘러싼 우려는, 만약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이 핵 위기 해결과 북한의 전반적인 정치적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하나의 가정은 만약 이 단계에서 김정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집권하게 된다면 군부가 권력을 장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심지어 이런 시나리오에서도 많은 분석가들은 일반적인 북한 주민들을 지배하는 강력한 개인 숭배 사상으로 김정일 일가는 어떠한 지도자라도 지지하고 철저히 정당화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또 다른 가정은 만약 핵 문제가 북한에 호혜적인 방향으로 해결되고 북한의 경제적·외교적 위상이 세계에서 향상된다면 김정일이 자신의 아들이 됐건 군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됐건 자신의 후계자를 지명할 발언권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모두 알고 있듯이 북한에 관한 많은 보도는 특파원이 다른 분쟁 지역에서 취재하는 기사의 종류와는 대단히 다르다. 북한관련 보도는 많은 설들과 소문들로 무성하고 정보원도 대다수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러나 해외 특파원이 엄청난 관심을 갖고 취재하는 기사가 있다. 그것은 바로 북한 탈북자들의 여러 가지 고통을 다루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 핵 위기의 여파 속에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맥락에서 특히 필자의 시선을 잡아 끈 사연이 하나 있다. 이 기사는 한 때 북한 주민

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탈북자들에 관한 것이다. 만약 이 회전목마와 같은 상황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 주민과 남한 주민이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탈북자들의 고통이 가치 있는 성찰을 제공해 주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 우리는 한국 정부가 후원하는 탈북자들을 위한 취업 박람회를 취재했다. 200여명의 탈북자들이 취업하고 직장을 유지하는 방법에 관한 강의를 들은 후, 신분증 사진을 찍고 이력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기 위해 앉아 있었다. 채용자들은 주로 한국의 중소기업으로 한국인 종업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었다. 일부 탈북자들은 하루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그곳에 온 사람들도 있었다. 취업 박람회는 아침에 열렸고, 오후에는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라이브 레크리에이션 시간이 있었다. 그러나 일부 탈북자들에게는 직장을 얻는 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알고자 하는 진지한 기회였다.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점들 중 하나는, 일자리를 구하는 한국인들을 위한 다른 취업박람회에서 필자가 목도했던 구직의 열기가 그 곳에는 부족했다는 점이다. 그 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매우 낯선 개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 여러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만났던 한 젊은이는 그의 임신한 부인과 함께 한국으로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식물성 기름을 제조하는 일을 했었다. 현재 한국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가진 기술이 없다. 탈북자들이 느끼는 이러한 좌절감은 그들을 고용하는 회사들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다. 한국 기업들의 가장 공통된 불만 사항들 중 상당 부분이 북한 탈북자들이 시간 개념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이들은 또한 정시에 출근해야 할 압력을 느끼지도 않는다. 많은 탈북자들이 사전에 공지도 없이 회사에 나가지 않는다. 외로움이나 북한에 남겨진 친척들을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적 괴로움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들 또한 많은 탈북자들을 음주와 마약으로 내몬다.

단지 15%의 탈북자들만이 정규직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기사가 북한 탈북자들이 한국에서 살아 남기가 얼마

나 힘든지를 보여 주는 예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 핵 위기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이 자본주의적 시장에 적응하는 길을 모색하기 시작한다면 이러한 상황은 소중한 교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약 북한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는 데 실패하여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흡수된다면 분명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핵 문제 해결이 북한과 한국의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가 될 것이다.

남한에서 북한 실상 취재기: 인접국가 밀접취재를 위한 기나긴 여정

존 허스코비츠
(Jon HERSKOVITZ)

북한 핵 위기를 취재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두 가지 중 하나는 주요 당사국인 북한이 일체의 질문에 응하지 않는 폐쇄국가라는 점이다. 보다 더 난감한 일은 공식 언론을 통해 북한이 발표하는 제한적인 언론의 내용도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같은 관련 당사국들이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점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의 핵 야욕을 취재하는 기자의 삶은 아마 김정일 지도자가 몇 번의 기자회견 정도만 열어 주어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을 것이다. 심지어 북한의 공식 언론은 김정일에 관련된 논평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는다. 마치 그들의 위대한 수령 동지에 대한 기사를 쓴다는 것은 그들이 필적할 사람이 없는 군사의 천재로 묘사하는 사람에 대한 모욕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 북한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북한은 좁은 프리즘을 통해 세계를 공산주의 국가와 공산주의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이라는 분명한 선을 그은 채 바라본다.

북한의 공식 언론 기사를 읽는 것은 일종의 예술 형태와 같다. 초보자를 위한 첫 번째 요령은 문제의 개요를 설명하는 급보의 첫 번째 단락을 읽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대개 해결책을 풀어 놓는 마지막 두 단락은 건

너뛰는 것이다. 북한이 해결책이라고 내놓는 것들(대단히 다양하다)에는 북한은 핵 무기를 보유할 것이다, 마카오 은행의 동결된 자금을 받을 때까지 협상 테이블에 나가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한다, 일본은 협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등등 많은 것들이 있다. 북한의 공식 언론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외부 세계가 주로 듣고 있는 북한 방송은 조선중앙통신이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모호한 단체들의 선물 꽃바구니를 북한의 위대한 수령동지에게 주는 것에서부터 외부세계와 가장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주로 담당하는 외무부 대변인의 성명서에 이르기까지 여러 기사를 제공한다. 조선중앙통신의 공식 TV 채널은 허가 아래 한국에서 시청할 수 있으며, 일본에는 북한사람들이 운영하는 친 북한 웹사이트도 있다. 한국은 이러한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고 있지만 한국을 거치지 않는 서버를 통해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다. 비밀스러운 국가 북한은 자국 언론에서는 대단히 직설적이고 개방적으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폭탄테러를 시사하는 언급에서 북한의 진짜 속셈을 파악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 북한이 실제로 관료들 중 한 명에게 기자회견을 열도록 허락한 드문 경우에서 북한은 민주국가인 한국보다 외국 언론에 더 공정하고 개방된 자세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모든 언론에 기자회견을 개방하고 번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엔티안에서 개최된 남북한 외무장관 회담을 취재할 때 북한 관료들은 회담이 끝난 직후 거의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다. 반면 자주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외국 언론을 제외시키는 한국은 먼저 국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난 후 2시간 여 즈음 지난 후 외국 언론을 위한 별도의 브리핑을 열었다. 외국 기자들을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북한을 취재하기 더욱 힘든 것은 북한의 주요 상대국들이 북한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이다.

수십 년 동안 국경 근처에 주둔한 대규모의 북한 군대의 위협 속에서 살아 온 한국은 북한과 관련된 문제를 경시하고 이웃 국가로서 북한의 나쁜 행동을 문제삼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본 기사는 자주 한국 관료들이 분

단된 한반도의 형제국가 간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고 미국, 일본 및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본적이 있다.

일본에게 있어 북한은 직접적인 위협이다. 그리고 일본의 자국민을 납치한 극악무도한 국가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 특히 신조 아베 총리의 자민당에 있어서 김정일은 최고의 친구가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렇다. 보수적인 자민당은 수년 동안 일본 군대를 강화하기 위한 압박을 받아 왔다. 이는 역내 일본의 입지를 더욱 더 강화하고 평화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일본의 전쟁 침략의 역사를 감안해 볼 때 일본이 군사적 힘을 증대해도 좋을 만큼의 신뢰가 있다고 이웃국가들과 일본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이든 핵실험이든 무력 도발을 일으킬 때 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하게 되고 자민당은 이를 일본 군대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에게 북한이 회피할 수 없는 숙명인 반면 북한 문제 외에도 미국은 수많은 국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과 관련된 문제는 바로 이라크, 이란 및 세계 다른 문제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과 함께 미국의 관심을 받을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을 보는 관점은 수없이 많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관점은 북한을 “오늘의 위협”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고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게 되어 해결하는 데 수십 년 혹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안보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로 이어진다. 세계는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긴밀한 관심을 갖고 있다. 로이터통신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면 “북한”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웹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10대 용어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패리스 힐튼, 린제이 로한과 관련된 뉴스들이 넘쳐날 때에도 북한관련 뉴스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

북핵 위기와 동북아시아: 언론인의 시각

도널드 커크
(Donald KIRK)

북한 핵 위기는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한가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인해 좌절감을 안겨준다. 바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취재하고 기사를 보충하고 현장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직접 북한에 갈 수 없다는 점이다. 10월 9일 자행된 핵 실험과 관련해서 우리는 먼저 한국의 케이블 뉴스 네트워크인 YTN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고 후에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한 핵 실험에 관한 북한의 주장을 들었고 마지막으로 과학자들과 핵 실험의 강도에 대해 말하는 다른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존했다. 미국에서 한국에 이르기 까지 많은 논평가들은 핵 실험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나섰지만, 그 누구도 북한의 일반 국민들은 이 상황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는지, 혹은 북한의 반응을 기늠하기 위해 북한의 관료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직접 보도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핵 실험이나 7월 초에 있었던 7대의 미사일 실험 발사의 경우 평양에서 이러한 기사를 취재할 수 있다 해도 중대한 차이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이든 한국이든 미국이든 기자는 여전히 공식적인 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 그러한 뉴스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은 북한이 아닌 곳일 수도 있다. 북한의 언론 기관은 YTN이나 다른 언론 매체들이 지진학자들의 말을 인용하여 지진측정 기계로 밝혀진 폭발의 크기 및 범위를 보도할 때까지 기사를 쓰지 않았다. 기사를 쓴다 해도 예상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다룬다. 연속적인 미사일 발사가 있는지 3개월 만에 감행했던 핵 실험은 6자 회담이 언제 개최되고 무엇이 논의되었는지를 사색하는 반복되는 과정 중에 극적인 효과를 제공했다. 6자 회담 국면이 문서나 성명서로 귀결될 때마다 특파원들과 분석가들은 성명서에 나온 문장들 하나하나의 의미와 회원국들의 예측 반응, 그리고 성명서에 공약된 사항들이 이행될 가능성에 대해 끝없이 곱씹게 된다.

모든 단계에서 위협성과 희망을 과장할 수도 있다. 가끔 핵 “위기”라는 것 자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다. 만약 위기에 직면했다면, 어쩌서 한국증시의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것이며, 동북아에 걸린 것이 많은 주요 열강들과,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남북 간 거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인가? 진정한 위기라는 의미에서의 위기(50년 이상 남북한의 대규모 군대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에 배치된 핵무기)는 군사적 긴장감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미군은 규모와 병력을 감소시키고 있고 한국 군대 역시 서서히 군사력은 아니더라도 군의 숫자를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무슨 짓을 저지르던 간에 서울을 포함해 한국에서 전쟁 분위기를 발생시키기엔 충분치 않다. 미국의 “핵 위기”의 영향에 대해서도 한국은 북한이 핵 실험을 감행하거나 반대로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기사를 제외하곤 거의 머리가사로 다루지 않는다.

사실 특파원들과 분석가들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잘못된 인상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북한이 대규모의 원조를 대가로 핵을 포기하기로 한다는 애매모호한 아젠다에 6개 당사국들이 합의했다는 2005년 9월 19일의 “성명서”로 잘못된 희망이 제시되었다.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구체적인 이행 과정을 담은 2007년 2월 13일의 최종 합의서도 또 다른 낙관적인 기사를 불러일으켰다. 베이징의 회담으로 도쿄와 서울에 잠

시 들르는 사이 크리스토퍼 힐 미 대북 특사는 몇 시간 동안 혹은 하루나 이틀 사이 북핵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으며 희망을 갖게 하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동북아 지역을 취재하는 특파원들의 관점에서 핵 문제, 핵 위기라는 것은 끝이 없는 이야기이다. 북한이 핵 탄두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도 아마 낙관과 실패의 반복으로 점철된 북핵 사태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1991년 남북 합의서와 그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점에 관해서 북한이 1993년 핵 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하고 1994년 제네바 합의서에 서명했던 것을 위반했던 사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있다.

나라 마다 관점은 다르다. 일본에서 우파의 부상은 한반도의 피스메이커로서 자국의 이익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북한의 행동을 억제한다고 해도 역내 긴장 유발에 일조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입장에 기본적인 변화를 줄 필요가 없다 해도 다양한 어조와 강조로 북한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더 이상 북한을 “악의 축”이라 말하지 않는다면, 북한과 이란간에 이루어지는 무기, 부품 및 기술 거래에 관한 기사들이 그 축의 양 극을 이루고 있는 국가간에 발생하는 사악한 거래라는 인상과 상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힘든 관점은 북한 자체의 관점으로 김정일과 그의 언론 기관의 발표와 제스처가 무슨 의미인지, “강경” 입장이나 힘들게 얻은 양보, 외부인에 대한 개방과 폐쇄, “자주국방”을 열렬히 선포하면서도 원조를 요청하는 것들의 의미를 이해하기 힘들다. 주체사상이 종교라면 다른 종교만큼이나 신성이 모독되어 왔다. 비록 북한에서 어떤 사람도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이름을 함부로 쓰는 것을 들은 사람이 없지만 말이다. 최근 기자가 인터뷰했던 탈북자들은,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오기까지 중국에서 겪은 역경과 북한의 끔찍한 실상과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주체”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야말로 이 종교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1972년 기자가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서울과 평양에 있는 적십자 회담에서 회담자들은 이산가족방문, 상업활동 및 우편에 대한 문제들로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그것이 정말 35년 전 일에 불과한 것일까? 이후 북한 핵 문제가 불거져 나왔고 기본적인 문제들이 미해결된 채 북핵 관련된 이해관계가 제기되었다. 그렇다면, 특파원들은 여전히 또 다른 35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건(핵 전멸이라는 악몽 또는 평화지속이라는 꿈)이 정말로 “발생”할 것인가? 본 기자의 관점에서는 협상이 전쟁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지만 예측불허이다.

북핵 위기에 관한 시각

호리야마 아키코
(HORIYAMA Akiko)

2.13일 합의서의 초기 조치 이행 단계

약 2천 5백만 달러의 북한 자산이 마카오에 있는 반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서 인출되었다는 발표가 있는 후 북한은 영변 핵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봉인하기 위해 IAEA와의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비록 2월 합의서에서 가동중단이 “궁극적인 핵 포기”를 위한 것이라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협정은 없다. 이는 진실로 북한과 IAEA간 협상에 달려 있다. 가동 중단의 수준은 1994년 기본 합의서에서 합의된 정도이거나 훨씬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 북한은 모든 북한의 핵 시설을 불능화하는 다음 단계 협상이 개시되기 전에 유엔 제재조치 철수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만약 유엔 제재조치가 2002년 핵 위기 이전 단계로까지 철회되지 않는다면 북한이 지난 10월 감행했던 핵 실험은 성공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건에 대한 협상 없이, 가동중단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엔 제재는 북한이 재처리 시설을 포함한 플루토늄 시설 목록을 제출하고 사용된 연료 봉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은 6자 회담의 틀에서 관리될 때까지 철회되어서는 안 된다.

비핵화라는 다음 단계

미국은 HEU(고농축우라늄)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을 듣기 위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HEU 문제 해결에 연착륙적인 접근방법을 갖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우라늄 농축 원심분리에 필요한 알루미늄 튜브와 같은 구매 리스트의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 미국과 논쟁을 벌일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심지어 핵 분열 물질의 양과 올 해 말까지의 핵 무기 수치를 포함하여 플루토늄 시설과 연관이 있는 리스트의 제출도 거부할 것이다. 올 해 말은 미국이 테러 지원국 리스트에서 북한을 제외할 것인지를 결정할 시기이다.

다음 단계로 효과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6개 관련국들은 핵 시설 불능화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 가장 긴급한 과제는 IAEA 사찰단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북한의 재처리 플루토늄을 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6자 회담국가들은 올 해 안으로 외무 장관 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들 국가들이 핵 시설 불능화를 위한 로드맵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성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아베 정부는 미국-북한 정상화와 일본-북한 정상화 간의 정치적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아베 총리와의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한 진지한 의도가 없다. 아베 행정부 또한 12명 이상의 납치된 일본인들의 무사귀환이라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과 북한 간 갈등은 때때로 6자 회담에서 다른 당사국들의 노력에 방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일본과 북한은 6자 회담이 핵 문제 돌파구를 위한 길을 마련할 때 포괄적인 협정에 합의하지 않을 수 없다.

아베 행정부는 이 문제를 6자 회담의 테이블에 놓기 위해 납치된 일본 인들과 관련된 정책의 포커스를 무사귀환에서 북한과 조율을 통한 진상조사로 바꾸어야 한다. 6자 회담을 위한 5개 실무 그룹 중에서 일본-북한 관계 정상화를 담당할 실무그룹이 가장 지연될 것이다. 6자 회담의 일부 당사국들이 일본에 납치 문제를 포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6자 회담에서 납치 문제가 분리된다면 해결에 대한 전망은 없다. 6자 회담에서 납치 문제와 핵 문제를 연결 짓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야만 일본 내 북한과의 협상을 추구하는 온건파의 입장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평화체제 구축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당사국들은 별도의 포럼을 개최해야 할 것이다. 4개국들은(북한, 한국, 중국, 미국) 한반도에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평화체제를 선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일본과 러시아도 회담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떻게 핵 보유 국가들의 핵 무기를 감소시키는가가 될 것이다. 6자 회담국가들 중 일본과 한국만이 핵을 보유하지 않은 국가이다. 따라서 일본과 한국 간 긴밀한 협력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평화유지군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논의함에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

6자 회담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본은 2002년 평양선언문에 기반하여 북한의 경제 발전에 대규모의 집단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체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20세기 초 한반도를 식민 지배했던 문제까지 해결 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다. 이러한 기여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신뢰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폐회사

권영민

각국 대표 여러분, 귀빈 여러분 이번 포럼의 대미를 장식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저는 제주도에서 열린 포럼 장소인 이곳 정남에 세 개의 나무를 올려 놓을 것입니다. 제5회 제주평화포럼 때 다시 만날 때까지 2년이 남았습니다. 정남에 세 개의 나무는 집 주인이 오랫동안 외출을 한다는 뜻입니다. 제주평화포럼은 전통적으로 매 2년 마다 개최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우리가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할 때 다시 정남에서 세 개의 나무를 치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회 제주평화포럼은 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다자간 협력과 갈등 예방과 관련하여 유럽의 경험에 대한 포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에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가 없었다면 이번 포럼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큰 헌신과 열성 덕분에 우리는 유럽의 경험을 동북아시아에 적용시킬 상관성을 발견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 구축을 강화하여 갈등 방지 프로세스를 제도화시키는 것은 평화와 번영을 지키기 위하여 안보 협력 및 지역 통합을 촉진하는 방법과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에 이정표를 남기는 제주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제주도에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번영의 달성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추구되어 왔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포한 대로, 세계 평화의 섬 이 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견해와 의견을 조율하여 적어도 한 가지 점에 대해서는 공동의 합의를 이루어 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북아 지역의 평화 유지 필요성이며 이것이 세계 평화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주 선언문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역의 화합과 통합을 이끄는 로드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3일 동안 아름답고 아열대성 기후를 갖춘 휴양지 제주도에서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은 호텔 객실에서 지내는 데 그쳐야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럽의 신뢰 구축 경험을 동북아시아에 적용시키는 것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토록 아름다운 날씨에도 실내에서만 지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다음 포럼에서는 여러분들이 야외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의 인내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이번 포럼에서 크게 기여해 주시고 성과를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2009년에 다시 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찾아보기 |

[ㄱ]

가즈프롬 211, 212, 219, 220, 221, 222, 223
 개도국경제연구소(IDE) 269
 개발도상국 56, 60, 201, 282, 288, 289, 298, 322, 323, 341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 19, 276, 184, 293, 276, 296, 300
 개방형 자본시스템 290
 개성공단 286, 333, 334
 개성공단사업 313
 거시적 감시(Macro Surveillance) 291
 걸프만연안국협력위원회(GCC) 259
 경제연대협정(EPA) 24
 경제자유구역 78, 79, 84
 경제협력강화협정(CEPA) 264, 267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HEU) 128
 고토회복주의(Irredentism) 108
 공급망관리(SCM) 284
 공정거래법 284, 290
 과학기술협력협약 240
 구조조정 19, 20, 50, 162, 281
 국민국가(Nation-State) 110, 122
 국영 석유 기업(NOC) 234
 국제원자력기구(IAEA) 128, 330
 국제적인 석유기업(IOC) 233, 234
 권력정치(Power Politics) 118, 119, 131,

152

균형발전정책 78, 79
 금강산 관광사업 313
 기러기행렬형 발전모델 283
 기술이전 164, 165, 167, 288

[ㄴ]

남북교류협력사업 313
 남북정상회담 314
 남북한 외무장관 회담 358
 남북합의서 362
 내국인대우 288
 네거티브 리스트 288
 녹색원조계획 259
 누들볼 효과 279, 287
 누적기준(Accumulation) 287
 뉴욕주-제주영어마을 파트너(NYROK Partners) 102

[ㄷ]

다국적기업 168, 169, 281, 282, 283, 284, 286
 다자간 통화스왑 300
 단순 역내무역 집중비율 265
 대동아공영권 300
 대량살상무기(WMD) 132, 137, 307
 대만 독립 문제 3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69, 278
 대통령자문동북아 시대위원회 37
 도미노 127, 129, 131, 132, 140, 142,
 145, 269
 독도/다케시마(Tokdo/Takeshima) 109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19
 동부 시베리아-태평양(ESPO) 208, 217
 동북공정 317
 동북아개발금융위원회(Northeast Asian
 Development Financing Comail) 43
 동북아개발기금(Northeast Asian
 Development Fund) 43
 동북아개발은행(Northeast Asian
 Development Bank) 43
 동북아경제공동체 37, 38, 39, 40, 41,
 44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 301
 동북아시아 FTA 56, 263, 268, 270, 275,
 296
 동북아시아의 경제 통합 17, 33
 동북아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
 175, 308
 동아시아 비전그룹(East Asia Vision
 Group) 181, 348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 164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
 64, 180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24, 25
 동아시아 FTA(EAFTA) 55, 56, 268, 272,
 277
 동아시아 ICT 정상회의(East Asia (CJK)
 ICT Summit) 52
 동아시아의 협력 프로세스 182, 283, 324
 동아시아투자포럼(East Asian Investment
 Forum) 183

동중국해 유전 257, 259
 두 마리의 호랑이 모델 114
 두 필의 말 114
 두만강 개발 프로그램(Tuman River
 development program) 54
 디아오유 247

[ㄹ]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Russian Academy
 of Sciences) 191

[ㄴ]

마스트리히트 조약 297
 말라카 딜레마 237, 238
 말라카 해협 237, 238, 251
 모스크바 국제관계연구소(MGIMO) 192
 무역장벽 284
 미소기준(De minimis) 287
 민족주의(Nationalism) 12, 26, 36, 58,
 108, 109, 118, 185, 189, 317, 318,
 337, 339

[ㄷ]

바렌츠 해 205
 반목적인 공모(antagonistic complicity)
 121
 방어적 민족주의 317
 방코델타아시아(BDA) 139
 배타적경제수역(EEZ) 256
 보통국가화 116, 117
 부가가치(Value Content) 167, 280, 284,
 287
 북·미 제네바 협정(US-DPRK Framework
 Agreement) 128
 북미정상회담 314
 북카스피안해 프로젝트 233

북한 핵 문제 59, 187, 309, 317, 342, 348, 363
 분야별 조기 무역자유화(Early Voluntary Sector Liberalization: EVSL) 21
 불능화(Disablement) 149, 314, 331, 364, 365
 브너쉬미꼬눔뱅크(Vnesheconombank) 223
 브라히미 보고서(Brahimi Report) 73
 비교우위 282, 283, 284, 285
 비엠히브페트로(Vietsovetpetro) 223
 비합리적 민족주의 113, 114

[스]

사과 증후군(Apology Fatigue) 107
 사스 332
 사할린 대륙붕 201, 205, 218
 사할린 프로젝트 207
 사할린 II LNG 258
 사할린-1 및-2 202
 사할린-2 프로젝트 214, 222
 사할린-3 220
 삼자위원회(Trilateral Commission) 193, 194
 상하이 협력기구(SCO) 307
 서귀포 관광항 프로젝트 80, 82
 성노예 120
 세계 핵에너지 파트너십(GNEP, 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135
 센카쿠 121
 센카쿠섬/조어도(Senkaku/DiaoyuIsland) 109
 송도경제자유구역 84, 85
 쇼트카 학원 90, 91, 93, 94, 95, 96, 97, 99, 100, 102
 수직적인 핵 확산

(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 152
 스트로이트란스가스 220
 스파게티볼 효과 279
 시베리아횡단철도(TSR) 40
 시장 자유화 50, 56
 신 도미노 이론 270
 신뢰구축에 관한 회의(CICA) 308
 신시대경제연대협정(JSEPA) 264, 267
 신자유주의 298
 신편 일본사 121
 신화역사 공영 프로젝트 81
 신흥경제국 281, 289
 실무그룹 136, 147, 179, 295, 348, 366
 심화된 통합 276, 291
 싱크탱크 네트워크 64, 180, 193, 287

[오]

아르코산타페 228
 아세안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 18, 19, 66, 147, 194, 196, 299, 303, 304, 307, 308, 334, 347
 아세안+3(ASEAN Plus Three: APT) 41, 42, 55, 62, 66, 77, 107, 115, 181, 267, 268, 275, 276, 280, 298, 317, 345, 347, 349
 아세안대화 파트너십 체제 307
 아세안-중국 자유무역 지역(ACFTA) 301
 아셈(ASEM) 195, 342
 아시아 금융위기 298, 299, 300
 아시아 외환위기 17, 18, 20
 아시아 채권기금(Asian Bond Fund) 23
 아시아 채권시장구상 (Asian Bond Market Initiative) 24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포럼 (APEC) 18, 19, 21, 72, 170, 195, 275, 276, 277, 281, 288, 290, 291,

292, 293, 298, 299, 307, 334, 347
 아시아 태평양 안보협력위원회
 (CSCAP) 308
 아시아 프리미엄(Asian Premium) 182
 아시아 협력대화체(ACD) 307, 308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 307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98
 아시아통화기금(AMF) 349
 악의 축(Axis of Evil) 143, 362
 안보방위정책(ESDP) 341
 안보 지역주의 296, 299, 300, 303
 안정 수준(Comfort Level) 178, 184
 알타이 가스 파이프라인 219
 야스쿠니 신사 114, 313
 야스쿠니 신사 참배 317
 양자간투자협정(BIT) 288
 양자협정 302
 연계비용 285
 연착륙 314, 365
 옥시덴탈석유회사 229
 완전누적규정(Full Accumulation) 280
 완충지대(Buffer Zone) 112, 189
 외국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28, 278, 279, 281, 282, 283,
 288, 289, 293
 외환 보유고 스와핑 네트워크 291
 요소부존량(Factor Endowment) 282
 우노칼(Unocal) 227
 우루과이 라운드 298
 워너 보고서(Werner Report) 348
 원산지규정 286, 287, 289
 원자바오 총리 260
 웨스트팔리아(Westphalia) 체제 298
 위안부 108, 120
 유럽 공동체 298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297

유럽연합 302, 303, 341, 342, 343, 344,
 345, 347
 유럽위원회 350
 유럽의 재래식 무기회담(Conventional
 Forces in Europe) 147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264
 유사누적(diagonal accumulation) 287
 유엔대북결의안 312
 유엔안보리(UNSC) 128
 유엔 제재조치 364
 유엔헌장 312
 이산가족방문 363
 이행 기준 288
 일본국제교류센터(JCIE) 193
 일본군위안부관련결의안 313
 일본·싱가포르 신시대경제연대협정
 (JSEPA) 264, 267
 일본파이프라인개발기구(JPDO) 222

[ㅈ]

자동차 산업 159, 160, 167, 168, 171, 285
 자루베즈네프트 220, 223
 자원외교 231
 자유무역체제 284
 자유시장경제 76, 333
 자주국방 362
 전자문서교환(EDI) 293
 제도적 투명성 50
 제로섬 게임 347
 제로섬(Zero-Sum) 118
 제임스타운 90, 99, 100, 101, 102, 103
 제주 건강마을 프로젝트 83
 제주국제자유도시 75, 76, 77, 78, 79,
 83, 86, 87, 88, 89
 제주영어마을 90, 93, 94, 98, 99, 100,
 101, 102

제주평화 활동센터 71
 제주평화연구원 311
 제주평화포럼 5, 6, 7, 12, 195, 311, 315, 367
 조류 독감 332
 조선중앙통신 358, 360
 조인트 벤처 기업 80, 160, 161, 163, 168
 중단철도(TKR) 40
 종전협정 314
 종합연구개발기구(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194
 주체사상 362
 준수비용(compliance cost) 285
 중국국영석유회사(CNOC) 251, 255, 256
 중국-아프리카포럼 227
 중국횡단철도(TCR) 40
 중상주의 227
 지방발전프로젝트 79
 지식 공동체(Epistemic Community) 180
 지역 경제 통합 269, 319, 321
 지역무역협정 263, 269, 271, 324
 지적재산권 165, 285
 진주 띠 238, 239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 116

[ㄷ]

천연액화가스 202
 첨단 SME 회계 292
 첨단과학기술단지 프로젝트 84
 청정에너지 259
 총괄평가국 238
 최혜국 대우 289
 치앙마이 구상(Chiang Mai Initiative) 23
 치앙마이 합의 300, 302, 349

[ㅋ]

카바로브스크(Khabarovsk) 정제소 218
 간쿤 25, 298
 캘리포니아 대학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n
 Global Conflict and Cooperation,
 IGCC) 175
 코즈미노(Kozmino) 217
 콤소몰슬온아무르
 (Komsomolsk-on-Amur) 218

[ㅌ]

탄화수소 201, 203, 204, 206, 207, 208,
 213, 215, 223, 225, 254, 256
 태평양 도서포럼(PIF) 308
 태평양경제협력회의회(PECC) 194
 통일외교통상위원회 311
 통제체제 284
 트랜스네프트(Transneft) 217
 티마노-페체르스카야
 (Timano-Pecherskaya) 201

[ㅍ]

파르스(Southern Pars) 223
 파이프라인 외교 257
 페르시아만 223, 236, 237, 245, 258
 페트로나스 223
 페트로베트남 223
 펜텍(Phentek) 221
 평가 정보 교환 292
 평화(Pacifist) 116
 평화배당금(peace dividends) 155
 평화유지 활동 73, 303
 평화체제 13, 48, 304, 332, 334, 366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CTBT) 132

- 포괄적 FTA 278
 포용정책 137, 333
 포지티브 리스트 289
 포지티브 섬 게임 347
 표제번호(Heading Number) 280
 푸틴 대통령 131, 135, 200, 206, 209, 223
 프리미엄 쇼핑아울렛 프로젝트 80, 82
- [ㅎ]
- 한계선(Red Line) 150
 한국전쟁 228, 311, 312, 366
 한반도 비핵화 115, 128, 138, 329, 334, 343, 361, 362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Inter-Korean Joint Declaration for
 Denuclearization) 154
 한·일 EPA 320
 합리적 민족주의 113, 114
 합리적 억지 이론
 (Rational Deterrence Theory) 129
 해상교통로(Sea Lines of Communication,
 SLOC) 178
 핵도미노 142
 핵억지력 144, 146, 150, 152, 154
 핵확산 126, 131, 132, 134, 142, 143, 145, 146, 150, 155
 핵확산금지 정책 343
 핵확산금지조약(NPT) 127
 허브-앤-스포크(Hub-and-Scope) 278
 호르무즈 해협 236, 251
 황사 43, 44, 332, 350
 황해경제권(Yellow Sea Economic Basin)
 85
 후진타오 주석 237, 255
 휴전협정 314, 366
 흡수기준(Roll-up) 287
 2.13 합의 13, 314, 330, 333, 334, 343
 4대 현대화 247
 5.18 시민혁명 313
 6.15 공동선언 312
 6자 회담 48, 59, 60, 72, 114, 309, 312, 329, 330, 331, 332, 334, 338, 343, 344, 345, 348, 349, 361, 364, 365, 366
 ACD 307, 347
 AFTA의 완전누적 287
 ABC(Anything But Clinton 클린턴 정부
 정책을 모두 배격한다는 의미) 150
 APEC회의 200
 APT 프로세스 299, 301, 302
 ASEAN 18, 19, 21, 25, 28, 30, 35, 41, 55, 56, 62, 65, 66, 184, 194, 196, 264, 267, 287, 288, 293
 ASEAN Harmonized Tariff Number
 (AHTN) 293
 ASEAN+6 72
 CBM 147
 CEPEA 41, 268, 270
 CERA 201
 CGE 모델 285
 CMI 23, 24, 25, 40, 42
 CNOOC(중국해양석유총공사) 211, 227, 233, 234
 CNPC(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 210, 211, 232
 CPTAT 293
 FTAAT(아시아태평양 FTA) 277
 GATS 288, 289
 HEU(고농축우라늄) 128, 365
 IEA 201, 230
 ITERA 220, 221, 223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77,	OECD	60, 170, 230
	79, 80, 81, 82, 83, 86	OSCE	8, 72, 350, 372
NAFTA	25, 44, 264, 265, 266, 272, 276,	PreUral	216
	277, 279, 298, 347	TransUral	209, 216
NATO	118, 288, 350	TRIMS	288
NBC(Nothing But Clinton 클린턴 정책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의미)	151	WTO	25, 56, 170, 276, 279, 288, 289, 292, 298, 299, 324

• 저자 소개 (제2권)

- 티제이 펴펠(T.J PEMPEL) | 버클리대 동아시아연구소장
- 이경태 | 대외경제정책연구소장
- 장울링(ZHANG Yunling) |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 태평양연구소장, 전인대 외교위원회 위원
- 이토 겐니치(ITO Kenichi) | 일본 동아시아공동체협의회 의장
- 아카시 야스시(AKASHI Yasushi) | 전 유엔사무차장
- 고성규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투자기획단장
- 다니엘 밥(Daniel E. BOB) | 미국 뉴욕 NYOK Partners 사장
- 신기욱 | 스탠포드대 교수
- 시아 리핑(XIA Liping) | 상해 국제관계연구소 사무총장
- 타마모토 마사루(TAMAMOTO Masaru) | 전 일본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임지현 | 한양대 교수
- 타나카 히토시(TANAKA Hitoshi) | 전 일본외무성 심의관
- 블라디미르 나자로프(Vladimir NAZAROV) | 러시아 안보회의 차장
- 양첸슈(YANG Chengxu) | 전 중국국제문제연구소장 역임, 전 오스트리아 대사
- 존 박(John S. PARK) | 동아시아 프로그램 담당, 미국평화연구소
- 김태우 |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이타미 히로유키(ITAMI Hiroyuki) | Hitotsubahi대 교수, 전 조직과학회장
- 무룽핑(MU Rongping) | 중국 과학원 과기정책 및 관리과학연구소장
- 수잔 셔크(Susan L. SHIRK) |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대 교수
- 쥬리쑤(ZHU Riqun) | 중국 외교학원 교수 및 부원장
- 겐나디 추프린(Gennady CHUFRIN) | IMEMO 부원장
- 야마모토 타다시(YAMAMOTO Tadashi) | 일본 국제교류센터 소장
- 이고르 톰버그(Igor TOMBERG) | IMEMO 에너지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짜다오지웅(ZHA Daojiong) | Renmin대 교수
 켈트 칼더(Kent E. CALDER) | 존스 홉킨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이창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후카가와 유키코(FUKAGAWA Yukiko) | 와세다대 교수
 사무엘 김(Samuel S. KIM) |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연구소 연구위원
 이고르 로가체프(Igor ROGACHEV) | 러시아 연방이사회위원
 김원웅 | 국회 통일외교통상 위원장
 남경필 | 국회의원
 니시무라 야스토시(NISHIMURA Yasutoshi) | 일본 중의원
 알렉산더 버시바우(Alexander R. VERSHBOW) | 주한 미국대사
 오시마 쇼타로(OSHIMA Shotaro) | 주한 일본대사
 노버트 바스(Norbert BAAS) | 주한 독일대사
 브라이언 맥도널드(Brian McDONALD) | 주한 EU 대표부 대사
 박인국 | 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손지애 | CNN 서울지국장
 존 허스크비츠(Jon HERSKOVITZ) | 로이터통신 서울지국장
 도널드 커크(Donald KIRK) | CBS 라디오 서울지국장
 호리야마 아키코(HORIYAMA Akiko) | 마이니치신문 서울지국장